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고경환

신지영·김성아·이연희·고숙자·이정우·임달오·노용환·홍세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신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달오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세영	안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연구보고서 2021-51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49-5 9351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51>

발|간|사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적 난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량의 실업자 발생과 장기화, 소상공인의 수입 급감과 나홀로 자영업자의 증가,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 나라의 복지재정 분석은 단편적 관점에서 복합적 측면으로 파악하는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구축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주로 ‘이전지출’ 관점에서 규모, 구조, 배분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보완하는 국민소득 순환 측면에서 살펴보는 새로운 접근이다. 바로 복지재정을 생산, 분배, 지출의 구조를 고려한 이전지출 뿐만 아니라 전달 체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접근의 계정구축이다. 이는 국민계정과 체계적 연계성이 높아 복지재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리라 본다. 이를 통해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직·간접의 효과 분석, 즉 가계소득과 소비, 기업의 생산효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국민계정체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선진 국가와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복지재정의 위성계정은 복지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목표 수립과 정책 영역별 방향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되며 정부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본다.

또한 위성계정을 활용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될 지역 간 비교지표를 고찰하고 탐색하였다. 여기에는 복지재정 총량(비중), 복지재정 배분정도(1인당, GRDP대비), 복지재정 자율성,

복지재정 압박도, 복지재정 부담도 등의 지표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OECD의 SNA작성 기준에 따라 2019년도 복지계정의 지출 규모, 기능, 속성을 산출하였으며 나아가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별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기본 통계들을 생산하였다.

앞으로 국가 복지지출 통계가 축적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면 국가는 물론 지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 축소 또는 해소 방안 마련에 일조하리라 본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고정환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연희 책임전문원, 고숙자 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신지영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외부 전문가로는 서울여자대학교의 노용환 교수, 인제대학교 이정우 교수, 공주대학교 임달오 교수, 안양대학교 홍세영 교수가 참여하였다. 특히 독일 보훔루르대학교에서 사회정책을 공부하는 김익재 선생의 최신 정보제공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의 특성상 손이 유난히 많이 가는 만큼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복지계정의 작성기준과 체계화	31
제1절 중분류와 세부 지출의 개념과 구성	33
제2절 위성계정 구축의 매뉴얼 개발	62
제3절 복지지출체계의 자동 분류 방안	85
 제3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광역자치단체 통계 생산과 분석	111
제1절 복지지출 규모	113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18
제3절 기능별 자원별 분석	125
제4절 중분류와 세부지출의 분석	139
제5절 개별 자치단체의 세부 분석(서울시 중심)	145
 제4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사례연구	151
제1절 공공데이터와 연계 분석	153
제2절 삶의 질과 개선, 관계 분석	175
제3절 복지 지표의 발굴과 산출	207

제4절 독일의 사회예산 활용 사례	277
제5장 연구의 한계와 정책과제	295
참고문헌	299
부록	315
[부록 1] 사회보호와 경제분류의 개념과 구성내용	315
[부록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331
[부록 3]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비율	395
[부록 4] 지역별 사회복지지출 시각화	403
[부록 5]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406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표 1〉 연차별 복지계정 구축 사업내용	5
〈요약표 2〉 사회보호의 중분류별 개념과 지출항목, 행정비용	7
〈요약표 3〉 사회보호의 세부지출별 개념과 급여, 비목명	9
〈요약표 4〉 중분류별 세부지출별 교차분석(2019년)	11
〈요약표 5〉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공통 및 추가 영역 비교: 주요 사업	14
〈요약표 6〉 기능별 주요 행정비의 세부사업과 예산목명	16
〈표 1-1〉 연차별 복지계정 구축 사업내용	25
〈표 1-2〉 복지계정 구축의 연차별 비교	26
〈표 2-1〉 복지지출을 구성하는 행정비용과 이전지출 구조	35
〈표 2-2〉 위성계정의 기능별 지출 종류별 분류표 양식	36
〈표 2-3〉 Social Protection에 대한 독일 국민연금공단의 용어 사용	40
〈표 2-4〉 질병(71011)에 해당하는 급여명	41
〈표 2-5〉 장애(71012)에 해당하는 급여명	42
〈표 2-6〉 노령(7102)에 해당하는 급여명	44
〈표 2-7〉 유족(7103)에 해당하는 급여명	44
〈표 2-8〉 가족 및 자녀(7104)에 해당하는 급여명	45
〈표 2-9〉 실업(7105)에 해당하는 급여명	47
〈표 2-10〉 주거(7106)에 해당하는 급여명	47
〈표 2-11〉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7107)에 해당하는 급여명	48
〈표 2-12〉 사회보호 R&D(7108)에 해당하는 급여명	49
〈표 2-13〉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7109)에 해당하는 급여명	50
〈표 2-14〉 노동에 해당하는 급여명	50
〈표 2-15〉 제외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명	51
〈표 2-16〉 사회보호의 중분류별 개념과 지출항목, 행정비용	52
〈표 2-17〉 사회보호의 세부 지출별 개념과 급여, 비목명	54
〈표 2-18〉 피용자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명	55
〈표 2-19〉 재화 및 서비스 사용에 해당하는 급여명	56

〈표 2-20〉 고정 자본 소비(제외부분에 포함)에 해당하는 급여명	57
〈표 2-21〉 이자에 해당하는 급여명	57
〈표 2-22〉 보조에 해당하는 급여명	58
〈표 2-23〉 출연에 해당하는 급여명	58
〈표 2-24〉 사회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명	59
〈표 2-25〉 기타비용에 해당하는 급여명	60
〈표 2-26〉 비금융자산의 순투자에 해당하는 급여명	60
〈표 2-27〉 제외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명	61
〈표 2-28〉 중앙 및 지방정부 자료시스템의 구조	62
〈표 2-29〉 지역별통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회보험급여 차액 비교(2019년)	68
〈표 2-30〉 지역통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조정방법: 공무원연금급여 예시(2019년)	69
〈표 2-31〉 중앙정부 자체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2019년): 서울시, 가족 및 자녀	70
〈표 2-3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율	70
〈표 2-33〉 국민계정 '사회보호'의 10대 중분류와 지출규모(2018, 2019)	71
〈표 2-34〉 복지지출의 세부지출별 금액(2018, 2019년)	72
〈표 2-35〉 복지지출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금액과 구성비(2018)	73
〈표 2-36〉 복지지출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금액과 구성비(2019)	74
〈표 2-37〉 광역자치단체별 정부부문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75
〈표 2-3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76
〈표 2-39〉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9년)	77
〈표 2-40〉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78
〈표 2-4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재원별	79
〈표 2-42〉 기능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9년)	80
〈표 2-43〉 Social Protection과 SOCX 지출 금액 비교(2018년)	81
〈표 2-4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공통 및 추가 영역 비교: 주요 사업	82
〈표 2-45〉 기능별 주요 행정비의 세부사업과 예산목명	84



〈표 2-46〉 ‘장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2018년, 2019년 분류코드 비교	88
〈표 2-47〉 분석 대상 데이터의 불일치 발생 조건	98
〈표 2-48〉 형태소 분석 기준에 따른 형태소 생성 예시	102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116
〈표 3-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순위별	117
〈표 3-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119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순위별	120
〈표 3-5〉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순위별	123
〈표 3-6〉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126
〈표 3-7〉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기능별	127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자원별	131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자원별	132
〈표 3-10〉 광역자치단체별 정부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134
〈표 3-11〉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자원별	135
〈표 3-12〉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자원별 지출종류별	137
〈표 3-13〉 기능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141
〈표 3-14〉 광역자치단체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143
〈표 3-15〉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규모와 구성비(2019년): 기능별·세부지출별	146
〈표 3-16〉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자원별	148
〈표 3-17〉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세부지출별·자원별	149
〈표 4-1〉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액 합계	155
〈표 4-2〉 공적 이전소득액 구성비	156
〈표 4-3〉 기능별 복지지출의 부문별 주입 규모 시나리오	158
〈표 4-4〉 가계부문의 복지지출 소득효과	162
〈표 4-5〉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 활동 부문의 소득증가율	164
〈표 4-6〉 소비방정식 (OLS 추정결과)	168
〈표 4-6〉 소비방정식 (OLS 추정결과) (계속)	169

〈표 4-7〉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170
〈표 4-8〉 가계부문에 대한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비효과	172
〈표 4-9〉 주요 연구의 삶의 질 측정 영역	179
〈표 4-10〉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181
〈표 4-11〉 기능별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표준화 산식	183
〈표 4-12〉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산식	184
〈표 4-13〉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2018년 기준)	185
〈표 4-14〉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187
〈표 4-15〉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	189
〈표 4-16〉 2008년 한국의 성별 행복기대여명	200
〈표 4-17〉 2018년 한국의 성별 행복기대여명	201
〈표 4-18〉 복지관련 주요 특성별 행복기대여명(2018)	203
〈표 4-19〉 한국과 미국의 행복기대여명 비교	205
〈표 4-20〉 사회복지예산지표의 특징	211
〈표 4-21〉 2015년~2019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	212
〈표 4-22〉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213
〈표 4-23〉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213
〈표 4-24〉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의 특징	218
〈표 4-25〉 광역시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15~2019)	219
〈표 4-26〉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15~2019)	220
〈표 4-27〉 복지재정 자율성 지표의 특징	224
〈표 4-28〉 광역시 복지재정의 자율성	226
〈표 4-29〉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자율성	228
〈표 4-30〉 복지재정압박도 지표의 특징	232
〈표 4-31〉 광역시 복지재정압박도	233
〈표 4-32〉 기초자치단체 재정압박도	235
〈표 4-33〉 복지재정부담도 지표의 특징	240



〈표 4-34〉 광역시 복지재정의 부담도	242
〈표 4-35〉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도	245
〈표 4-36〉 복지재정지표의 특징 비교	249
〈표 4-37〉 광역시 지방복지재정 지수에 따른 비교	250
〈표 4-38〉 세대 간 회계 산출식	259
〈표 4-39〉 세대 간 회계 전방주의적 접근의 산출식	260
〈표 4-40〉 세대 간 회계 후방주의적 접근의 산출식	261
〈표 4-41〉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지표 산출식	267
〈표 4-42〉 우리나라 세대 간 불평등도	271
〈표 4-43〉 세대 간 불평등도 지표 산출식	271
〈표 4-44〉 지방재정 장래세대부담 비율 산출식	273
〈표 4-45〉 세대 간 형평성 지표 비교	276
〈표 4-46〉 독일 사회예산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분류(2019년 추계치)	278
〈표 4-47〉 독일 사회예산의 제도별 분류 및 행정지출	279
〈표 4-48〉 독일 사회예산의 부담주체	280
〈표 4-49〉 사회보고서 2021의 B챕터 구성	282
〈표 4-50〉 데이터리포트 2021: 독일연방공화국 사회보고서 목차	285
〈표 4-51〉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의 주요 업데이트 주제	287
〈부표 1-1〉 정부의 기능별 COFOG 분류 체계(10개 분야 69개 부문)	315
〈부표 1-2〉 사회보호와 중분류 영역의 개념	316
〈부표 1-3〉 기능별 공공기관별 관련 급여(사업)들	320
〈부표 1-4〉 GFS기준에 따른 복지지출의 세부지출 개념과 관련 비목·세목명	324
〈부표 1-5〉 통합재정수지와 COFOG의 재정분류 체계	327
〈부표 1-6〉 중앙·지방정부의 세부지출별 예산 목명	328
〈부표 2-1〉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31
〈부표 2-2〉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32
〈부표 2-3〉 부산지역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33

〈부표 2-4〉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34
〈부표 2-5〉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35
〈부표 2-6〉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36
〈부표 2-7〉 대구지역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37
〈부표 2-8〉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38
〈부표 2-9〉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39
〈부표 2-10〉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40
〈부표 2-11〉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41
〈부표 2-12〉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42
〈부표 2-13〉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43
〈부표 2-14〉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44
〈부표 2-15〉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45
〈부표 2-16〉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46
〈부표 2-17〉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47
〈부표 2-18〉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48
〈부표 2-19〉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49
〈부표 2-20〉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50
〈부표 2-21〉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51
〈부표 2-22〉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52
〈부표 2-23〉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53
〈부표 2-24〉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54
〈부표 2-25〉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55
〈부표 2-26〉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56
〈부표 2-27〉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57
〈부표 2-28〉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58
〈부표 2-29〉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59
〈부표 2-30〉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60



〈부표 2-31〉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61
〈부표 2-32〉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62
〈부표 2-33〉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63
〈부표 2-34〉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64
〈부표 2-35〉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65
〈부표 2-36〉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66
〈부표 2-37〉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67
〈부표 2-38〉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68
〈부표 2-39〉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69
〈부표 2-40〉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70
〈부표 2-41〉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71
〈부표 2-42〉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72
〈부표 2-43〉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73
〈부표 2-44〉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74
〈부표 2-45〉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75
〈부표 2-46〉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76
〈부표 2-47〉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77
〈부표 2-48〉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78
〈부표 2-49〉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79
〈부표 2-50〉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80
〈부표 2-51〉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81
〈부표 2-52〉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82
〈부표 2-53〉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83
〈부표 2-54〉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84
〈부표 2-55〉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85
〈부표 2-56〉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86
〈부표 2-57〉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87

〈부표 2-58〉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88
〈부표 2-59〉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89
〈부표 2-60〉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90
〈부표 2-61〉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391
〈부표 2-62〉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392
〈부표 2-63〉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393
〈부표 2-64〉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394
〈부표 3-1〉 지역별 인구 수 및 구성비(2019년)	395
〈부표 3-2〉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국민연금	396
〈부표 3-3〉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공무원연금	397
〈부표 3-4〉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군인연금	398
〈부표 3-5〉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사학연금	399
〈부표 3-6〉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고용보험	400
〈부표 3-7〉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산재보험	401
〈부표 3-8〉 중앙정부 보훈경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보훈	402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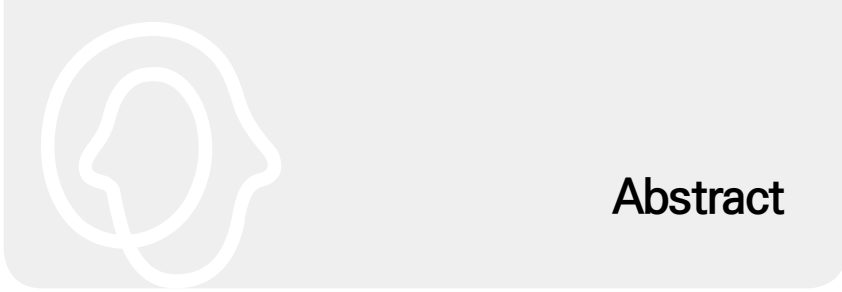


[요약그림 1]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로드맵	4
[요약그림 2] 복지계정 개발 과정: 4단계	6
[요약그림 3] 사회보호 중분류 작성 결과	10
[요약그림 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영역 및 지출규모 비교(2018)	13
[그림 1-1]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로드맵	24
[그림 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 과정	34
[그림 2-2] 국민계정의 10대 분야와 중분류 구조	35
[그림 2-3] OECD의 주제별 통계분류 체계(대-중-소 분류)	39
[그림 2-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지출규모 비교(2018)	82
[그림 2-5] 정부 세출자료의 계층적 분류구조도	85
[그림 2-6] 정부 결산자료의 분류체계 예시	86
[그림 2-7] 복지계정용 분류항목 생성 프로세스	92
[그림 2-8] 지역복지계정 단어사전 업데이트 흐름도	94
[그림 2-9] 세목에 따른 GFS경제적분류 항목 차이 예시	95
[그림 2-10] 지역복지지출DB의 세목에 대한 기능, 자원, 제도 분류 예시	96
[그림 2-11] 2019년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이용한 형태소 추출 결과 예시	100
[그림 2-12] 복지계정 단어사전 이용한 분석용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 칼럼 생성 예시	104
[그림 2-13] 분석용 결산자료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간 불일치 자료 예시	105
[그림 3-1] 국민계정 대분류의 '사회보호'를 중분류한 결과	114
[그림 3-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비교: GRDP대비 %(2019년)	121
[그림 3-3]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대비 비율 비교(2019년)	122
[그림 3-4]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9년)	124
[그림 3-5]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9년)	125
[그림 3-6]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복지지출의 구성비(2019년): 노령, 가족 및 자녀, 기타사회적배제	128
[그림 3-7]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9년)	129
[그림 3-8] 복지지출의 재원별 구성과 금액(2019년)	130

[그림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재원별	133
[그림 3-10] 복지지출의 기능별 재원별 구성 금액(2019년)	136
[그림 3-11] 복지지출의 재원별 지출종류별 구성 금액(2019년)	138
[그림 3-12] 기능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140
[그림 3-13] 복지지출의 세부지출별 구성비(2019년)	142
[그림 3-14]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9년)	144
[그림 3-15] 기능별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9년): 서울	147
[그림 4-1] 가계소득분위별 노인가구주 비율	157
[그림 4-2] 정책 프로세스와 삶의 질 간 관계 구조	176
[그림 4-3] GRDP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190
[그림 4-4] GRDP대비 지자체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191
[그림 4-5] GRDP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192
[그림 4-6] 인구 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193
[그림 4-7] 인구 대비 지자체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194
[그림 4-8] 인구 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195
[그림 4-9] 광역시 복지재정의 자율성	227
[그림 4-10] 광역시 복지재정의 압박도	234
[그림 4-11] 광역시 복지재정의 부담도	243
[그림 4-12] 광역시 지방복지재정 지수에 따른 비교	251
[그림 4-13] 위대한 게츠비 곡선	263
[그림 4-14] 데이터리포트 2021: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한 사회보고서 표지	284
[그림 4-15]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 홈페이지	286
[그림 4-16] 독일 19대 연방하원에 제출된 사회보고서 2021	288
[그림 4-1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2020 사회보고서 표지(부제: 빈부보고서)	290
[그림 4-18] 독일 매스컴의 사회보고서 데이터의 활용사례1	291
[그림 4-19] 독일 매스컴의 사회보고서 데이터의 활용사례2	292
[그림 5-1] '사회보호'의 중분류와 세부지출 작성을 위한 협력방안	298



[부도 4-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 비교(2019년)	403
[부도 4-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금액(2019년)	404
[부도 4-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405
[부도 5-1]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 노령	406
[부도 5-2]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가족 및 자녀	407
[부도 5-3]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질병 및 장애	408
[부도 5-4]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사회적 배제	409



Abstract

Research on welfare accou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trategy in national account(3rd Year)

Project Head: Gho, Gyeong-hoan

Each country is establishing the National Accounts System (SNA)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welfare finance that protects the people from social risks such as disease, unemployment, and aging. SNA guidelines recommend not only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but also subcategories. That is, Total expenditure of welfare finance - Classification by welfare policy area - Current expenditure(transfer expenditure, administrative expenses) and capital expenditure .

Currently, Korea's SNA only announces the total size of welfare finance. Accordingly, in this study, welfare accounts were established by classifying welfare finance by policy area and detailed current expendi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tal scale of welfare finance was 146.7 trillion won (2019), and by policy area, it was 63 trillion won for the elderly, 23 trillion won for families and children, and 80 billion won for social security R&D.

Next, the detailed composition ratio of individual benefits is

Co-Researchers: Shin, Ji-Young · Kim, Seonga · Lee, Yeon-hee · Ko, Sukja ·
Lee, Jung-Woo · Lim, Dar-Oh · Noh, Yong-Hwan · Hong,
Sae-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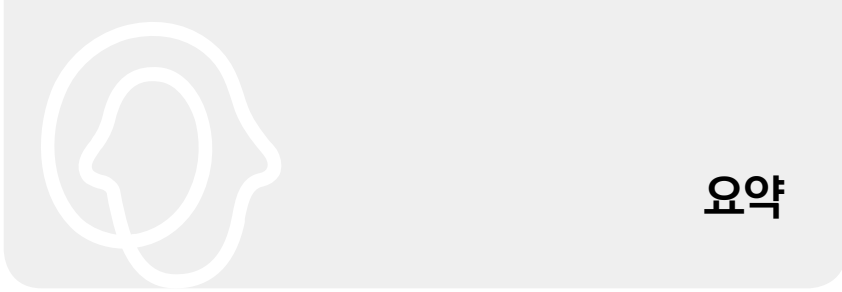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as follows. ‘Transfer expenses’ was the highest with ‘Unemployment benefits’ at 98.4%, and ‘Administrative expenses’ was the highest with ‘Housing benefits’ at 40.5%. This is the main data that quantitatively shows the attributes of individual benefi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system.

After all, the welfare account can be more sophisticated in analyzing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 o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the production effect of firms.

There are five policy contributions of this welfare account.

First, it can be used as the most sophisticated basic data to analyze welfare finance in the national account system. Second, it provides evidence for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goals such as the basic welfare plan and deriving directions for each policy area. Third, it can be usefully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ies optimized for welfare finance. Fourth, it is easy to compare with foreign countries that follow the SNA account system. Finally, the public awareness of how much welfare finances are distributed within the national economy can be raised.

Keyword : social protection, national account, welfare account, local welfare expenditure, detailed expenditure on welfare benefits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의 생로병사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데 소요된 복지재정의 현황 파악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계정체계(SNA)가 사용되고 있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정책영역별 지출현황인 중분류와 그 하부영역으로 이 전지출과 행정비용의 분류를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문의 중분류는 개인 이나 가계에 제공되는 현금지출과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정책 목적별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중분류를 기반으로 개별 영역별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정책 목적인 기능별 (예, 노령, 질병 및 장애) 지출에 이전지출·행정비용의 교차분류표를 작성 하면 각 지출의 규모는 물론 그 구성 요소들(사회급여, 보조금, 피용자 보 수,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등)을 종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정책영역별 ‘행정비용’을 산출함에 따라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SAM)에 신규로 행정계수를 부여할 수 있어 결과분석이 더 명료해 진다. 이러한 중분류와 세부지출의 유용성이 높음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칠레 의 3국가는 분류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처음으 로 국민계정의 복지재정 분야인 ‘사회보호’를 기능별, 세부지출별 분류하 는 연구를 하였다. 사회보호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 긴장감과 갈 등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이 다. 다음, 사회보호는 가계의 소비와 총수요를 증가시켜 위기대응과 구조 변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끝으로 사회보호는 생계와 영양 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교육기회의 증 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고용기회의 증대로 인간개발과 생산성 증

4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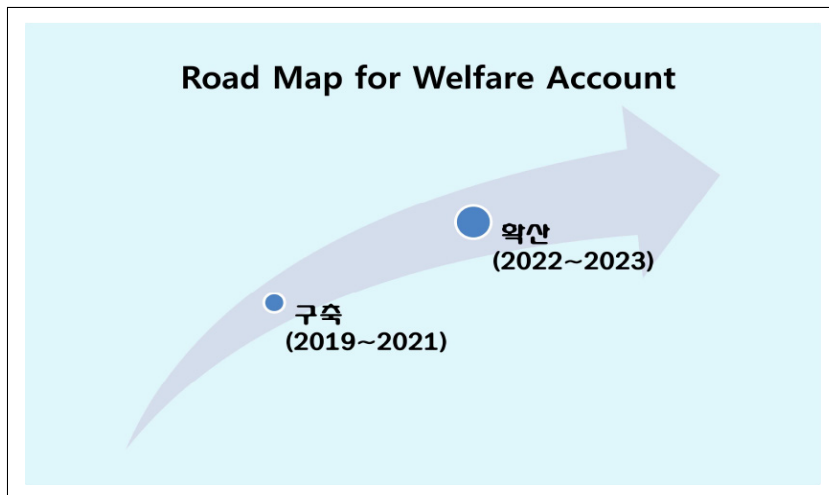
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복지와 재정지출의 기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이터인프라 조성에 일차적 목적을, 이것을 정책분석과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고에 2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내용

가. 로드맵

[요약그림 1]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로드맵



자료: 고경환, 이연희, 안수인, 노용환, 홍세영, 김원종. (202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 (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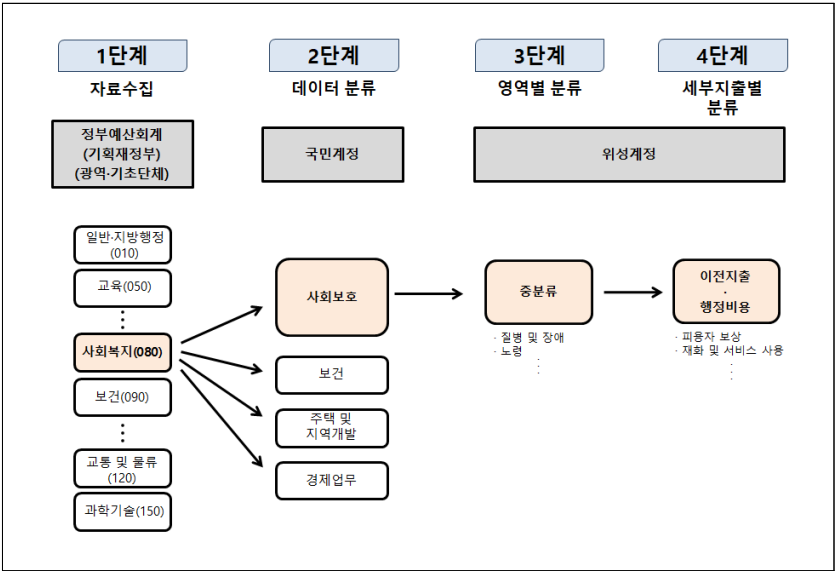
〈요약표 1〉 연차별 복지계정 구축 사업내용

연차	단 계	사 업 내 용
1차 2019	구축	- 지역복지계정 구축 환경 분석과 자료원 개발 - 복지계정 DB 체계 기획(SOCX 기준) -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기초 Data Set 구축 - 지역복지 통계 생산
2차 2020		- 지역복지계정 구축 환경 분석과 자료원 개발(연속) - 복지계정 DB 체계 기획(SNA 기준) -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기초 Data Set 구축 - Data Set을 활용한 지출세분화 구축 - 지역복지 통계 생산
3차 2021		- 지역복지계정 DB 구축(SNA 기준, 연속) - Data Set을 활용한 지출세분화 구축(연속) - 지역복지계정 구축의 매뉴얼 개발 - 지역복지 통계 생산(연속) - 복지계정을 활용한 지표 발굴
4차 2022	확산	- 지역복지계정 DB 구축(SNA 기준, 연속) - 국제통계 생산(SNA 중분류) -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지방공무원 대상 통계생산 역량(매뉴얼) 교육 - 「복지계정」간행물 발간(초판)
5차 2023		- 기 구축 DB의 시계열 확장 - 지역복지계정의 활용성 확산 - 연구결과 확산(통계리포트, 인포그래픽 등)과 학술대회 개최 - 「복지계정」간행물 발간(속간) - 지방자치단체 통계생산 지원

자료: 고경환, 이연희, 안수인, 노용환, 홍세영, 김원중. (202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 (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

나. 개발 단계

[요약그림 2] 복지계정 개발 과정: 4단계



자료: 고경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p. 25를 재구성함.

다. 복지재정 위성계정의 작성기준과 체계

〈요약표 2〉 사회보호의 중분류별 개념과 지출항목, 행정비용

중분류		개 념	지출항목	행정비용
1. 질병 및 장애 (7101)	가. 질병 (71011)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수입 손실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	정액형 또는 소득 비례형 병가금 (sick-leave payments), 기타 현금 급여, 부조성 현물급여(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	이들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나. 장애 (71012)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또는 정상적 생활을 전혀 또는 일부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작업 능력의 손상으로 지급되는 조기 퇴직 급여, 간호 수당, 장애인 수당,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2. 노령 (7102)		노령에 따른 위험(소득 상실, 불충분한 소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자립성 결여, 사회생활 및 지역 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노령 연금,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조기 노령 연금, 간호 수당, 퇴직 또는 노령 때문에 지급되는 기타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3. 유족 (7103)		고인의 유족(고인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기타 친척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급여	유족 연금, 사망 위로금, 기타 유가족에 대한 정기 또는 일시 지급 장례비 및 유족들의 지역생활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4. 가족 및 자녀 (7104)		피부양 자녀가 있는 가계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산모 수당,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가족 또는 자녀 수당, 기타 가정 지원 취학 전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간 보호 및 하숙시설, 주간 보모 비용 등	
5. 실업 (7105)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 및 현물 급여	전액 및 부분 실업급여,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급여, 직업훈련 수당, 정리해고 보상금 실업자 직업훈련, 실업자와 그	

8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중분류	개 념	지출항목	행정비용
		가족에게 제공되는 숙박·식품·의류 등과 같은 현물 급여 등	
6. 주거 (7106)	가계 주거비용 총당의 현물 급여(자산 조사)	임대료 지원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주거비용 지급(즉, 주택용자 원리금 상환금), 저가주택 또는 공공주택 제공	
7. 미분류 사회적 배제 (7107)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소외 위험에 처한 사람들(빈곤층, 저소득층, 이민자, 원주민, 피난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소득 보조 및 기타 현금 지급금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장단기 보호 및 숙박시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재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상담, 주간 보호, 일상 생활 지원, 식품, 의류, 연료,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8. 사회보호 R&D (7108)	사회보호와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사회보호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의 출연, 용자, 보조	-
9. 미분류 사회보호 (7109)	사회보호 정책·계획·프로그램·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사회보호 제공에 관한 법률과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화재·홍수·지진에 따른 재해 희생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평시 재해에 대비한 긴급용도의 식품·장비·기타 보급품의 구입 및 저장	-

자료: IMF(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 115~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257~313.에서 재인용

라. ‘사회보호’의 행정비용 개념과 비목명

〈요약표 3〉 사회보호의 세부지출별 개념과 급여, 비목명

경제 분류	개 념	비목명 ¹⁾
1. 피용자 보수	- 피용자가 수행하는 근로 대가로써 현금 및 현물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 - 임금, 급여, 피용자를 대신하여 사회보험제도에 납부하는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인건비, 여비, 연구용역비
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 시장 및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구성 - 고정자본소비, 자가 건설 관련 재화와 서비스 사용, 정부가 구매하여 변환 없이 배분하는 현물. 이러한 이전은 보조, 출연, 사회급여, 또는 기타 미분류 경상 이전으로 분류됨	업무추진비, 예비비 및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²⁾ , 특수활동비 ²⁾
3. 고정 자본 소비	물리적 감모, 정상적 진부화, 또는 정상적 사고 손실에 의해 정부단위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현시점의 가치 하락	전출금 등: 감가상각비, 기금전출금
4. 이자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을 또 다른 기관단위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수취하는 일종의 투자이익	상환지출, 예탁금, 이차보전금
5. 보조	생산활동 수준 기준으로, 또는 생산, 판매, 수출 및 수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정부단위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일방적인 경상 이전	보전금(배상금, 손실보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6. 출연	조세, 보조금, 또는 사회기여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정부단위가 거주나 비거주 정부단위, 또는 국제기구에 지급하는 이전	일반출연금, 출자금
7. 사회급여	질병, 실업, 퇴직, 주거, 교육 또는 가정 사정 등의 예처럼, 사회적 위험에 수반되는 필요를 위한 제공을 목적으로 가계가 수취하는 경상이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8. 기타비용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기타 4미분류 이전, 그리고 비생명보험과 표준화된 보증 관련 보험료, 수수료 및 보험청구권의 지급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용자금, 전출금등, 해외이전
9.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자가건설 관련 원가의 자본화 해당분	건설보상비, 건설비, 무형자산, 연구개발, 출연금, 유형자산

주: 1)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2) 매뉴얼에 따라 업무 중에 사용되는 직무수행경비와 특수활동비는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분류(재정통계매뉴얼 2014(IM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자료: IMF(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 115~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257~313.에서 재인용

3. 주요 연구결과

가. 국민계정 ‘사회보호’의 중분류 작성

[요약그림 3] 사회보호 중분류 작성 결과

대 분 류		
분 야		2019
계		651,849
701	일반 공공행정	80,444
702	국방	49,218
703	공공질서 및 안전	24,628
704	경제활동	94,045
705	환경보호	17,123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21,285
707	보건	99,837
708	휴양, 문화, 종교	19,844
709	교육	98,704
710	사회보호	146,722

중 분 류		
부 문		2019
계		146,722
7101	질병 및 장애	15,041
7102	노령	62,641
7103	유족	8,862
7104	가족 및 자녀	22,703
7105	실업	9,356
7106	주거	2,686
7107	기타 사회적 배제	14,779
7108	사회보호 R&D	79
7109	기타 사회보호	1,408
노동		9,167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고경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p.31(원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 DB. 2021.

나. 중분류와 세부지출의 교차분석

〈요약표 4〉 중분류별 세부지출별 교차분석(2019년)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파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 금	사회 급여
계	100.0	146,722	17,008	2,484	1,705	17	54	10,648	2,099	129,714	7,159	122,555
노령	42.7	62,641	2,668	682	767	-	4	1,117	98	59,972	78	59,895
유족	6.0	8,862	715	111	119	2	5	372	106	8,147	2,502	5,645
질병 및 장애	10.3	15,041	2,869	254	72	2	9	1,672	861	12,172	2,047	10,124
가족 및 자녀	15.5	22,703	5,591	172	254	1	6	4,966	193	17,112	158	16,954
기타 사회 보호 ¹⁾	1.0	1,408	565	93	75	1	6	299	91	842	481	361
기타 사회적 배제 ²⁾	10.1	14,779	1,421	117	64	0	-	1,057	183	13,358	17	13,341
사회 보호 R&D ³⁾	0.1	79	9	1	5	-	0	3	-	70	-	70
노동 ⁴⁾	6.2	9,167	1,931	929	325	1	25	132	518	7,236	1,806	5,430
실업	6.4	9,356	149	124	17	-	-	7	0	9,207	70	9,137
주거	1.8	2,686	1,089	1	7	10	-	1,022	49	1,597	1	1,597

주: 1) 사회보호의 관리·운영·지원, 화재·홍수·지진의 재해지원

2) 소외계층(저소득층, 이민자, 피난민, 원주민, 알콜약물중독자, 범죄피해자)

3) 사회보호관련 연구·실험(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 지역사회올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R&D)

4)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4. 결론 및 정책적 기여

가. 중분류 및 세부지출 작성

지금껏 대분류 단계에서만 작성되던 국민계정의 복지부문에 대해 중분류를 실시하여 국가통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출된 중분류를 대상으로 세부지출 작성(이전지출, 행정비용)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 복지지출 중 행정비용이 평균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비용의 비중을 세부 급여별로 살펴보면 ‘실업’이 최소로 1.6%, ‘주거’가 최대로 40.5%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급여들의 급여속성과 전달체계의 특성을 통계로 보여 주는 신규 데이터로서 정책효과 분석과 급여 발굴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기능별 분류와 세부지출 분류의 교차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의 성과평가와 방향성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분석

복지부문의 위성계정과 공공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높이고자 공적이전 지출이 가계의 소득과 소비, 기업의 생산효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가계소득분위별 배분 시나리오를 작성(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하여 사회계정행렬(SAM) 승수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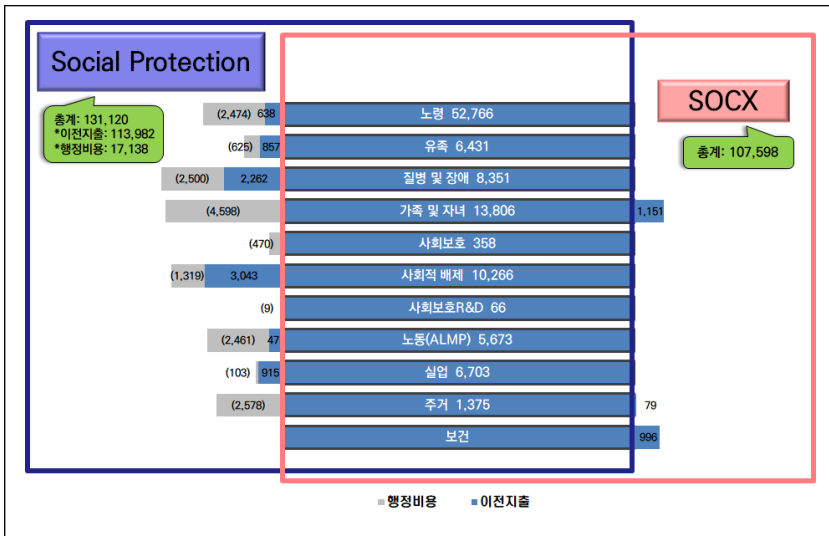
다. 복지지표의 발굴과 산출

복지재정의 현황과 동향 파악, 복지수요를 반영한 지표의 선정과 발굴 및 산출이다. 대표지표로 사회복지예산(비중), 1인당 사회복지비, 복지 재정 자율성, 복지 재정 압박도, 복지 재정 부담도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각 지표별로 정의, 산식, 해외 사례, 최근 동향 등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고경환, 신지영. 2021. p.35).

라. Social protection-SOCX의 영역 및 지출규모 비교

[요약그림 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영역 및 지출규모 비교(2018)

(단위: 십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2018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지방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0.9.20.;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0.9.20.;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8). 내부자료; 국방부. (2018).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8).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19). 2018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0.9.20.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14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요약표 5〉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공통 및 추가 영역 비교: 주요 사업

기능	공통영역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순)	추가영역	
		SP	SOCX (정부재정의 '사회복지(080)' 이외 분야)
노령	기초연금지원, 노인관련기관지원 등, 공적연금(노령연금, 퇴직수당)	기초연금위탁운영(민간경상보조), 국민연금 공단관리운영 공무원연금 위탁시설관리(민간위탁 사업비)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고궁통입장료 감면(노인), 교통통신요금감면(노인)
유족	군경유족(정기보상금), 애국지사 및 그유족(정기보상금) 등 공적연금(유족연금), 산재보험(유족연금)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민간경상보조) 보훈처본부운영(포상금),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보전금)	별정우체국연금(유족연금)
질병 및 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공적연금(장애연금), 산재보험(후유급여 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지원, 국립재활원 기본경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민간경상 보조), 장애인지원관리(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단체(민간경상보조)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민간경상보조) 클린사업장조성지원(민간경상보조),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포상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통및물류),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문화및관광), 특수교육지원(교육), 고궁통입장료 감면(장애인), 교통통신요금감면(장애인)
가족 및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민간경상보조),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민간위탁사업비)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민간경상보조)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민간경상보조) 인구교육추진지원(민간경상보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민간경상 보조) 양성평등문화 확산(민간경상보조) 미래여성인재양성(민간경상보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민간경상보조) 청소년참여지원(포상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민간위탁사업비)	취학전 유아교육복지원(교육), 고궁통입장료 감면(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공공질서및안전),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공공질서및안전), 군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국방), 국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일반·지방행정), 청소년비행예방(공공질서및안전)
사회 보호	-	사회복지협의회의운영(민간경상보조)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민간경상 보조) 지역복지사업평가(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민간경상보조)	-
사회적 배제	생계급여, 자활사업, 간접복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의사상자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민간경상보조) 생계급여(포상금),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민간경상보조) 복지급여사후관리(포상금), 제대군인의료지원(기타보전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민간경상보조)	TV시청료, 내방객신문인원지원(교통및물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통일·외교), 에너지 바우처(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기능	공통영역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순)	추가영역	
		SP	SOCX (정부재정의 '사회복지(080)' 이외 분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문화및관광), EITC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조세자출예산서)
사회 보호 R&D	-	100세 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 사업(R&D),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R&D), 정책연구개발사업(R&D), 사회서비스(R&D)	-
노동	ALMP(고용창출및훈련 등 제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근로조건개선지원 등	-	고용창출및훈련 등
실업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지원금 등	실업크레딧지원사업(기타보전금), 전직실업자등 능력 개발지원(민간 경상보조)	-
주거	주거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의 주택조사(민간 경상보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자료: 저자 작성

16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요약표 6〉 기능별 주요 행정비의 세부사업과 예산목명

기 능	행정비의 주요 세부사업	예산 세목명
노 령	기초연금지급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 고객지원사업	일반수용비, 사업출연금,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유 족	보훈처본부운영, 보상금지급관리, 기금운영비(보훈기금)_국가유공자 단체사업운영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질병및장애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장애인지원관리,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사업출연금, 일반수용비
가족및자녀	보육사업관리,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아동수당	일반연구비, 사업추진비 국내여비 일반연구비
사회보호	평생사회안전망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	일반연구비, 일반연구비, 사업추진비
사회적배제	의사상자제도운영지원, 복지급여사후관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일반수용비, 포상금, 인차료
사회보호 R&D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 정책연구개발(R&D), 정책연구개발사업(R&D),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R&D), 사회서비스(R&D)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노 동 ^{주)}	-	-
실 업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실업급여운영기타경비, 실업급여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전직실업자등 능력 개발지원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주 거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일반출자금

자료: 저자 작성

본 위성계정의 정책적 기여는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계정과 연계하여 도출된 중분류와 세부분류는 국내 첫 연구인 만큼 복지재정을 분석하는데 가장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복지재정 위성계정은 복지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목표 수립과 정책 영역별 우선순위와 방향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복지재정 분야의 사업모니터링과 정책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넷째, UN 국민계정체계에 기반하여 구축했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정이 국민경제 내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경환, 신지영. 2021. p.35).

주요 용어 : 사회보호, 국민계정, 복지계정, 지역복지지출, 세부지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저출산,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의 충격을 흡수 또는 보장하기 위해 복지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이들 지출의 현황파악에는 UN, IMF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가 사용된다(고경환, 신지영. 2021, pp.23~24). 국민계정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포착하여 이를 정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기록하는 일종의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이다(한국은행, 2010). SNA 작성기준에는 ‘일반정부의 기능별 총지출’을 10개 대분류¹⁾에 이어 중분류(69개 부문) 단위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계정’은 재정과 관련한 총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문 프로그램의 현황과 추이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중분류단위까지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고경환, 신지영. 2021, p. 24).

복지부문의 중분류는 개인이나 가계에 제공되는 현금지출과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정책 목적별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중분류를 작성하게 되면 정책영역별 지출현황과 투자 방향 및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출은 9개 부문 즉 노령, 유족, 질병 및 장애,

1) 공공행정, 경제업무,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호 등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및 자녀, 기타사회보호,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R&D, 실업, 그리고 주거로 분류된다. 또한 중분류를 기반으로 개별 영역별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을 작성할 수 있다. 정책 목적인 기능별(예, 질병 및 장애) 지출에 이전지출·행정비용의 교차분류표를 작성하면 각 지출의 규모는 물론 그 구성 요소들(사회급여, 보조금, 피용자 보수,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등)을 개별적이며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경환, 신지영. 2021, p. 24).

이러한 중분류의 유용성이 높음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칠레의 3국가는 분류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그 동안 국내적으로 필요성이 낮았거나 산출할 기초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료된다. 국민계정을 대분류 단계에서 작성하여도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주체별 소비효과나 산업별 소득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국가통계를 중분류까지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별 제도운영과 재원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부처별 협조 등 추가 노력이 요구 된다. 다음으로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방식의 지출규모 차이에 따른 신뢰성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정성호, 김완희, 2015, p.15)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복지재정 분야인 ‘사회보호’의 하위 부문을 알 수 없어 세부 기능별 규모 파악,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규모와 구성, 공공데이터와 연계분석 그리고 국제비교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복지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가를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통계생산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연하면 국가 단위에서 복지재정의 정책 목적별 규모와 동향, 배분 등과 같은 주요 복지재정에 대하여 시계열적 일관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경환, 신지영. 2021, p 24).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을 통해 정책영역별 규모파악과 아울러 이전지출 및 행정비용을 산출함으로 실제 복지지출에

소요되는 세부 재정 영역별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지출과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이용하여 복지정책의 수행과 평가에 있어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측면의 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고경환, 신지영. 2021, p. 25).

본 연구는 복지와 재정지출의 기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이터인프라 구성에 일차적 목적을, 이것을 정책분석과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고에 2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위성계정의 정책적 기여는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계정과 연계하여 도출된 중분류와 세부 분류는 국내 첫 연구인만큼 복지재정을 분석하는데 가장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복지재정 위성계정은 국가의 복지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목표 수립과 정책 영역별 우선순위와 방향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복지재정 분야의 사업모니터링과 정책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넷째, UN 국민계정체계인 SNA에 따라 구축했기 때문에 본 계정체계를 따르는 해외 통계와 비교가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정이 국민경제 내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경환, 신지영. 2021, pp. 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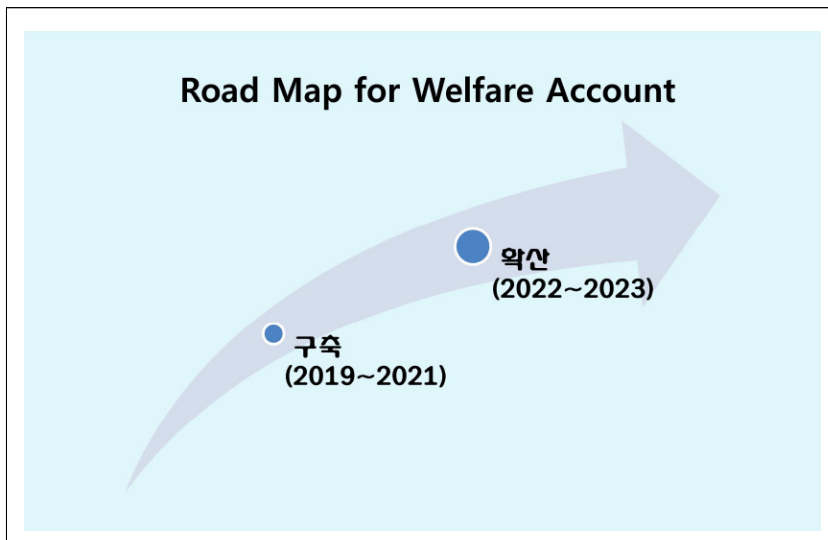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5년사업으로 설계되었으나 3차년도까지 기획된 연구내용을 충실히 달성하고 종료한다. 그 이유는 학술적 측면에서 계정구축을 달성한 것으로 만족하고 운영측면은 후행연구로 넘겨야 할 연구 여건 때문이다.

연구 로드맵은 [그림 1-1]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즉, 구축단계(2019~2021년)와 확산단계(2022년)로 이루어져 있다.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표 1-1>과 같다.

[그림 1-1]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로드맵



자료: 고경환, 이연희, 안수인, 노용환, 홍세영, 김원중. (202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 (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

〈표 1-1〉 연차별 복지계정 구축 사업내용

연차	단 계	사 업 내 용
1차 2019	구축	- 지역복지계정 구축 환경 분석과 자료원 개발 - 복지계정 DB 체계 기획(SOCX 기준) -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기초 Data Set 구축 - 지역복지 통계 생산
2차 2020		- 지역복지계정 구축 환경 분석과 자료원 개발(연속) - 복지계정 DB 체계 기획(SNA 기준) -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기초 Data Set 구축 - Data Set을 활용한 지출세분화 구축 - 지역복지 통계 생산
3차 2021		- 지역복지계정 DB 구축(SNA 기준, 연속) - Data Set을 활용한 지출세분화 구축(연속) - 지역복지계정 구축의 매뉴얼 개발 - 지역복지 통계 생산(연속) - 복지계정을 활용한 지표 발굴
4차 2022	확산	- 지역복지계정 DB 구축(SNA 기준, 연속) - 국제통계 생산(SNA 중분류) -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지방공무원 대상 통계생산 역량(매뉴얼) 교육 - 「복지계정」간행물 발간(초판)
5차 2023		- 기 구축 DB의 시계열 확장 - 지역복지계정의 활용성 확산 - 연구결과 확산(통계리포트, 인포그래픽 등)과 학술대회 개최 - 「복지계정」간행물 발간(속간) - 지방자치단체 통계생산 지원

자료: 저자 작성

1차년도 연구는 OECD회원국 중 처음으로 복지계정을 구축한 덴마크와 이스라엘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EU-재정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중앙통계국과 덴마크 통계청이 복지위성계정을 구축(2016)하였다. 개발된 복지계정은 SOCX작성 기준을 준용하되 급여범위는 보건, ALMP를, 제도에서는 교통통신요금 보조를 제외하였다. 반면 각 기능별 행정비용은 별도로 추가하였다.

2차년도에는 기존 국민계정의 복지재정 분석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정부의 기능별 총지출’을 10개 대분류 단위에서만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²⁾. 복지지출 부문인 ‘사회보호’의 하위영역을 알 수 없어 세부 기능별 규모와 동향 파악, 연관분석, 국제비교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계정의 ‘사회보호’(대분류)에 대해 한 단계 더 세분화한 중분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지출현황,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금년도 연구는 먼저 지역복지지출의 데이터베이스(Data-Set)의 연속 구축이다. 년차별 구축내용은〈표 1-2〉와 같다.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구축의 방향을 더 구체화 한다.

〈표 1-2〉 복지계정 구축의 년차별 비교

	2019년(1년차) ¹⁾	2020년(2년차) ²⁾	2021년(3년차)
작성기준	SOCX	SNA	SNA
하위분류	9개 기능	‘사회보호’ 중분류	‘사회보호’ 중분류
제외영역	-	보건, ALMP, 교통통신요금(보조)	보건, ALMP, 교통통신요금(보조)
추가영역	-	행정비용	행정비용
작성년도	2017	2018	2019
Data Set 형성	○	○	○
통계 생산	국가통계(1개)	○	○
	광역통계(17개)	○	○
정책효과 분석자료	SAM 이용	지출세분화 시도	지출세분화

주: 1) SOCX 작성기준을 기반으로 행정비용을 추가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작성

2) 국민계정의 작성 체계를 기반으로 이스라엘·덴마크 복지위성계정 원용. 국민계정의 복지 부문 위성계정으로 활용에 목표를 둠.

자료: 저자 작성

2) 정부지출은 크게 10개 부문(1. 일반 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 5. 환경보호, 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 보건, 8. 휴양, 문화, 종교, 9. 교육, 10. 사회 보호)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다시 69개로 중분류 한다. 특히 사회보호는 9개로 중분류(1. 질병 및 장애, 2. 노령, 3. 유족, 4. 가족 및 자녀, 5. 실업, 6. 주거, 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8. 사회보호 R&D, 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기능별 정책에 대한 지출 현황을 국가 및 지역단위로 횡단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

둘째, 소관부처 중심을 탈피하여 정부 전체의 기능별 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정책의 동향과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용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복지지출의 세부사업(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공공부조, 사회보호 R&D, 기타 사회보호)과 세부지출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넷째, 사회보장제도는 기능별로 서로 다른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들 급여별 지출변화나 배분 실태에 대해 파악과 분석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예를 들어 GDP 대비 사회보호나 실업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이 급증한 경우 사회위기나 경제위기(visibl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지출 산출 구조의 체계화와 운영전략을 수립한다. 국제적인 작성기준에 따라 지역별 통계를 생산,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복지지출체계의 자동 분류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 결산자료는 매년 큰 틀에서 전년도 분류기준을 유지하지만 당해 연도 사업의 추가·삭제·변경에 따라 부분적인 변경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임에도 분류기준이 지역이나 작성자 혹은 시점에 따라 변경되면 상이한 통계가 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분류는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분류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지리정보체계, 웹리포트 등을 통하여 구축 결과를 확산함으로써 지역별 지출 통계의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복지지출 분석의 다양화를 시도한다. 지역복지를 둘러싼 재정 규모나 배분상태, 재정 자율성 등 다양한 통계들이 복지계정에서 생

산·제공될 수 있도록 지표현황을 살펴보고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재정 규모, 1인당 사회복지비, 복지 재정 자율성, 복지 재정 압박도, 복지 재정 부담도로 구성된 5가지 복지지표의 개념과 선행연구, 산식, 동향 등을 살펴본다.

넷째, 복지DB를 활용한 기초통계의 생산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지역복지지출을 산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분배 현황, 지역별 기능별 재원별 분석, 기능별 지역별 교차분류(Matrix 지표) 분석, 기능별 재원별 교차분류 분석 등이다. 재원분야에서는 일반정부(중앙, 지방)재원, 사회보험 급여, 공기업 등의 규모와 추이 등을 살펴본다.

다섯째, 앞으로 복지계정이 생산되는 안내서로 통계생산 매뉴얼을 개발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IMF가 권고한 ‘재정통계매뉴얼 2014’를 검토하고 적용한다. COFOG의 경제적 분류체계 중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분야를 중심으로 9개 부문(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보호 연구개발, 기타 사회보호)에 대해 개념과 작성방법을 고찰한다. 다시 9개 부문별로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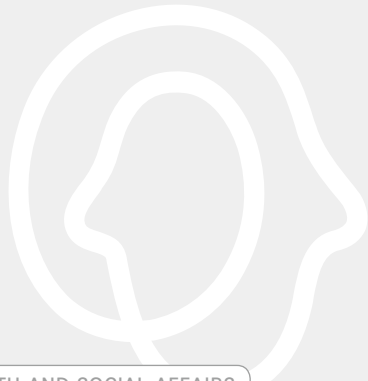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둘째, 국내의 문헌 연구이다. 복지계정에 대한 국제기구나 외국의 선행연구와 구축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지역재정통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지표를 탐색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셋째, 자료 설계 및 산출이다. 계정 구축을 위한 기초 및 연계 자료를 수집, 분석 및 구축한다. 또한 해당 연도의 지역별 복지지출을 산출한다.

넷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을 운영한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등과의 업무 협의를 한다. 또한 지역 통계 산출 전문가와 FGI(집단심층면접)와 포럼을 운영한다.

다섯째, 지역복지계정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준비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전문 업체 위탁 수행(연구 4차년 부터)을 계획한다.

여섯째, 지역복지지출계정의 운영전략을 모색한다. 본 계정과 공공데이터와 연계 분석, 삶의 질과 관계 분석, 복지 지표의 발굴과 산출, 그리고 독일의 사회예산 활용 사례 등을 시도한다.



제2장

복지계정의 작성기준과 체계화

제1절 중분류와 세부 지출의 개념과 구성

제2절 위성계정 구축의 매뉴얼 개발

제3절 복지지출체계의 자동 분류 방안

제 2 장 복지계정의 작성기준과 체계화

국민의 질병, 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복지재정의 현황과약 기준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계정체계(SNA)가 사용되고 있다. SNA는 정책영역별 지출현황과 그 하부영역으로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분류를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국민계정의 복지재정 분야인 ‘사회보호’를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해 본다. 먼저 정책영역별로, 다음 이전지출과 행정비용별로 분류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정의 개발과정과 작성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제1절 중분류와 세부 지출의 개념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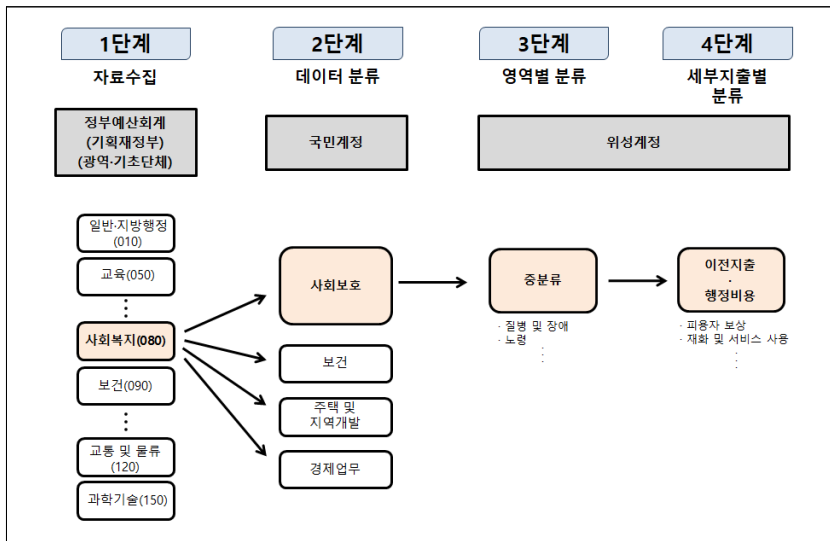
1. 복지계정의 개발 과정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은 3단계로 [그림 2-1]과 같다. 1단계는 정부의 예산자료 수집이다. 정부의 예산자료 15개 분야³⁾ 중 ‘사회복지(080)’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자료를 수집한다. 2단계는 수집 자료를 국민계정 매뉴얼에 따라 분류한다. 복지성 사업은 ‘사회보호’로 분류하고 그 외 사업은 ‘보건’이나 ‘주택’ 등으로 분류한다.

3) 15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국방,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복지, 외교통일, 통신, 일방지방행정, 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사회보호’는 국민계정과 정합성 검토 과정을 거친다. 작성기관에 따라 매뉴얼의 해석과 적용, 분류의 차이나 한계, 해석의 차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확정 된 ‘사회보호’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목적과 지출성격에 따라 중분류와 행정비용으로 분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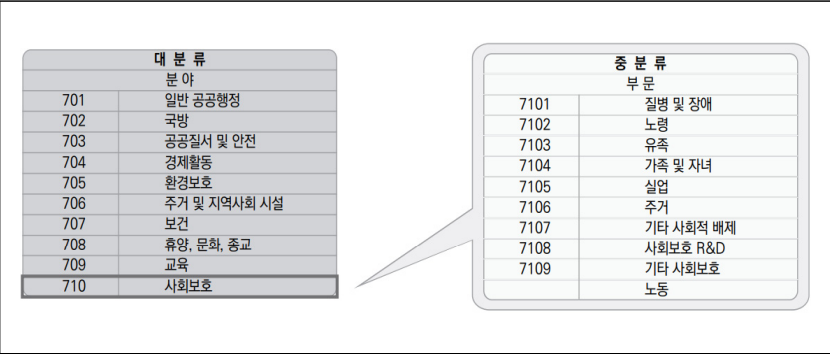
[그림 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 과정



자료: 고정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p. 25를 재구성함.

위성계정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계정 대분류의 ‘사회보호(710)’에 대해 10개 정책 영역별로 중분류를 실시한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국민계정의 10대 분야와 중분류 구조



자료: 고경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p. 26(원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 143.)

다음, 중분류의 10개 개별급여들에 대해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 2-1>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표 2-1> 복지지출을 구성하는 행정비용과 이전지출 구조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이 전 지 출			행 정 비 용 ^{주)}						
	%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소계	파용자보수	재화 및 서비스사용	이자	기타비용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출연

주: 복지지출 항목을 간략히 파악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의 분류체계와 다소 다르게 구성함, 통합 재정수지 분류체계는 부표 1-5 참조.
자료: 고경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p.26(원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257~3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 115~141에서 재인용.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끝으로 10대 정책 영역별 급여에 대해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이다(〈표 2-2〉 참조). 이는 국내 첫 시도한 연구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다.

〈표 2-2〉 위성계정의 기능별 지출 종류별 분류표 양식

부문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피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보조금	사회 급여
계										
노령										
유족										
질병및장애										
가족및자녀										
기타 사회보호										
기타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노동 ^{주)}										
실업										
주거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아 별도 분류함. 국제기준은 비교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인 만큼 우리 여건에 맞게 추가 분류할 수 있음.

자료: 고경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p.27(원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257~3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 115~141에서 재인용.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2. 사회보호의 중분류 개념과 구성

가. 사회보호의 개념

정부지출 중 사회보호 영역은 개인과 가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전지출과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지출이 포함된다. 개인 대상의 서비스와 이전지출은 질병및장애(7101)에서 기타 사회적 배제(7107) 사이에 분류되고, 집단적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사회보호R&D(7108)부터 기타 사회보호(7109)에 해당한다.

집단 대상의 사회보호 서비스에는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 제공 관련 법률 및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등이 포함된다(고경환, 신지영, 2021).

EC통계국(Eurostat)의 ‘1996 유럽 사회보호 통합통계체계(ESSPROS)’에 따라 사회보호의 기능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ESSPROS와의 차이는 보건관리의 포함 여부에 있는데 ESSPROS가 사회보호 영역 안에 보건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분야에서는 보건관리를 포함하지 않고 보건(707)분야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질병및장애(7101)부터 기타사회적배제(7107)까지 현금 급여 및 현물 급여 수령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재화와 서비스는 의료제품 기기·장비(7071), 외래환자서비스(7072), 병원서비스(7073)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계정체계의 Social Protection은 한국어로 ‘사회보호’로 번역되지만 포괄 범위는 사회적 보호 개념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Social Protection과 Social Expenditure와 같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독일은 Social Protection을 두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을 뜻하는 Soziale Sicherung(=Sicherheit)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보호를 뜻하는

Sozialschutz이다. 두 용어의 공통 접두사인 Sozial-은 ‘사회적’ 혹은 ‘사회의’ 라는 뜻이며 그 뒤에 붙는 Sicherung(=Sicherheit)과 Schutz에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 Duden(2021)에 따르면 전자의 Sicherung(=Sicherheit)은 “어떠한 사고 내지는 다른 부정적인 현상/사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인 장치”를 뜻하고, 후자의 Schutz는 “위험을 저지하고 손상/부상을 막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 사전적 정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 연방노동사회성(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1, p.234)에 따르면 “...사회예산의 구성과 구조는 사회보호(Sozialschutz)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위원회와 유럽연합 의회 그리고 유럽 통합 사회보호통계시스템에 의해 충족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Social Protection을 일종의 ‘사회보호’로 해석하는 반면, 독일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Social Protection을 Soziale Sicherung(=Sicherheit)이라는 일종의 ‘사회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07, p.132). 독일어 용어를 영어 및 프랑스어로 함께 기재해 둔 사전(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07, p.234)에서 Protection과 관련한 용어를 찾았을 때, 그 정의는 보장을 의미하는 Sicherung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3〉 참조).

한편 Social Expenditure의 경우 Social Protection 보다 다소 정의가 명료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를 정의하는 독일어 단어는 Soziale Ausgaben과 Soziale Leistungen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Ausgaben의 경우 국민계정의 복지지출, 순지출, 사회지출 등 전체 차원의 소비, 지출을 의미하며 Leistung(en)의 경우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급여지출 등 전자의 Ausgaben에 비해 범위는 다소 좁지만 그 목적이 뚜렷한 지출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된다. 즉, Ausgaben이란 그 자체로 국가지출 등 총량적 측면에서의 지출을 의미하고, Leistungen의 경우 특정한 기능, 제도,

목표 등에 연계된 지출이나 급여항목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Social Expenditure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다. OECD도 사회 정책 통계 체계를 분류함에 있어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을 보면, OECD는 사회정책의 주제별 통계체계를 분류함에 있어 Social Benefits Recipients, Social Expenditure, Pensions at a Glance, 그리고 ELS Pensions를 포용하는 용어로 Social Protection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3] OECD의 주제별 통계분류 체계(대-중-소 분류)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21.11.20. 인출)

독일에서 Social protection을 개별 기관의 필요 및 기능 등에 따라 ‘보장’의 의미를 가진 Sicherung과 ‘보호’의 의미를 가진 Schutz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Social Protection을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Social Protection에 대한 독일 국민연금공단의 용어 사용

한국어	독일어 ¹⁾	영어 ¹⁾	프랑스어 ¹⁾
사회보장	Soziale Sicherung	Social security, Social protection	Protection (f) sociale
사회보장 시스템	Allgemeines Sicherungssystem	General system of social security	régime général de protection
보장목표	Sicherungsziel	Insurance objective, goal of protection	objectif d'assurance
보험(보장)	Assekuranz	Insurance / Protection	Assurance ²⁾

주: 1) 한국어 용어를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각각 번역한 것임

2)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은행을 뜻하는 Banque와 보험을 뜻하는 Assurance가 합쳐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있음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07). Wörterbuch Fachbegriffe der Alterssicherung pp. 234 를 재구성함

4. ‘사회보호’⁴⁾의 중분류별 개념과 급여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사회보호의 중분류를 구성하는 기능별 개념과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168-1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372~377.에서 재인용.

1) 질병 및 장애 (7101)

가) 질병(IS) (71011)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수입 손실 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현금 또는 현물 사회보호 급여로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액형 또는 소득 비례형 병가 지급금(sick-leave payments) 및 기타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와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부조 같은 현물 급여(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가 해당된다.

〈표 2-4〉 질병(71011)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	산재보험급여 근로자건강보호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산재병원지원 안전보건문화정착(산업재해예방) 업종별재해예방(산업재해예방) 유해작업환경개선(산업재해예방)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산업재해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나) 장애(IS) (71012)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또는 정상적 생활을 전혀 또는 일부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현금 또는 현물 사회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에는 장애로 인해 작업 능력이 손상된 정년퇴직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장애 연금, 작업 능력의 손상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 급여, 간호 수당, 장애인용 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기타 사회보호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현물 급여에는 취업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숙박 및 하숙,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장애인의 근로 재활과 사회 재활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직업 훈련 및 기타 훈련, 장애인의 휴양 및 문화 활동이나 여행 또는 지역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이 포함된다. 단,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71020)는 제외한다.

〈표 2-5〉 장애(71012)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보상금(보훈보상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국민연금급여지급_장애연금, 장애일시금 재해보상급여_상이연금(군인연금) 재해보상급여_장애연금, 장애연금일시금(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_장애연금, 장애보상금(공무원연금)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한마음복지관 운영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도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보조)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진폐위로금지급 교통시설이용지원(보훈의료 복지) 국립재활원 인건비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지원 (4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2) 노령 (7102)

노령에 따른 위험(소득 상실, 불충분한 소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자립성 결여, 사회생활 및 지역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으로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노령 연금,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조기 노령 연금, 정년퇴직 연령 이전 또는 이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근로 활동을 하는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 노령 연금, 간호 수당, 퇴직 또는 노령 때문에 지급되는 기타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현물 급여에는 전문 시설에 거주하거나 적정 시설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숙박 및 하숙,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가사 지원, 교통 시설 등),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노인의 휴양 및 문화 활동이나 여행 또는 지역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이 포함된다. 군인 및 정부 피용자에 대한 연금제도는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71012) 또는 실업(71050)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 대한 조기 퇴직급여는 제외한다.

〈표 2-6〉 노령(7102)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지급 노인단체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공적연금연계제도 운영 (국민연금)	국민연금급여지급(노령연금) 연금급여(퇴직연금, 사립학교연금 기금) 퇴직급여(퇴역연금, 군인연금) 퇴직급여(퇴직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수당(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공단관리운영 인건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 보조)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장수수당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효문화 전승 발전사업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 유족 (7103)

고인의 유족(고인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기타 친척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 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유족 연금, 사망 위로금, 기타 유가족에 대한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와 장례비 및 유족들의 지역생활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유족(7103)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	국민연금급여지급(유족연금) 퇴직급여_유족연금(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연금급여_유족연금(사학연금) 퇴직급여_유족연금일시금(군인연금) 연금급여_유족연금일시금(사학연금)	장사시설 설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 지원 보훈가족어울림마당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보훈사업 추진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면제)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보훈의료복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지방보훈청처본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보훈회관 관리운영 고엽제전우회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무궁수훈자회 지원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 현충시설 운영 지원 호국정신 함양사업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4) 가족 및 자녀 (7104)

피부양 자녀가 있는 가계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로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에는 산모 수당,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가족 또는 자녀 수당, 기타 가정 지원 및 특정 비용 충당을 위한 정기 및 일시 지급금(결혼 부모 가정 또는 장애 자녀 가정에 대한 급여 등과 같은 현금 급여)이 포함된다. 현물 급여에는 취약 전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간 보호 및 하숙시설, 주간 보모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영구적으로 어린이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하숙시설(고아원, 입양가족 등), 자녀나 보호자 가정에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족·청소년·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와 재화(휴가 및 여가센터 등) 등이 포함된다. 단, 가족계획 서비스(70740)는 제외된다.

〈표 2-8〉 가족 및 자녀(7104)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아동수당 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중장년층취업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공립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비전센터 운영 청소년미래센터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육성사업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그룹홈 운영비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5) 실업 (7105)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으로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에는 전액 및 부분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해 또는 경제적 이유에 따른 감원조치로 인해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급여, 특정 집단 근로자들의 고용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 정리해고 보상금, 그 외에 실업자 특히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현물 급여에는 이사 및 정착지원금,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실업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 실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숙박·식품·의류 등이 포함된다. 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을 감소 또는 소외계층과 기타 고실업 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일반적 프로그램 또는 제도(70412), 정상퇴직 연령에 도달한 실업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71020)는 제외한다.

〈표 2-9〉 실업(7105)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실업크레딧지원(고용정책)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지원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전직실업자능력 개발지원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국민연금제도 운영사업)	공공근로사업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공모)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 과정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희망일자리사업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6) 주거 (7106)

가계의 주거비용 충당을 위한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이러한 급여의 수령자는 자산 조사를 받음)으로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임대료 지원을 위한 단기 또는 장기 지급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지급금(즉, 주택용자 원리금 상환을 도와 주기 위한 지급금), 저가주택 또는 공공주택의 제공이 해당된다.

〈표 2-10〉 주거(7106)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국민임대출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영구임대출자 임대주택리츠출자 전세임대경상보조 주거급여지원 행복주택출자	임대주택전립(공무원연금)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주거 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107)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소외 위험에 처한 사람들(빈곤층, 저소득층, 이민자, 원주민, 피난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으로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에는 빈곤경감 또는 난곤극복을 위해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소득 보조 및 기타 현금 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현물 급여에는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장단기 보호 및 숙박시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재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상담, 주간 보호, 일상생활 지원, 식품, 의류, 연료,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등이 포함된다.

〈표 2-11〉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7107)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긴급복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3년 주기) 제대군인의료지원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 거주외국인 정주화사업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돌봄SOS센터 운영 사할린 동포 정착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8) 사회보호 R&D (7108)

사회보호와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으로 연구기관, 대학 같은 비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회보호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용자, 보조가 해당되며 기초연구(70140)는 제외된다.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의 정의는 (7014)와 (7015)에 별도 제시되어 있다.

〈표 2-12〉 사회보호 R&D(7108)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R&D)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 사회서비스(R&D)(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연구개발(R&D)(고용노동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사업(R&D)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	-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7109)

전반적인 사회보호 정책·계획·프로그램·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사회보호 제공에 관한 법률과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으로 화재·홍수·지진·기타 평시 재해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5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형태의 사회보호 제공, 평시 재해에 대비한 긴급용도의 식품·장비·기타 보급품의 구입 및 저장, (7101), (7102), (7103), (7104), (7105), (7106), (7107), (7108)로 지정될 수 없는 기타 사회보호 활동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표 2-13〉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7109)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WPRO 전략사업 추진(ODA)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사회복지중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역복지사업평가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재해보상급여_재해부조금(군인연금) 재해보상급여_재해부조금(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_재해부조금(공무원연금)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G-푸드립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재민 구호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10) 노동

〈표 2-14〉 노동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무로법률구조지원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근로자복지지원 퇴직연금 사업운영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기금관리비(인건비)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전정대부)	고용센터인력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고용안정장려금	1인 창조기업 육성 같이살림 프로젝트 강원도마을공동체사업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건전한 근로분위기 조성 지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고용센터 운영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대위변제 근복지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 (정보화)	일터혁신컨설팅지원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고용안정용자사업운영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고용안정사업 관리운영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고용촉진 기반구축 공공근로 취업사업 공유경제 육성 및 지원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11) 제외 부분

〈표 2-15〉 제외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국공채이자상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 생활안정자금(용자) 국가유공자대부(용자) 민간보육시설지원(용자) 장애인자립자금용자(용자)	기타민간차입금이자상환(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대부(용자) 대여학자금용자(용자)(공무원연금) 고용장려금(용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고용보험 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용자) (국민 연금기금)	강릉시자활기금 예치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공원도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예치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 정자금 용자 기금예탁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내부거래(양성평등기금) 보전지출 세부사업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지방채 이자상환(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끝으로 〈표 2-4〉부터 〈표 2-15〉에 해당하는 사회보호 중분류 급여들의 개념을 종합하고 이를 지출 항목, 행정비용으로 구분하면 〈표 2-16〉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6〉 사회보호의 중분류별 개념과 지출항목, 행정비용

중분류		개 념	지출항목	행정비용
1. 질병 및 장애 (7101)	가. 질병 (71011)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수입 손실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	정액형 또는 소득 비례형 병가금 (sick-leave payments), 기타 현금 급여, 부조성 현물급여(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	이들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나. 장애 (71012)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또는 정상적 생활을 전혀 또는 일부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작업 능력의 손상으로 지급되는 조기 퇴직 급여, 간호 수당, 장애인 수당,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2. 노령 (7102)		노령에 따른 위험(소득 상실, 불충분한 소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자립성 결여, 사회생활 및 지역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노령 연금,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조기 노령 연금, 간호 수당, 퇴직 또는 노령 때문에 지급되는 기타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3. 유족 (7103)		고인의 유족(고인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기타 친척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급여	유족 연금, 사망 위로금, 기타 유가족에 대한 정기 또는 일시 지급 장례비 및 유족들의 지역생활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4. 가족 및 자녀 (7104)		피부양 자녀가 있는 가계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산모 수당,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가족 또는 자녀 수당, 기타 가정 지원 취학 전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간 보호 및 하숙시설, 주간 보모 비용 등	
5. 실업 (7105)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 및 현물 급여	전액 및 부분 실업급여,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급여, 직업훈련 수당, 정리해고 보상금 실업자 직업훈련, 실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숙박·식품·의류 등과 같은 현물 급여 등	
6. 주거 (7106)		가계 주거비용 총당의 현물 급여(자산 조사)	임대료 지원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주거비용 지급(즉, 주택용	

중분류	개 념	지출항목	행정비용
7. 미분류 사회적 배제 (7107)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소외 위험에 처한 사람들(빈곤층, 저소득층, 이민자, 원주민, 피난민, 알코올 및 약물 중 독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 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자 원리금 상환금), 저가주택 또 는 공공주택 제공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소득 보조 및 기타 현금 지급금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장단기 보 호 및 숙박시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재활, 취약 계층을 돕 기 위한 상담, 주간 보호, 일상 생활 지원, 식품, 의류, 연료, 기 타 서비스 및 재화 등과 같은 현 물 급여	
8. 사회보호 R&D (7108)	사회보호와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 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사회보호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의 출연, 용자, 보조	-
9. 미분류 사회보호 (7109)	사회보호 정책·계획·프로그 램·예산의 수립·집행·조정· 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운 영·지원, 사회보호 제공에 관한 법률 과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 회보호에 관한 일반정보, 기 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화재·홍수·지진에 따른 재해 희 생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평시 재해에 대비한 긴급용도의 식품·장비·기타 보급품의 구입 및 저장	-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168-1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372 ~377. 에서 재인용.

3.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개념과 구성

사회보호의 중분류를 구성하는 <표 2-16>의 개별급여들은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지출은 <표 2-17>의 보조금(5)과 사회급여(7)로, 행정비용은 그 외 항목들은 (1,2,3,4,6,8,9)로 이루어져 있다. 비목명은 UN의 경제 분류별 개념에 따라 우리나라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4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표 2-17〉 사회보호의 세부 지출별 개념과 급여, 비목명

경제 분류	개 념	비목명 ¹⁾
1. 피용자 보수	- 피용자가 수행하는 근로 대가로써 현금 및 현물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 - 임금, 급여, 피용자를 대신하여 사회보험제도에 납부하는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인건비, 여비, 연구용역비
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 시장 및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구성 - 고정자본소비, 자가 건설 관련 재화와 서비스 사용, 정부가 구매하여 변환 없이 배분하는 현물. 이러한 이전은 보조, 출연, 사회급여, 또는 기타 미분류 경 상 이전으로 분류됨	업무추진비, 예비비 및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²⁾ , 특수활동비 ²⁾
3. 고정 자본 소비	물리적 감모, 정상적 진부화, 또는 정상적 사고 손실에 의해 정부단위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현시점의 가치 하락	전출금 등: 감가상각비, 기금전출금
4. 이자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을 또 다른 기관단위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수취하는 일종의 투자이익	상환지출, 예탁금, 이차보전금
5. 보조금	생산활동 수준 기준으로, 또는 생산, 판매, 수출 및 수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정부단위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일방적인 경 상 이전	보전금(배상금, 손실보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6. 출연	조세, 보조금, 또는 사회기여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정부단위가 거주나 비거주 정부단위, 또는 국제기구에 지급하는 이전	일반출연금, 출자금
7. 사회급여	질병, 실업, 퇴직, 주거, 교육 또는 가정 사정 등의 예처럼, 사회적 위험에 수반되는 필요를 위한 제공을 목적으로 가계가 수취하는 경 상이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8. 기타비용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기타 4미분류 이전, 그리고 비생명보험과 표준화된 보증 관련 보험료, 수수료 및 보험청구권의 지급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용자금, 전출금등, 해외이전
9.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자가건설 관련 원가의 자본화 해당분	건설보상비, 건설비, 무형자산, 연구개발, 출연금, 유형자산

주: 1)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2) 매뉴얼에 따라 업무 중에 사용되는 직무수행경비와 특수활동비는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분류(재정통계매뉴얼 2014(IM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257~313.에서 재인용; 원문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 115~141.

가. 피용자 보수

보고기간 동안 고용주-피용자 관계에서 피용자가 수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현금 및 현물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이다. 이러한 금액은 기관단위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임금 및 급여, 피용자를 대신하여 사회보험제도에 납부하는 고용주의 사회기여금을 포함한다.

〈표 2-18〉 피용자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여비, 연구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교육여비, 국외업무여비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연가보상비, 일용임금, 기타직 보수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기타직보수, 보수	
		국외교육여비 상용임금 연가보상비 일용임금	공무원 교육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민간인국외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성과보상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외빈초청여비 월액여비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직급보조비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시장 및 시장 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구성된다. 단, 고정자본소비, 비금융자산 취득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자가 건설 관련 원가의 자본화에서의 재화와 서비스 사용, 정부가 구매하여 변환 없이 배분하는 현물 이전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재화는 제외되는데 이러한 이전은 보조, 출연, 사회급여, 또는 기타 미분류 경상 이전으로 분류된다.

〈표 2-19〉 재화 및 서비스 사용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¹⁾	세목명 ¹⁾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비비 및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²⁾ , 특수활동비 ²⁾	업무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및 손실금, 예비금, 예비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리용역비, 급 식비, 기타운영비, 복리후생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험연구비, 유류비, 일·숙직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재료비, 특근매식비, 피복비, 학교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교수보직경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재료비, 특정업무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관리용역비 관서업무추진비 급식비 기타운영비 반환금 및 손실금 복리후생비 사업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 유류비 일·숙직비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정책연구비 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운영비

주: 1)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2) 매뉴얼에 따라 업무 중에 사용되는 직무수행경비와 특수활동비는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분류(재정통계매뉴얼 2014(IM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다. 고정 자본 소비(제외부분에 포함)

물리적 감모, 정상적 진부화, 또는 정상적 사고 손실에 의해 정부단위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현시점의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표 2-20〉 고정 자본 소비(제외부분에 포함)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등	전출금 등: 감가상각비,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라. 이자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을 또 다른 기관단위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수취하는 일종의 투자이익을 의미한다.

〈표 2-21〉 이자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상환지출, 예탁금	상환지출: 국내차입금상환, 민간예수금원금상환, 민간예수금이자,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 전대차원금상환, 전대차관이자, 차입금이자, 해외차입금상환 예탁금: 기금예탁금, 일반회계예탁금, 특별회계예탁금	이자보전금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마. 보조

생산활동 수준 기준으로, 또는 생산, 판매, 수출 및 수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정부단위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일방적인 경상 이전을 의미한다.

〈표 2-22〉 보조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보전금: 배상금, 손실보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배상금(등), 포상금	
		기타보전금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바. 출연

조세, 보조금, 또는 사회기여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정부단위가 거주나 비거주 정부단위, 또는 국제기구에 지급하는 이전을 의미한다.

〈표 2-23〉 출연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출연금, 출자금	일반출연금: 금융성기금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 사업출연금 출자금: 일반출자금	금융성기금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일반출자금	출연금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사. 사회급여

질병, 실업, 퇴직, 주거, 교육 또는 가정 사정 등의 예처럼, 사회적 위험에 수반되는 필요를 위한 제공을 목적으로 가계가 수취하는 경상이전을 의미한다.

〈표 2-24〉 사회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구호 및 교정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인위탁교육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간부담금 장학금및학자금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아. 기타비용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기타 미분류 이전, 그리고 비생명보험과 표준화된 보증 관련 보험료, 수수료 및 보험청구권의 지급액을 의미한다.

〈표 2-25〉 기타비용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융자금, 전출금등, 해외이전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공채매입, 국채매입, 기타 유가증권매입,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지방채매입,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한국은행예치금 융자금: 기타민간융자금, 지방자치단체융자금, 통화 금융기관융자금 전출금 등: 계정간전출금, 기금전출금, 기타전출금, 당기순이익, 일반회계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해외이전: 국제부담금, 해외경상이전, 해외자본이전	국제부담금	
		고용부담금 구호및교정비 해외경상이전 해외자본이전	-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자.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자가건설 관련 원가의 자본화 해당분을 의미한다.

〈표 2-26〉 비금융자산의 순투자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예산목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보상비, 건설비, 무형자산, 연구개발 출연금, 유형자산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 건설비: 감리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 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무형자산: 무형자산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연구활 동비등,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 장비·시스템구축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저장품매입비 지분취득비: 지분취득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 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 업비 기타자본이전 민간단채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비법정전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설보상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무형자산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실시설계비 연구개발연구활동 비등 자산취득비	

주: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지출항목의 분류는 GFS 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차. 제외 부분

아래는 행정비용 중 앞의 9개 분류에 속하지 않는 비목과 세목들을 중앙정부, 사회보험기관, 지방정부별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정책목적의 용자 지출이나 회수금, 보전 수입이나 보전 지출, 회계 및 기금 상호간의 내부 거래 등이 해당 된다.

〈표 2-27〉 제외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명

비목명	세목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상환지출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용자금, 전출금등, 자치단체이전	상환지출: 국내차입금상환, 민간예수금원금상환, 민간예수금이자,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 전대차원금상환, 전대차관이자, 차입금이자, 해외차입금상환 예탁금: 기금예탁금, 일반회계예탁금, 특별회계예탁금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공채매입, 국채매입, 기타유가증권매입,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지방채매입,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한국은행예치금 용자금: 기타민간용자금, 지방자치단체용자금, 통화금융기관용자금 전출금 등: 계정간전출금, 기금전출금, 기타전출금, 당기순이익, 일반회계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용자금 차입금이자 민간예수금이자 기금전출금 통화금융기관용자금	차입금이자 기타민간용자금	지방채증권원금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치금 민간용자금 기타회계전출금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적립금 예탁금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용자금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법정전출금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제2절 위성계정 구축의 매뉴얼 개발

1. 자료 수집

가. 기초 자료

복지계정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결산 재정 자료이다. 자료는 중앙정부의 D-brain시스템과 지방정부의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료가 모두 수집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1)를 통해 자치단체별 재정과 전체의 규모를 비교·검토한다. 수집하는 재정자료는 정부예산회계 10대 분류 가운데 ‘사회복지(080)’ 분야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정리한다.

나. 자료원의 구조

중앙 및 지방정부 자료시스템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28〉 중앙 및 지방정부 자료시스템의 구조

지역	소관	예산 구분	회계	회계 구분	기금 구분	회계 명	계정 명	분야 명	부문 명	부서 코드	부서 명	프로 그램 명	단위 사업 명	세부 사업	세부 사업 명	목명	세목 명
								사회 복지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을 참고함.

- 가.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집
- 나. ‘소관명’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명
- 다. ‘예산구분’은 기금, 예산
- 라. ‘회계’은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마. ‘회계구분’은 기금,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바. ‘기금구분명’은 계정성기금,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 사. ‘회계명’은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립재활원,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주택도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아. ‘계정명’은 5·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국가유공자지원자금, 국민건강증진계정, 손익계정, 신용보증사업계정, 자본계정, 주택계정, 중소기업계정,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투자계정,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자. ‘분야명’은 사회복지
- 차. ‘부문명’은 고용, 고용노동일반,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동, 노인, 보훈,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주택, 취약계층지원,
- 카. ‘프로그램명’은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안전망확충, 공무원연금급여지급, 국민연금운영, 기초생활보장, 노숙인의사상자지원, 노인생활안정, 보육지원강화, 보훈선양,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사회복지기반조성, 산재보험,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여성가족부행정지원,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일자리지원, 장애인고용증진,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

상,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등

타. '단위사업명'은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가족서비스지원,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고객지원, 고령친화산업육성, 공적연금연계제도운영, 교육급여, 교통시설이용지원,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지원, 긴급복지, 노숙인등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독립유공자예우 모성보호육아지원, 방과후 돌봄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재근로자재활복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실업급여, 아동수당 지원, 아이돌봄지원, 어린이집 지원, 자활지원,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청소년 체험활동기회확대, 퇴직급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한부모가족지원(기금), 현충시설 등

파. '세부사업명'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객지원사업, 공공형어린이집,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정보화), 구직급여, 국립재활원 인건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국민연금급여지급, 나눔문화확산, 노인보호전문기관, 다함께 돌봄 사업, 모성보호육아지원, 미래여성인재 양성, 발달장애인 지원, 보상금지급관리,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망일시금,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산재보험급여, 시간제보육지원, 실업크레딧지원, 어린이집 확충, 영주귀국정착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재해보상급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주거급여, 참전유공자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하. '목명'은 건설보상비, 건설비, 무형자산, 민간이전, 보전금,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개발출연금, 연구용역비, 예비비및기타, 운영비, 유형자산, 인건비, 일반출연금, 직무수행경비, 출자금, 해외이전

가. '세목명'은 감리비, 건설보상비, 구호및교정비, 국내여비, 국제부담금, 기타보전금, 기타직보수, 무형자산, 민간경상보조, 법정민간대행사

업비, 보험금, 사업출연금, 상용임금, 시험연구비,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일반출자금, 임차료 자산취득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해외경상이전 등

다. 자료의 수집시기와 방법

정부의 당년도 결산은 익년도 6월말에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결산자료를 사용하는 만큼 7월말쯤 수집을 할 수 있다. 수집방법은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에,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차세대재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수집방법이 변화되리라 기대된다.

라. 수집자료 정리방법

2019년도 기준 자료는 170,966건으로 방대하다. 이중 중앙정부 및 사회보험이 3,471건, 광역자치단체 15,792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151,70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앙정부 프로그램 갯수(사회보험 제외)에는 자체사업이 418건 있다. 자체사업에 대해 보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건),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110건), 교육부 교육급여(1건), 국가보훈처 보상금지급관리 등(114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 등(3건), 기획재정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등(9건), 보건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111건),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69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연계에 따라 이중계산을 피하고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 재정 시스템에서 자치단체이전은 삭제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와 지방매칭사업비의 합을 활용하고 있다. 매칭사업비에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이전과 지방정부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이전은 삭제하고 광역보조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 합으로 사용하였다.

2. 분류 단계

가. 정부예산 자료로 국민계정의 “사회보호” 작성

정부예산의 “사회복지(080)”로 국민계정의 “사회보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체계(SNA)가 제시하는 사회보호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그 하위 분류(중분류)의 개념들과 지출항목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사회보호(710)의 개념⁵⁾

사회보호에 포함되는 정부지출에는 개인과 가계 대상의 이전지출과 개인적 서비스 및 집단적 서비스 지출이 포함된다. 개인적 서비스 및 이전 지출은 질병 및 장애(7101)에서 기타 사회적 배제(7107)의 범위에서 분류되고, 집단적 서비스 지출은 사회보호 R&D(7108)에서 기타 사회보호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에서 재구성; 원문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168-170.

(7109) 범위에서 분류되고 있다.

집단적 서비스에는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 사회보호 제공 관련 법률 및 기준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회보호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응용연구와 실험개발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호는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의 ‘1996 유럽 사회보호 통합통계체계(ESSPROS)’에 기초하여 정의되고 기능이 부여된다. ESSPROS에서는 사회보호에 보건 관리가 포함되지만, 이 분야에서는 보건 관리가 별도의 보건(707) 분야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질병 및 장애(7101)부터 기타 사회적 배제(7107)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재화와 서비스는 의료제품·기기·장비(7071), 외래 환자서비스(7072), 병원서비스(7073)로 분류된다.

2) ‘사회보호’ 중분류

이하 내용은 제3장 1절의 ‘2. 사회보호의 중분류 개념과 구성’과 ‘3.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개념과 구성’ 참조

3. 조정 단계

가. 지역통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회보험 급여 차액

〈표 2-29〉와 같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지역통계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

〈표 2-29〉 지역별통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회보험급여 차액 비교(2019년)

(단위: 십억 원)

사회보험	비교금액 ¹⁾	기준금액	차액 ²⁾
	보험자 제공 지역통계(A)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	(B-A)
계	58,695	62,017	3,322
국민연금	22,764	22,764	-
공무원연금	14,296 ³⁾	17,017	2,721
사학연금	3,619	3,607	△12
군인연금	2,772 ³⁾	3,364	592
고용보험_고용보험	-		
고용보험_모성보호	1,329	1,350	21
고용보험_실업급여	8,386	8,386	-
산재보험	5,529	5,529	-

주: 1) 각 기관의 공표 자료

2) 지역별통계연보(A)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 간 수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차액(B-A)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별 통계연보의 급여비율에 따라 배분.

3) 관련 기관의 내부자료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정보 > 통계자료 > 2019년 주요통계 (https://www.geps.or.kr/g_data/page_1901.jsp 에서 2021.4.5. 인출); 2019년 주요통계, 2019년 기준 지역별 급여종류별 공무원연금(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사학연금 통계연보, 2019년 결산자료 작성기준 급여지급내역(내부자료); 국방부, 2019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2019년 기준 지역별 급여종류별 군인연금(내부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고용보험통계연보, 지역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추이(계속), 지역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추이(계속), 지역별 성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근로복지공단, 2019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지사별·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지역통계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이 지역통계 보다 큰 경우 추가 배분을, 작은 경우는 공제하는 조정을 한다. 이 경우 조정방법은 광역자치단체별 급여종류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아래 표에서는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표 2-30〉 참조)

〈표 2-30〉 지역통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조정방법:
공무원연금급여 예시(2019년)

(단위: 십억 원)

구분	지역 통계(A)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				차 액 (B-A)
	퇴직연금	분할연 금	퇴직유족 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장해연 금	소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소계	
계	13,137	7	1,077	28	47	14,296	15,668	1,267	83	17,017	2,721
서울	2,464	2	195	4	7	2,672	2,940	224	12	3,176	504
부산	910	0	73	2	4	989	1,085	86	6	1,177	188
대구	728	0	69	2	2	800	868	79	3	951	151
인천	430	0	33	1	1	466	512	41	3	556	90
광주	643	0	61	1	2	708	767	70	4	841	133
대전	558	0	52	1	3	614	666	60	5	730	116
울산	140	0	8	0	0	149	167	11	0	178	29
세종	69	0	3	0	0	73	83	4	0	88	15
경기	2,367	1	184	5	8	2,565	2,823	219	15	3,056	491
강원	710	0	65	1	3	780	847	75	5	927	147
충북	552	0	49	1	3	605	658	56	4	719	114
충남	494	0	40	1	2	536	589	46	3	638	101
전북	721	0	61	2	3	786	859	72	5	937	150
전남	532	0	40	1	2	576	635	49	4	687	111
경북	739	0	57	2	3	802	882	69	5	956	154
경남	879	0	74	2	4	959	1,048	88	6	1,142	183
제주	201	0	14	1	1	216	240	17	1	259	42

주: 퇴직연금 및 분할연금은 내부자료적용,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차액 퇴직수당은 퇴직연금 지역별 비율로,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유족연금 지역별 비율로,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은 내부자료 적용,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_사망조의금은 순직유족연금 등 지역별 비율로, 장해연금은 내부자료 적용, 요양급여, 장해일시금은 장해연금 지역별 비율로 적용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정보 > 통계자료 > 2019년 주요통계

(https://www.geps.or.kr/g_data/page_1901.jsp 에서 2021.4.5. 인출), 2019년 기준 지역별 급여종류별 공무원연금(내부자료)

나. 중앙정부 자체사업의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중앙정부 자체사업 재정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출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배분한다.

〈표 2-31〉 중앙정부 자체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2019년): 서울시, 가족 및 자녀

(단위: 백만 원)

	계	고용노동부 ¹⁾	기획재정부 ²⁾	보건복지부 ³⁾	여성가족부 ⁴⁾
합 계	280,299	30,291	4,402	47,621	197,985
피용자 보수	23,225	3		1,489	21,733
재화 및 서비스 사용	50,373	1,310		12,654	36,408
보조	859			68	790
출연	29,504		4,402		25,102
사회급여	155,971	28,978		33,124	93,869
기타비용	5,587			255	5,332
비금융자산의순투자	14,780			30	14,750

주: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중장년층취업지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보육사업관리,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참여지원, 행정능률향상및민원서비스개선사업,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표 2-3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율

인구비	1.000		
서울	0.188	강원	0.030
부산	0.066	충북	0.031
대구	0.047	충남	0.041
인천	0.057	전북	0.035
광주	0.028	전남	0.036
대전	0.028	경북	0.051
울산	0.022	경남	0.065
세종	0.007	제주	0.013
경기	0.255		

자료: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4. 제표작업 및 분석

국가통계와 광역자치단체의 아래 통계표 작성은 엑셀의 ‘피벗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였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DATA SET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본 제표작업에서 도출한 주요 통계

와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공통 및 추가 영역들을 제시한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작성은 앞의 분류단계에서 살펴본 매뉴얼 기준에 따랐다. 매뉴얼의 주된 내용을 보면 현금급여는 제반 수당과 사회보험의 현금성 급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반 수당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아기수당, 장수노인수당,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100세인 수당 등이 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속하는 세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로 보면 된다.

가. 국가통계

〈표 2-33〉 국민계정 ‘사회보호’의 10대 중분류와 지출규모(2018, 2019)

(단위: 십억 원)

중분류	2018	2019
국민계정의 사회보호	131,120	146,722
계	131,120	146,722
노령	55,878	62,641
유족	7,913	8,862
질병 및 장애	13,114	15,041
가족 및 자녀	18,405	22,703
기타 사회보호	828	1,408
기타 사회적 배제	14,629	14,779
사회보호 R&D	75	79
노동주)	8,605	9,167
실업	7,721	9,356
주거	3,953	2,686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8, 2019). 2018-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8, 2019). 2018-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0.9.20.과 2021.4.5.; 행정안전부. (2018, 2019). 2018-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0.9.20.과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8,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8,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8,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8,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8,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8,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19, 2020). 2018-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0.9.20.과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34〉 복지지출의 세부지출별 금액(2018, 2019년)

(단위: 십억 원)

기능		2018	2019
계		131,120	146,722
행정비용	피용자 보수	2,115	2,484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889	1,705
	이 자	8	17
	기타비용	49	54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8,179	10,648
	출 연	4,899	2,099
이전지출	보 조	6,520	7,159
	사 회 급 여	107,463	122,555

자료: 기획재정부. (2018, 2019). 2018-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8, 2019). 2018-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0.9.20.과 2021.4.5.; 행정안전부. (2018, 2019). 2018-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0.9.20.과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8,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8,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8,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8,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8,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8,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19, 2020). 2018-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0.9.20.과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35〉 복지지출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금액과 구성비(2018)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파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131,120 (100.0)	17,138 (13.1)	2,115 (1.6)	1,889 (1.4)	8 (0.0)	49 (0.0)	8,179 (6.2)	4,899 (3.7)	113,982 (86.9)	6,520 (5.0)	107,463 (82.0)
노령	42.6	55,878 (100.0)	2,474 (4.4)	592 (1.1)	811 (1.5)	- (0.0)	2 (0.0)	975 (1.7)	93 (0.2)	53,404 (95.6)	60 (0.1)	53,344 (95.5)
유족	6.0	7,913 (100.0)	625 (7.9)	104 (1.3)	116 (1.5)	2 (0.0)	4 (0.1)	292 (3.7)	106 (1.3)	7,288 (92.1)	2,194 (27.7)	5,094 (64.4)
질병및 장애	10.0	13,114 (100.0)	2,500 (19.1)	207 (1.6)	64 (0.5)	2 (0.0)	7 (0.1)	1,447 (11.0)	774 (5.9)	10,613 (80.9)	2,227 (17.0)	8,386 (63.9)
가족및 자녀	14.0	18,405 (100.0)	4,598 (25.0)	161 (0.9)	229 (1.2)	- (0.0)	6 (0.0)	4,059 (22.1)	144 (0.8)	13,806 (75.0)	133 (0.7)	13,673 (74.3)
기타 사회 보호	0.6	828 (100.0)	470 (56.7)	142 (17.1)	57 (6.9)	- (0.0)	4 (0.5)	234 (28.2)	33 (4.0)	358 (43.3)	14 (1.7)	344 (41.6)
기타 사회적 배제	11.2	14,629 (100.0)	1,319 (9.0)	137 (0.9)	69 (0.5)	1 (0.0)	1 (0.0)	895 (6.1)	216 (1.5)	13,309 (91.0)	565 (3.9)	12,745 (87.1)
사회 보호 R&D	0.1	75 (100.0)	9 (12.3)	1 (0.9)	5 (6.1)	- (0.0)	0 (0.1)	4 (5.1)	- (0.0)	66 (87.7)	- (0.0)	66 (87.7)
노동 ^{주)}	6.6	8,605 (100.0)	2,461 (28.6)	683 (7.9)	520 (6.0)	2 (0.0)	24 (0.3)	86 (1.0)	1,145 (13.3)	6,144 (71.4)	1,258 (14.6)	4,886 (56.8)
실업	5.9	7,721 (100.0)	103 (1.3)	82 (1.1)	15 (0.2)	- (0.0)	- (0.0)	6 (0.1)	- (0.0)	7,618 (98.7)	63 (0.8)	7,555 (97.8)
주거	3.0	3,953 (100.0)	2,578 (65.2)	4 (0.1)	3 (0.1)	1 (0.0)	- (0.0)	181 (4.6)	2,388 (60.4)	1,375 (34.8)	5 (0.1)	1,370 (34.7)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고경환 등. (202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6
을 재구성함(원자료: 자료: 기획재정부. (2018). 2018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0.9.20.;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0.9.20.;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8), 내부자료; 국방부. (2018).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8).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19). 2018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0.9.20.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74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표 2-36〉 복지지출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금액과 구성비(2019)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피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146,722 (100.0)	17,008 (11.6)	2,484 (1.7)	1,705 (1.2)	17 (0.0)	54 (0.0)	10,648 (7.3)	2,099 (1.4)	129,714 (88.4)	7,159 (4.9)	122,555 (83.5)
노령	42.7	62,641 (100.0)	2,668 (4.3)	682 (1.1)	767 (1.2)	- (0.0)	4 (0.0)	1,117 (1.8)	98 (0.2)	59,972 (95.7)	78 (0.1)	59,895 (95.6)
유족	6.0	8,862 (100.0)	715 (8.1)	111 (1.2)	119 (1.3)	2 (0.0)	5 (0.1)	372 (4.2)	106 (1.2)	8,147 (91.9)	2,502 (28.2)	5,645 (63.7)
질병및 장애	10.3	15,041 (100.0)	2,869 (19.1)	254 (1.7)	72 (0.5)	2 (0.0)	9 (0.1)	1,672 (11.1)	861 (5.7)	12,172 (80.9)	2,047 (13.6)	10,124 (67.3)
가족및 자녀	15.5	22,703 (100.0)	5,591 (24.6)	172 (0.8)	254 (1.1)	1 (0.0)	6 (0.0)	4,966 (21.9)	193 (0.8)	17,112 (75.4)	158 (0.7)	16,954 (74.7)
기타 사회 보호	1.0	1,408 (100.0)	565 (40.2)	93 (6.6)	75 (5.4)	1 (0.0)	6 (0.4)	299 (21.2)	91 (6.5)	842 (59.8)	481 (34.2)	361 (25.7)
기타 사회적 배제	10.1	14,779 (100.0)	1,421 (9.6)	117 (0.8)	64 (0.4)	0 (0.0)	- (0.0)	1,057 (7.1)	183 (1.2)	13,358 (90.4)	17 (0.1)	13,341 (90.3)
사회 보호 R&D	0.1	79 (100.0)	9 (11.6)	1 (1.0)	5 (6.4)	- (0.0)	0 (0.2)	3 (4.0)	- (0.0)	70 (88.4)	- (0.0)	70 (88.4)
노동 ^{주)}	6.2	9,167 (100.0)	1,931 (21.1)	929 (10.1)	325 (3.5)	1 (0.0)	25 (0.3)	132 (1.4)	518 (5.6)	7,236 (78.9)	1,806 (19.7)	5,430 (59.2)
실업	6.4	9,356 (100.0)	149 (1.6)	124 (1.3)	17 (0.2)	- (0.0)	- (0.0)	7 (0.1)	0 (0.0)	9,207 (98.4)	70 (0.7)	9,137 (97.7)
주거	1.8	2,686 (100.0)	1,089 (40.5)	1 (0.0)	7 (0.3)	10 (0.4)	- (0.0)	1,022 (38.1)	49 (1.8)	1,597 (59.5)	1 (0.0)	1,597 (59.4)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나. 광역자치단체 통계

〈표 2-37〉 광역자치단체별 정부부문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중앙정부	지방매칭비 (국고보조사업, 시도보조사업)	지방자체사업비
계	78,362	49,330	23,664	5,368
서울	15,513	8,479	5,768	1,266
부산	6,047	4,580	1,351	116
대구	3,611	2,666	861	83
인천	3,451	2,166	1,068	217
광주	2,932	2,227	640	65
대전	2,624	1,896	651	77
울산	1,383	859	461	62
세종	392	234	102	56
경기	15,527	9,329	4,923	1,274
강원	2,940	1,713	899	328
충북	2,590	1,597	702	290
충남	3,072	1,864	876	332
전북	3,497	2,295	1,012	190
전남	3,731	2,403	1,103	225
경북	4,620	2,993	1,355	272
경남	5,144	3,279	1,508	357
제주	1,290	747	384	15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3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노령	유족	질병 및 장애	가족 및 자녀	기타 사회 보호	기타 사회적 배제	사회 보호 R&D	노동	실업	주거
계	146,722	62,641	8,862	15,041	22,703	1,408	14,779	79	9,167	9,356	2,686
서울	29,121	11,666	2,251	3,137	4,256	444	2,603	15	1,663	1,821	1,265
부산	11,118	4,629	837	1,300	1,203	149	1,505	5	619	718	153
대구	6,976	3,041	627	926	898	112	406	4	429	433	102
인천	6,588	2,818	295	631	1,173	36	413	4	509	592	118
광주	5,185	1,968	535	759	644	88	618	2	255	246	70
대전	4,904	1,919	466	714	673	85	488	2	246	265	48
울산	2,872	1,143	119	325	519	13	240	2	230	257	24
세종	693	285	22	34	194	7	45	1	56	46	5
경기	30,219	12,304	1,329	2,739	6,059	197	2,624	20	2,244	2,353	351
강원	5,963	2,730	357	758	720	39	602	2	381	272	101
충북	4,842	2,260	223	437	758	21	551	2	287	258	43
충남	5,591	2,624	274	489	921	40	548	3	341	303	46
전북	6,185	2,991	252	483	812	26	915	3	339	298	65
전남	6,068	2,925	265	472	874	34	837	3	314	261	82
경북	8,502	4,127	412	671	1,169	31	1,038	4	486	485	81
경남	9,835	4,426	465	935	1,422	57	1,135	5	634	655	100
제주	2,057	786	133	230	408	28	209	1	135	93	34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39〉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9년)

(단위: 천원, 십억 원, 명)

지역	1인당 지출액(A/B)	지역복지지출액(A)	인구수(B)
계	2,830	146,722	51,849,861
서울	2,993	29,121	9,729,107
부산	3,257	11,118	3,413,841
대구	2,862	6,976	2,438,031
인천	2,228	6,588	2,957,026
광주	3,560	5,185	1,456,468
대전	3,325	4,904	1,474,870
울산	2,502	2,872	1,148,019
세종	2,036	693	340,575
경기	2,282	30,219	13,239,666
강원	3,868	5,963	1,541,502
충북	3,026	4,842	1,600,007
충남	2,633	5,591	2,123,709
전북	3,400	6,185	1,818,917
전남	3,247	6,068	1,868,745
경북	3,189	8,502	2,665,836
경남	2,925	9,835	3,362,553
제주	3,066	2,057	670,98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40〉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단위: GRDP 대비 %)

지역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계	7.63	2.56	1.51	3.55
서울	6.72	1.96	1.62	3.14
부산	12.03	4.95	1.59	5.48
대구	12.08	4.62	1.63	5.83
인천	7.36	2.42	1.43	3.50
광주	12.60	5.41	1.71	5.48
대전	11.46	4.43	1.70	5.33
울산	3.83	1.15	0.70	1.99
세종	5.85	1.97	1.33	2.54
경기	6.32	1.95	1.30	3.07
강원	12.26	3.52	2.52	6.22
충북	6.98	2.30	1.43	3.25
충남	4.88	1.63	1.05	2.20
전북	11.93	4.43	2.32	5.19
전남	7.90	3.13	1.73	3.04
경북	7.92	2.79	1.52	3.62
경남	8.72	2.91	1.65	4.16
제주	10.15	3.69	2.68	3.7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4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46,722	49,330	29,032	23,664	5,368	68,360	48,242	13,788	6,330
서울	29,121	8,479	7,034	5,768	1,266	13,608	9,747	2,900	961
부산	11,118	4,580	1,467	1,351	116	5,071	3,542	1,040	488
대구	6,976	2,666	944	861	83	3,366	2,421	630	314
인천	6,588	2,166	1,284	1,068	217	3,137	2,012	830	295
광주	5,185	2,227	705	640	65	2,254	1,645	359	250
대전	4,904	1,896	728	651	77	2,280	1,617	405	258
울산	2,872	859	523	461	62	1,489	908	373	209
세종	693	234	158	102	56	301	232	69	-
경기	30,219	9,329	6,198	4,923	1,274	14,692	9,849	3,482	1,361
강원	5,963	1,713	1,226	899	328	3,024	2,058	378	587
충북	4,842	1,597	992	702	290	2,253	1,683	379	191
충남	5,591	1,864	1,208	876	332	2,519	1,855	445	219
전북	6,185	2,295	1,202	1,012	190	2,688	2,067	423	199
전남	6,068	2,403	1,328	1,103	225	2,337	1,823	346	168
경북	8,502	2,993	1,627	1,355	272	3,883	2,910	684	288
경남	9,835	3,279	1,865	1,508	357	4,691	3,285	903	503
제주	2,057	747	543	384	159	767	587	140	40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42〉 기능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9년)

(단위: 십억 원)

기 능	계	현 금	현 물
계	146,722	71,099	75,622
노 령	62,641	56,738	5,903
유 족	8,862	4,212	4,650
질병및장애	15,041	1,858	13,183
가족및자녀	22,703	4,022	18,681
사회보호	1,408	0	1,408
사회적배제	14,779	4,270	10,509
사회보호R&D	79	-	79
노 동	9,167	-	9,167
실 업	9,356	8,386 ¹⁾	970
주 거	2,686	-	2,686 ²⁾

주: 1) 구직급여

2) 주거급여는 현금 및 현물 혼합되어 현물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다.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영역 및 규모 비교

〈표 2-43〉은 COFOG의 Social Protection(이하 SP)과 SOCX의 규모를 정책 영역별로 비교하고 있다. SP의 이전지출 범주와 동일한 SOCX의 사회복지분야 지출과 크기를 비교하여 본다.

〈표 2-43〉 Social Protection과 SOCX 지출 금액 비교(2018년)

(단위: 십억 원)

구 분	S P			SOCX			
		행정비용	이전지출		사회복지 분야지출	기타분야 지출 ¹⁾	공기업 지출 ²⁾
계	131,120	17,138	113,982	205,722	107,598	96,459	1,665
노령	55,878	2,474	53,404	53,545	52,766	61 ³⁾	718
유족	7,913	625	7,288	6,434	6,431	3 ⁴⁾	-
질병및장애	13,114	2,500	10,613 ⁵⁾	11,540	8,351	2,939 ⁶⁾	249
가족및자녀	18,405	4,598	13,806	22,765	14,957	7,807 ⁷⁾	0
사회보호	828	470	358	-	-	-	-
사회적배제	14,629	1,319	13,309 ⁸⁾	13,350	10,266	2,386 ⁹⁾	698
사회보호R&D	75	9	66	-	-	-	-
노동	8,605	2,461	6,144	5,673	5,673	-	-
실업	7,721	103	7,618	6,703	6,703	-	-
주거	3,953	2,578	1,375	1,454	1,454	-	-

주: 1) SP의 영역범주를 SOCX와 비교하기 위해 그 보다 넓은 영역인 교육부의 취학전 유아교육 비지원, 문화재청의 고궁릉 노인 입장료감면, 통일부 하나원시설 취득 등은 '기타분야'로 분리함.

2) SP의 재원범주를 기준으로 SOCX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넓은 재원은 '공기업'으로 분리함. 예로는 노인·장애인 등에 교통·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에 통신요금·전기요금·에너지요금 등 감면이 해당

3)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 문화재청의 고궁릉 노인 입장료감면

4) 별정우체국연금의 유족연금

5) 산재보험의 요양급여(SOCX에는 Health로 분류)

6)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등, 교육부의 장애아교육지원(특수교육예산), 문화재청의 고궁릉 장애인 입장료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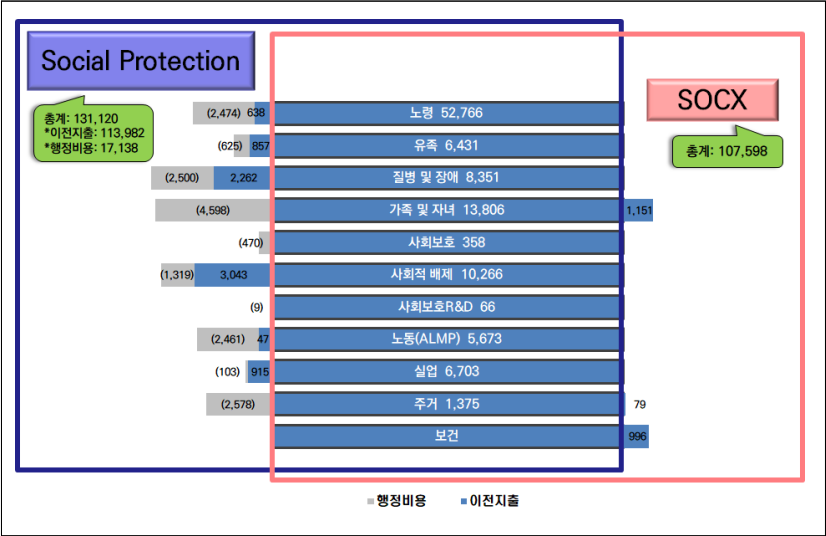
7)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 신축, 국방부의 군어린이집 운영지원, 국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국전번호사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청소년비행예방,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교육부(교육DB) 취학전 유아학비 지원, 문화재청의 청소년 고궁릉 입장료감면

8) 의료급여진료실적(SOCX에는 Health로 분류)

9) 통일부 하나원시설 취득, 조세지출예산서 EITC,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약농가인력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등,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해양수산부의 내항여객선운임보조, 행정안전부의 이재민구호, 주택피해복구비, 북한이탈주민지원, 국토교통부의 피해자지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재해부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8). 2018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jo.go.kr. 2020.9.20.;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0.9.20.;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8). 내부자료; 국방부. (2018).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8).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19). 2018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0.9.20.을 재구성함. (철도요금감면)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지하철요금 감면)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내부자료;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TV수신료 감면) 한국방송공사 내부자료, (전기, 가스, 열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그림 2-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지출규모 비교(2018)



자료: 기획재정부. (2018). 2018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0.9.20.;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0.9.20.;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8). 내부자료; 국방부. (2018).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8).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19). 2018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0.9.20.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2-44> Social Protection과 SOCX의 공통 및 추가 영역 비교: 주요 사업

기능	공통영역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순)	추가영역	
		SP	SOCX (정부재정의 '사회복지(080)' 이외 분야)
노령	기초연금지원, 노인관련기관지원 등, 공적연금(노령연금, 퇴직수당)	기초연금위탁운영(민간경상보조), 국민연금 공단관리운영, 공무원연금 위탁시설관리(민간위탁 사업비)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고공통입장료 감면(노인), 교통통신요금감면(노인)
유족	군경유족(정기보상금), 애국지사 및 그유족(정기보상금) 등 공적연금(유족연금), 산재보험(유족연금)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민간경상보조), 보훈처분부운영(포상금),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보전금)	별정우체국연금(유족연금)
질병 및 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공적연금(장애연금),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민간경상 보조), 장애인지원관리(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단체(민간경상보조)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민간경상보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통및물류),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문화및관광),

기능	공통영역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순)	추가영역	
		SP	SOCX (정부재정의 '사회복지(080)' 이외 분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지원, 국립재활원 기본경비	클린사업장조성지원(민간경상보조), 산재예방운영 기탁경비(포상금)	특수교육지원(교육), 고공통입장료 감면(장애인), 교통통신요금감면(장애인)
가족 및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민간경상보조),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민간위탁사업비)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민간경상보조)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민간경상보조) 인구교육추진지원(민간경상보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민간경상 보조) 양성평등문화 확산(민간경상보조) 미래여성인재양성(민간경상보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민간경상보조) 청소년참여지원(포상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민간위탁사업비) 사회복지협의회의운영(민간경상보조)	취학전 유아교육비지원(교육), 고공통입장료 감면(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공공질서및안전),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공공질서및안전), 군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국방), 국세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일반·지방행정), 청소년비행예방(공공질서및안전)
사회 보호	-	사회복지부요원 직무교육(민간경상 보조) 지역복지사업평가(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민간경상보조)	-
사회적 배제	생계급여, 자활사업, 긴급복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의사상자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민간경상보조) 생계급여(포상금),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민간경상보조) 복지급여사후관리(포상금), 계대군인의료지원(기타보전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민간경상보조)	TV시청료, 내한여객선운임지원(교통및물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통일·외교), 에너지 바우처(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문화및관광), EITC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조세지출예산서)
사회 보호 R&D	-	100세 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 사업(R&D),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R&D), 정책연구개발사업(R&D), 사회복지서비스(R&D)	-
노동	ALMP(고용창출및훈련 등 제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평등환경개선훈원,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근로조건개선지원 등	-	고용창출및훈련 등
실업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지원금 등	실업크레딧지원사업(기타보전금), 전직실업자등 능력 개발지원(민간 경상보조)	-
주거	주거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의 주택조사(민간 경상보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자료: 저자 작성

〈표 2-45〉 기능별 주요 행정비의 세부사업과 예산목명

기 능	행정비의 주요 세부사업	예산 세목명
노 령	기초연금지급 국민연금 정수업무 위탁사업비,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 고객지원사업	일반수용비, 사업출연금,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유 족	보훈처본부운영, 보상금지급관리, 기금운영비(보훈기금)_국가유공자 단체사업운영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질병및장애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장애인지원관리, 산재보험 정수위탁지원,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사업출연금, 일반수용비
가족및자녀	보육사업관리,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아동수당	일반연구비, 사업추진비 국내여비 일반연구비
사회보호	평생사회안전망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	일반연구비, 일반연구비, 사업추진비
사회적배제	의사상자제도운영지원, 복지급여사후관리,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일반수용비, 포상금, 임차료
사회보호 R&D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 정책연구개발(R&D), 정책연구개발사업(R&D),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R&D), 사회서비스(R&D)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노 동 ^{주)}	-	-
실 업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실업급여운영기타경비, 실업급여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전직실업자등 능력 개발지원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주 거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일반출자금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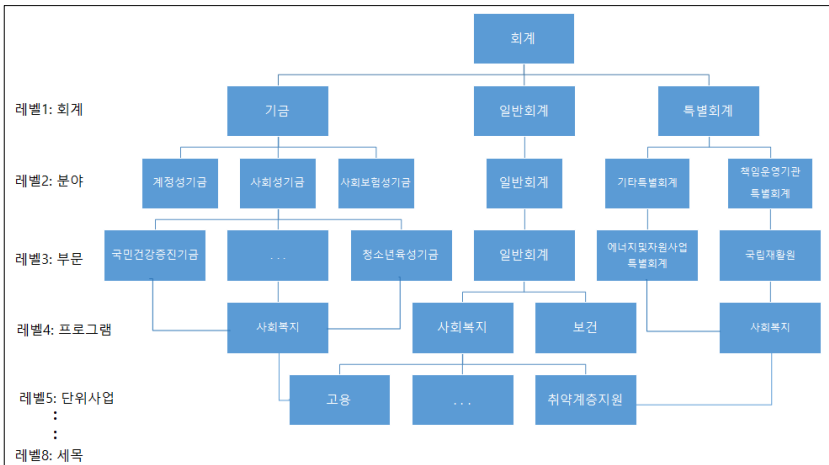
제3절 복지지출체계의 자동 분류 방안

1.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분류 프로세스 정립

가.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분류체계 및 문제점

지역복지계정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기초데이터는 정부 결산자료이다. 이 자료는 예산구분, 회계구분, 기금구분,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등의 계층적 코드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정부 세출자료의 계층적 분류구조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예를 들어 복지사업의 ‘장사시설설치’의 경우, 회계는 ‘일반’(110), 분야는 ‘사회복지’(080), 부문은 ‘노인’(08B), 프로그램은 ‘노인생활안정’(2100), 단위사업은 ‘장사시설’(2140), 세부사업은 ‘장사시설설

치’(300), 목은 ‘운영비’(210), 그리고 세목은 ‘일반수용비’(01) 등의 계층적 분류항목을 가진다([그림 2-6] 참조). 예제에서 보듯이 사업 분류는 분야부터 부문, 세부분류까지 각 세부결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즉, 일반수용비에 관한 통계 산출은 세목이라는 세부과목을 사용해야 가능한데, 만약 세부과목에서 운영비 목까지만 사용하게 되면 세목의 일반수용비 외 일반운영비(14) 등 세부적인 결산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지역복지계정 분류를 위해서는 세목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6] 정부 결산자료의 분류체계 예시

	A	B	C	D	Q	R	S	T	U	V	W	X	Y	Z	AG
1	인	국	소관명	프	프로그램	단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명	세목명	지출순역	소관			
3159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1 망향의동산 위탁사업비및시설유지보수	210 운영비	15 관리운영비	#####	075			
3160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1 망향의동산 위탁사업비및시설유지보수	420 건설비	02 시설설계비	#####	075			
3161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1 망향의동산 위탁사업비및시설유지보수	420 건설비	03 공사비	#####	075			
3173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	075			
3174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10 운영비	14 일반운영비	#####	075			
3175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20 여비	01 국내여비	#####	075			
3176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20 여비	02 국외업무여비	4,014,320	075			
3177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1,999,740	075			
3178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60 연구용역비	01 일반연구비	#####	075			
3179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20 민간이전	01 민간장상보조	#####	075			
3180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30 자치단체이전	01 자치단체경상	#####	075			
3181	###	2014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전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30 자치단체이전	03 자치단체자본	#####	075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정부 결산자료 분류는 매년 큰 틀에서 전년도 분류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연도 사업의 추가/삭제/변경에 따라 부분적인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분류기준은 무엇보다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가 중요하다. 작성자에 따라, 혹은 시간에 따라 분류 값이 바뀌게 되면 동일한 통계지표라 하더라도 통계에 포함되는 기준이 달라 자칫 상이한 통계 수치가 생산될 것이

며, 이로 인해 시간에 따른 연도별 변화를 비교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분류체계 표준화 목적은 일관성과 통일성, 효율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 결산자료의 분류코드는 일관성과 통일성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단위사업인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의 경우, 2018년도 결산자료에서는 단위사업코드를 2251로 분류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2254 코드로 분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표 2-4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부사업은 동일함에도 프로그램명과 분류코드가 모두 불일치하는 사례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정부 결산자료의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구분할 때 정부에서 부여한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전년도와 동일한 코드임에도 해당연도에는 다른 사업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반드시 코드와 사업명을 비교하여 동일 사업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년도와 동일한 단위사업이지만 각 연도마다 상이한 분류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통계 분석측면에서는 심각한 오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88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표 2-46〉 '장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2018년, 2019년 분류코드 비교

연도	결산자료 분류코드 예시											
2018	- 프로그램: 장사시설확충(2400) - 단위사업: 장사시설(2431) - 세부사업명: 장사시설설치(300)											
	연	회	소	소관영	프	프로그램명	단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	목명	세목명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10	운영비	14 일반용역비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20	여비	01 국내여비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20	여비	02 국외업무여비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30	자치단체이전	03 자치단체자본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3	말향의동산 위탁사업비	210	운영비	15 관리용역비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4	말향의동산 노후시설유지보	210	운영비	02 공공요금및제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4	말향의동산 노후시설유지보	420	건설비	02 실시설계비
	218	075	보건복지부	240	장사시설확충	2431	장사시설	304	말향의동산 노후시설유지보	420	건설비	03 공사비

2019	- 프로그램: 노인생활안정(2100) - 단위사업: 장사시설(2140) - 세부사업명: 장사시설설치(300)											
	연	회	소	소관영	프	프로그램명	단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	목명	세목명
	2560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559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10	운영비 14 일반용역비
	2558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20	여비 01 국내여비
	2557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20	여비 02 국외업무여비
	2556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555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260	연구추진비 01 일반연구비
	2554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2553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30	자치단체이전 01 자치단체경상
	2552	2019	075	보건복지부	2100	노인생활안정	2140	장사시설	300	장사시설설치	330	자치단체이전 03 자치단체자본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2018~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본 연구는 단(單) 년도 복지지출계정을 산출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다(多) 년도에 걸쳐 계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분류기준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숫자코드보다 문자로 표현된 명칭에 친숙한 반면, 컴퓨터는 숫자코드일 때 처리 성능과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부 결산자료에서 제공하는 분류코드를 배제하고, 대신 지역복지계정을 위한 별도의 분류코드를 정립하고자 한다.

나. 분류기준 표준화 활용 기술

지역복지지출체계 분류는 2019년도 정부 결산자료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코드화하고자 한다. 결산자료는 [그림 2-5]처럼 ‘소관’ 항목부터 ‘세목’ 항목까지 6개 항목들이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들 항목들을 통칭하여 ‘세부결산과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복지지출계정은 국민계정의 복지부문인 ‘사회보호’를 중심으로, 여기에 속한 복지사업을 정책목적에 따라 ‘기능별 분류’(이를 국민계정에서는 ‘중분류’라고 부름), 재정의 종류에 따른 재원별 분류, 법 체계에 따른 제도별 항목을 각각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기능별 분류를 중심으로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으로 분류(이를 GFS경제적 분류라 부름)해 놓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5개 분류를 통칭하여 ‘복지계정산출항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결산과목 코드화를 위해 2019년도 정부 결산자료의 분류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로 표현된 사업명을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표 2-45>에서 살펴봤듯이, 세부사업명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명이 다르거나, 동일 세부사업임에도 분류코드가 달라 다른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기준 표준화를 위한 활용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텍스트 마이닝에서 문서 전처리⁶⁾를 위해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법이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네이버사전, 2021)이며, 의미는 어휘적 관계, 문법적 관계를 가진 뜻을 모두 포함한다.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보다 단위가 큰 언어 단위인 어절, 혹은 문장을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분절하는 과정이다.

6) 전처리(Preprocessing)는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 불용어 처리 등 사전(事前)에 작업하는 일련의 행위

간단한 문장 하나를 형태소로 분절하는 과정을 예시로 살펴보자. “실종 예방 등 아동안전 증진”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문법에 따라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실종/명사, 예방/명사, 등/의존명사, 아동/명사, 안전/명사, 증진/명사

앞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형태소 분석은 최소 의미 단위로 문장을 자르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전처리 과정의 첫 번째 작업이 형태소 분석이다. 형태소 분석은 사용하는 사전에 따라 최소 의미를 나누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동일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지역복지계정에 형태소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복지계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명사나 단어가 있다면 형태소 분석기에 사용자 사전을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의미 단위로 분해하여 형태소를 만들게 되면 분류기준 표준화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복지지출체계의 분류 방안으로 형태소 분석기법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정교한 분류기준 도출과 표준 분류체계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 분류기준 프로세스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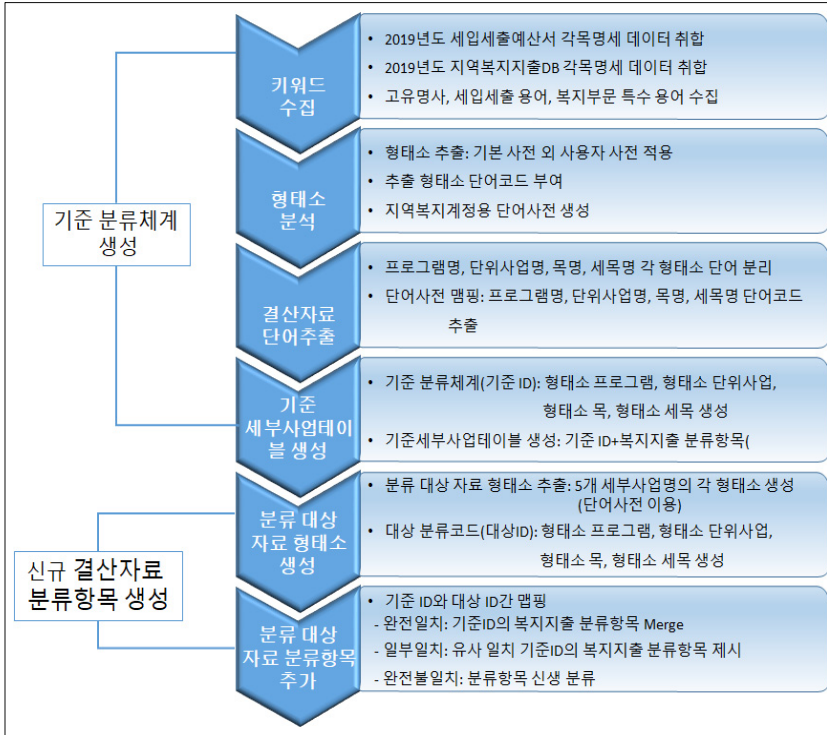
복지지출체계 분류기준 표준화는 지속 가능한 계정을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복지계정에서 정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분류하는 프로세스이다. 여기서 원칙은 수집 데이터의 내용과 특성, 분석 및 생

산하려는 통계의 성격과 종류, 범위 등을 고려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역복지계정에서 사용하는 분류기준 데이터는 본 연구 2차 년도에 구축한 '2019년도 지역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가 되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결산자료에 포함된 기본 항목과 추가로 생성된 분류항목들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9년도 지역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는 정부 결산자료의 회계연도, 소관, 회계구분,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지출순액 항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0년 2차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복지계정산출항목인 기능별, 제도별, 재원별, 이전지출, 행정비용 분류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20년에 구축한 2019년도 지역복지지출DB의 5개 세부결산 과목을 기준ID로 하여 이후 년도 결산자료의 복지계정산출항목의 값들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복지지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림 2-7]은 과거 결산자료를 분류했던 복지계정산출항목인 기능·제도·재원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새로운 결산자료에 복지계정산출항목을 추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7]을 보면, 기준 분류체계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분류항목 기준선이 되는 기준ID를 생성하는 과정과 기준ID와 대상ID를 비교해 기준데이터로부터 복지계정산출항목을 가져와 생성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그림 2-7] 복지계정용 분류항목 생성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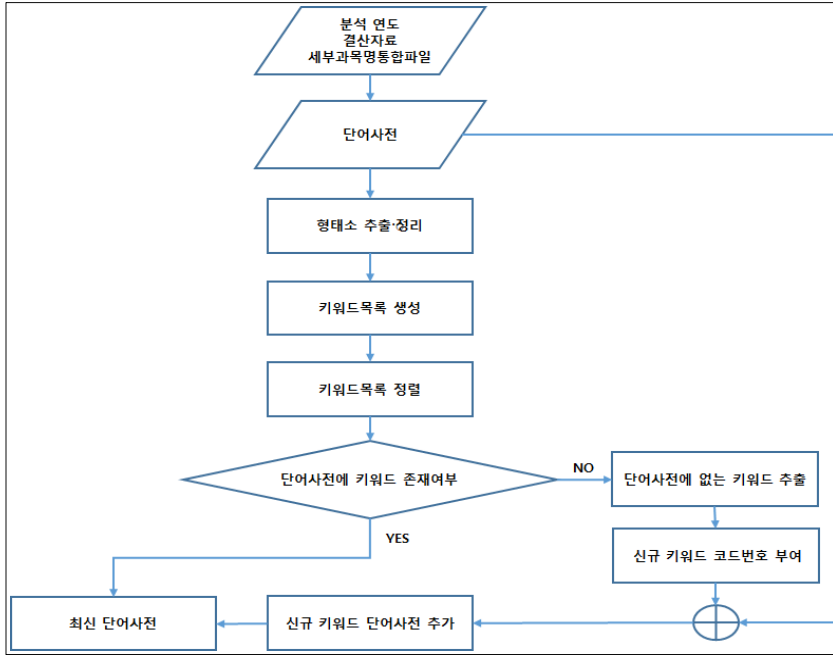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복지지출체계의 분류기준 생성과정은 [그림 2-7]에 도식화한대로 몇 단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1단계는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세부결산과목에 입력된 사업들을 하나의 통합파일로 합치는 키워드 수집단계이다. 키워드 수집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는 2019년도 복지계정DB의 부문칼럼, 프로그램칼럼, 단위사업칼럼, 세부사업칼럼, 목칼럼, 세목칼럼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이다. 이 값들은 한 개의 데이터 파일(가칭 세부결산과목 통합파일)로 통합하여 다음 단계인 형태소 분석에 필요한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생성한 세부결산과목통합파일의 형태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실행시켜 형태소로 분리·추출하게 된다. 형태소 분석의 주된 목적은 지역복지계정용 단어사전(Keyword Dictionary)을 만드는데 있다. 형태소 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해 1단계에서 만들어진 세부결산과목통합파일에 들어있는 문장들의 단어를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분리한 후 키워드 추출 작업을 실시하고, ② 추출된 키워드를 가나다순으로 목록화하여 키워드별 단어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지역복지계정용 단어사전이 완성된다([그림 2-7] 참조).

특정 연도의 복지지출 결산자료는 그 해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있거나, 사업명 변경 혹은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 복지지출 결산자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출현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단어사전을 업데이트하는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상 연도의 복지지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했던 2단계 프로세스 중 ①번 과정인 형태소 분석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은 형태소 분석에서 생성된 단어가 단어사전에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단어사전에 없는 신생 단어인 것으로 확인되면 신규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단어사전에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지역복지계정 단어사전 업데이트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3단계는 2019년도 지역복지지출DB의 부문명부터 세목명칼럼까지 각 칼럼의 문자값을 단어사전과 매핑하여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코드 칼럼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코드 변환은 지역복지계정 단어사전과 세부결산과목의 각 형태소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단어사전에서 가져와 하나의 연결된 코드로 만든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부문명이 ‘공적연금’이면, 단어코드사전에서 ‘공적’과 ‘연금’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각 10002, 20113라고 가정하면, 부문명 ‘공적연금’은 ‘1000220113’을 가지는 부문코드 필드(칼럼)를 생성한다. 이 작업은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명, 세목명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목코드, 세목코드 필드를 추가한다.

앞에서 생성한 프로그램코드에서 세목코드까지 5개 칼럼을 기준 ID로 정렬하여 중복된 행은 삭제한 후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을 생성한다. 이때, 세목코드까지 조합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세목이 무엇이나에 따라 분석항목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프로그램명-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목명이 ‘고용-고용창출및훈련-고용영향평가사업-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을 때 ‘목명’까지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세목에 따라 GFS경제적분류(이전지출, 행정비용)는 달라진다. 즉, GFS경제적 분류는 세목명이 ‘민간위탁사업비’이면 ‘사회급여’로 분류하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이면 ‘비금융자산의순투자’로 분류된다(〔그림 2-9〕 참조). 이렇듯 기준ID는 세부결산과목을 세목까지 붙여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9〕 세목에 따른 GFS경제적분류 항목 차이 예시

M	N	O	P	Q	R	S	T	U	V	W	X	Y	Z/A	AB	AC	AD
분야명	부서부동명	프로그램명	관리대상사업명	세부사업명	목표	목적	세목명		지소	대분류	중분류	GFS가격정보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한국고용정책	국가고용촉진회개발	350	일자리연계	03사회연계	#1	사회보호	노동	출연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한국고용정책	공공고용서비스 구축	350	일자리연계	03사회연계	#1	사회보호	노동	출연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청년내일채움	청년내일채움공제	320	민간이전	01민간경상보조	#1	사회보호	가죽및타사	사회귀환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청년내일채움	청년내일채움공제	320	민간이전	02민간위탁사업비	#1	사회보호	가죽및타사	사회귀환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고용정책	고용정책연구사업	240	일자리추진	01사회추진비	#1	사회보호	노동	생애 및 저비지 사용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고용정책	고용정책연구사업	320	일자리추진	02민간위탁사업비	#1	사회보호	노동	사회귀환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고용정책	고용정책연구사업	320	민간이전	08법정직인대행사사업비	#1	사회보호	노동	비공용자산인용통차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청년내일채움	한국실업률보조	350	일자리연계	03사회연계	#1	사회보호	노동	출연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청년내일채움	인문융합창년취업지원	210	운영비	01일반인문	#1	사회보호	노동	재회 및 서비스 사용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청년내일채움	인문융합창년취업지원	210	운영비	07일반인문	#1	사회보호	노동	재회 및 서비스 사용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청년내일채움	인문융합창년취업지원	210	운영비	14일반인문	#1	사회보호	노동	재회 및 서비스 사용				
사회복지	080	공공	11고용생활및훈련	10청년내일채움	인문융합창년취업지원	220	여비	01국내여비	#1	사회보호	노동	효율화사용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그림 2-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지역복지지출DB에는 각 복지사업에 대하여 5개 복지계정산출항목 칼럼이 있는데, 5개 각 복지계정산출항목 칼럼을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 추가한다. 이것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9년 이후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계정산출항목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96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정부가 관리하는 복지지출 결산자료에는 전년도 사업대비 추가/삭제/수정 등 사업 변경이 매년 조금씩 발생하며, 또한 전년과 동일한 사업일 지라도 반드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그렇다보니 복지지출 결산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의 각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데이터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동일 코드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을 한 건씩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은 분류 자동화이며 자동화가 되려면 분류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며, 2단계 과정을 통해 기준이 되는 세부결산과목 코드가 생성된다.

[그림 2-10] 지역복지지출DB의 세목에 대한 기능, 자원, 제도 분류 예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AF																																																																																																																																																																																																																																																																																																																																																																																																																																																																																																																																																																																																																																																																																																																																																																																																																																																																																																																																																																																																																																																																																																																																																																																																															
1	회	산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	국	인	사

과목과 복지계정산출항목이 들어 있다. 3단계에서는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 없는 사업의 복지계정산출항목 칼럼을 생성하기 위해 기준데이터와 신규 대상 데이터칸 매핑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세부결산과목과 분석용(신규) 결산자료의 각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을 종합한 분석용 세부결산과목을 비교해 보면 ① 완전 일치 유형, ② 부분 일치 유형, ③ 완전 불일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 일치형은 기존 세부결산과목과 분석용 세부결산과목이 100% 일치하여 해당 분류항목 칼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므로 매핑 작업 완료 후 추가적인 처리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분 일치형은 분석용 결산자료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칼럼이 일부 생기는 경우이다. 완전 불일치형은 분석용 결산자료의 사업과목이 아예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세부결산과목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부분 일치형 혹은 완전 불일치형 사업은 분류항목 칼럼 생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3단계 작업 목적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세부결산과목과 매치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복지계정산출항목인 기능별, 자원별, 제도별, 이전지출, 행정비용 칼럼에 도메인 값을 삽입하는 것이다. 3단계는 불일치 정도(부분, 완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분 일치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석용 결산자료 처리 프로세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부분 일치가 발생하는 조건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과 일치하는 분석용 사업과목(대상ID)이 없는 것은 완전 불일치와 동일하지만 부분 일치는 분석용 사업과목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으로 분리해 각각을 비교했을 때 일부만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석용 결산자료의 세부결산과목 중 어느 한 곳에서 세부사업 기준테이블

에는 없던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는 있었던 단어가 삭제되어서 매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다(〈표 2-47〉 참조). 이처럼 결산 자료에서 매치되지 않은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세부결산과목에 존재하지 않아 복지계정산출항목 5개 칼럼이 빈 상태로 생성될 것이다. 빈 칼럼에는 2019년도와 동일한 도메인 값을 추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표 2-47〉 분석 대상 데이터의 불일치 발생 조건

구분		기준 데이터	
		부분 일치	완전 불일치
분석 대상 데이터	사업명 변경	일부 단어 추가 일부 단어 삭제	-
	신규 사업	일부 단어	단어사전 추가·갱신

자료: 저자 작성

일부 일치와 완전 불일치를 가려내기 위해 세부결산과목별 세부코드에 대한 일치 정도를 비교해 유사사업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치 정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기준ID인 세부결산과목인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목코드, 세목코드 칼럼을 분석용 결산자료 데이터의 각 세부결산과목코드(대상ID)와 비교해 일치하는 단어 수를 산출한 뒤 5개 필드별 일치율을 구해 평균 일치율을 구하면 된다. 기존 사업임에도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세부결산과목과 일치하는 사업이 없었던 것은 대부분 사업명에서 일부 단어가 변경(수정/삭제)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부 일치 사업의 각 복지계정산출항목 생성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세부결산항목과 가장 일치 정도가 높은 사업을 리스트로 보여주고, 그 중에서 동일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세부결산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각 복지계정산출항목 칼럼의 항목값을 가

저와서 넣어주면 된다.

완전 불일치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연구진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한 복지계정산출항목별 분류항목을 신규로 생성해줘야 할 것이다. 완전 불일치 사업의 세부결산과목에 대한 복지계정산출항목이 생성되면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도 관련된 정보, 즉 표준 세부결산과목과 복지계정산출항목을 추가하여 업데이트해야 지속적인 세부사업 기준테이블 관리가 가능하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분석용 결산자료에는 복지계정분류항목의 표준화된 분류항목이 생성되고, 연도별 복지계정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생산된다.

2. 분석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 및 활용전략

가. 분석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

1) 복지계정용 단어사전 생성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 중 Mecab을 사용하여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고자 한다. Mecab은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 특정 영역의 용어 처리에 유리하며 속도,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계정용 단어사전은 2019년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명, 세목명을 이용해 생성하였다. 실제로 형태소 추출 알고리즘을 실행시킨 결과, 2019년 복지지출 결산자료에서 747

개의 형태소가 추출되었다([그림 2-11] 참조).

[그림 2-11] 2019년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이용한 형태소 추출 결과 예시

	A	B	C	D	E
1	Length of morpheme dictionary : 747				
2	가구				
3	가인				
4	가정				
5	가정특역				
6	가죽				
7	가을				
8	간상				
9	간상				
10	간호				
11	간담				
12	간담특역				
13	간담화				
14	개도국				
15	개발				
16	개보				
17	개선				
18	거래				
19	거주				
20	건				
21	건				
22	건립				
23	건립비				
24	건립비				
25	건립비				
26	건립비				
27	건립비				
28	건립비				
29	건립비				
30	건립비				
31	건립비				
32	건립비				
33	건립비				
34	건립비				
35	건립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그림 2-11]의 세부결산과목에 대한 형태소 추출 결과를 보면, 다소 어색하게 분절된 형태소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10]에 나열된 형태소 중 10번 행에 있는 ‘간상’은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이라는 단위사업명을 형태소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절되어 생성된 형태소이다. 이처럼 분석자의 의도와는 달리 생각지 않은 의미 없는 형태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 분절된 형태소는 어떤 문장에서 추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의도한 형태소로 분절시키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제대로 된 형태소 단어사전이 만들어진다.

한편, [그림 2-11]의 형태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eCab 형태소 분석기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단어사전을 기준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복지지출 결산자료에서만 사용되는 고유명사 혹은 특화된 형태소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특성이 반영된 형태소, 즉 복지계정

에 최적화된 형태소를 생성하려면 MeCab 분석기가 참조할 수 있는 추가적인 특수 사전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을 하나의 형태소로 사용하려면 사용자 사전에 공무원연금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과 연금을 분리한 형태소로 분절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하나의 형태소로 생성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류비’도 일반적으로 명사 기준 형태소 분석을 하면 형태소가 ‘유류’와 ‘비’로 분절 되는데, 사용자 사전에 ‘유류비’를 추가하여 한 형태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결국, 정교한 복지지출 결산자료용 단어사전을 만들려면, 원시 형태소 사전을 추출한 후 부자연스럽게 분절된 단어를 찾아 복지계정용 부가 사전을 만드는 추가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 사전은 MeCab 분석기 알고리즘에 반영하여 알고리즘 실행 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 정교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생성하게 된다. 다만, 기준데이터와 분석용 데이터간 정확한 형태소 비교를 위해서는 가급적 고유명사, 혹은 복지영역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예컨대 ‘중앙입양원’, ‘한부모’ 같은 굳이 최소 단위 형태소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단어정도로 부가 사전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특화된 형태소 사전, 즉 복지계정용 단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 기준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형태소 추출 시물레이션을 해 보았다.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 기준인 명사만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 생소한 단어로 형태소가 추출되었다. 따라서 명사만 분석하지 않고 접미사 등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때 더 정확한 형태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8〉은 명사만 가지고 형태소를 추출한 결과와 특수문자 등을 제외한 모든 단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 추출된 형태소 결과를 보여주

는 예시이다. 세부사업중 ‘연금지제작사업’은 명사만 기준으로 하면 [‘연금’, ‘제작’, ‘사업’] 형태소가 생성되고, 모든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 [‘연금’, ‘지’, ‘제작’, ‘사업’] 형태소가 구성된다.

〈표 2-48〉 형태소 분석 기준에 따른 형태소 생성 예시

명사만 분석							특수문자만 제외한 분석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공무원연금기	기	인건비	인	보	[	[	[인건비]	2019-4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인	상	[	[형태소]단위사업명
공무원연금기	기	인건비	인	보	[	[	[인건비]	32	주택시설운영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인	상	[	[고객, 지원, 사업]
주택시설운영	고	연금지제작사업	운	공	[	[	[연금, '제작', '사업']	33	주택시설운영	고객지원사업	연금지제작사업	운	공	[	[연금, '지', '제작', '사업']
주택시설운영	고	연금지제작사업	운	일	[	[	[연금, '제작', '사업']	33	주택시설운영	고객지원사업	연금지제작사업	운	공	[	[연금, '지', '제작', '사업']
주택시설운영	고	연금지제작사업	운	일	[	[	[연금, '제작', '사업']	34	주택시설운영	고객지원사업	연금지제작사업	운	일	[	[고객, '지', '제작', '사업']
주택시설운영	고	연금지제작사업	운	일	[	[	[연금, '제작', '사업']	34	주택시설운영	고객지원사업	연금지제작사업	운	일	[	[고객, '지', '제작', '사업']
주택시설운영	시	보유시설개보수	유	재	[	[	[보유, '시설', '개보', '수']	34	주택시설운영	고객지원사업	연금지제작사업	운	일	[	[고객, '지', '제작', '사업']
주택시설운영	시	보유시설개보수	건	공	[	[	[보유, '시설', '개보', '수']	34	주택시설운영	고객지원사업	연금지제작사업	운	일	[	[고객, '지', '제작', '사업']
주택시설운영	시	신규시설건립	건	공	[	[	[신규, '시설', '건립']	35	주택시설운영	시설운영사업	보유시설개보수	유	재	[	[보유, '시설', '개보', '수']
주택시설운영	시	신규시설건립	건	공	[	[	[신규, '시설', '건립']	36	주택시설운영	시설운영사업	보유시설개보수	건	공	[	[신규, '시설', '개보', '수']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표 2-48〉처럼 형태소 분석 기준을 달리하여 기준 데이터와 분석용 데이터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명사만 분석대상에 넣었을 때 매치율(55.2%)보다 접미사 등 모든 단어를 포함한 형태소 분석에서 두 데이터의 매치율(64.0%)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복지계정용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형태소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복지지출 결산자료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용어를 정리해 복지계정용 부가사전을 작성해야 보다 정교한 형태소를 추출할 수 있다.

2) 복지지출체계 분류기준 데이터 생성

위에서 만들어진 복지계정 단어사전은 복지지출체계 분류기준 데이터 구축 시 사용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2019년도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세부 결산과목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칼럼에 입력된 한글 명은 복지계정 단어사전을 이용하여 각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 칼럼을 추가 생성한다([그림 2-12] 참조). 이 데이터는 2019년도 복지지출 결산 자료의 복지계정산출항목에 해당하는 5개 칼럼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연도 복지지출 결산자료 분석 시 체계화된 복지계정산출항목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이다. 다시 말해서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세부결산과목(5개 세부과목을 합친 과목)과 5개 복지계정산출항목은 복지계정 분류기준이 된다.

따라서 복지지출체계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는 원시 결산자료 전체 칼럼과 신규로 생성된 5개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칼럼, 그리고 5개 복지계정산출항목칼럼을 가지게 된다.

만일, 2019년 이후 복지지출 결산자료에서 신규 사업이 입력되면 이 사업(복지지출체계 미분류 사업)의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 칼럼과 복지계정산출항목을 생성하여 기존의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표준 복지계정 분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illegible]

3)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복지계정산출항목 생성

앞에서 생성된 기준 데이터에서 5개 형태소 세부결산과목 칼럼 조합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기준ID(Identity)이며 ID마다 5개 표준 복지제정사출항목 칼럼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복지계정산출항목은 신규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분석용 기초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사업 과목의 복지계정산출항목 칼럼을 생성할 때 사용된다. 생성 과정은 각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 칼럼 생성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분석용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세부결산과목 칼럼에서 각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 칼럼을 생성한 후, 분석용 사업과목과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사업과목가 매핑 과

정을 거쳐 일치 수준에 따라 기준 데이터에서 5개 복지계정산출항목을 그대로 가져와 칼럼을 신규로 추가한다.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의 기준ID와 분석용 대상 데이터의 대상ID간 세부결산과목 형태소가 불일치하는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에서 일치율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리스트를 제시해준다([그림 2-13] 참조). [그림 2-13]은 2019년도 기준 결산자료와 2018년도 분석용 데이터를 매핑한 결과, 불일치하는 자료 중에서 일치율이 높은 순부터 보여주는 예시이다. 데이터 분석자는 제시된 리스트에서 동종 사업으로 판단되는 기준 데이터의 표준 복지계정분류를 적용하면 된다. 이 때 일치율이 얼마 이상일 때 리스트로 보여줄 것인지는 분석자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만일, 리스트로 보여줄 유사사업이 없는 경우는 데이터 분석자가 직접 분류체계를 결정해 삽입하면 된다. 이것은 데이터 분석자 개인적 견해가 아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표준 분류항목으로 결정하도록 추진되어야 분류항목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분류항목 체계화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림 2-13] 분석용 결산자료와 세부사업 기준테이블간 불일치 자료 예시

A	B	C	D	E	F	G	M	N	O	P	Q	R
일치율	2019_No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	세목	2018_No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목	세목
0.9	30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운영비	일반용역비	372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연구교육사업	운영비	일반용역비
0.8	30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운영비	일반용역비	369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연구교육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0.7	30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운영비	일반용역비	373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연구국제학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0.9	31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369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연구교육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0.8	31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373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연구교육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0.8	31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372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연구국제학사업	운영비	일반용역비
0.7	31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261	사립학교고직원연금제도및기타고객지원	고객지원(사립학교고직원연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0.9	32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고객지원사업	간접비	상용임금	431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고객지원사업	연구교육사업	간접비	상용임금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18년도 두 결산자료 간에 일치정도를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2019년도 결산자료 2,808건의 약 64.0%

에 해당하는 1,796건의 데이터가 2018년과 완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완전 일치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커지며 분류체계 정확도까지 담보하게 된다. 완전 일치를 제외한 1,012건은 사업과목에 대해 일치정도 순으로 2019년도 후보 사업을 리스트로 보여줘 분류체계 결정 시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사업의 분류체계 일관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일치 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새롭게 생성하고 나면 이를 기준데이터의 표준 복지계정분류 내에 추가시켜 업데이트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같은 복지계정산출항목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복지지출체계 분류 프로세스 활용 전략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복지지출체계의 분류기준 정립 과정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원시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실험 결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된 분류 수준을 능가하는 분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면 향후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 세부결산과목을 생성함에 있어서 각 세부결산과목마다 형태소를 생성하였는데, 각 세부결산과목 내에 생성된 형태소의 나열 순서, 중복된 형태소의 처리 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실험을 통해 각 조건에 따른 일치 수준과 정확도의 변화가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토대로 복지계정산출항목을 생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실험이 필요하다.

한편,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복지계정 분류 구축의 핵심인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복지계정 분류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의 개발이다. 복지계정 분류 구축에 기초가 되는 것은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MeCab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일 뿐 복지계정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알고리즘이다. 다시 말해서, 세부결산과목에 대한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기본 MeCab 알고리즘 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아 추가적인 강제 코딩이 필요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지계정 분류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세부결산과목에 알맞은 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세부결산과목 형태소를 MeCab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형태소추출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세부결산과목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키워드 추출이 가능한 형태소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계정 분류 프로세스는 매년 생성되는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복지계정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자 제안한 체계이다. 이것은 복지지출 관련 사업이 기능별, 제도별, 재원별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결정하는 세부사업 기준테이블로 활용될 것이다.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지출 결산자료가 들어오더라도 동일 기준, 동일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D-brain에서 수집한 복지지출 결산자료는 분석용 원시자료이며, 이 자료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 세부결산과목에 따른 복지계정 산출항목을 추가하면 실질적인 복지계정 구축용 기초자료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지계정 분류 프로세스는 D-brain 결산자료와 지방재정사업(e-호조)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방재정사업은 240

여개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사업명의 작명을 다르게 하고 있다. 즉, D-brain 자료는 전체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같은 사업이면 동일한 사업명을 사용하지만, e-호조 자료는 동일 사업임에도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한 사업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복지지출 분류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사업의 복지계정 분류체계 정립은 절실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은 중앙재정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별도의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은 지양하고, 본 연구에서 생성한 복지계정 분류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중앙과 지방재정사업의 통합된 단일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복지계정 분류 프로세스를 지방재정에 적용하게 된다면, 동일한 기준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방재정사업에 관한 분류까지 더해지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복지계정 구축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SOCX 기반의 복지지출 규모 및 제도별 복지지출 산출도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세부결산과목별 형태소는 보다 정교한 통계 산출에 활용 가능하다. 결산자료의 세부사업에서 특정 형태소에 대한 통계, 세목의 특정 항목 통계 등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과거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복지계정산출항목의 항목 값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 과거에 확립되었던 분류체계에서 만들어진 복지계정산출항목이 현재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 복지지출 결산자료를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과거 복지지출 결산자료는 분

류기준을 정할 때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부여하였다. 수작업으로 처리할 때의 문제는 분류기준의 흔들림이다. 즉, 매년 반복된 분류작업일지라도 기억의 한계로 인해 그리고 작업 당시의 환경과 상황, 정책적 변화 등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져 과거의 분류기준과 다른 기준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복지계정 분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신규로 수집되는 복지지출 결산자료의 분석용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적용함으로써 복지계정 산출항목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세부사업 기준테이블은 5개 형태소 세부결산항목 단위로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복지지출 온톨로지(Ontology)⁷⁾도 만들어낼 수 있다. 복지지출 온톨로지가 구축되면 자연어에 가까운 검색 기능이 제공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연관된 통계를 유연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온톨로지 기반의 다양한 형태소 단위 데이터마트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출 데이터를 가공·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온톨로지(Ontology): 존재하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및 여러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 어떤 일정 범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개념, 특성, 연관 관계 등을 표현하여 단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단어 간 관계 정의 등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2021)



제3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광역자치단체 통계 생산과 분석

제1절 복지지출 규모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제3절 기능별 자원별 분석

제4절 중분류와 세부지출의 분석

제5절 개별 자치단체의 세부 분석(서울시 중심)

제3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광역자치단체 통계 생산과 분석

이 장에서는 국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복지지출을 산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산출은 정부결산자료를 기초로 OECD등 국제기구의 COFOG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개발한 매뉴얼을 측정도구로 하였다.

지역복지지출은 정부의 예산구조를 구성하는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다. 다만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추가 제시함으로 10개 부문이 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계 산출은 본 연구의 자료가 축적 된 후 가능하리라 본다.

제1절 복지지출 규모

2019년도 국가단위의 ‘사회보호’는 146.7조로 10개 부문으로 분류한 결과 노령 62.6조원, 가족및자녀 22.7조원, 질병및장애 15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별 급여들은 평균적으로 행정비용이 약 12%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경환, 신지영, 2021).

[그림 3-1] 국민계정 대분류의 '사회보호'를 중분류한 결과

대 분 류		
분 야		2019
계		651,849
701	일반 공공행정	80,444
702	국방	49,218
703	공공질서 및 안전	24,628
704	경제활동	94,045
705	환경보호	17,123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21,285
707	보건	99,837
708	휴양, 문화, 종교	19,844
709	교육	98,704
710	사회보호	146,722

중 분 류		
부 문		2019
계		146,722
7101	질병 및 장애	15,041
7102	노령	62,641
7103	유족	8,862
7104	가족 및 자녀	22,703
7105	실업	9,356
7106	주거	2,686
7107	기타 사회적 배제	14,779
7108	사회보호 R&D	79
7109	기타 사회보호	1,408
노동		9,167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고경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원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정책영역별 행정비용의 구성을 보면 '주거'와 '기타사회보호'에서 각각 40.5%와 40.2%로 높았으며 '실업'에서 1.6%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개별 급여들의 급여속성과 전달체계의 특성을 통계로 보여 주는 신규 데이터로 정책효과 분석과 급여발굴에 보다 유용하리라 본다(고경환, 신지영, 2021).

이 절에서는 복지지출 규모를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분석한다. 국가 단위와 광역 단위의 두 통계 작성 기준은 동일하지만 자료원을 세분화하는 작성 방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자체사업과 행정비용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배분한다. 연금급여에 대한 행정비용은 지역별 연금급여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보훈급여 행정비용은 지사별 보훈급여 비율로, 또한 실업급여와 산재보험은 지역별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과 지사별 산재보험급여 지급비율로 배분한다. 기타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배분하였다.

지역복지지출 총계는 2019년 기준 146조 722십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0조 219십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 29조 121십억 원, 부산 11조 118십억 원 순이었다. 이들 세 지역이 전국 지출의 48.0%를 차지한다. 하위 순위를 보면 울산 2조 872십억 원, 제주 2조 57십억 원, 세종 693십억 원으로 분석되었다(〈표 3-2〉).

세부 주체별 지출을 보면 사회보험 68조 360십억 원(46.6%), 중앙정부가 49조 330십억 원(33.6%), 지방자치단체가 29조 32십억 원(19.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합은 국가 단위의 복지지출과 동일하게 산출되는 정합성을 이루었다. 국가 단위의 복지지출은 국민계정의 ‘사회보호’와 일치한다.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GRDP
계	146,722	49,330	29,032	68,360	1,923,977
서울	29,121	8,479	7,034	13,608	433,488
부산	11,118	4,580	1,467	5,071	92,445
대구	6,976	2,666	944	3,366	57,756
인천	6,588	2,166	1,284	3,137	89,571
광주	5,185	2,227	705	2,254	41,146
대전	4,904	1,896	728	2,280	42,794
울산	2,872	859	523	1,489	74,930
세종	693	234	158	301	11,863
경기	30,219	9,329	6,198	14,692	478,325
강원	5,963	1,713	1,226	3,024	48,625
충북	4,842	1,597	992	2,253	69,338
충남	5,591	1,864	1,208	2,519	114,642
전북	6,185	2,295	1,202	2,688	51,826
전남	6,068	2,403	1,328	2,337	76,808
경북	8,502	2,993	1,627	3,883	107,312
경남	9,835	3,279	1,865	4,691	112,849
제주	2,057	747	543	767	20,261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3-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순위별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GRDP
계	146,722	49,330	29,032	68,360	1,923,977
경기	30,219	9,329	6,198	14,692	478,325
서울	29,121	8,479	7,034	13,608	433,488
부산	11,118	4,580	1,467	5,071	92,445
경남	9,835	3,279	1,865	4,691	112,849
경북	8,502	2,993	1,627	3,883	107,312
대구	6,976	2,666	944	3,366	57,756
인천	6,588	2,166	1,284	3,137	89,571
전북	6,185	2,295	1,202	2,688	51,826
전남	6,068	2,403	1,328	2,337	76,808
강원	5,963	1,713	1,226	3,024	48,625
충남	5,591	1,864	1,208	2,519	114,642
광주	5,185	2,227	705	2,254	41,146
대전	4,904	1,896	728	2,280	42,794
충북	4,842	1,597	992	2,253	69,338
울산	2,872	859	523	1,489	74,930
제주	2,057	747	543	767	20,261
세종	693	234	158	301	11,863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국가단위의 복지지출은 GRDP대비 7.63%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2.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강원 12.26%, 대구 12.08% 순이다(〈표 3-4〉, [그림 3-2]). 광주가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을 보면 12위이지만 GRDP대비 비율은 1순위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급자가 많아 복지지출 금액이 높으며 GRDP가 낮아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위이지만 GRDP대비 비율은 14위이다([그림 3-3]).

이는 어떤 변수로 사회복지 수준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이나 노력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역 자치단체 간 복지지출을 비교 분석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수준이나 노력에 대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경환 등, 2018, p.220).

〈표 3-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단위: GRDP 대비 %)

지역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계	7.63	2.56	1.51	3.55
서울	6.72	1.96	1.62	3.14
부산	12.03	4.95	1.59	5.48
대구	12.08	4.62	1.63	5.83
인천	7.36	2.42	1.43	3.50
광주	12.60	5.41	1.71	5.48
대전	11.46	4.43	1.70	5.33
울산	3.83	1.15	0.70	1.99
세종	5.85	1.97	1.33	2.54
경기	6.32	1.95	1.30	3.07
강원	12.26	3.52	2.52	6.22
충북	6.98	2.30	1.43	3.25
충남	4.88	1.63	1.05	2.20
전북	11.93	4.43	2.32	5.19
전남	7.90	3.13	1.73	3.04
경북	7.92	2.79	1.52	3.62
경남	8.72	2.91	1.65	4.16
제주	10.15	3.69	2.68	3.7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순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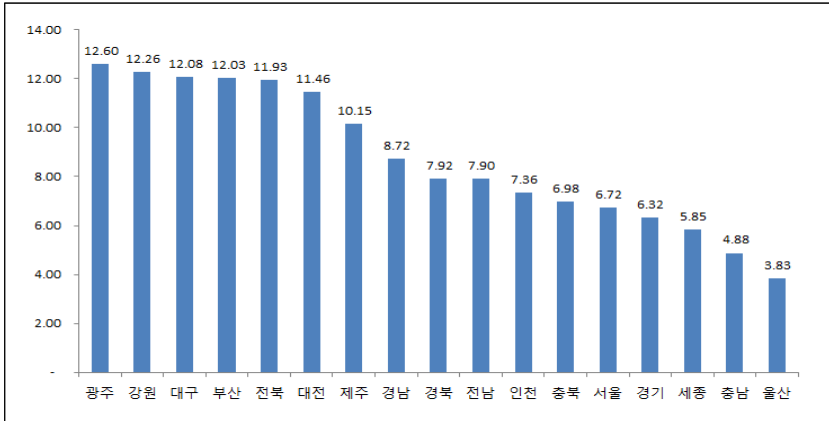
(단위: GRDP 대비 %)

지역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계	7.63	2.56	1.51	3.55
광주	12.60	5.41	1.71	5.48
강원	12.26	3.52	2.52	6.22
대구	12.08	4.62	1.63	5.83
부산	12.03	4.95	1.59	5.48
전북	11.93	4.43	2.32	5.19
대전	11.46	4.43	1.70	5.33
제주	10.15	3.69	2.68	3.79
경남	8.72	2.91	1.65	4.16
경북	7.92	2.79	1.52	3.62
전남	7.90	3.13	1.73	3.04
인천	7.36	2.42	1.43	3.50
충북	6.98	2.30	1.43	3.25
서울	6.72	1.96	1.62	3.14
경기	6.32	1.95	1.30	3.07
세종	5.85	1.97	1.33	2.54
충남	4.88	1.63	1.05	2.20
울산	3.83	1.15	0.70	1.9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그림 3-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비교: GRDP대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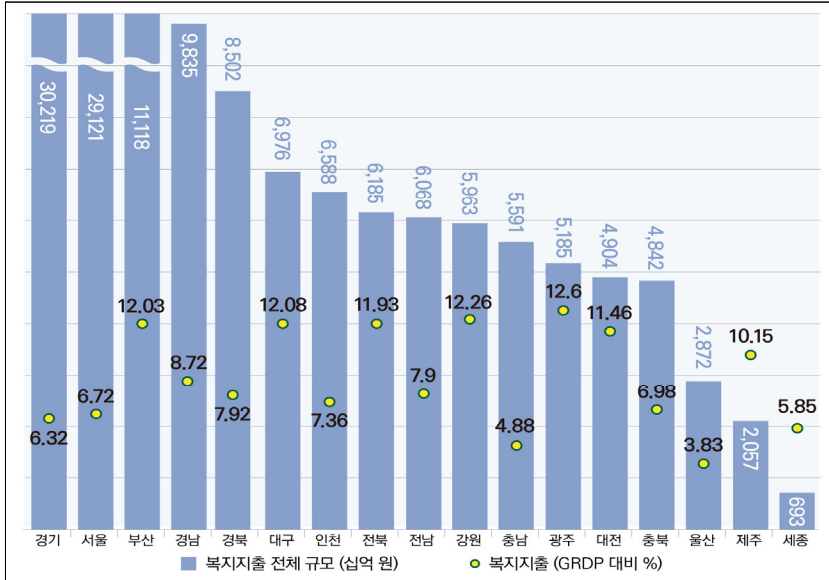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그림 3-3]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대비 비율 비교(2019년)

(단위: 십억 원, GR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광역 단위의 1인당 평균 지역복지지출액은 283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38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광주 356만 원, 전북 340만 원 순이었다. 강원이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을 보면 10위이지만 1인당 지출액으로 보면 1순위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는 적고 복지지출 금액이 높아 1인당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한편 경기도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위이지만 1인당 복지

지출액은 15위이다([그림 3-4]).

〈표 3-5〉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순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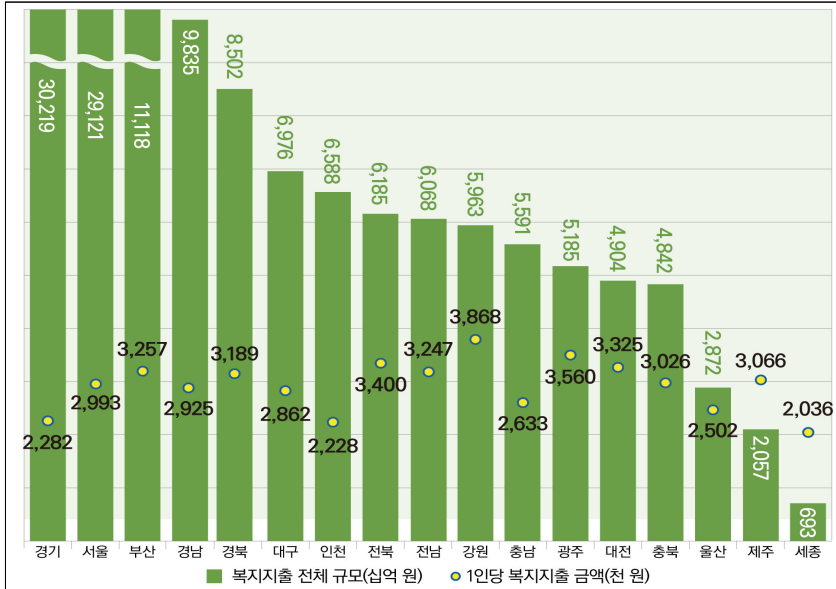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십억 원, 명)

지역	1인당 지출액(A/B)	지역복지지출액(A)	인구수(B)
계	2,830	146,722	51,849,861
강원	3,868	5,963	1,541,502
광주	3,560	5,185	1,456,468
전북	3,400	6,185	1,818,917
대전	3,325	4,904	1,474,870
부산	3,257	11,118	3,413,841
전남	3,247	6,068	1,868,745
경북	3,189	8,502	2,665,836
제주	3,066	2,057	670,989
충북	3,026	4,842	1,600,007
서울	2,993	29,121	9,729,107
경남	2,925	9,835	3,362,553
대구	2,862	6,976	2,438,031
충남	2,633	5,591	2,123,709
울산	2,502	2,872	1,148,019
경기	2,282	30,219	13,239,666
인천	2,228	6,588	2,957,026
세종	2,036	693	340,575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그림 3-4]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9년)

(단위: 십억 원,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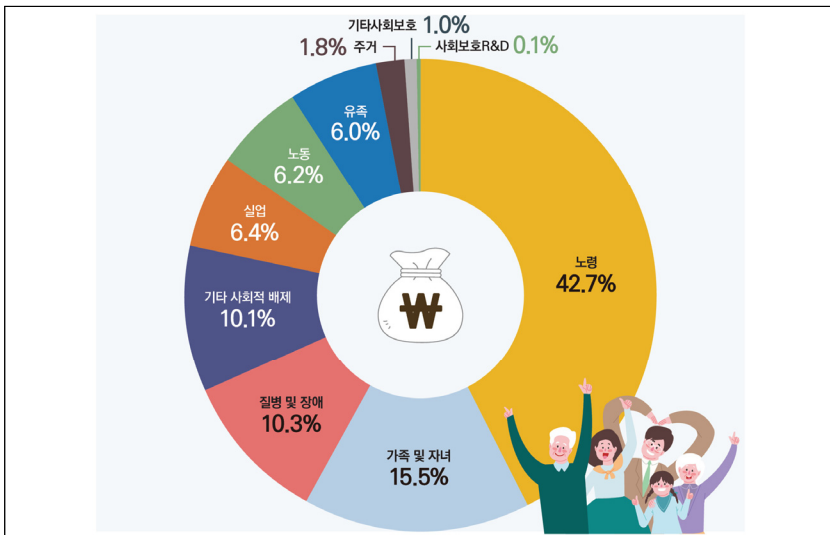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제3절 기능별 자원별 분석

지역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 비율을 [그림 3-5]와 <표 3-6>에서 살펴보면 노령이 42.7%로 가장 높고 가족 및 자녀 15.5%, 질병 및 장애 10.3%, 기타 사회적 배제 10.1%, 실업 6.4%, 노동 6.2%, 유족 6.0%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네 기능이 7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능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표 3-7>에서 살펴보면 노령은 경북·전북·전남이, 가족 및 자녀는 세종·경기가, 기타 사회적 배제는 전북·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표 3-6〉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단위: 십억 원, %)

지역	계	노령	유족	질병및 장애	가족및 자녀	기타 사회 보호	기타 사회적 배제	사회 보호 R&D	노동	실업	주거
계 (%)	146,722 (100.0)	62,641 (42.7)	8,862 (6.0)	15,041 (10.3)	22,703 (15.5)	1,408 (1.0)	14,779 (10.1)	79 (0.1)	9,167 (6.2)	9,356 (6.4)	2,686 (1.8)
서울	29,121	11,666	2,251	3,137	4,256	444	2,603	15	1,663	1,821	1,265
부산	11,118	4,629	837	1,300	1,203	149	1,505	5	619	718	153
대구	6,976	3,041	627	926	898	112	406	4	429	433	102
인천	6,588	2,818	295	631	1,173	36	413	4	509	592	118
광주	5,185	1,968	535	759	644	88	618	2	255	246	70
대전	4,904	1,919	466	714	673	85	488	2	246	265	48
울산	2,872	1,143	119	325	519	13	240	2	230	257	24
세종	693	285	22	34	194	7	45	1	56	46	5
경기	30,219	12,304	1,329	2,739	6,059	197	2,624	20	2,244	2,353	351
강원	5,963	2,730	357	758	720	39	602	2	381	272	101
충북	4,842	2,260	223	437	758	21	551	2	287	258	43
충남	5,591	2,624	274	489	921	40	548	3	341	303	46
전북	6,185	2,991	252	483	812	26	915	3	339	298	65
전남	6,068	2,925	265	472	874	34	837	3	314	261	82
경북	8,502	4,127	412	671	1,169	31	1,038	4	486	485	81
경남	9,835	4,426	465	935	1,422	57	1,135	5	634	655	100
제주	2,057	786	133	230	408	28	209	1	135	93	34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3-7〉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기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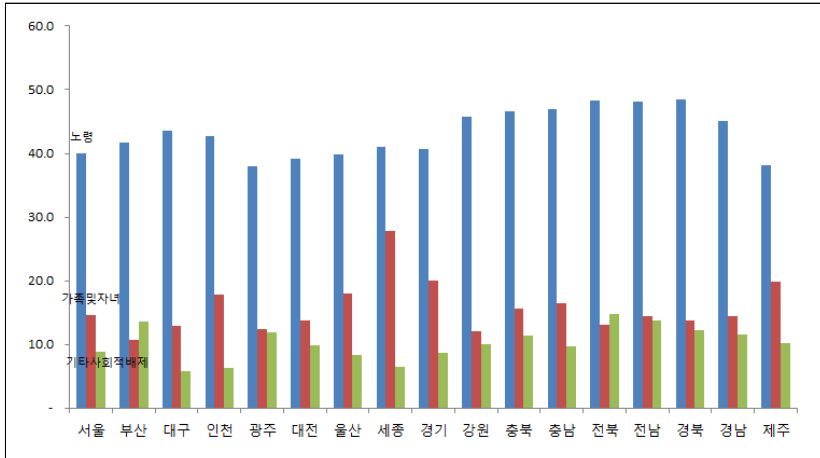
(단위: %)

지역	계	노령	유족	질병및 장애	가족및 자녀	기타 사회 보호	기타 사회적 배제	사회 보호 R&D	노동	실업	주거
계	100.0	42.7	6.0	10.3	15.5	1.0	10.1	0.1	6.2	6.4	1.8
서울	100.0	40.1	7.7	10.8	14.6	1.5	8.9	0.1	5.7	6.3	4.3
부산	100.0	41.6	7.5	11.7	10.8	1.3	13.5	0.0	5.6	6.5	1.4
대구	100.0	43.6	9.0	13.3	12.9	1.6	5.8	0.1	6.1	6.2	1.5
인천	100.0	42.8	4.5	9.6	17.8	0.5	6.3	0.1	7.7	9.0	1.8
광주	100.0	37.9	10.3	14.6	12.4	1.7	11.9	0.0	4.9	4.7	1.3
대전	100.0	39.1	9.5	14.6	13.7	1.7	9.9	0.0	5.0	5.4	1.0
울산	100.0	39.8	4.1	11.3	18.1	0.5	8.4	0.1	8.0	9.0	0.8
세종	100.0	41.1	3.1	4.8	27.9	1.0	6.5	0.1	8.1	6.6	0.7
경기	100.0	40.7	4.4	9.1	20.1	0.7	8.7	0.1	7.4	7.8	1.2
강원	100.0	45.8	6.0	12.7	12.1	0.7	10.1	0.0	6.4	4.6	1.7
충북	100.0	46.7	4.6	9.0	15.7	0.4	11.4	0.1	5.9	5.3	0.9
충남	100.0	46.9	4.9	8.7	16.5	0.7	9.8	0.1	6.1	5.4	0.8
전북	100.0	48.4	4.1	7.8	13.1	0.4	14.8	0.0	5.5	4.8	1.1
전남	100.0	48.2	4.4	7.8	14.4	0.6	13.8	0.0	5.2	4.3	1.4
경북	100.0	48.5	4.8	7.9	13.7	0.4	12.2	0.0	5.7	5.7	1.0
경남	100.0	45.0	4.7	9.5	14.5	0.6	11.5	0.1	6.4	6.7	1.0
제주	100.0	38.2	6.5	11.2	19.8	1.4	10.2	0.0	6.6	4.5	1.6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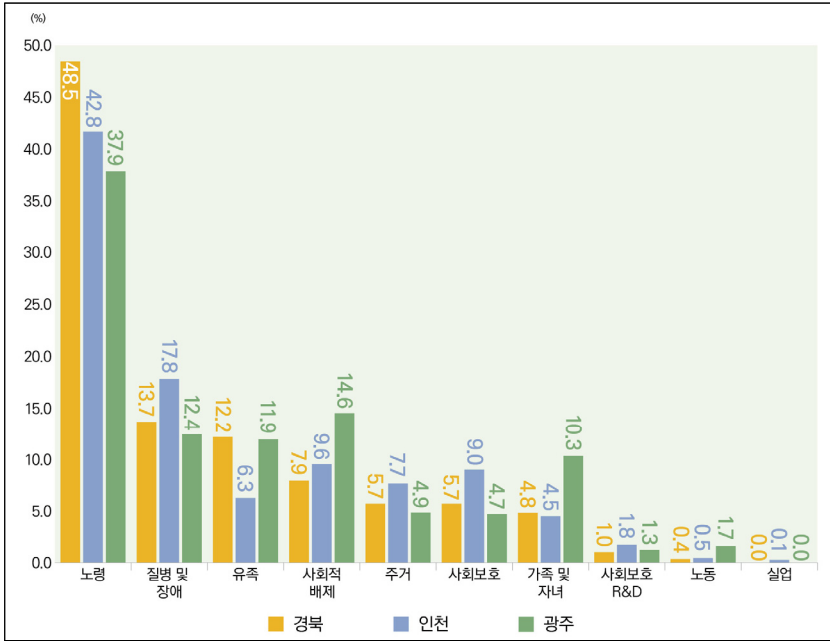
[그림 3-6]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복지지출의 구성비(2019년): 노령, 가족 및 자녀, 기타사회적배제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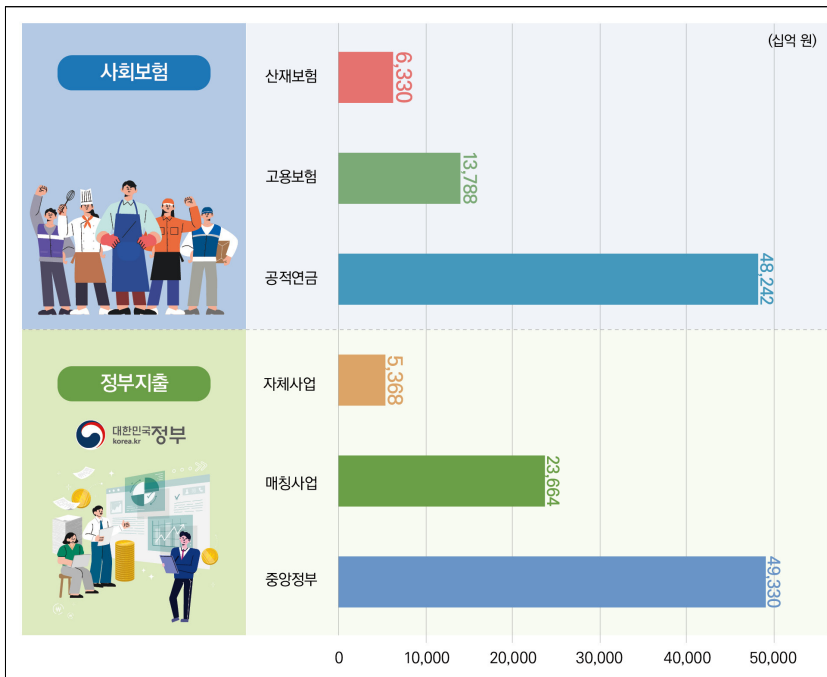
[그림 3-7]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재원별 구성 비율을 [그림 3-8]과 <표 3-8>에서 살펴보면 사회보험 68조 360십억 원(46.6%)으로 가장 높고, 중앙정부 49조 330십억 원(33.6%), 지방자치단체 29조 32십억 원(19.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부담이 대략 5:3:2임을 알 수 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울산·강원이, 중앙정부는 광주·부산이, 지방정부는 제주·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9>).

[그림 3-8] 복지지출의 재원별 구성과 금액(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46,722	49,330	29,032	23,664	5,368	68,360	48,242	13,788	6,330
서울	29,121	8,479	7,034	5,768	1,266	13,608	9,747	2,900	961
부산	11,118	4,580	1,467	1,351	116	5,071	3,542	1,040	488
대구	6,976	2,666	944	861	83	3,366	2,421	630	314
인천	6,588	2,166	1,284	1,068	217	3,137	2,012	830	295
광주	5,185	2,227	705	640	65	2,254	1,645	359	250
대전	4,904	1,896	728	651	77	2,280	1,617	405	258
울산	2,872	859	523	461	62	1,489	908	373	209
세종	693	234	158	102	56	301	232	69	-
경기	30,219	9,329	6,198	4,923	1,274	14,692	9,849	3,482	1,361
강원	5,963	1,713	1,226	899	328	3,024	2,058	378	587
충북	4,842	1,597	992	702	290	2,253	1,683	379	191
충남	5,591	1,864	1,208	876	332	2,519	1,855	445	219
전북	6,185	2,295	1,202	1,012	190	2,688	2,067	423	199
전남	6,068	2,403	1,328	1,103	225	2,337	1,823	346	168
경북	8,502	2,993	1,627	1,355	272	3,883	2,910	684	288
경남	9,835	3,279	1,865	1,508	357	4,691	3,285	903	503
제주	2,057	747	543	384	159	767	587	140	40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재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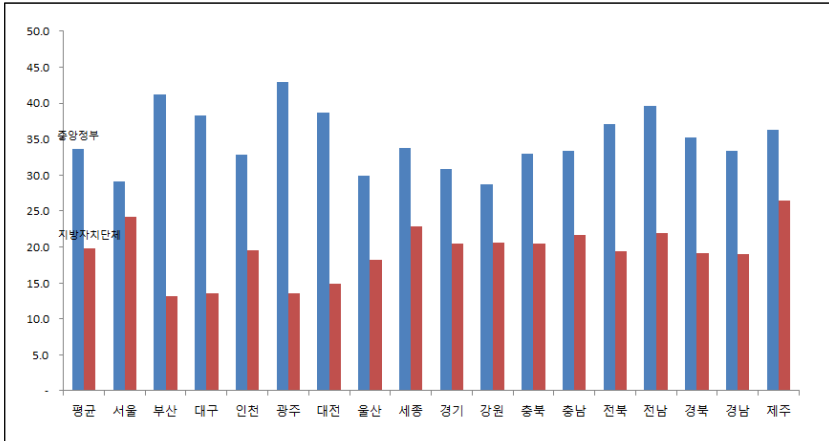
(단위: %)

지역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평균	100.0	33.6	19.8	16.1	3.7	46.6	32.9	9.4	4.3
서울	100.0	29.1	24.2	19.8	4.3	46.7	33.5	10.0	3.3
부산	100.0	41.2	13.2	12.2	1.0	45.6	31.9	9.4	4.4
대구	100.0	38.2	13.5	12.3	1.2	48.2	34.7	9.0	4.5
인천	100.0	32.9	19.5	16.2	3.3	47.6	30.5	12.6	4.5
광주	100.0	42.9	13.6	12.3	1.3	43.5	31.7	6.9	4.8
대전	100.0	38.7	14.8	13.3	1.6	46.5	33.0	8.3	5.3
울산	100.0	29.9	18.2	16.0	2.2	51.9	31.6	13.0	7.3
세종	100.0	33.8	22.8	14.7	8.1	43.4	33.5	9.9	-
경기	100.0	30.9	20.5	16.3	4.2	48.6	32.6	11.5	4.5
강원	100.0	28.7	20.6	15.1	5.5	50.7	34.5	6.3	9.9
충북	100.0	33.0	20.5	14.5	6.0	46.5	34.8	7.8	3.9
충남	100.0	33.3	21.6	15.7	5.9	45.1	33.2	8.0	3.9
전북	100.0	37.1	19.4	16.4	3.1	43.5	33.4	6.8	3.2
전남	100.0	39.6	21.9	18.2	3.7	38.5	30.0	5.7	2.8
경북	100.0	35.2	19.1	15.9	3.2	45.7	34.2	8.1	3.4
경남	100.0	33.3	19.0	15.3	3.6	47.7	33.4	9.2	5.1
제주	100.0	36.3	26.4	18.7	7.7	37.3	28.5	6.8	1.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그림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재원별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표 3-10〉 광역자치단체별 정부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9년)

(단위: 십억 원)

지역	계	중앙정부	지방매칭비 (국고보조사업, 시도보조사업)	지방자체사업비
계	78,362	49,330	23,664	5,368
서울	15,513	8,479	5,768	1,266
부산	6,047	4,580	1,351	116
대구	3,611	2,666	861	83
인천	3,451	2,166	1,068	217
광주	2,932	2,227	640	65
대전	2,624	1,896	651	77
울산	1,383	859	461	62
세종	392	234	102	56
경기	15,527	9,329	4,923	1,274
강원	2,940	1,713	899	328
충북	2,590	1,597	702	290
충남	3,072	1,864	876	332
전북	3,497	2,295	1,012	190
전남	3,731	2,403	1,103	225
경북	4,620	2,993	1,355	272
경남	5,144	3,279	1,508	357
제주	1,290	747	384	15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표 3-11〉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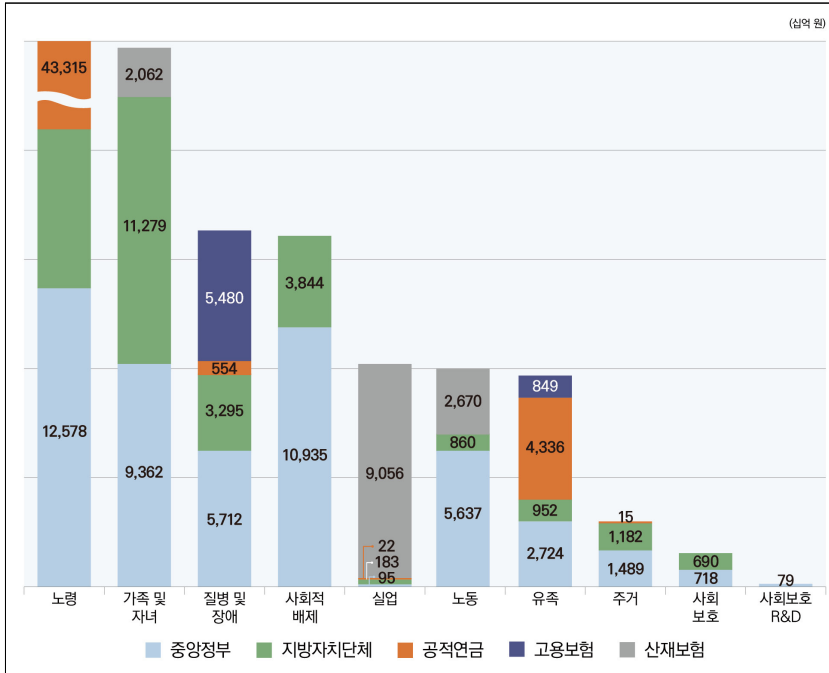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146,722 (100.0)	49,330 (33.6)	29,032 (19.8)	23,664 (16.1)	5,368 (3.7)	68,360 (46.6)	48,242 (32.9)	13,788 (9.4)	6,330 (4.3)
노령	42.7	62,641 (100.0)	12,578 (20.1)	6,747 (10.8)	5,855 (9.3)	892 (1.4)	43,315 (69.1)	43,315 (69.1)	1 (0.0)	- (0.0)
유족	6.0	8,862 (100.0)	2,724 (30.7)	952 (10.7)	409 (4.6)	543 (6.1)	5,185 (58.5)	4,336 (48.9)	- (0.0)	849 (9.6)
질병 및 장애	10.3	15,041 (100.0)	5,712 (38.0)	3,295 (21.9)	2,711 (18.0)	584 (3.9)	6,034 (40.1)	554 (3.7)	- (0.0)	5,480 (36.4)
가족 및 자녀	15.5	22,703 (100.0)	9,362 (41.2)	11,279 (49.7)	9,708 (42.8)	1,571 (6.9)	2,062 (9.1)	- (0.0)	2,062 (9.1)	- (0.0)
기타 사회 보호	1.0	1,408 (100.0)	718 (51.0)	690 (49.0)	328 (23.3)	361 (25.7)	0 (0.0)	0 (0.0)	- (0.0)	- (0.0)
기타 사회적 배제	10.1	14,779 (100.0)	10,935 (74.0)	3,844 (26.0)	3,383 (22.9)	461 (3.1)	- (0.0)	- (0.0)	- (0.0)	- (0.0)
사회 보호 R&D	0.1	79 (100.0)	79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노동 ^{주)}	6.2	9,167 (100.0)	5,637 (61.5)	860 (9.4)	464 (5.1)	396 (4.3)	2,670 (29.1)	- (0.0)	2,670 (29.1)	- (0.0)
실업	6.4	9,356 (100.0)	95 (1.0)	183 (2.0)	78 (0.8)	105 (1.1)	9,078 (97.0)	22 (0.2)	9,056 (96.8)	- (0.0)
주거	1.8	2,686 (100.0)	1,489 (55.4)	1,182 (44.0)	726 (27.0)	455 (17.0)	15 (0.6)	15 (0.6)	- (0.0)	- (0.0)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포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그림 3-10] 복지지출의 기능별 자원별 구성 금액(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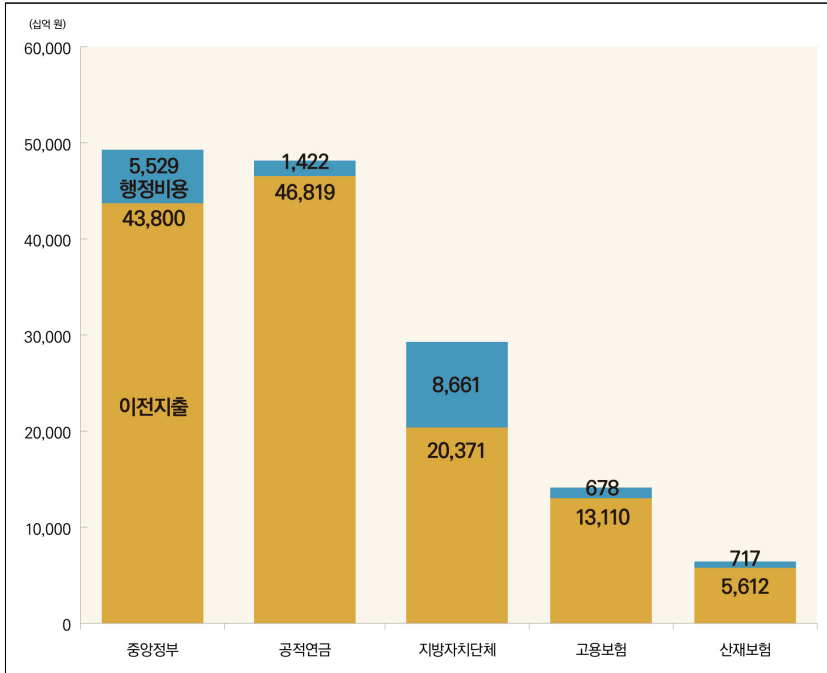
〈표 3-12〉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146,722 (100.0)	49,330 (33.6)	29,032 (19.8)	23,664 (16.1)	5,368 (3.7)	68,360 (46.6)	48,242 (32.9)	13,788 (9.4)	6,330 (4.3)	
행정 비용	소계	11.6	17,008 (100.0)	5,529 (32.5)	8,661 (50.9)	5,886 (34.6)	2,774 (16.3)	2,818 (16.6)	1,422 (8.4)	678 (4.0)	717 (4.2)
	피용자 보수	1.7	2,484 (100.0)	1,132 (45.6)	806 (32.4)	513 (20.6)	293 (11.8)	546 (22.0)	475 (19.1)	67 (2.7)	4 (0.1)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	1,705 (100.0)	456 (26.7)	343 (20.1)	122 (7.2)	221 (13.0)	906 (53.1)	784 (46.0)	120 (7.0)	2 (0.1)
	이자	0.0	17 (100.0)	5 (27.7)	11 (66.7)	1 (3.3)	10 (63.4)	1 (5.6)	- (0.0)	1 (5.6)	- (0.0)
	기타 비용	0.0	54 (100.0)	36 (65.7)	1 (2.1)	- (0.0)	1 (2.1)	17 (32.1)	5 (9.1)	12 (22.5)	0 (0.5)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7.3	10,648 (100.0)	3,353 (31.5)	7,210 (67.7)	5,234 (49.1)	1,976 (18.6)	86 (0.8)	72 (0.7)	9 (0.1)	5 (0.0)
	출연	1.4	2,099 (100.0)	549 (26.1)	290 (13.8)	17 (0.8)	273 (13.0)	1,261 (60.0)	86 (4.1)	469 (22.3)	706 (33.6)
	소계	88.4	129,714 (100.0)	43,800 (33.8)	20,371 (15.7)	17,777 (13.7)	2,594 (2.0)	65,542 (50.5)	46,819 (36.1)	13,110 (10.1)	5,612 (4.3)
이 전 지 출	보조금	4.9	7,159 (100.0)	6,824 (95.3)	291 (4.1)	163 (2.3)	128 (1.8)	44 (0.6)	21 (0.3)	22 (0.3)	0 (0.0)
	사회 급여	83.5	122,555 (100.0)	36,976 (30.2)	20,080 (16.4)	17,614 (14.4)	2,466 (2.0)	65,498 (53.4)	46,798 (38.2)	13,088 (10.7)	5,612 (4.6)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그림 3-11] 복지지출의 재원별 지출종류별 구성 금액(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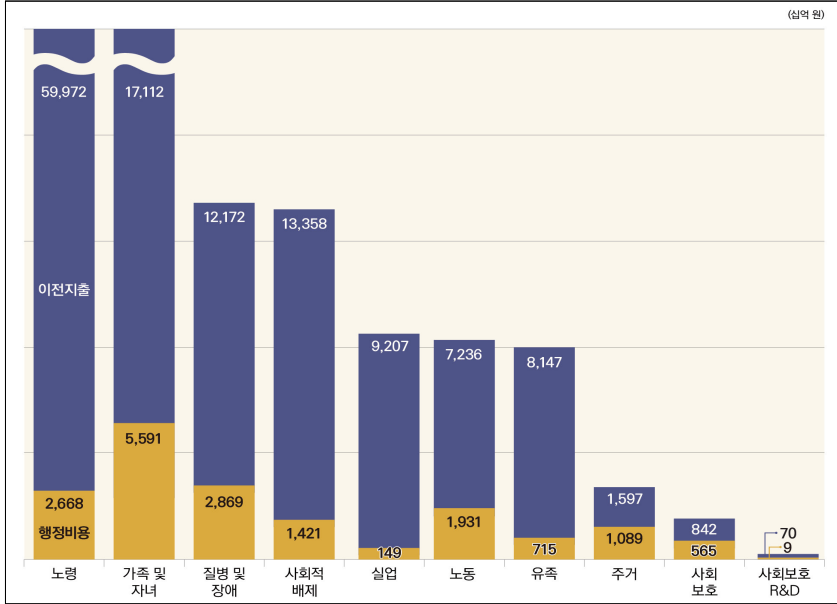
제4절 중분류와 세부지출의 분석

복지지출의 세부지출별 규모는 [그림 3-12], <표 3-13>과 같다. 전체 147조 중 이전지출이 129.7조원을, 행정비용으로 17.0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구성 비율을 [그림 3-13]과 <표 3-14>에서 살펴보면 이전지출이 88.4%, 행정비용이 11.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전지출은 사회급여 83.5%, 보조금 4.9%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행정비용은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7.3%, 피용자 보수 1.7%, 출연 1.4%,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로 나타났다.

이전지출의 전달을 위해 전체 지출 중 약 10%가 행정비용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복지지출의 세부지출 개념과 관련 비목·세목명에 대해서는 <부표 1-4>를, 중앙·지방정부의 세부지출별 예산 목명은 <부표 1-6>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3-12] 기능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과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표 3-13〉 기능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단위: 십억 원)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 금	사회 급여
계	100.0	146,722	17,008	2,484	1,705	17	54	10,648	2,099	129,714	7,159	122,555
노령	42.7	62,641	2,668	682	767	-	4	1,117	98	59,972	78	59,895
유족	6.0	8,862	715	111	119	2	5	372	106	8,147	2,502	5,645
질병 및 장애	10.3	15,041	2,869	254	72	2	9	1,672	861	12,172	2,047	10,124
가족 및 자녀	15.5	22,703	5,591	172	254	1	6	4,966	193	17,112	158	16,954
기타 사회 보호 ¹⁾	1.0	1,408	565	93	75	1	6	299	91	842	481	361
기타 사회적 배제 ²⁾	10.1	14,779	1,421	117	64	0	-	1,057	183	13,358	17	13,341
사회 보호 R&D ³⁾	0.1	79	9	1	5	-	0	3	-	70	-	70
노동 ⁴⁾	6.2	9,167	1,931	929	325	1	25	132	518	7,236	1,806	5,430
실업	6.4	9,356	149	124	17	-	-	7	0	9,207	70	9,137
주거	1.8	2,686	1,089	1	7	10	-	1,022	49	1,597	1	1,597

주: 1) 사회보호의 관리·운영·지원, 화재·홍수·지진의 재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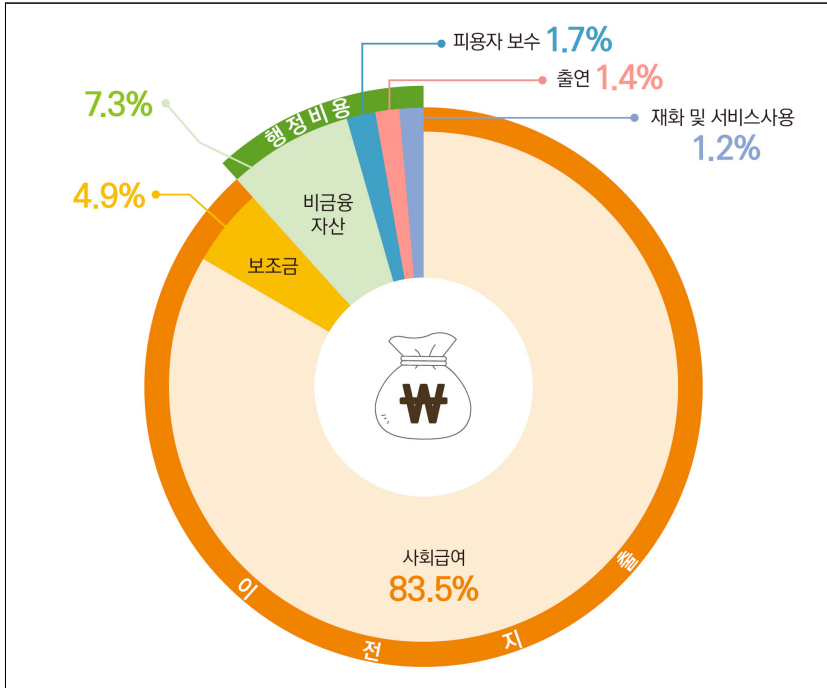
2) 소외계층(저소득층, 이민자, 피난민, 원주민, 알콜약물중독자, 범죄피해자)

3) 사회보호관련 연구·실험(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 지역사회융합 사회서비스투자사업 R&D)

4)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그림 3-13] 복지지출의 세부지출별 구성비(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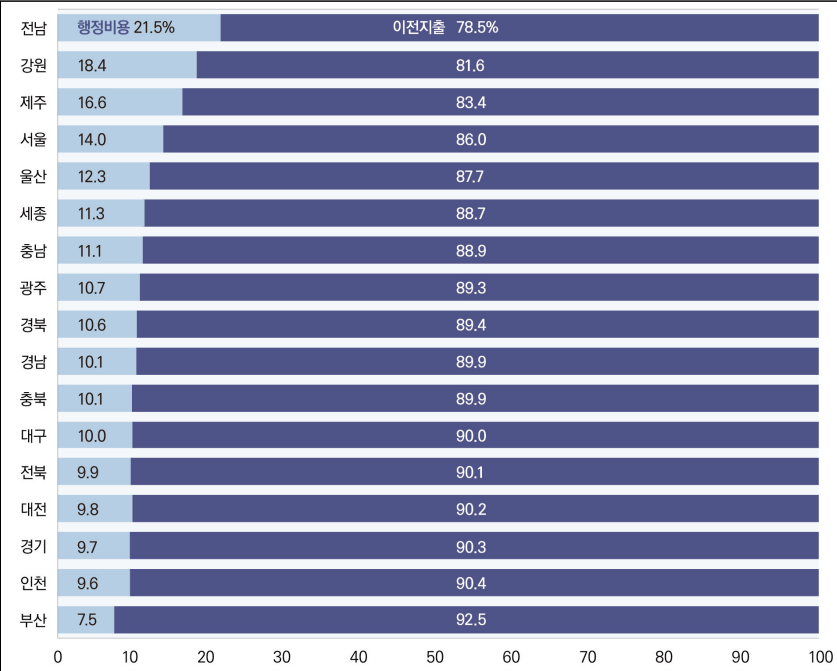
〈표 3-14〉 광역자치단체별 세부지출의 복지지출 구성비(2019년)

(단위: %)

지역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소계	피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 급여
평균	100.0	11.6	1.7	1.2	0.0	0.0	7.3	1.4	88.4	4.9	83.5
서울	100.0	14.0	1.6	1.3	0.0	0.0	9.7	1.3	86.0	9.0	77.0
부산	100.0	7.5	1.1	1.0	0.0	0.0	4.2	1.2	92.5	8.7	83.8
대구	100.0	10.0	1.5	1.2	0.0	0.0	5.9	1.3	90.0	10.5	79.4
인천	100.0	9.6	1.6	1.0	0.0	0.0	5.3	1.6	90.4	1.8	88.6
광주	100.0	10.7	1.5	1.3	0.0	0.1	6.5	1.2	89.3	13.4	75.9
대전	100.0	9.8	1.6	1.2	0.0	0.0	5.6	1.4	90.2	11.2	79.0
울산	100.0	12.3	1.9	1.0	0.0	0.0	7.6	1.8	87.7	1.6	86.1
세종	100.0	11.3	1.3	1.3	0.0	0.0	7.4	1.2	88.7	3.8	84.9
경기	100.0	9.7	1.4	1.1	0.0	0.0	5.4	1.9	90.3	1.8	88.5
강원	100.0	18.4	2.3	1.3	0.0	0.0	13.1	1.7	81.6	1.6	80.0
충북	100.0	10.1	1.5	1.1	0.0	0.0	6.2	1.2	89.9	1.5	88.5
충남	100.0	11.1	1.8	1.2	0.0	0.0	6.8	1.3	88.9	2.3	86.7
전북	100.0	9.9	1.9	1.2	0.0	0.0	5.7	1.1	90.1	1.2	88.9
전남	100.0	21.5	3.2	1.2	0.0	0.0	16.1	1.0	78.5	1.6	76.9
경북	100.0	10.6	1.8	1.2	0.0	0.0	6.3	1.2	89.4	1.4	88.0
경남	100.0	10.1	2.3	1.1	0.0	0.0	5.2	1.5	89.9	1.5	88.4
제주	100.0	16.6	2.7	1.3	0.0	0.0	11.7	0.9	83.4	6.2	77.3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그림 3-14]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제5절 개별 자치단체의 세부 분석(서울시 중심)

이 절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복지지출을 기능별·세부지출별, 기능별·재원별, 재원별·세부지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나머지 지역은 부록에 제시 한다(〈부표 2-1〉에서 〈부표 2-64〉 참조).

기능별·세부지출별로 보면 노령부문의 이전지출이 96.2%, 행정비용이 3.8%로 이전지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주거는 이전지출의 비중이 36.6%로 낮다. 이러한 이유는 주거의 급여제공을 위해 자본적 지출인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표 3-15〉).

〈표 3-15〉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규모와 구성비(2019년): 기능별 세부지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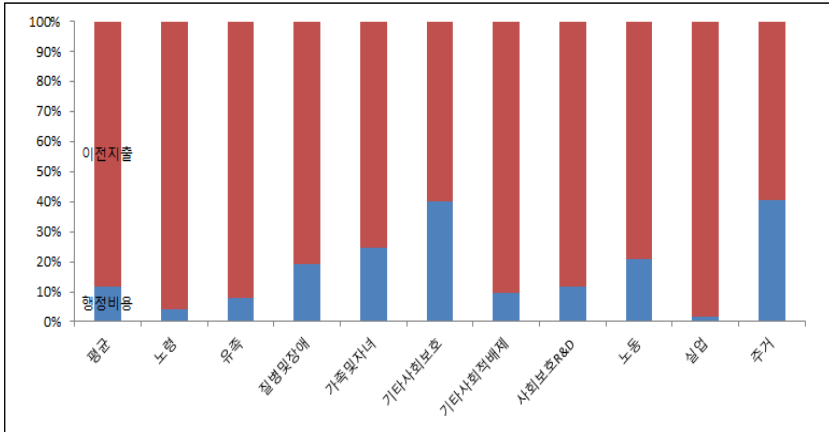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파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 금	사회 급여
계	100.0	29,121 (100.0)	4,066 (14.0)	464 (1.6)	369 (1.3)	12 (0.0)	14 (0.0)	2,824 (9.7)	383 (1.3)	25,056 (86.0)	2,624 (9.0)	22,432 (77.0)
노령	40.1	11,666 (100.0)	438 (3.8)	101 (0.9)	151 (1.3)	- (0.0)	1 (0.0)	154 (1.3)	30 (0.3)	11,228 (96.2)	37 (0.3)	11,192 (95.9)
유족	7.7	2,251 (100.0)	108 (4.8)	33 (1.5)	27 (1.2)	1 (0.0)	2 (0.1)	30 (1.3)	15 (0.7)	2,143 (95.2)	1,097 (48.7)	1,047 (46.5)
질병및 장애	10.8	3,137 (100.0)	334 (10.7)	57 (1.8)	23 (0.7)	1 (0.0)	3 (0.1)	110 (3.5)	140 (4.5)	2,803 (89.3)	921 (29.4)	1,882 (60.0)
가족및 자녀	14.6	4,256 (100.0)	1,712 (40.2)	21 (0.5)	51 (1.2)	- (0.0)	1 (0.0)	1,619 (38.1)	20 (0.5)	2,543 (59.8)	4 (0.1)	2,539 (59.7)
기타 사회 보호	1.5	444 (100.0)	143 (32.3)	15 (3.3)	15 (3.5)	0 (0.0)	2 (0.5)	66 (14.9)	45 (10.1)	301 (67.7)	213 (47.9)	88 (19.8)
기타 사회적 배제	8.9	2,603 (100.0)	106 (4.1)	19 (0.7)	16 (0.6)	- (0.0)	- (0.0)	36 (1.4)	34 (1.3)	2,498 (95.9)	6 (0.2)	2,492 (95.7)
사회 보호 R&D	0.1	15 (100.0)	2 (11.6)	0 (1.0)	1 (6.4)	- (0.0)	0 (0.2)	1 (4.0)	- (0.0)	13 (88.4)	- (0.0)	13 (88.4)
노동	5.7	1,663 (100.0)	356 (21.4)	164 (9.9)	71 (4.3)	0 (0.0)	5 (0.3)	26 (1.6)	90 (5.4)	1,307 (78.6)	335 (20.1)	972 (58.5)
실업	6.3	1,821 (100.0)	64 (3.5)	53 (2.9)	9 (0.5)	- (0.0)	- (0.0)	2 (0.1)	- (0.0)	1,757 (96.5)	12 (0.7)	1,745 (95.8)
주거	4.3	1,265 (100.0)	803 (63.4)	0 (0.0)	3 (0.2)	10 (0.8)	- (0.0)	781 (61.7)	9 (0.7)	463 (36.6)	0 (0.0)	463 (36.6)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그림 3-15] 기능별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9년): 서울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다음으로 10개 기능별 지출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6>의 구성 비율을 보면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노령(40.1%)이며, 이의 지출을 위한 부담 주체는 공적연금이 75.7%, 중앙정부 15.0%, 지방자치단체 9.3%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가족 및 자녀 영역은 지방자치단체 58.8%, 중앙정부 24.5%, 고용보험 16.7% 순이었다. 세 번째 순위인 질병 및 장애 영역은 중앙정부가 46.9%, 산재보험이 26.7%, 지방자치단체가 23.7%로 나타났다. 즉, 노령 영역은 주된 지출이 공적연금이고, 가족 및 자녀 영역은 정부 재원임을 알 수 있다(<표 3-16>).

〈표 3-16〉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29,121 (100.0)	8,479 (29.1)	7,034 (24.2)	5,768 (19.8)	1,266 (94.3)	13,608 (46.7)	9,747 (33.5)	2,900 (10.0)	961 (3.3)
노령	40.1	11,666 (100.0)	1,746 (15.0)	1,085 (9.3)	947 (8.1)	138 (1.2)	8,835 (75.7)	8,835 (75.7)	0 (0.0)	- -
유족	7.7	2,251 (100.0)	1,191 (52.9)	118 (5.2)	61 (2.7)	58 (2.6)	942 (41.8)	817 (36.3)	- -	125 (5.6)
질병 및 장애	10.8	3,137 (100.0)	1,471 (46.9)	742 (23.7)	631 (20.1)	111 (3.5)	924 (29.5)	88 (2.8)	- -	837 (26.7)
가족 및 자녀	14.6	4,256 (100.0)	1,042 (24.5)	2,503 (58.8)	2,188 (51.4)	314 (7.4)	711 (16.7)	- -	711 (16.7)	- -
기타 사회보호	1.5	444 (100.0)	264 (59.5)	180 (40.5)	122 (27.5)	57 (12.8)	0 (0.0)	0 (0.0)	- -	- -
기타 사회적 배제	8.9	2,603 (100.0)	1,384 (53.2)	1,219 (46.8)	1,171 (45.0)	48 (1.8)	- -	- -	- -	- -
사회보호 R&D	0.1	15 (100.0)	15 (100.0)	- -	- -	- -	- -	- -	- -	- -
노동	5.7	1,663 (100.0)	1,017 (61.2)	150 (9.0)	112 (6.7)	38 (2.3)	497 (29.9)	- -	497 (29.9)	- -
실업	6.3	1,821 (100.0)	7 (0.4)	117 (6.4)	31 (1.7)	86 (4.7)	1,697 (93.2)	4 (0.2)	1,693 (93.0)	- -
주거	4.3	1,265 (100.0)	342 (27.0)	921 (72.8)	504 (39.8)	417 (33.0)	3 (0.2)	3 (0.2)	- -	- -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끝으로 재원별·세부지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비용을 구성하는 주된 급여인 비금융자산의 순투자는 지방정부가 81.7%, 중앙정부가 17.7%, 사회보험이 0.6%로 나타나 정부가 대부분의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전지출을 구성하는 주된 급여인 '사회급여'는 중앙정부가 22.3%, 지방정부가 19.4% 그리고 사회보험이 58.3%로 나타나 정부 대 사회보험은 4:6임을 알 수 있다. 이전지출은 사회보험이 주된 지출을 하고 있다.

〈표 3-17〉 서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세부지출별 재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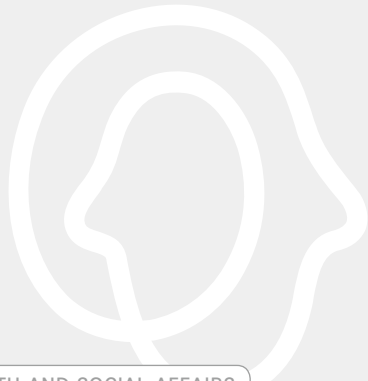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29,121 (100.0)	8,479 (29.1)	7,034 (24.2)	5,768 (19.8)	1,266 (4.3)	13,608 (46.7)	9,747 (33.5)	2,900 (10.0)	961 (3.3)
소계	(14.0)	4,066 (100.0)	895 (22.0)	2,655 (65.3)	1,831 (45.0)	824 (20.3)	516 (12.7)	281 (6.9)	126 (3.1)	109 (2.7)
행정 비용	비용자 보수	(1.6)	464 (100.0)	184 (39.6)	174 (37.6)	117 (25.3)	57 (12.3)	106 (22.8)	93 (20.0)	13 (2.7)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3)	369 (100.0)	96 (26.1)	95 (25.9)	48 (13.1)	47 (12.8)	177 (48.0)	154 (41.8)	22 (6.1)
	이자	(0.0)	12 (100.0)	2 (17.1)	10 (81.4)	0 (4.2)	9 (77.3)	0 (1.4)	- (0.0)	0 (1.4)
	기타 비용	(0.0)	14 (100.0)	10 (68.6)	1 (8.2)	- (0.0)	1 (8.2)	3 (23.3)	1 (6.9)	2 (16.1)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9.7)	2,824 (100.0)	500 (17.7)	2,307 (81.7)	1,659 (58.7)	648 (23.0)	17 (0.6)	15 (0.5)	2 (0.1)
	출연	(1.3)	383 (100.0)	103 (27.0)	67 (17.5)	6 (1.6)	61 (15.9)	213 (55.5)	18 (4.7)	87 (22.8)

15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이 전 지 출	소계	(86.0)	25,056 (100.0)	7,585 (30.3)	4,379 (17.5)	3,937 (15.7)	442 (1.8)	13,092 (52.3)	9,466 (37.8)	2,774 (11.1)	852 (3.4)
	보조금	(9.0)	2,624 (100.0)	2,578 (98.3)	38 (1.4)	31 (1.2)	6 (0.2)	8 (0.3)	4 (0.2)	4 (0.2)	0 (0.0)
	사회 급여	(77.0)	22,432 (100.0)	5,006 (22.3)	4,342 (19.4)	3,905 (17.4)	436 (1.9)	13,084 (58.3)	9,462 (42.2)	2,770 (12.3)	852 (3.8)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금;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제4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사례연구

제1절 공공데이터와 연계 분석

제2절 삶의 질과 개선, 관계 분석

제3절 복지 지표의 발굴과 산출

제4절 독일의 사회예산 활용 사례

제4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복지계정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여러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계정의 정책적,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1절에서는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복지지출의 소득계층별 소득 및 소비 효과를 추정하는 등 정책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2절에서는 사회조사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삶의 질과 개선, 관계를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복지 지표의 발굴과 산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절에서는 독일의 Social Protection에 대한 세부 분류를 활용한 사례로 연방노동사회성(BMAS)에서 발간하는 사회예산(Sozialbudget)과 사회보고서(Sozialbericht)의 학술적, 정책적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1절 공공데이터와 연계 분석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2.2%(2019년 기준)로 OECD 평균(20.0%)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최근 10년간(2009~2019년) 연평균 증가율이 4.3%(동 기간 중 OECD 국가는 연평균 0.4% 감소)에 달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OECD.Stat, 2021). 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시의성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 진단 및 평가를 필요로 한다.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계 소비후생 증대 기여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통해 기능별 복지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절에서는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득창출 효과와 함께 가계의 소비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경환 등(2020)이 국민계정의 사회보호지출(대분류)을 중분류 단위에서 세분화하여 구축한 복지계정 항목을 이용하였다. 복지계정의 경우 복지예산에서 행정비용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 금액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복지정책의 실제 효과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정책효과 분석의 일환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공적 이전소득액 비율 분석, 사회계정행렬(SAM)의 명목승수분석, 가계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의 추정을 통해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수량적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4대 기능별 복지지출(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이 소득분위별 가계계층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어떻게 배분되는가? 둘째, 가계부문에 배분된 공적이전소득이 계층별 가계부문의 소득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능별 복지지출이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가계소득계층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1.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득분위별 분포

분석 대상인 복지정책 항목은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계계층별 지출 분포가 추정 가능한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고경환 등(2020)이 구축한 복지계정 기준으로 10개 기능별 분류 중 규모가 큰 4대 분야인 노령(42.6%), 가족 및 자녀(14.0%), 질병 및 장애(10.0%), 기타 사회적 배제(11.2%)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4대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의 소득 10분위별 지출 비율을 구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기준의 가구통합 공통부문(금융+복지) 공적이전소득액을 계산하였다. 노령은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의 합이며, 가족 및 자녀는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에 해당한다. 질병 및 장애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기타 사회적 배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농어업정부보조금, 취업관련지원금, 보훈급여금, 긴급복지지원금,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으로 정의하였다.

〈표 4-1〉에 상기 기준으로 집계한 4대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에 대한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0) 표본가구의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네 항목 합계의 71.4%가 ‘노령’ 부분에 대한 지출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타(21.9%), 가족(5.4%), 장애(1.3%) 순으로 추계되었다.

〈표 4-1〉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액 합계

(단위: 백만 원)

가계소득 분위	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
1분위	5,885,507	20,503	175,379	2,829,419
2분위	7,240,432	156,701	322,278	3,435,990
3분위	7,144,295	277,320	205,018	3,261,183
4분위	7,062,829	467,221	136,662	2,767,561
5분위	7,378,236	649,295	105,856	2,360,941
6분위	7,187,678	724,964	61,595	1,633,308
7분위	6,296,481	900,755	42,225	1,405,869
8분위	6,730,674	647,545	22,234	1,272,306
9분위	6,058,576	639,513	47,903	910,718
10분위	5,240,720	564,000	42,176	486,961
합계	66,225,428	5,047,817	1,161,326	20,364,256

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 합계치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함.

다음으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구한 네 가지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총액(〈표 4-1〉)의 소득분위별 지출비율이 〈표 4-2〉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 및 장애’와 ‘기타 사회적 배제’ 분야의 경우 낮은 수준의 가계소득 분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득분위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액 지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 및 자녀’ 분야의 경우 노인가구주 비율(〈그림 4-1〉)이 높은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가구주 비율이 낮은 고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액 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령’ 분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액 지출의 소득분위별 치우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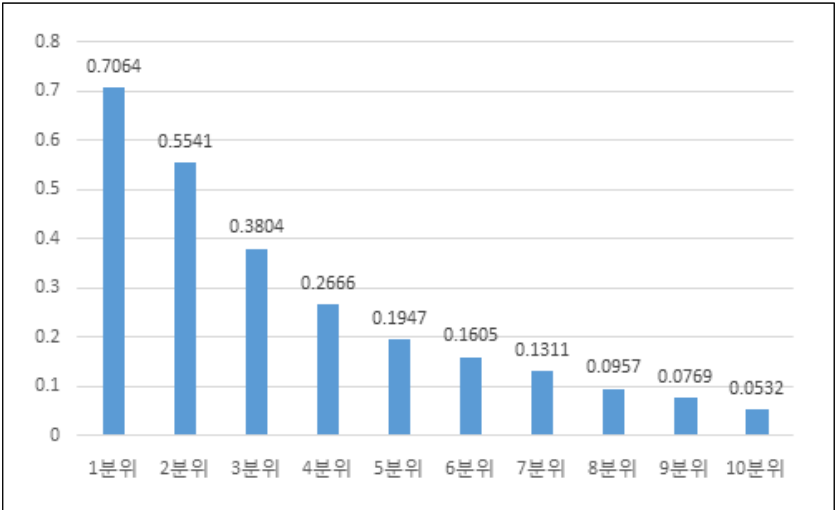
〈표 4-2〉 공적 이전소득액 구성비

가계소득 분위	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
1분위	0.0889	0.0041	0.1510	0.1389
2분위	0.1093	0.0310	0.2775	0.1687
3분위	0.1079	0.0549	0.1765	0.1601
4분위	0.1066	0.0926	0.1177	0.1359
5분위	0.1114	0.1286	0.0912	0.1159
6분위	0.1085	0.1436	0.0530	0.0802
7분위	0.0951	0.1784	0.0364	0.0690
8분위	0.1016	0.1283	0.0191	0.0625
9분위	0.0915	0.1267	0.0412	0.0447
10분위	0.0791	0.1117	0.0363	0.0239
합계	1	1	1	1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함.

[그림 4-1] 가계소득분위별 노인가구주 비율

(단위: %)



주: 노인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복지지출이 가계부문과 생산활동 부문으로 공적이전 지출 되는 경우, 가계소득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 기능별 복지지출의 주입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과 <표 4-2>의 공적 이전소득액 구성비를 이용하여 기능별 복지지출의 가계소득분위별 및 생산활동별 주입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아래 <표 4-3>과 같다. 즉, 기능별 복지지출의 ‘현금’ 주입은 가계 부문에서, ‘현물’ 주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행정비용’ 주입은 공공행정 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표 4-3〉 기능별 복지지출의 부문별 주입 규모 시나리오

(단위: 백만 원)

부문별 주입		노령	가족	장애	기타
가계 소득	1분위	5,042,324	16,335	280,537	593,255
	2분위	6,203,137	124,850	515,517	720,437
	3분위	6,120,773	220,952	327,948	683,784
	4분위	6,050,978	372,254	218,606	580,285
	5분위	6,321,199	517,320	169,328	495,027
	6분위	6,157,941	577,609	98,527	342,462
	7분위	5,394,420	717,669	67,543	294,774
	8분위	5,766,409	515,926	35,566	266,769
	9분위	5,190,599	509,526	76,626	190,954
	10분위	4,489,912	449,362	67,465	102,103
사회복지서비스업		3,234,623	13,089,949	10,314,133	9,088,356
공공행정		2,668,245	5,590,943	2,869,325	1,420,826
합계		62,640,559	22,702,696	15,041,121	14,779,030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제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2. 기능별 복지지출이 분위별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가계부문에 대한 기능별 복지지출이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기능별 복지지출 주입 시 가계 소비의 원천인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회계정행렬’(SAM) 승수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SAM은 경제의 소득순환을 정방행렬 형태의 수입-지출 표로 구성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생충격이 창출하는 소득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고경환 등(2019)에서 80×80 SAM을 이용하여 구한 명목소득승수 행렬을 이용하였다. 거시 SAM의 기본 자료는 국민계정의 소득계정을 근간으로 하므로 SAM 승수분석을 위한 복지지출 주입 시나리오도 국민계정 기준의 정부기능별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관점에서 복지지출 구조를 파악한 ‘복지계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COFOG 경제적 분류체계의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 분야 중분류 재정지표 중 4대 복지지출 분야를 대상으로 가계소득 창출효과를 산출하였다.

〈표 4-3〉에 제시한 기능별 복지지출의 가계소득분위별 배분 시나리오와 고정환 등(2019)의 SAM 명목승수행렬(M_n)을 이용하여 복지지출이 가계부문의 소득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n=80$ 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진 명목 승수행렬을 $M_n = (I - A_n)^{-1}$ (단 A_n 은 SAM 내생계정의 평균지출)과 같이 정의할 때, 복지지출이라는 외생적인 주입($P_{(n-1) \times 1}$)이 정부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n-1$ 개의 내생계정에서 나타나는 소득효과는 $M_{(n-1) \times (n-1)} \cdot P_{(n-1) \times 1}$ 을 통해 계산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0개 복지지출 분야 중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적이전소득 분석을 통해 소득분위별 지출 금액의 파악이 가능한 네 가지 분야(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로 모의실험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위한 외생적인 충격은 가계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액 지출 비율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능별 복지지출(현금급여)의 네 가지 분야(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의 실제 지출 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⁸⁾

네 가지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에 대한 외생적 주입(1회성 충격)의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창출 효과를 계산한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어 있음

8)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액 합계로부터 구한 네 가지 공적이전지출 항목 비율과 고정환 등(2020)의 「복지계정」에서 가져온 4대 복지지출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소득대비 소득증가율은 주입 금액이 가장 큰 ‘노령’ 분야가 가장 높고, 이어서 ‘가족 및 자녀’, ‘기타 사회적 배제’, ‘질병 및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적 배제’는 현금급여 주입 규모가 ‘가족 및 자녀’에 비해 크지만, 오히려 가계 소득창출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 가지 기능별 복지지출 중 ‘가족 및 자녀’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초기소득에 비해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특히 ‘노령’ 분야의 분배개선 효과가 가장 크고, 이어서 ‘기타 사회적 배제’와 ‘질병 및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자녀’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가구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가구주 비중이 적은 고소득층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사회적 배제’와 ‘질병 및 장애’ 분야의 소득분배 개선 정도가 ‘노령’ 분야에 비해 낮은 이유는 가계부문에 대한 현금급여의 규모가 작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네 가지 기능별 복지지출이 국민경제 소득 순환을 통해 생산 활동 부문의 소득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표 4-5>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지출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소득증가율 효과가 생산 활동 부문에 미치는 소득증가율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지출의 생산 활동 부문에 대한 소득창출 효과는 현물급여가 주입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비용의 주입이 이루어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농림어업, 음식료품제조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소득증가율이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지출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생산 활동 부문인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득창출 기여도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물급여의 주입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복지지출을 통해 ‘노령’ 분야의 경우 부동산업이, ‘가족 및 자여’,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 분야의 경우는 행정비용의 주입이 이루어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업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지지출로 인한 소득창출 효과가 낮은 생산 활동 부문은 모든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에서 ‘건설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계부문의 복지지출 소득효과

구 분		노령			가족 및 자녀		
		현금 급여	소득 창출액	초기 소득 대비 소득 증가율	현금 급여	소득 창출액	초기 소득 대비 소득 증가율
가계 소득	1분위	5,042,324	5,746,945	33.069	16,335	239,565	1.379
	2분위	6,203,137	7,562,976	22.207	124,850	617,876	1.814
	3분위	6,120,773	7,993,885	16.754	220,952	1,043,542	2.187
	4분위	6,050,978	8,368,112	14.105	372,254	1,436,407	2.421
	5분위	6,321,199	9,059,059	12.901	517,320	1,910,691	2.721
	6분위	6,157,941	9,216,684	11.748	577,609	2,189,963	2.791
	7분위	5,394,420	8,752,052	10.114	717,669	2,504,300	2.894
	8분위	5,766,409	9,864,176	9.366	515,926	2,796,681	2.655
	9분위	5,190,599	10,441,753	7.687	509,526	3,305,100	2.433
	10분위	4,489,912	12,597,049	6.029	449,362	4,898,035	2.344
합계		56,737,691	89,602,692	10.619	4,021,804	20,942,159	2.482
지니계수		0.2797			0.2963		

주: 지니계수는 소득 10분위로 구분한 가계부문의 누적가구 비율(N_i)과 누적소득 비율(H_i)을 이용하여 계산한 근사치 기준($G=1-\sum_{k=1}^n(N_k-N_{k-1})(H_k+H_{k-1})$, $n=10$)으로 초기값은 0.2952임.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단위: 백만 원, %)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		
현금 급여	소득 창출액	초기 소득 대비 소득 증가율	현금 급여	소득 창출액	초기 소득 대비 소득 증가율
280,537	428,322	2.465	593,255	744,387	4.283
515,517	845,731	2.483	720,437	1,047,645	3.076
327,948	886,537	1.858	683,784	1,216,389	2.549
218,606	943,439	1.590	580,285	1,265,917	2.134
169,328	1,122,861	1.599	495,027	1,381,306	1.967
98,527	1,203,684	1.534	342,462	1,363,936	1.738
67,543	1,293,414	1.495	294,774	1,426,363	1.648
35,566	1,602,761	1.522	266,769	1,703,405	1.617
76,626	1,996,269	1.470	190,954	1,963,246	1.445
67,465	3,125,212	1.496	102,103	2,911,913	1.394
1,857,663	13,448,229	1.594	4,269,848	15,024,506	1.781
0.2950			0.2937		

〈표 4-5〉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 활동 부문의 소득증가율

(단위: %)

생산 활동 부문	기능별 복지지출 주입	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
농림어업		6.896	2.397	1.674	1.709
광업		2.235	0.909	0.634	0.625
음식료품제조업		6.777	2.505	1.752	1.770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694	0.898	0.596	0.606
목재 및 종이, 인쇄 및 복제업		2.929	1.124	0.760	0.747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94	0.768	0.531	0.5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51	0.559	0.377	0.38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914	0.308	0.206	0.207
1차금속 제조업		0.633	0.223	0.149	0.14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24	0.454	0.303	0.29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0.808	0.242	0.158	0.165
전기장비 제조업		1.094	0.399	0.270	0.26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56	0.163	0.109	0.109
운송장비 제조업		1.087	0.337	0.212	0.216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2.867	1.152	0.782	0.76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525	1.864	1.320	1.3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544	1.547	1.050	1.061
건설업		0.361	0.098	0.065	0.068
도소매업		3.103	0.695	0.461	0.522
운수업		2.991	0.872	0.578	0.602
숙박 및 음식점업		6.163	1.876	1.227	1.277
정보통신업		3.985	1.202	0.782	0.805
금융 및 보험업		5.967	1.722	1.102	1.149
부동산업		7.370	1.529	1.060	1.226
전문, 과학 및 기술 관련 서비스업		1.558	0.548	0.363	0.360
사업지원서비스업		3.373	1.253	0.829	0.8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6.672	5.816	3.160	2.031
교육서비스업		6.074	1.706	1.065	1.123
의료 및 보건업		6.198	1.572	1.045	1.137
사회복지서비스업		21.852	63.226	49.508	43.837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6.504	1.686	1.087	1.175
기타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미분류 자가소비		6.622	1.716	1.106	1.196
생산활동		6.622	1.716	1.106	1.196
평균		3.243	1.425	0.968	0.922

주: 기능별 복지지출 주입으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는 [부도 5-1]에서 [부도 5-4] 참조.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3. 기능별 복지지출이 분위별 가계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SAM 명목승수분석에 의해 가계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이 창출한 소득 증가분의 얼마만큼이 소비증가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가계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해야 하며, 여기서는 한계소비성향 추정 모형은 노용환(2021)의 이론 및 실증 모형에 기반을 둔다. 즉, 폐쇄경제 하에서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총액(C)은 $C = C_0 + mY$ (단, C_0 는 생존소비, m 은 한계소비성향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와 같이 국민 소득(Y)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국민소득함등식 $Y = C + I_0 + G_0$ (단 I_0 와 G_0 는 각각 외생적 투자지출과 정부지출)을 이용하여 균형소비지출(C^*)과 균형국민소득(Y^*)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행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평균소비성향($C_0/Y + m$)은 항상 한계소비성향(m)보다 크다. 둘째, 외생적 투입 한 단위에 의한 소비지출 증가분($\frac{m}{1-m}$)이 소득 증가분($\frac{1}{1-m}$)보다 작으며, 소비지출과 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증가한다.

먼저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m)은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며, 소비행태가 가처분소득, 가구특성(가구원 수, 가구주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 입주형태, 은퇴여부), 금융상태(금융자산, 부채전망, 은퇴시 생활비 여유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증모형은 최소자승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가계의 소비지출총액과 가처분소득액은 모두 수준(level)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추정치를 한계소비성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지출액이 더 높게 조사된 가계소득 1분위의 경우 한계소비성향 추정치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어 별도의 소비방정식 추정에서 제

외하며, 가계소득 1분위에 대한 이후의 소비효과 분석에서는 2분위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표 4-6〉에 소비방정식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총액에 미치는 추정치(한계소비성향)는 가계소득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정(+)의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고,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평균적으로 고소득분위에 비해 저소득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소비이론 모형의 조건($0 < m < 1$)을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둘째, 가계 소비지출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젊은 수준에서는 연령의 증가함수이나, 일정 임계수준의 연령을 지나면 연령의 감소함수로 추정되었다. 가계 소비지출과 연령의 역 U자형 관계는 인구고령화가 가계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가계 소비지출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원 수의 증가함수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선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가구주 성별이 전체 가계의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분위(2, 3, 4 분위)에서만 유의하게 추정되었는데, 여성 가구주이면서 저소득계층인 경우 전체 평균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계소득 4, 6, 9분위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소비성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가계소득 2분위의 경우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가계소득 분위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여섯째, 입주형태가 자가인 가계 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비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가구주 은퇴여부는 5, 6분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계소득 계층에서 소비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덟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전망 변수는 모두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추

정되었는데, 이는 금융자산이 소비창출에 있어 ‘부의효과’(wealth effect)가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금융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금조달 수단이 되어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홉째, 은퇴 시 적정생활비에 여유가 있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비 여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6〉 소비방정식 (OLS 추정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소비지출				
	전체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처분소득	.1703*** (.0025)	.2225*** (.0672)	.3550*** (.0721)	.3174*** (.0837)	.2551*** (.0949)
연령 ²	-.3030*** (.0374)	-.0128 (.0480)	-.1696*** (.0589)	-.4034*** (.0831)	-.4654*** (.1080)
연령	23.00*** (4.179)	-12.09** (5.787)	6.974 (6.579)	30.54*** (8.934)	39.10*** (11.30)
가구원 수	408.0*** (9.963)	362.0*** (22.45)	283.0*** (19.99)	276.9*** (22.25)	332.8*** (23.66)
가구주성별(여자=1)	-71.26*** (25.26)	-92.61*** (31.40)	-116.9*** (37.22)	-105.3** (48.86)	20.37 (64.94)
가구주혼인상태 (배우자 있음=1)	37.11 (28.08)	-96.22** (41.55)	15.18 (45.35)	97.59* (55.72)	84.82 (65.18)
입주 형태(자기집=1)	155.8*** (18.92)	123.6*** (26.59)	109.5*** (32.17)	177.3*** (40.33)	137.5*** (46.13)
가구주 은퇴여부(은퇴=1)	5.348 (28.10)	11.16 (28.98)	.0447 (41.96)	80.94 (62.49)	156.9* (86.24)
1년 후 금융부채규모 전망 (증가예상=1)	135.1*** (30.74)	114.3** (47.85)	185.9*** (52.42)	150.7** (65.26)	198.6*** (71.58)
가구주은퇴시 적정생활비 충당(충분히 여유, 여유=1)	397.3*** (63.74)	270.8*** (90.44)	272.7** (123.1)	552.0*** (124.1)	373.1** (167.9)
ln(금융자산)	155.3*** (5.667)	68.82*** (7.039)	84.57*** (9.180)	81.12*** (12.62)	130.2*** (15.80)
상수항	-930.7*** (118.3)	668.5*** (197.6)	-139.1 (233.5)	-705.5** (327.3)	-1346.*** (440.1)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18,393	2,132	1,972	1,900	1,814
Adj R-squared	0.5828	0.3517	0.3088	0.2583	0.2480

주: *, **, *** 표시는 추정치의 유의수준(10%, 5%, 1%)을 의미함. 가처분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높게 조사된 1분위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표 4-6〉 소비방정식 (OLS 추정결과) (계속)

설명변수	종속변수: 소비지출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처분소득	.3110*** (.0969)	.1768** (.0829)	.1848*** (.0706)	.1821*** (.0531)	.0784*** (.0086)
연령^2	-.7380*** (.1364)	-.409*** (.1575)	-1.104*** (.2098)	-1.256*** (.2862)	-1.158** (.4839)
연령	64.04*** (14.18)	35.96** (16.34)	107.9*** (21.62)	116.0*** (29.64)	111.5*** (51.04)
가구원 수	297.1*** (26.17)	373.9*** (26.90)	370.4*** (30.84)	356.8*** (39.31)	491.8*** (58.17)
가구주성별(여자=1)	18.12 (83.22)	-81.28 (91.41)	-118.2 (109.1)	-143.9 (148.7)	-15.82 (267.4)
가구주혼인상태 (배우자 있음=1)	183.9** (80.80)	114.3 (87.78)	60.01 (105.2)	301.7** (158.1)	347.4 (300.2)
입주 형태(자기집=1)	215.3*** (54.50)	137.7** (58.97)	27.77 (70.85)	184.5** (91.99)	394.8*** (150.9)
가구주 은퇴여부(은퇴=1)	203.1** (101.1)	82.91 (122.1)	-82.57 (164.2)	-32.53 (212.7)	-405.1 (395.5)
1년 후 금융부채규모 전망 (증가예상=1)	122.8*** (83.96)	139.6* (85.40)	128.8 (100.1)	108.1 (132.4)	212.4 (212.5)
가구주은퇴시 적정생활비 충당(충분히 여유, 여유=1)	222.4 (199.3)	447.7** (210.3)	695.0*** (278.7)	925.9*** (316.7)	347.9 (509.6)
ln(금융자산)	135.0*** (19.26)	170.1*** (20.82)	194.3*** (24.58)	332.9*** (33.59)	532.3*** (52.96)
상수항	-2142.*** (555.0)	-1481.*** (594.5)	-3290.*** (702.8)	-4725.*** (867.4)	-6061.*** (1375.)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	1,741	1,708	1,698	1,641	1,579
Adj R-squared	0.2029	0.2078	0.1758	0.1620	0.1744

주: *, **, *** 표시는 추정치의 유의수준(10%, 5%, 1%)을 의미함. 가처분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높게 조사된 1분위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제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표 4-7〉에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가계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총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인 평균소비성향과 〈표 4-5〉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평균소비성향이 1을 상회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 한계소비성향의 추정이 어려워 소비방정식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소비이론 모형을 통해 예상한 바와 같이 실제 모든 소득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추세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작아지며, 이 두 값의 차이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계소득 10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0.0784로 10개 분위별 가계 중에서 가장 낮게 추정되었으며, 차상위소득 계층인 9분위의 한계소비성향(0.1821)과도 격차가 크며,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큰 3분위(0.3550)와는 4.53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표 4-7〉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가계소득 분위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가처분소득)	한계소비성향 (소비함수 추정치)	APC-MPC
	APC	MPC	
1분위	1.9171	-	-
2분위	0.9505	0.2225***	0.7280
3분위	0.8128	0.3550***	0.4578
4분위	0.7378	0.3174***	0.4204
5분위	0.6823	0.2551***	0.4272
6분위	0.6357	0.3110***	0.3247
7분위	0.5741	0.1768**	0.3973
8분위	0.5331	0.1848***	0.3483
9분위	0.4897	0.1821***	0.3076
10분위	0.4047	0.0784***	0.3263
전체	0.8125	0.1703***	0.6422

주: 한계소비성향은 〈표 4-3〉의 소비함수 추정결과에 근거하며, *, **, *** 표시는 추정치의 유의수준(10%, 5%, 1%)을 의미함. 가처분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높게 조사된 1분위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표 4-8〉에는 SAM 명목승수 분석과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계부문에 대한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비효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지출의 가계평균 소비효과는 ‘노령’ 분야가 3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 사회적 배제’가 21.39%, ‘가족 및 자녀’와 ‘질병 및 장애’가 각각 18.20%와 17.90%로 낮게 산출되었다. 둘째, 소득분위별 가계부문의 초기 소득대비 소비증가율은 ‘가족 및 자녀’를 제외한 다른 기능별 복지지출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족 및 자녀’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이 노인가구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은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네 가지 모든 분야의 기능별 복지지출에서 가구평균 소비증가율은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낮게 추정된 상위 10%의 고소득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소득 10분위 계층의 경우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효과와 소비효과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8〉 가계부문에 대한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비효과

가계소득 분위	소비효과(백만 원) = 한계소비성향×소득창출액				초기소득대비 소비증가율(%)			
	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	노령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
1분위	1,278,476	53,294	95,285	165,598	7.36%	0.31%	0.55%	0.95%
2분위	1,682,474	137,454	188,143	233,061	4.94%	0.40%	0.55%	0.68%
3분위	2,838,215	370,508	314,763	431,877	5.95%	0.78%	0.66%	0.91%
4분위	2,655,779	455,871	299,418	401,763	4.48%	0.77%	0.50%	0.68%
5분위	2,310,509	487,321	286,385	352,301	3.29%	0.69%	0.41%	0.50%
6분위	2,866,729	681,159	374,390	424,235	3.65%	0.87%	0.48%	0.54%
7분위	1,547,230	442,722	228,656	252,159	1.79%	0.51%	0.26%	0.29%
8분위	1,823,073	516,876	296,218	314,819	1.73%	0.49%	0.28%	0.30%
9분위	1,901,262	601,801	363,486	357,473	1.40%	0.44%	0.27%	0.26%
10분위	987,342	383,902	244,950	228,232	0.47%	0.18%	0.12%	0.11%
가계소비 창출액 합계 (A)	19,891,088	4,130,908	2,691,696	3,161,518	2.36%	0.49%	0.32%	0.37%
복지지출액 합계 (B)	62,640,559	22,702,696	15,041,121	14,779,030	-	-	-	-
소비창출 비율 (A/B)*100	31.75	18.20	17.90	21.39	-	-	-	-

주: 평균소비성향이 1보다 큰 값(1.9171)을 가지는 가계소득 1분위 계층은 소비행태식 추정에 의한 한계소비성향의 산출이 어려워 2분위 한계소비성향 추정치(0.2225)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4. 소결

이 장에서 가계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이 소득분위별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의 소득 흐름을 반영한 ‘사회계정행렬’(SAM) 승수분석을 통해 복지지출에 따른 가

계 소득 변화를 계산하였다. SAM 승수분석을 통해 구한 소득분위별 가계 소득과 소비방정식 추정을 통해 도출한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를 이용하여 4대 기능별 복지지출의 가계소득분위별 소비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 증가는 가계의 소비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가계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복지지출 외에도 안정적 소득원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주거 불안정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자산이 부족한 가계도 소비후생의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복지지출은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수요를 촉진시켜 국민경제 소득순환을 통해 생산활동부문의 소득도 증가시키는데, 현물급여가 주입된 사회복지서비스업과 행정비용의 주입이 이루어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부문의 소득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접적인 주입이 나타난 이 두 부문을 제외하면 농림어업, 음식료품제조업, 부동산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소득증가율이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지출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생산활동부문인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득창출 기여도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의 기능별 차이는 소득분배의 차이를 유발하며, 소득분위별 소비후생의 차이도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가계소득 10분위 계층의 경우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효과와 소비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가계 집단으로 분석되었으며, 노인가구주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은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복지지출을 제외한 다른 기능별 복지지출(노령, 질병 및 장애, 기타 사회적 배제)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계소득을 통한 소비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기능별 배분이 소득 확보가 부족한 가계(저소득계층, 노인가구주 가계, 금융자산이 부족한 가계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계소비의 직접효과는 현물 주입이나 행정비용의 주입보다는 현금급여의 주입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가계의 소비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은 안정적 재원조달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우선은 소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향하면서, 다른 가계 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한편 SAM 승수분석은 정태적인 조건을 가정한 정책효과를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량적인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기능별 복지정책의 명목 소득과 소비 효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가계에 따라 복지지출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항상소득이 아닌 임시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의 추정치에 비해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량적 추정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기능별 복지지출의 가계계층별 소득분배효과와 소비후생에 미치는 실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경우 복지지출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한 모의실험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삶의 질과 개선, 관계 분석

2절에서는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설정하는 정책 투입이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 대한 연구모형은 김성아 등(2021)의 정책 프로세스와 삶의 질 간 관계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 투입, 즉 복지지출은 정책 운용 과정을 통해 최종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단위 정책 투입은 당장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보다 1~2년의 시차를 두고 지역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복지정책이 목표로 하는 삶의 영역은 특정 영역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수요자인 지역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의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지출의 정책 투입과 정책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 간 관계가 유사한 지역군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을 구성하는 사업이 주로 서비스 및 기반 마련 중심이라는 점에서 고경환 등(2020)의 지역복지계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주민 삶의 질 2차 자료를 활용한다.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이 2018년 기준이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다차원적인 지표체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제한적으로 2020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2] 정책 프로세스와 삶의 질 간 관계 구조



자료: 김성아 등. (2021).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삶의 질 지수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14.

1. 삶의 질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표 4-9〉에서는 사람들이 누리는 실질적인 삶의 질, 특히 지역 단위에 주목하는 주요 선행연구의 삶의 질 측정 영역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해외의 주요 삶의 질 측정 노력에 대해서는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와 이를 지역 단위로 확장하고자 한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을 검토한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고경환 등(2020)의 국내 복지 수준 모니터링 지표, 그리고 김성아 등(2021)의 “삶의 질 지수체계”에서 각각 고려하는 삶의 질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는 주거, 소득, 일, 지역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의 11개 영역을 고려하고 있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 각 영역의 측정지표를 활용해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한다.

OECD의 지역 웰빙은 국가 단위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단위라기보다 생활권을 고려한 권역이다. 여기에서는 소득, 일, 주거, 건강상태, 교육과 숙련, 환경의 질, 안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서비스 접근성,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의 12개 영역을 다루고 있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8, p.14).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공표하고 있다. 가족 및 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 및 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의 11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 지표체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영역별 삶의 질 추세를 비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통계개발원, 2019).

고경환 등(2020)의 국내 복지 수준 모니터링 지표는 보육,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의 4가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지역복지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책 공급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경환 등, 2020, pp.103-117).

마지막으로 김성아 등(2021)의 삶의 질 지수체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을 주요국의 삶의 질과 비교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주관적 웰빙(행복), 건강, 교육/역량, 노동, 경제적 생활수준, 사회문화자본, 안전, 거버넌스, 사회안전망, 환경의 10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질 측정 영역을 비교하면, 복지정책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고경환 등(2020)의 복지 수준 모니터링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체계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삶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개인들이 누리는 삶의 만족 등 주관적 웰빙과 건강, 교육의 영역이 포함된다. 일 혹은 노동과 이를 통해 획득하는 가구 소득이나 소비, 자산 등의 경제력 또한 공통 영역으로 확인된

다. 또한 개인이나 가구 차원을 넘어 안전의 영역이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환경의 질이나 지역공동체, 참여 혹은 거버넌스의 영역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역복지계정을 활용한 지역 단위 복지정책 공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정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삶의 질 측정 영역에서 지역 단위 복지정책 공급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및 지수 산출

가.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여기에서는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지표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에 의해 규범적 타당성이 확인된 삶의 질 영역과 둘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단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지역 단위 복지지출은 고경환 등(2020)이 제시한 지역복지계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과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그리고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의한 복지지출의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지역의 규모와 경제력을 통제하기 위해 인구 수와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활용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영역을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 건강, 교육, 가계 경제, 노동, 안전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한다. 각각의 영역은 통계청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3개 정도의 측정 지표를 포괄한다.

주관적 웰빙은 긍정적 측면으로서 삶의 만족과 부정적 측면으로서 자살률을 측정 지표로 하고 각각은 통계청 사회조사과 사망원인통계를 자료원으로 한다. 건강은 비만유병률을 측정 지표로 하고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자료원으로 한다. 전체 국민을 위한 교육 영역의 측정 지표는 인구 대비 평생교육기관 수인데, 자료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생산하는 평생교육통계이다.

가계 경제의 측정 지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인데, 각각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 생산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자료원으로 하고 있다. 노동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해 생산되는 실업률을 측정 지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한 강력, 절도, 폭력의 인구 대비 강력범죄발생률과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한 야간보행불안감, 그리고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의한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 발생률을 측정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표 4-10〉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지역 단위 복지지출	측정치표	출처
지역 단위 복지지출	지역복지지출 ↳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복지지출	고경환 등(2020, pp.204-251)
지역 단위 통계변수	인구 수 지역내총생산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치표	출처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	통계청 사회조사
	자살률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건강	비만유병률(조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교육	인구 대비 평생교육기관 수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가계 경제	소득(+), 자산(+), 부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	실업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안전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 (강력, 절도, 폭력)	경찰청 범죄통계
	야간보행불안감 (-)	통계청 사회조사
	아동 인구 대비 아동학대 발생률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주: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중 (+)는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높은 순기능 지표이고, (-)는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높은 역기능 지표임.

자료: (인구 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

01&tblId=DT_1B04006&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지역소득(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삶의 만족)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자살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비만유병률) 질병관리청 지역사회회건강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75_MEA_OBE&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평생교육기관 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TX_334_2009_H2004&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소득, 자산, 부채)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0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실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강력, 절도, 폭력 범죄발생률) 서울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3&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부산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4&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대구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5&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인천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6&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광주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7&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대전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8&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울산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9&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세종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32&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30&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3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강원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충북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2&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충남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3&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전북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4&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전남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5&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경북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6&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경남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7&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제주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8&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야간 보행불안감)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아동학대 발생률)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아동보호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2&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나.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사실상 지역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은 특정한 삶의 영역의 수준에 좌우되기보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多)영역이 상호작용한다. 이 맥락에서 김성아 등(2021)은 삶의 질 지수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영역의 측정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지수화 작업을 하였다. 여기에서도 앞서 제안한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indicators)를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index)로 요약하기 위해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첫째, 삶의 질 측정 지표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표값을 표준화한다. 각각의 측정 지표는 서로 다른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의 수치를 비교할 수 없다. 지표 표준화 단계는 서로 다른 단위를 쓰는 지표를 최솟값 0에서 최댓값 1까지의 영역으로 재계산한다. 단,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순기능적 지표와 숫자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역기능적 지표를 구분한다. 측정 지표의 기능에 따라 다음의 산식을 활용해 비교대상범위, 여기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표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로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값이 위치하는 지위를 확인한다.

〈표 4-11〉 기능별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표준화 산식

기능	산식
순기능	$ind_{it} = (x_{it} - min_t) / (max_t - min_t)$
역기능	$ind_{it} = (max_t - x_{it}) / (max_t - min_t)$

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의 기능은 〈표 4-10〉의 측정지표 옆 (+) 혹은 (-) 표시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 김성아 등. (2021).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삶의 질 지수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70

여기에서는 주관적 웰빙부터 안전까지 6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동일가중치 방식을 활용하여 영역지수와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영역지수와 종합지수 모두 최솟값 0에서 최댓값 1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종 종합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 비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2〉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산식

구분	산식
삶의 질 영역지수	$d_{it} = \sum ind_{it} * w_{ind}$
삶의 질 종합지수	$QoL_{it} = \sum d_{it} * w_d$

자료: 김성아 등. (2021).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삶의 질 지수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70

3. 분석자료

가.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우선 고경환 등(2020, pp.204-251)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복지지출의 자료를 확인한다. 다음 표에서 ‘계’는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지출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지출, 그리고 사회보험에 의한 복지지출의 합으로, 여기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지역복지지출’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복지정책 투입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간 관계에 주목하므로,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지출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에 의한 복지지출을 추출

하였다. 지역의 통제변수로 GRDP와 인구 수를 제시하고 있다. 각 수치는 고경환 등(2020)에 의해 2018년 기준 값이다.

〈표 4-13〉 지역복지계정에 의한 지역 단위 복지지출(2018년 기준)

지역	계 (십억 원)	지방자치단체 (십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십억 원)	GRDP (십억 원)	인구수 (명)
서울	25,700	5,173	1,074	423,742	9,765,623
부산	10,043	1,237	115	89,980	3,441,453
대구	6,838	899	96	56,714	2,461,769
인천	6,354	1,215	238	88,735	2,954,642
광주	4,634	596	70	39,805	1,459,336
대전	4,458	588	92	41,308	1,489,936
울산	2,564	418	51	73,648	1,155,623
세종	592	128	60	11,102	314,126
경기	26,338	5,118	1,211	479,822	13,077,153
강원	5,202	967	287	46,926	1,543,052
충북	4,244	822	215	69,637	1,599,252
충남	5,249	1,118	322	115,534	2,126,282
전북	5,595	1,072	158	50,595	1,836,832
전남	5,365	1,120	194	75,425	1,882,970
경북	7,572	1,365	251	108,783	2,676,831
경남	8,610	1,543	294	110,720	3,373,988
제주	1,761	442	148	20,051	667,191

자료: 고경환 등. (202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0, 135, 142에서 발췌

나. 지역 주민 삶의 질

다음은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와 지수값이다. 다음 표는 6개 영역 11개 측정 지표의 실측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삶의 만족은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응답의 평균값이다. 자살률은 연앙인구 10만 명 대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 발생 건수의 비율이다. 건강 영역의 비만유병률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고 교육은 인구 10만명 당 평생교육기관의 개소 수이다. 가계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소득과 자산, 부채인데,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 연간 총액이고 자산과 부채는 시점 기준값이다. 노동의 지표인 실업률은 조사기간에 소득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비율이다. 안전 영역의 범죄발생률은 강력, 절도, 폭력 범죄 발생 건수의 비율이다. 야간보행불안감은 ‘밤에 혼자 걸을 때’ 약간 혹은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고, 아동학대 발생률은 만18세 미만 아동 수 대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합산 건수의 비율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표의 단위에 따라 수치 수준과 편차가 가지는 의미가 상이하므로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 4-14〉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영역	주관적 웰빙		건강	교육	가계 경제			노동	안전		
측정 지표	삶의 만족	자살률	비만 유병률	평생 교육 기관 수	가구 소득	가구 자산	가구 부채	실업률	범죄 발생률	야간 보행 불안감	아동 학대 발생률
단위	점	10만 명당 건	%	10만 명당 개소	만원	만원	만원	%	10만명 당 건	%	아동 10만 명당 건
서울	3.5	22.5	31.8	21.2	6,595	64,240	10,635	4.4	1068.5	29.2	34.5
부산	3.4	30.1	32.7	9	5,181	35,781	6,217	3.7	1080.7	25.8	67.4
대구	3.2	28.7	33.0	7.7	5,301	41,818	7,546	3.7	973.6	27.5	77.4
인천	3.4	25.9	35.8	5.4	5,704	35,159	7,277	4.4	1063.4	33.5	102.6
광주	3.5	23.9	34.1	11.1	5,796	34,387	5,003	3.7	986.6	30.3	74.8
대전	3.4	28.7	30.9	10.1	5,688	35,692	6,763	4.2	1009.0	32.8	82.2
울산	3.4	28.2	33.7	4.3	6,413	39,305	6,672	4.2	850.3	28.5	33.1
세종	3.7	22.4	31.1	4.7	7,147	58,784	10,145	2.7	527.0	29.1	268.1
경기	3.4	25.4	34.3	7.8	6,430	47,546	10,217	3.8	918.2	31.5	75.4
강원	3.5	33.3	36.6	9.7	5,088	34,879	4,924	3.6	903.1	30.3	119.1
충북	3.4	31.1	35.8	7.8	5,042	31,152	5,195	3.1	931.9	32.8	87.6
충남	3.4	35.2	37.0	8.2	5,348	29,534	5,225	2.9	916.6	29.2	87.7
전북	3.4	30.2	34.3	9.0	5,156	28,877	4,973	2.7	843.5	29.3	109.6
전남	3.4	25.4	37.0	7.2	4,981	30,196	4,765	2.6	894.0	26.4	131.3
경북	3.3	29.4	36.5	8.2	4,830	31,316	5,067	3.9	875.3	30.6	82.9
경남	3.5	28.0	34.6	6.2	5,187	32,049	6,804	3.8	885.2	29.6	45.2
제주	3.5	31.7	39.2	6.0	5,437	50,459	7,289	2.1	1,312.5	27.8	142.9

주: 지표는 2019년 기준 측정값이되, 삶의 만족과 야간보행불안감은 2020년 기준임. 삶의 만족은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자살률은 연앙인구 10만 명 대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 발생 건수의 비율임. 비만유병률은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임. 범죄발생률은 강력, 절도, 폭력 범죄 발생 건수의 비율임. 가구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임. 야간보행불안감은 '밤에 혼자 길을 때' 약간 혹은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아동학대 발생률은 만18세 미만 아동 수 대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합산 건수의 비율임.

자료: 〈표 4-10〉의 자료원과 같음.

다음 표는 앞서 제시한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과정에 따라 상기 지역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값을 지수로 요약한 결과이다. 지수 산출 결과,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다. 서울과 광주 각각 0.713점과 0.658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세종의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와 차이가 작지 않다. 건강 영역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다. 세종과 서울이 각각 0.976점과 0.89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영역지수는 서울이 가장 높다. 광주가 0.400점, 대전이 0.344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서울의 교육 영역지수와 차이가 크다. 가계 경제의 영역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다. 그 뒤를 서울이 0.587점, 울산이 0.551점으로 잇고 있지만 경기의 지수값과 차이가 크다. 노동 영역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다. 전남이 0.783점, 전북이 0.739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 영역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지수값은 0.744점이다. 부산이 0.716점, 전남이 0.676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지역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과 서울이다. 두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각각 65.11%와 63.55%로 차이는 근소하다. 반면, 종합지수가 3번째로 높은 지역인 광주의 삶의 질 지수는 50.69%로 세종이나 서울의 종합지수와 차이가 비교적 크다. 그 뒤를 전북(48.74%), 전남(47.34%), 부산(46.27%)이 잇고 있다. 삶의 질 종합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세종은 교육과 안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서울은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중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경북과 인천의 종합지수가 각각 32.67%와 28.72%로 낮게 나타났다. 경북은 각각 8~9위 정도를 차지한 교육과 안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천은 6위 정도인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5〉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

지역	영역지수(점)						지역 주민 삶의 질 종합지수 (%)
	주관적 웰빙	건강	교육	가계 경제	노동	안전	
서울	0.713	0.892	1.000	0.587	0.000	0.621	63.55
부산	0.327	0.783	0.279	0.366	0.304	0.716	46.27
대구	0.254	0.747	0.203	0.365	0.304	0.672	42.43
인천	0.532	0.410	0.065	0.376	0.000	0.341	28.72
광주	0.658	0.614	0.400	0.511	0.304	0.553	50.69
대전	0.423	1.000	0.344	0.408	0.087	0.425	44.79
울산	0.429	0.663	0.000	0.551	0.087	0.744	41.22
세종	1.000	0.976	0.025	0.643	0.739	0.523	65.11
경기	0.584	0.590	0.209	0.430	0.261	0.528	43.36
강원	0.282	0.313	0.322	0.418	0.348	0.526	36.82
충북	0.290	0.410	0.209	0.361	0.565	0.449	38.08
충남	0.127	0.265	0.234	0.388	0.652	0.611	37.96
전북	0.342	0.590	0.277	0.368	0.739	0.607	48.74
전남	0.578	0.265	0.171	0.367	0.783	0.676	47.34
경북	0.271	0.325	0.233	0.339	0.217	0.574	32.67
경남	0.514	0.554	0.113	0.299	0.261	0.664	40.09
제주	0.400	0.000	0.100	0.481	1.000	0.424	40.08

주: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지수는 백분율의 형태로 재계산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4. 분석 결과 및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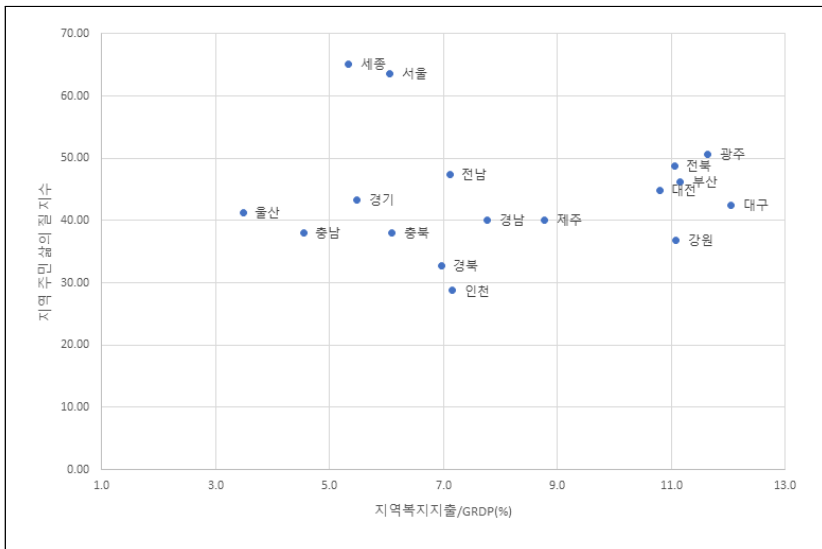
가. GRDP대비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여기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으로서 GRDP대비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비교하였다. 다음 그림은 GRDP대비 지역복지지출,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에 의한 복지지출의 총합을 X축에,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을 Y축에 두어 둘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 주민 삶의 질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세종과 서울은 Y축을 기준으로 상단에 다소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 경향은 전체 분석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GRDP대비 지역복지지출은 대구, 광주, 부산, 전북, 강원,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제주, 경남, 인천, 전남, 경북, 충북, 경기, 충남, 울산의 지역은 그림 중간에서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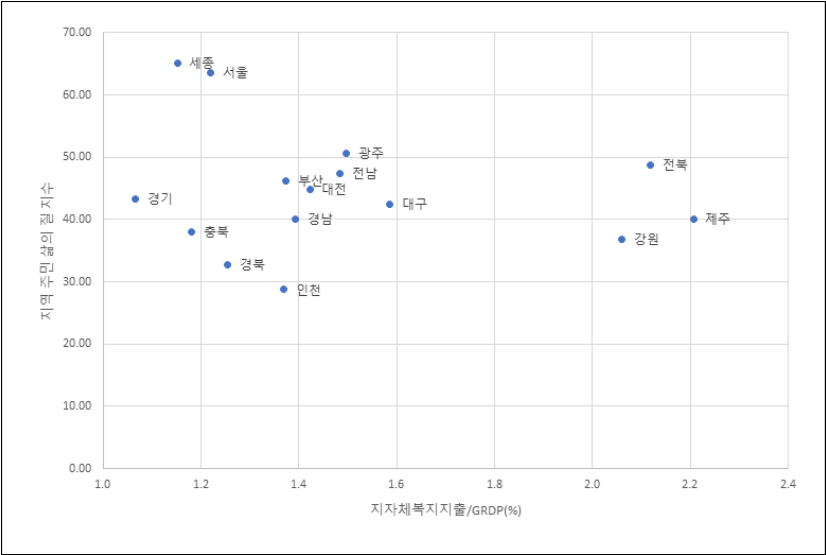
[그림 4-3] GRDP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자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 그림은 지역 주민 삶의 질 종합지수와 GRDP대비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규모를 비교하고 있다. 제주, 전북, 강원이 GRDP대비 지자체 복지지출이 비교적 높아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는 GRDP 대비 지역복지지출이 높은 5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대적인 지자체복지지출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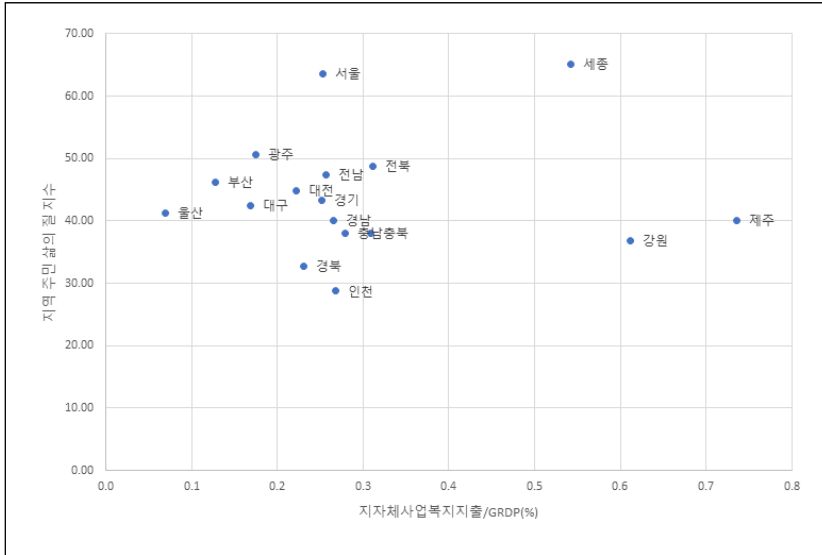
[그림 4-4] GRDP대비 지자체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자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GRDP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GRDP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이 높은 지역은 제주, 강원, 세종으로, 상대적으로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4-5] GRDP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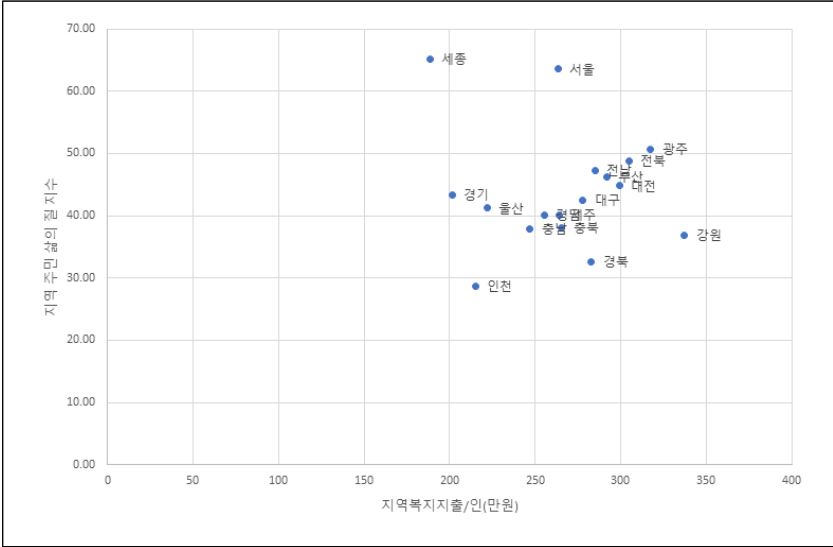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인구 대비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여기에서는 지역의 인구 수 대비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비교하였다. 인구 대비 지역복지지출은 인당 약 200만 원 정도에서 350만 원 정도까지 범위에서 다소 밀집되어 있다. 세종, 서울, 경기와 강원, 경북, 인천을 제외한 11개 지역은 인구 수 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이 양적인 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 수 대비 지역복지지출이 늘수록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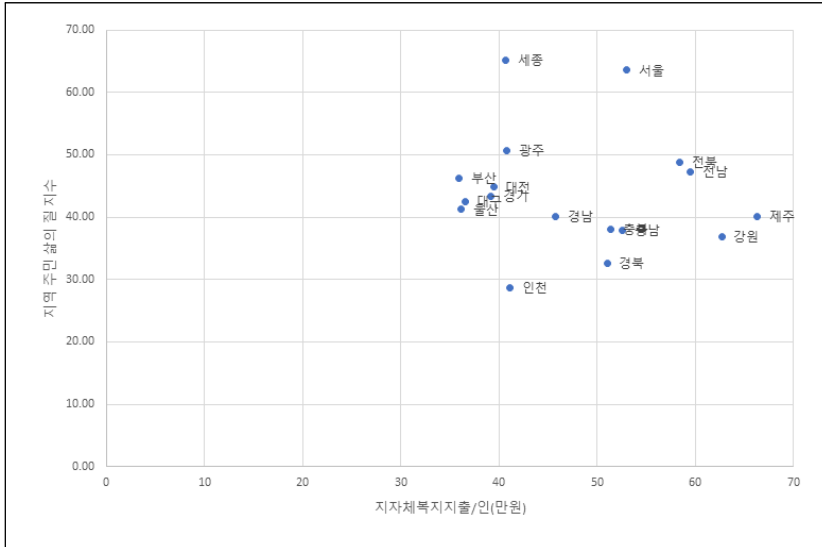
[그림 4-6] 인구 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자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 그림은 인구 수 대비 지자체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을 도식화한 것이다. 제주, 강원, 전남, 전북의 인구 수 대비 지자체복지지출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아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수 대비 지자체복지지출은 인구 수 대비 지역복지지출 총액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과의 관계가 선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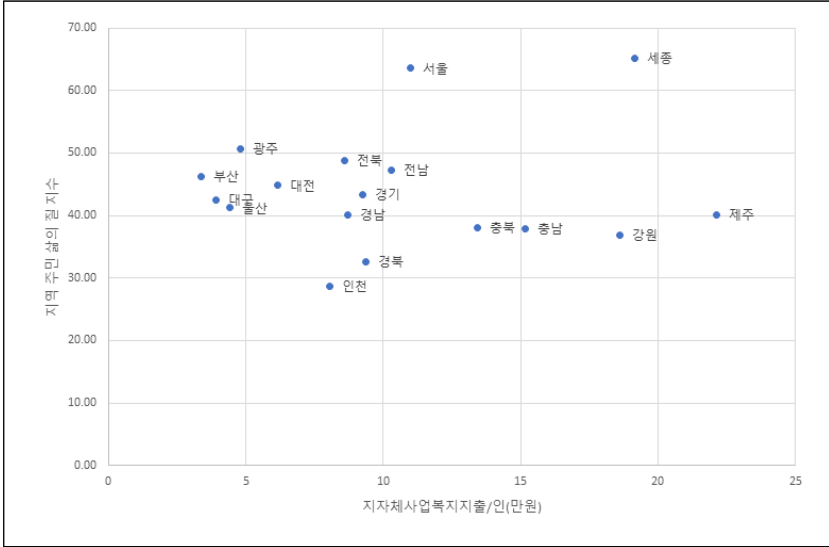
[그림 4-7] 인구 대비 지자체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자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은 인구 수 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제주와 세종, 강원, 강원도의 인구 수 대비 지자체사업 복지 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아 그림의 오른 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세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 간 편차는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다. 상대적으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의 인구 수 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은 낮은 편이다.

[그림 4-8] 인구 대비 지자체사업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자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주민 삶의 질 지표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결과의 함의

여기에서는 고경환 등(2020)의 지역복지계정을 활용한 정책 연구의 시도로써,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역 단위 복지지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고경환 등(2020)이 제안한 지역복지계정을 활용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삶의 질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복지지출이라는 정책 투입이 정책 운용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 개선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복지지출은 2018년 기준값을, 삶의 질 측정 지표는 2019년 이후에 생산된 값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지역 단위 복지지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한 공간적 범위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고,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적 범위를 복지지출과 삶의 질 측정지표 각각 1개년도에 국한되어 있어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사실상 제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인구 수 대비 지역복지지출과 지역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 간 양의 관계가 확인되는 등 정책 투입으로서 복지지출이 정책 성과로서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역 단위 복지지출의 세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복지계정의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규모가 확보되면 여기에서 시도한 지역복지계정 활용 방안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 재정과 삶의 질 연구의 확장⁹⁾

선진국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지표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Veenhoven, 1996; 김용하, 임성은, 윤강재, 우선희, 2011; 남상호, 2013; Yang, 2008). 그 중 하나가 행복기대여명이라 할 수 있다. Veenhoven(1996)은 생명표를 이용하여 국가수준의 행복한 삶을 계량화한 행복기대여명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김용하 등(2011)과 남상호(2013)에서도 OECD 국가들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복지수를 제안한 바 있으며, Yang(2008)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9) Yoon, B. J. (2018). A Study on the Happy Life Expectancy by Life Table Method.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89-95.의 pp.90-91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연구 개요 및 연구 방법을 정리함.

삶의 만족도 자료와 평균여명을 결합하여 행복기대여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Yoon, 2018).

가. 연구 개요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2008년과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성균관대학교 서베이라서치센터, 2008, 2018)의 생활만족도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18세 이상 성인의 행복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에는 2008년 1,508명, 2018년 1,031명이 포함되었다.

행복도는 한국종합사회조사(성균관대학교 서베이라서치센터, 2008, 2018)에서 설문한 “귀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행복하다, 다소 행복하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등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매우 행복하다, 다소 행복하다를 행복으로 구분하고, 별로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불행으로 구분하였으며 행복은 매우 행복하다와 다소 행복하다를 세부 구분하여 5세 연령계급별 행복도율을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행복기대여명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지인구 등의 함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과 2018년 간이생명표를 활용하였다(Barclay, 1965).

나. 분석 방법

1) 행복도의 확률 추정치 산출

성, 연령계급별 행복도의 확률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SPSS 24.0

프로그램(StataCorp LLC, College Station, TX, USA)을 사용하여 그룹화된 로짓(logit) 모델을 채택하였다. 성과 연령군에 추가로 연령군의 제곱, 성과 연령군의 교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모델에 투입하여 구하였으며 모델 적합도에 따라 행복도의 확률추정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2) Sullivan의 생명표 분석기법

본 연구에서 Sullivan(1971)의 생명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행복정지 인구(nL_{hx})와 행복기대여명(He)을 산출한 식은 다음과 같다. 생존인년(nL_x)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과 2018년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상의 정지인구를 이용하였으며, 행복률(nh_x)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전반적인 생활행복도의 확률 추정치를 반영하였다. x 세에서 활동장애가 없는 생존인년은 생존인년과 활동장애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연간 분율(l_x)을 곱하여 얻게 되고, 행복정지인구(nL_{hx})를 구하기 위하여 생존인구(nL_x)에 행복률(nh_x)을 반영하였다(수식 1 참조).

$$nL_{hx} = nL_x \cdot nh_x \text{ ----- (수식 1)}$$

다음으로 행복기대여명(He)은 생명표 작성방식에 따라 총 생존인년(nTh_x)을 연령계급의 생존수(l_x)로 나누어 산출하였다(수식 2 참조).

$$He \text{ (happy life expectancy)} = nTh_x / l_x \text{ ----- (수식 2)}$$

다. 주요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16>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2008년 남녀 행복기대수명은 남녀 각각 20-24세에서 39.1년과 43.9년으로 나타났다. <표 4-17>에서는 2018년 남녀 행복기대여명(행복기대여명률)이 각각 20-24세에서 45.9년(76.2%)과 52.9년(80.1%)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2018년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기대여명은 3.3년 증가한데 반하여 행복기대여명은 6.8년 증가하였고 여자는 기대여명이 2.6년 증가한데 반하여 행복기대여명은 9.0년 증가하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18년 공히 여자의 행복기대여명이 남자의 행복기대여명보다 20세 이후 전 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2008년 한국의 성별 행복기대여명

연령	사망확률 (nqx)	생존수 (nix)	정지인구 (nLx)	행복율 (nhx)	행복			기대 여명 (nex)	nex -He	He/ nex (%)
					정지인구 (nLhx)	총정지인구 (nThx)	기대 여명 (He)			
남 자										
20-24	0.00285	99,206	495,373	0.66	329,037	3,881,505	39.1	56.8	17.7	68.9
25-29	0.00373	98,923	493,707	0.78	386,672	3,552,468	35.9	52.0	16.1	69.
30-34	0.00410	98,554	491,825	0.84	413,955	3,165,796	32.1	47.1	15.0	68.2
35-39	0.00669	98,150	489,225	0.81	396,723	2,751,840	28.0	42.3	14.3	66.3
40-44	0.01128	97,493	484,953	0.79	383,058	2,355,118	24.2	37.6	13.4	64.2
45-49	0.01861	96,393	477,805	0.69	327,706	1,972,060	20.5	33.0	12.5	62.0
50-54	0.02754	94,600	466,880	0.73	341,296	1,644,353	17.4	28.6	11.2	60.8
55-59	0.04091	91,995	451,026	0.60	271,775	1,303,057	14.2	24.3	10.1	58.3
60-64	0.05803	88,231	429,114	0.70	300,671	1,031,282	11.7	20.2	8.5	57.9
65-69	0.09655	83,111	396,920	0.64	254,366	730,611	8.8	16.3	7.5	53.9
70-74	0.16059	75,087	346,969	0.61	210,823	476,245	6.3	12.8	6.5	49.6
75-79	0.25374	63,029	276,905	0.46	127,881	265,422	4.2	9.7	5.5	43.4
80-84	0.39725	47,036	188,315	0.50	93,925	137,541	2.9	7.1	4.2	41.2
85+	0.55924	28,351	99,932	0.44	43,616	43,616	1.5	5.2	3.7	29.6
여 자										
20-24	0.00187	99,375	496,448	0.69	344,000	4,363,937	43.9	63.5	19.6	69.2
25-29	0.00242	99,189	495,350	0.80	398,620	4,019,937	40.5	58.6	18.1	69.2
30-34	0.00279	98,949	494,069	0.86	424,128	3,621,317	36.6	53.7	17.1	68.2
35-39	0.00346	98,673	492,559	0.83	408,965	3,197,189	32.4	48.8	16.4	66.4
40-44	0.00491	98,332	490,517	0.81	397,763	2,788,224	28.4	44.0	15.6	64.4
45-49	0.00695	97,849	487,638	0.71	347,934	2,390,461	24.4	39.2	14.8	62.3
50-54	0.00977	97,169	483,584	0.76	365,640	2,042,527	21.0	34.5	13.5	60.9
55-59	0.01427	96,220	477,898	0.63	302,814	1,676,887	17.4	29.8	12.4	58.5
60-64	0.02177	94,847	469,414	0.73	341,519	1,374,074	14.5	25.2	10.7	57.5
65-69	0.03819	92,782	455,905	0.67	305,710	1,032,555	11.1	20.7	9.6	53.8
70-74	0.07383	89,238	431,247	0.64	275,361	726,844	8.1	16.4	8.3	49.7
75-79	0.14256	82,650	386,597	0.49	191,235	451,484	5.5	12.5	7.0	43.7
80-84	0.26527	70,868	310,055	0.53	164,836	260,248	3.7	9.1	5.4	40.4
85+	0.43800	52,069	203,409	0.47	95,412	95,412	1.8	6.4	4.6	28.6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년,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간이생
명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에서
2021.9.16. 인출)를 분석함.

〈표 4-17〉 2018년 한국의 성별 행복기대여명

연령	사망확률 (nqx)	생존수 (nix)	정지인구 (nLx)	행복율 (nhx)	행복			기대 여명 (He)	기대 여명 (nex)	nex -He	He/ nex (%)
					정지인구 (nLhx)	총정지인구 (nThx)					
남 자											
20-24	0.00199	99,418	496,624	0.79	394,750	4,558,703	45.9	60.2	14.3	76.2	
25-29	0.00264	99,220	495,474	0.69	344,280	4,163,953	42.0	55.3	13.3	75.9	
30-34	0.00355	98,959	493,958	0.83	408,993	3,819,673	38.6	50.4	11.8	76.6	
35-39	0.00499	98,608	491,892	0.78	381,824	3,410,679	34.6	45.6	11.0	75.9	
40-44	0.00743	98,115	488,901	0.87	424,638	3,028,855	30.9	40.8	9.9	75.7	
45-49	0.01223	97,386	484,172	0.80	387,328	2,604,218	26.7	36.1	9.4	74.1	
50-54	0.01934	96,195	476,629	0.83	395,960	2,216,890	23.0	31.5	8.5	73.2	
55-59	0.02852	94,335	465,317	0.69	320,738	1,820,931	19.3	27.1	7.8	71.2	
60-64	0.04138	91,644	449,322	0.84	377,090	1,500,192	16.4	22.8	6.4	71.8	
65-69	0.06352	87,852	426,178	0.75	317,610	1,123,102	12.8	18.7	5.9	68.4	
70-74	0.1019	82,271	391,986	0.75	295,690	805,492	9.8	14.8	5.0	66.2	
75-79	0.18726	73,888	337,223	0.72	242,300	509,802	6.9	11.1	4.2	62.2	
80-84	0.32513	60,052	253,177	0.67	169,058	267,502	4.5	8.1	3.6	55.0	
85+	0.50079	40,527	150,713	0.65	98,444	98,444	2.4	5.7	3.3	42.6	
여 자											
20-24	0.00129	99,375	497,374	0.85	421,148	5,261,850	52.9	66.1	13.2	80.1	
25-29	0.00147	99,189	496,688	0.76	379,731	4,840,702	48.8	61.2	12.4	79.7	
30-34	0.00216	98,949	495,800	0.87	432,750	4,460,971	45.1	56.3	11.2	80.1	
35-39	0.00292	98,673	494,557	0.83	411,385	4,028,222	40.8	51.4	10.6	79.4	
40-44	0.00387	98,332	492,883	0.90	445,589	3,616,836	36.8	46.5	9.7	79.1	
45-49	0.00538	97,849	490,643	0.85	417,441	3,171,247	32.4	41.7	9.3	77.7	
50-54	0.00755	97,169	487,467	0.87	426,523	2,753,806	28.3	36.9	8.6	76.8	
55-59	0.01009	96,220	483,229	0.76	367,156	2,327,283	24.2	32.2	8.0	75.1	
60-64	0.01457	94,847	477,374	0.88	420,837	1,960,127	20.7	27.5	6.8	75.1	
65-69	0.024	92,782	468,477	0.81	377,884	1,539,290	16.6	22.8	6.2	72.8	
70-74	0.04416	89,238	453,190	0.81	368,926	1,161,406	13.0	18.3	5.3	71.1	
75-79	0.09592	82,650	422,984	0.78	331,816	792,480	9.6	14.1	4.5	68.0	
80-84	0.19919	70,868	363,372	0.74	269,370	460,664	6.5	10.3	3.8	63.1	
85+	0.37209	52,069	262,527	0.73	191,293	191,293	3.7	7.1	3.4	51.7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년,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간이생
 명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에서
 2021.9.16. 인출)를 분석함.

다음은 2018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복지와 관련된 주요 특성별 행복 기대여명의 결과이다(〈표 4-18〉).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20-24세 경우(남: 52.0세, 여: 58.5세)와 건강이 좋은 상태인 경우(남: 51.1세, 여: 59.0세)가 수입에 종사하는 경우 및 지역거주 상태보다 행복기대여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행복기대여명은 남자의 경우 시골(47.2세)이 도시(45.4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시골(54.1세)이 도시(52.5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공히 농촌이 도시보다 매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대여명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8〉 복지관련 주요 특성별 행복기대여명(2018)

연 령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	좋은 건강상태	경제상태에 만족함	지 역	
				농 촌	도 시
남 자					
20-24	46.9	51.1	52.0	47.2	45.4
25-29	42.8	46.8	47.6	43.2	41.5
30-34	39.4	43.0	43.6	39.7	38.1
35-39	35.3	38.6	39.2	35.6	34.1
40-44	31.6	34.3	35.0	31.7	30.5
45-49	27.4	29.9	30.6	27.5	26.3
50-54	23.7	25.8	26.4	23.7	22.7
55-59	20.0	21.7	22.4	19.9	19.0
60-64	17.0	18.1	18.8	16.8	16.1
65-69	13.4	14.2	14.9	13.2	12.5
70-74	10.3	10.5	11.5	10.1	9.6
75-79	7.3	7.0	8.2	7.1	6.7
80-84	4.7	3.6	5.4	4.6	4.3
85+	2.6	0.0	3.0	2.5	2.3
여 자					
20-24	54.2	59.0	58.5	54.1	52.5
25-29	50.0	54.6	54.0	49.9	48.3
30-34	46.1	50.4	49.7	46.0	44.6
35-39	41.8	45.9	45.1	41.7	40.4
40-44	37.7	41.4	40.6	37.5	36.4
45-49	33.3	36.7	36.1	33.1	32.0
50-54	29.2	32.3	31.6	29.0	28.0
55-59	25.0	27.9	27.2	24.7	23.8
60-64	21.4	23.8	23.1	21.1	20.4
65-69	17.3	19.4	18.8	17.0	16.3
70-74	13.6	15.3	14.8	13.3	12.8
75-79	10.1	11.5	11.1	9.8	9.4
80-84	6.9	7.9	7.6	6.6	6.3
85+	3.9	4.4	4.3	3.7	3.5

자료: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간이생명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에서 2021.9.16. 인출)를 분석함.

국제비교의 경우 조사시점의 차이로 제한적이지만, 미국(2000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행복기대여명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2018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행복기대여명률은 남녀 공히 연령대별로 같은 정도(80-90%)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행복기대여명률은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표 4-19〉).

〈표 4-19〉 한국과 미국의 행복기대여명 비교

구 분	한 국 ¹⁾						미 국 ²⁾	
	2008		2018		2008-2018		200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0세 기대여명								
전체	47.1	53.7	50.4	56.3	3.3	2.2	45.9	50.5
행복	32.1	36.6	38.6	45.1	6.5	8.5	41.6	44.4
매우 행복	7.6	7.3	9.5	11.3	1.9	4.0	15.8	16.0
다소 행복	24.5	29.3	29.1	33.8	4.6	4.5	25.8	28.4
행복하지 않음	15.0	17.1	11.8	11.2	-3.2	-5.9	4.3	6.1
30세 기대여명률(%)								
전체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행복	68.2	68.2	76.6	80.1	8.4	11.9	90.7	87.9
매우 행복	16.1	13.6	18.9	20.1	2.7	6.4	34.4	31.6
다소 행복	52.1	54.5	57.7	60.0	5.7	5.5	56.3	56.3
행복하지 않음	31.8	31.8	23.4	19.9	-8.4	-11.9	9.3	12.1
65세 기대여명								
전체	16.3	20.7	18.7	22.8	2.4	2.1	16.2	19.1
행복	8.8	11.1	12.8	16.6	4.0	5.5	14.7	16.5
매우 행복	1.8	1.8	4.3	5.4	2.5	3.6	6.3	5.9
다소 행복	7.0	9.3	8.5	11.2	1.5	1.8	8.4	10.6
행복하지 않음	7.5	9.6	5.9	6.2	-1.6	-3.4	1.5	2.6
65세 기대여명률(%)								
전체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행복	53.9	53.8	68.4	72.8	14.4	19.0	90.6	86.6
매우 행복	10.9	8.7	23.0	23.9	12.1	15.2	39.0	31.1
다소 행복	43.0	45.1	45.3	48.9	2.3	3.8	51.6	55.5
행복하지 않음	46.1	46.2	31.6	27.2	-14.4	-19.0	9.4	13.4
85세 기대여명								
전체	5.2	6.4	5.7	7.1	0.5	0.7	5.6	6.7
행복	1.5	1.8	2.4	3.7	0.9	1.8	5.2	5.8
매우 행복	0.0	0.0	1.2	1.7	1.2	1.7	2.3	2.0
다소 행복	1.5	1.8	1.2	2.0	-0.3	0.1	2.9	3.8
행복하지 않음	3.7	4.6	3.3	3.4	-0.4	-1.1	0.5	0.8
85세 기대여명률(%)								
전체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행복	29.6	28.6	42.6	51.7	13.0	23.1	91.7	87.2
매우 행복	0.0	0.0	20.8	23.9	20.8	23.9	40.2	29.5
다소 행복	29.6	28.6	21.8	27.8	-7.8	-0.8	51.5	57.7
행복하지 않음	70.4	71.4	57.4	48.3	-13.0	-23.1	8.3	12.8

자료: 1)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간이생명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에서 2021.9.16. 인출)를 분석함.

2) Yang, Y. (2008). Long and happy living: Trends and patterns of happy life expectancy in the US, 1970-2000.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235-1252.

라. 결과의 함의

우리나라 행복기대여명은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며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행복기대여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간 비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행복기대여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국가 간 문화나 조사 방법, 조사 시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고 연령층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원의 한계로 복지 재정과의 연관성을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복지 재정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국민의 행복기대여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재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행복에 대한 정의와 객관적인 측정 지표, 다양한 변수를 분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료원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의 객관적 지표화 과정에 복지재정이 포함될 수 있다면 앞으로 지역별 정책 수립에서 지역 단위의 복지 계정 자료들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절 복지 지표의 발굴과 산출

3절에서는 복지계정을 활용한 복지지표 생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예산, 1인당 사회복지비, 복지 재정 자율성, 복지 재정 압박도, 복지 재정 부담도로 구성된 5가지 복지지표의 개념과 선행연구, 산식,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세대 간 형평성 지표에 대한 탐색으로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GA), 세대 간 소득 탄력성(세대 간 이동성 지표:Th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GE), 세대 간 불평등도(Generational Imbalance: GI), 지방재정 장래세대부담 비율의 의미와 선행연구, 방법론 등을 검토하였다.

1. 사회복지예산 지표

가. 개념

사회복지 예산이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비를 의미하며 세출예산이 주요 단위이다. 이 지표는 지방정부의 실제 활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적 지표이자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양적 지표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측정 단위는 비중(%)이다. 그래서 이 지표를 사회복지 예산 비중지표라고도 한다(고경환 등, 2020).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규모를 통제한 상황에서 상대적 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연도별 지출의 증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총액보다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높고 낮음뿐만 아니라 지출의 증감율, 경향, 변화의 정도, 그리고 증감율의 차이 원인을

탐색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고경환 등, 2020; 이상일, 박종철, 2016; 이종대, 2008; 조규영, 2009).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지방자치정부가 복지 분야에서 재정 투입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정보의 노력과 지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이진성, 2012).

이 지표의 장점은 우선 자료수입의 용이성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행정 안전부나 보건복지부, 복지재정 DB 등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자료 확보가 쉽다. 그리고 일반 회계 대비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이 쉽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가 단순하다. 그러나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양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 간의 복지 부담에 따른 차이나 재정 위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산정방식과 비교 방식의 단순성이다(박고운, 박병현, 2007). 사회복지 예산의 증감은 지방자치제도의 부담도를 가장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다. 단지 사회복지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선행연구

사회복지예산은 복지재정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수행되면서 지방복지재정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대, 2005년 복지사무의 본격적인 이양 이후 복지재정 연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은 하나의 보편적인 변수로 사용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자치정부 간의 복지 노력 정도나 상대적 순위를 통해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활용되었다(최일진, 남황우, 2017). 이 연구들은 사회복지예산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비중의 증감율과 지역 간 차이의 원인이나 결정 요인을 밝히는데 다분히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정책의 성격, 외부 환경적 요인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의 원인과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강혜규, 2004; 강운호, 2002; 박고운, 박병현, 2007; 김승연, 홍경준, 2011; 신정관, 임준형, 2013; 오수현, 강인성, 2013; 이상일, 박종철, 2016; 장인수, 김홍석, 2018; 정진현, 2003 외 다수).

초창기 연구들은 사회복지예산이라는 명칭보다는 사회보장 예산(비)을 사용하였다(강혜규, 2004; 강운호, 2002; 박고운, 박병현, 2007; 김승연, 홍경준, 2011; 오수현, 강인성, 2013; 이상일, 박종철, 2016; 정진현, 2003 외 다수). 지방자치단체 복재 재정은 대략 3차에 걸쳐 변화가 있었는데 1991년도~1995년도(1차) 사회복지비, 1996년~2007년(2차) 사회개발비, 2008년도 이후(3차)는 사회복지비로 명칭이 변화였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항목 등 사회복지비 이외에 보건, 환경 등 순수 복지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로 현재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사회복지 개념과 유사하다. 이에 이시기 많은 연구들은 사회개발이나 사회복지보다는 사회보장을 단위로 사용하였다(고경환 등, 2020). 그러나 사회보장비의 하위 세부 단위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왜곡이 발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통계적 유의가 필요하다(이진성, 2012).

사회복지 예산은 위의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사회복지 예산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정 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전체 예산액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도 포함이 된다. 사회복지지는 8개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이다. 보건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2021).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보건을 구분하고 순수 사회복지 예산을 비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건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김윤수, 류호영, 2012; 신정관, 임준형, 2013; 신재혁, 김태완, 박희경, 2020; 윤인주, 양준석, 2016; 현승현, 신현중, 2018 외 다수).

조무현(2016)은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지자체 분석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은 자치구가 크고 군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가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 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은 지역 간 복지재정의 편차를 통해 지역의 복지 노력정도, 예산 부담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변수는 경직성 경비와 법적 의무 지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집행 의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김경준, 함영진, 이기동, 2013; 함영진, 2013). 또한 지표 속성이 전체 비중이나 변화량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도 지역 간 격차나 불평등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 산식

사회복지예산 지표는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나눈 방식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여기의 변수는 비율과 변화량이다. 비율은 상대적인 비중을 보여주어 비교가 용이하며 사회복지예산 비율 변화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자치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표 4-20〉 사회복지예산지표의 특징

분류	내용		
활용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 정도를 파악하고 상대적 순위를 매겨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도 측정이 가능		
원리	지방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년도별 변화량		
기본 공식	$\frac{\text{사회복지예산}}{\text{전체예산}}$	$\frac{\text{사회복지예산}}{\text{전년도 전체예산}}$	$\frac{\text{사회복지예산}}{\text{전년도 사회복지예산}}$
변수	사회복지예산 비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변화량		
단위	%, 변화량		

자료: 강혜규. (2004).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라. 동향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증가율을 광역시와 시군구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복지 예산을 비교해보면 광역시보다 기초자치단체가 다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구가 가

장 높고 그다음이 시, 그리고 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의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중에 예산 비중이 낮은 군의 경우 20% 정도로 전체 예산에 5분의 1 수준이다.

〈표 4-21〉 2015년~2019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

구분	사회복지예산비중(평균,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광역시	32.52	32.31	32.28	33.79	35.62
시	31.16	30.31	29.39	30.69	31.59
군	20.31	19.96	19.32	20.08	20.54
구	54.09	52.65	51.44	52.47	53.97
평균	35.2	34.3	33.39	34.41	35.37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모두 2016년과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감소하다가 2018년과 2019년 소폭 증가하였다. 변화량의 포근 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를 비교 해보면 변화량은 년도별로 차이가 있다. 2016년, 2017년에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감소했는데 광역시보다 기초자치단체가 컸다. 반면 2018년에서 2019년 증가 폭은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보다 컸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구가 시와 군보다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시였고 군이 변화량이 가장 낮았다.

〈표 4-22〉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구분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광역시	-0.22	-0.03	1.51	1.83
시	-0.85	-0.92	1.30	0.90
군	-0.35	-0.64	0.76	0.46
구	-1.44	-1.21	1.03	1.50
평균	-0.88	-0.92	1.03	0.95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참고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절대적인 총액인 사회복지 예산 자체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증가 폭은 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구, 군 순이었다.

〈표 4-23〉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구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광역시	5.39	6.47	9.98	16.44
시	7.89	4.87	10.65	16.78
군	3.96	7.99	8.65	14.87
구	6.25	5.40	9.72	15.52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2. 1인당 사회복지비

가. 개념

1인당 사회복지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을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는 인구와 총 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간의 실질적 차이를 비교하는데 적합하다(조무현, 2016). 그리고 이 지표는 지방자치 정부의 인구 규모나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 양을 측정할 수 있다(강철웅, 2009).

1인당 사회복지비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미 있는 노력을 탐색하고 복지와 규모와 구성이 지역 주민에게 미칠 결과까지 해석이 가능한 결과 지표이다(박고운, 박병현, 2007; 이상일, 박종철, 2016).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표가 상대적 순위를 보여줄 수 있다면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정책의 절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제공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표는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더욱 용이하다(강혜규, 2004; 이진성, 2012; 조규영, 2009). 지역 간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인당 복지 예산과 변이계수(CV)를 사용한다.

나. 선행연구

지역 간의 격차나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사회복지 예산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지표가 총량만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하기 위해 1인당 사회복지 예산지표를 사용한다. 1인당 사회복지비를 단일지표로 사용하는 경우 보다 사회복지예산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강혜규, 2004; 박고운, 박병현, 2007; 이상일, 박종철, 2016; 이종대, 2008; 장동호, 2012; 조규영, 2009; 조무현, 2016). 강혜규(2004)는 사회복지 예산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을 함께 사용하였고 지표에 따른 결과의 상이성을 보여주었다. 강혜규(2004)는 198개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자치구, 시, 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사회복지비는 군, 시, 자치구 순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박고운, 박병현(2007), 이진성(2012), 조무현(2016)도 유사하다. 박고운, 박병현(2007)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보다 높게 나온 반면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은 군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시, 구로 나타났다. 이진성(2012)도 사회복지 예산비율로 분석했을 때 가장 적은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경상북도 울릉군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북구였다. 반면 1인당 사회복지비로 지역을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지역은 서초구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이었다. 조무현(2016)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 비중은 자치구, 시, 순이었다, 반면 1인당 사회복지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군 지역의 액수와 증가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지역이 가장 1인당 사회복지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 자치구 순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비로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일부 연구에서는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의 분석 단위가 액수(원)로만 지역 간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

적한다. 진재문(2010, 2012)은 액수의 평균은 수준만 보여줄 뿐 실질적인 차이는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Williamson(1965)이 국가 간 지역 간의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할 때 차용하는 방식이다. 진재문(2010)은 2009년을 기준으로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격차를 분석한 결과 구지역이 불평등도가 시나 군보다 높게 나왔다. 반면 변이계수는 시·군·구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집단내보다 집단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진재문(2012)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과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측정하였다.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의 평균을 통해 2000년에서 2010년 2011년 사이의 시·군·구 차원에서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추이를 통해 시군구간 사회복지 예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변이계수를 통해 지역 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시군구 내부 불평등보다 집단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최영(2015)이 있다. 최영(2015)도 변이계수(CV)를 사용하여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2008년 차등 보조율 도입 이후 지역 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2005년 이후 지역 간 불평등 정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을 자체사업 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국가 보조사업에 비해 자체사업 예산의 지역 간 불평등도가 2배 내외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러한 단순성에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차원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한 연구로는 김홍주, 구찬동(2014)과 이석환(2019)가 있다. 김홍주, 구찬동(2014)는 엔트로피지수(Theil entroph index),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를 구하였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매해 불평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가 포함될 경우 불평등도가 낮아졌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비 불평등도는 경상지역이 가장 높았고 국가보조예산이 포함될 경우 불평등도가 개선되었다. 이석환(2019)은 김홍주, 구찬동(2014)의 엔트로피지수(Theil entroph index),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와 함께 Beta 수렴, Sigma 수렴을 사용하여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시간에 따른 지역 간 불평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Beta 수렴과 Sigma 수렴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사회복지지출의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빈곤 지표를 지역 간 격차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차용하였다. 한편 변이계수(CV) 이외에 다른 지표들은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 산식

1인당 사회복지 지표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한 것이다. 하나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간의 격차를 측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해당 지역의 복지예산을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변이계수를 구해 지역 간 격차나 불평등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 4-24〉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의 특징

분류	내용
활용도	복지 수준을 측정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탐색하고 지역 간의 불평등도와 격차를 파악할 수 있음
원리	사회복지예산을 해당지역 인구수로 나눈 값
기본 공식	$1인당사회복지비 = \frac{\text{사회복지예산}}{\text{해당시·군·구인구수}} \quad cv = \frac{\sigma}{\mu}$
변수	1인당 사회복지비, 사회복지예산, 인구 수
단위	원, 변이계수(CV)

자료: 진재문. (2012). 시·군·구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2000~2010 년의 1인당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205-227.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라. 동향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광역시별로 1인당 사회복지비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은 소폭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사회복지비는 2백 25만원이다. 1인당 사회복지비가 많은 광역시는 전라남도가 1위였으며 그 이어 강원도 전라북도 순이었다. 또한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였으며 경기도 제주도 순이었다. 지역 간의 편차도 2015년과 2019년 사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50만원이다. 변이계수는 0.22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광역시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15~2019)

(단위: 백만 원)

구분	광역시도별 1인당 사회복지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1.28	1.37	1.47	1.64	1.94
부산광역시	1.51	1.63	1.73	1.92	2.32
대구광역시	1.47	1.58	1.67	1.83	2.19
인천광역시	1.33	1.40	1.50	1.69	2.04
광주광역시	1.69	1.76	1.84	2.04	2.43
대전광역시	1.48	1.51	1.61	1.83	2.23
울산광역시	1.18	1.27	1.37	1.58	1.87
세종특별자치시	0.92	0.85	0.91	0.98	1.12
경기도	1.13	1.18	1.27	1.41	1.70
강원도	1.82	1.94	2.17	2.41	2.94
충청북도	1.72	1.78	1.89	2.08	2.47
충청남도	1.65	1.73	1.82	2.02	2.44
전라북도	1.97	2.06	2.22	2.48	2.89
전라남도	2.15	2.20	2.35	2.57	3.05
경상북도	1.79	1.88	2.01	2.20	2.64
경상남도	1.51	1.58	1.67	1.87	2.23
제주특별자치도	1.18	1.21	1.32	1.43	1.72
평균	1.52	1.58	1.70	1.88	2.25
표준편차	0.32	0.35	0.37	0.41	0.50
변이계수	0.21	0.22	0.22	0.22	0.22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1인당 복지비를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1인당 사회복지비는 군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 구 순이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군이 1인당 사회복지비가 2백 26만원, 시가 1백 38만원, 구가 1백 9만원이었다. 지역 간의 편차역시 군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 구 순이었다. 시군구 모두 1인당 사회복지비는 증가하였다. 지역 간의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시($C=0.2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구($C=0.22$), 군($C=0.19$) 순이었다. 요약하자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1인당 사회복지비는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은 군이 가장 높은 반면 지역 내 불평등도는 시가 가장 높다.

〈표 4-26〉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15~2019)

(단위: 백만 원)

구분		지방자치단체별(시·군·구) 1인당 사회복지비 변이계수				
		2015	2016	2017	2018	2019
시	평균	0.92	0.97	1.04	1.15	1.38
	표준편차	0.26	0.27	0.30	0.33	0.38
	변이계수	0.28	0.28	0.29	0.28	0.27
군	평균	1.52	1.58	1.72	1.90	2.26
	표준편차	0.29	0.30	0.34	0.39	0.44
	변이계수	0.19	0.19	0.20	0.20	0.19
구	평균	0.72	0.77	0.82	0.91	1.09
	표준편차	0.17	0.18	0.19	0.20	0.24
	변이계수	0.23	0.23	0.23	0.22	0.22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3. 복지 재정 자율성

가. 개념

재정의 자율성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나 광역자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동식, 2012). 자율성은 다른 말로 자주도라고도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의 세출에서의 자주도이다(권민영, 박용호, 전지수, 2016). 지방정부의 재정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주 재원은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의 조종교부금, 도비보조금 등이다(이동식, 2012).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의 핵심은 바로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동식, 2012).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자주재원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자립도이다. 복지재정의 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나 상위 기관의 지방정부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정부가 순수한 자체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순수 자체 복지 사업비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도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재원은 국가 보조금,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지방비 예산이다. 자주 재원은 사회복지예산에서 의존재원을 제외한 액수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는 자치 재원이다(모지환, 이중섭, 2010; 조기태, 2017).

일부 실증적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예산 대비 자체 복지사업의 지출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체 복지사업의 지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의 자율성이 높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또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는 자체 고유 복지사무를 감소시킨다는 것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일, 2013; 윤영진, 2013; 하능식, 구찬동, 2012; 장덕희, 2015).

즉 복지재정의 자율성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고유사무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측정하고, 지자체 자체의 ‘스스로의 결정’이나 ‘스스로 노력’인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장덕희, 2015).

나. 선행연구

지방 복지 재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복지 예산이나 1인당 사회복지비를 사용하면서 순수한 지자체의 복지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을 단위로 분석되었으며, 당시 많은 연구들은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고 보조 사업과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지표가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비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의 증감에 따른 자체 사업의 결정정도나 실질적인 복지 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2004년 상당 부분의 지자체의 복지 사무가 이양되고 국고 보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의 자체 재정의 부담도가 증가하고 지자체 복지 고유사무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제기가 되면서 복지

재정의 자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함영진, 201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0년대부터는 지자체의 순수 복지노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김승연, 2014; 모지환, 이중섭, 2010; 장덕희, 2015; 조기태, 2017 외 다수).

모지환, 이중섭(2010)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사이의 복지재정 자율성을 측정하였다. 복지재정자율성은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높아졌다가 2006년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탐색하였다. 또한 시(중소도시) 군(대도시) 구(소도시)로 분류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 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별로 소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재정자립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태(2017)는 2008년부터 2015년 까지 74개의 자치구와 7개의 광역시를 분석하면서 이들 사이에 복지 재정의 자율성의 편차가 크다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밝혀주었는데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의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복지재정의 자율성을 측정한 김승연(2014)의 연구가 있다. 김승연(2014)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을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자치사무에 지방이양사업과 고유사업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율복지지출'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율복지 지출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출과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자율복지 지출로 보았다. 측정은 1인당 분권교부세와 자체복지사업지출 합계액과 총 세출 대비 분권교부세와 자체복지사업지출 합계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모지환, 이중섭(2010)과 조기태(2017)는 자치 사무에 한정했다면 김승연(2014)은 지방이양사업까지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재정능력이 클수록 위임복지 지출이 줄어들고 자율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지역의 복지욕구가 클수록 자율복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복지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지표를 사용한 연구로는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2014)의 연구가 있다. 2004~2010년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는 자체복지 사업이 20%를 상회했으며 재정력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30% 이상의 자율성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 복지 자체사업의 지출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 노력을 하는데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다. 산식

복지 재정의 자율성은 한마디로 복지 자립도 또는 복지 자주도 라고 할 수 있다. 기본 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자체사업 예산이다. 계산 방식은 총 세출예산 중 순수한 사회복지관련 고유 사무로 자체사업의 예산 비율로 계산한다(모지환, 이중섭, 2010). 총 액수가 아닌 비율로 계산하는 이유는 표준화 시켜 지역 간의 비교가 용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를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모지환, 이중섭, 2010; 조기태, 2017).

〈표 4-27〉 복지재정 자율성 지표의 특징

분류	내용
활용도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지와 정책 결정을 탐색
원리	자체복지사업비를 사회복지예산 총액으로 나누어 순수한 복지사업의지를 측정
기본 공식	$\frac{\text{자체복지사업비}}{\text{사회복지분야예산총액}} \times 100$
변수	자체복지사업비
단위	%

자료: 모지환, 이중섭. (201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7(4), 49-73.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라. 동향

2019년 기준으로 광역시의 복지재정의 자율성을 살펴보았다. 자체사업 지방비로는 경기도(1,289,617백만 원)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강원도(339,769백만 원), 경상남도(224,444백만 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와 그 다음 강원도 사이의 복지 사업비의 차이가 약 3.5 배 정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1454백만 원), 제주도(5432백만 원), 울산광역시(5443백만 원) 순이었다. 표준편차는 314,303백만 원으로 가장 자체사업지방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1,288,163백만 원이다.

사회복지예산액과 자치사업지방비를 기준으로 복지재정자율성을 구한 결과 강원도가 7.49%였으며 다음이 경기도로 5.72%였다. 이 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고유의 복지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복지재정 자율성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0.15%)였으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0.14%)였다. 이 두 지역이 외에 대구(0.16%), 대전(0.17%), 부산(0.18%)로 복지재정자율성이 상당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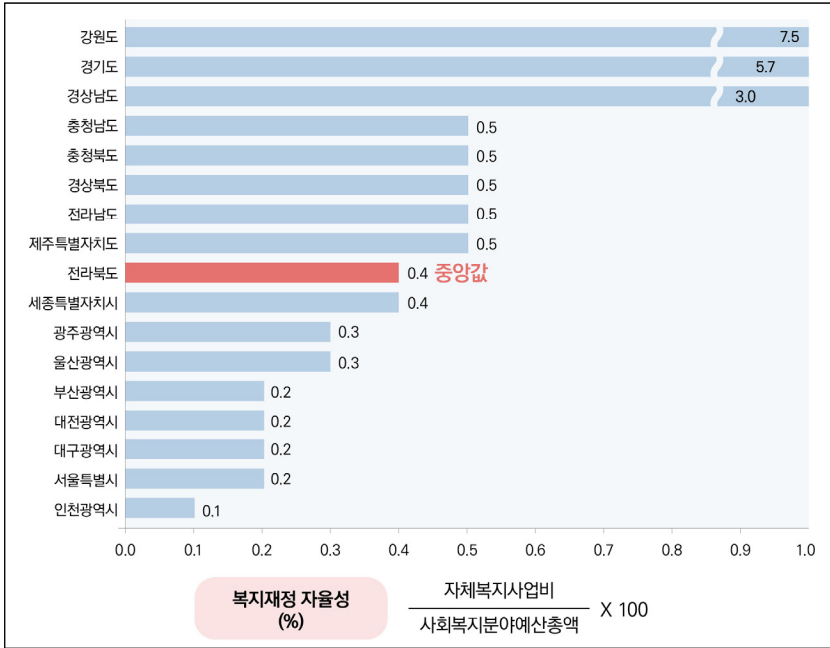
절대적 총액인 자체사업 지방비와 비중인 복지재정 자율성을 광역시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 자체 사업지방비가 사회복지 예산액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따라서 복지재정의 자율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광역시 복지재정의 자율성

행정구역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자체사업 지방비	복지재정 자율성
	백만 원	백만 원	%
서울특별시	17,981,757	28,386	0.15
부산광역시	7,592,271	14,589	0.18
대구광역시	5,010,673	8,747	0.16
인천광역시	5,827,802	8,547	0.14
광주광역시	3,372,577	10,972	0.31
대전광역시	3,127,409	5,686	0.17
울산광역시	2,041,401	5,443	0.25
세종특별자치시	344,563	1,454	0.38
경기도	21,327,868	1,289,617	5.72
강원도	4,232,447	339,769	7.49
충청북도	3,697,930	20,707	0.52
충청남도	4,806,418	27,014	0.52
전라북도	4,971,837	20,347	0.39
전라남도	5,325,624	28,831	0.51
경상북도	6,565,119	35,535	0.51
경상남도	7,129,257	224,444	2.99
제주특별자치도	1,081,070	5,432	0.47
합계	104,436,023	2,075,521	1.88
평균	6,143,295	122,089	1.23
표준편차	5,486,695	314,303	0.0215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에서 2020.10.16. 인출)

[그림 4-9] 광역시 복지재정의 자율성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다음으로는 기초자치단체(223개)의 복지 재정의 자율성을 비교해보았다. 일반적으로 자체사업 지방비는 절대적 총액은 시(1,530,07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군(285,351백만 원)이고 구(48,091백만 원)가 가장 낮았다. 평균으로 보면 시(9,199백만 원), 군(2,941백만 원), 구(697백만 원) 순이었다. 지역 간의 평균 격차를 볼 수 있는 표준편차는 시(13,405백만 원)이고 다음이 구(3,771백만 원), 군(455백만 원)순이었다.

복지재정의 자율성은 평균적으로 시가 5.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군이 3.47%이었고 구가 0.24%로 가장 낮았다. 시의 경우 지역 간의 복지 자율성에 대한 평균 격차는 0.05로 작은 편이다. 군의 경우 평균 지역 간의 격차는 0.05로 시와 같다. 구의 경우 지역 간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요약하자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보다 복지재정자율성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광역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전달자 역할만 할뿐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다(모지환, 이중섭, 2010).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실제로 지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주된 역할자로서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시가 가장 자율성이 높은 반면 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자율성

구분		사회복지비 총액	자체사업 지방비	복지재정 자율성
		백만 원	백만 원	%
시	합계	28,384,066	1,530,072	5.39
	평균	346,891	9,199	5.07
	표준편차	242,850	13,405	0.05
군	합계	8,905,785	285,351	3.20
	평균	96,666	2,941	3.47
	표준편차	31,180	3,771	0.05
구	합계	22,099,231	48,091	0.22
	평균	320,279	697	0.24
	표준편차	123,802	455	0.0017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4. 복지 재정 압박도

가. 개념

복지 재정 압박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원래 재정 압박도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인해 초래되는 지방재정의 높은 부담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압박이라는 표현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적절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재정 수입 조달 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사용한다(이효, 1990). 다른 말로 재정압박도는 지불능력 취약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의 부족이나 재정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재정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지출에 대한 장기간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허명순, 2011). 이 개념은 재정 건전성의 위협단계인 지방재정의 위기를 설명할 때 단계별 또는 수준별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복지재정압박도는 하능식, 구찬동(2012)에 개발되었다. 복지 재정압박도(fiscal stress)는 기초자치단체가 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지방 재정을 지출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김은주, 최정우, 배수호, 2014). 그러나 이 지표는 사회복지 예산 중 국가 보조금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률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한재명, 신우진, 2017).

나. 선행연구

지방분권 이후 지방재정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압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0년대를 기점으로 지방 재정의 상당 액수가 사회복지

지와 관련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부터 사회복지 측면에서 재정 압박도를 측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이상호, 2015; 하능식, 구찬동, 2012).

이효(1990)는 국내에서 최초로 재정압박도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효(1990)에 따르면 재정상태의 악화는 세입감소와 지출증가, 세원 감소와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 예산초과, 부의 외부경제 발생, 정부 간 제약과 위임의 증가, 재해와 긴급 상황의 발생, 중앙정부의 과도한 의존, 정치적 압력, 효과적인 관여 결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이효, 1990).

국내에서 재정 압박도 지표 구성은 허명순(2011)에 의해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허명순(2011)은 기존의 지방재정 건전성의 지표에 대한 낮은 타당도와 신뢰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내에 적합한 재정압박도 지표를 구성하였다. 재정 압박은 재정위기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압박, 위기, 파산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허명순(2011)은 한국의 재정 구조상 위기나 파산과는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압박도로 구성하였다. 허명순(2011)은 지방재정 압박도 지수에 세입압박, 세출압박, 운영압박, 채무 압박 지표로 구성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허명순(2011)은 재정압박도와 재정건정성의 개념을 차별화하면서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하능식, 구찬동(2012)은 기존의 재정압박도 지표를 토대로 복지재정 압박도 지표를 구성하였다. 하능식, 구찬동(2012)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지표와 사회복지 예산비중 지표를 토대로 복지재정 압박도 지수를 만들었다. 하능식, 구찬동(2012)은 이 두 지표를 사용하여 비중지표로 2002~2010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증가를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을 상태 지표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비중 증가가 2010년 복지 예산 비중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두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비중 증가가 있더라도 현행 비중이 높은 지자체가 재정압박도가 크고 동일한 2010년 사회복지 비중이더라도 비중의 증가폭이 큰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 재정압박도 점수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4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압박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고압박 그룹의 경우 수도권 시와 비수도권의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저압박 그룹의 경우 소규모 농어촌 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을 통해 인구 수, 재정력, 사회복지 예산 등을 기준으로 고압박과 저압박 그룹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박지현(2014)는 하능식, 구찬동(2012)의 복지재정압박도를 사용하여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복지재정압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자치구가 복지 재정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군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자치구의 복재재정압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호(2015)는 하능식, 구찬동(2012)이 기초자치단체에 국한한 것을 광역시까지 확대하였고 2008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지역 간의 복지재정압박도를 탐색하였다. 이상호(2015)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비교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다른 사업의 축소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 대한 합리적 정비와 세출여건의 새로운 정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산식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화 지수 구해 평균 비교하기: 해당 지자체의 지표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준 것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분모에 표준화 적용함)

2. 평균값의 순위 매기기 : 복지재정 압박도는 절대지수가 아닌 상대적 순위임
3. 고압박 그룹과 저 압박 그룹으로 유형화하기: 상위 25%를 고압박 그룹(A), 하위 25%를 저 압박 그룹(D)형으로 분류. 그룹은 시, 군, 구 단위로 분류해야 함

〈표 4-30〉 복지재정압박도 지표의 특징

분류	내용
활용도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정도를 측정하는 것
원리	사회복지비의 비중과 사회복지비의 증가율(사회복지비 비중의 차)을 결합하여 표준화한 후 복지 압박도 도출
기본 공식	$\frac{\text{사회복지예산증가비중} + \text{사회복지예산비중}}{2}$
변수	사회복지 예산 비중, 자체 복지 사업 예산 변화량
단위	점, 변화량

자료: 이상호. (2015). 사회복지 지출과 지방재정: 재정압박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427-454.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라. 동향

2019년을 기준으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각각 재정압박도를 구하여 비교해보았다. 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정압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46.82점의 광주광역시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22.42점인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재정압박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높다고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재정압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광주시 재정의 부담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역시 압박도 평균 지수는 34.46점이었다. 지역 간의 평균적인 차이는 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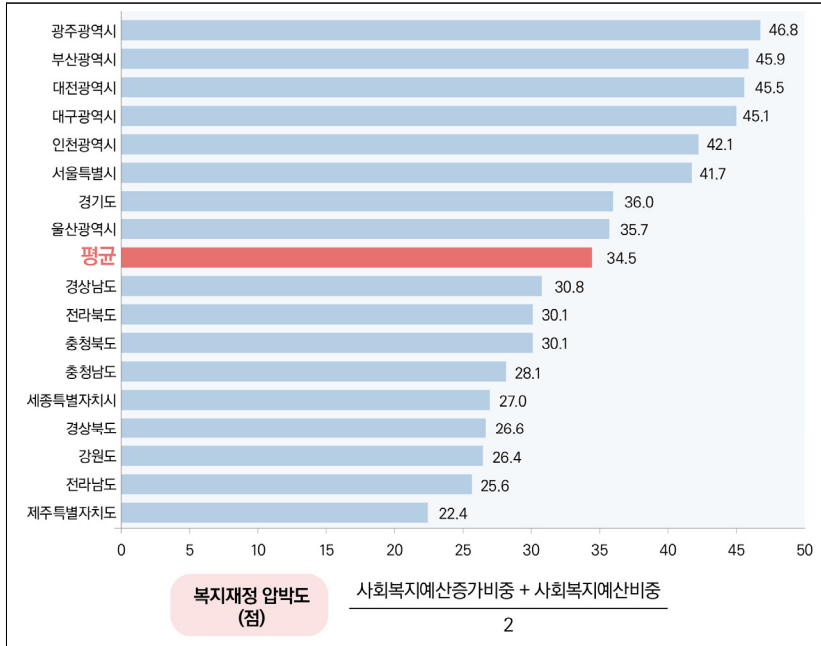
점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22.4로 약 2배정도 차이가 났다. 지수를 구한 후 점수별로 순위를 매겼고 점수별로 유형화를 하였다. 복지재정압박도가 높은 상위 25%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였다. 하위그룹 25%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위 50%그룹에 속하지만 상위 25%그룹의 맨 마지막 순위에 있는 인천광역시와 점수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표 4-31〉 광역시 복지재정압박도

구분	2019		
	행정구역별 (광역시도)	복지재정압박도(점)	압박도 순위
상위25%	광주광역시	46.82	1
	부산광역시	45.90	2
	대전광역시	45.53	3
	대구광역시	45.05	4
	인천광역시	42.11	5
중위	서울특별시	41.72	6
	경기도	35.96	7
	울산광역시	35.68	8
	경상남도	30.77	9
	전라북도	30.08	10
	충청북도	30.06	11
	충청남도	28.08	12
하위25%	세종특별자치시	26.99	13
	경상북도	26.62	14
	강원도	26.44	15
	전라남도	25.64	16
	제주특별자치도	22.42	17
압박도평균		34.46	-
압박도표준편차		8.41	-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그림 4-10] 광역시 복지재정의 압박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에서 2020.10.16. 인출)

2019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압박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생략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좀 더 단순하게 비교하기 위해 상위 10위 하위 10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복지압박도를 비교해보면 구가 53.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시로 31.11점이었고 군이 20.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 간 격차는 구(7.5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시(7.05), 군(4.59) 순이었다. 시의 경우 지역 간의 격차는 평균 7.05점이었으며 복지재정 압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천시로 46.57점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상주시로 16.72점으로 약 2.7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군의 경우 기장군이 41.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군은 울릉군으로 11.06점이었으며 이들 사이의

차이는 약 2.8배 차이가 있었다. 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재정부박도가 66.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동구로 33.82점이었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약 2배이다.

〈표 4-32〉 기초자치단체 재정압박도

압박도 순위	시		군		구	
	행정구역	복지재정 압박도(점)	행정구역	복지재정 압박도(점)	행정구역	복지재정 압박도(점)
1	부천시	46.57	기장군	41.64	북구(광주)	66.45
2	목포시	43.68	달성군	33.59	달서구	65.15
3	남양주시	42.80	칠곡군	31.00	미추홀구	64.02
4	의정부시	41.99	양평군	28.75	북구(부산)	63.25
5	고양시	41.87	음성군	27.73	부평구	63.07
6	전주시	41.72	가평군	27.18	사하구	62.75
7	군포시	41.67	홍성군	26.96	부산진구	61.83
8	광명시	41.66	울주군	26.94	서구(광주)	61.69
9	성남시	41.63	서천군	26.17	동구(대전)	61.38
10	안양시	40.70	증평군	26.13	서구(대전)	6.21
-10	이천시	23.04	무주군	16.14	서초구	45.76
-9	보령시	22.76	성주군	16.07	강남구	44.51
-8	남원시	22.17	고성군(강원)	16.02	용산구	43.79
-7	김제시	22.12	봉화군	16.00	중구(대구)	39.26
-6	포천시	22.00	양구군	15.92	강서구(부산)	38.96
-5	공주시	21.72	군위군	15.60	중구(부산)	38.77
-4	영천시	20.23	장수군	15.57	중구(인천)	36.04
-3	문경시	20.19	인제군	15.19	중구(서울)	35.93
-2	삼척시	19.70	신안군	14.63	종로구	34.62
-1	상주시	16.72	울릉군	11.06	동구(인천)	33.82
평균	31.11		20.29		53.45	
표준편차	7.05		4.59		7.52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에서 2020.10.16. 인출)

5. 복지재정 부담도

가. 개념

복지 재정 부담도는 사회복지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국고 보조 사업이나 이양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 보조사업의 확대에 의해 지방정부의 지방비의 부담 정도의 변화를 탐색하고 당해 지자체가 받는 실질적 재정부담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복지재정 부담도는 복지 지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 과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비교를 통해 세부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박기묵, 2015).

복지 재정 부담도는 한재명, 김성수(2016), 한재명, 신우진(2017)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지표는 하능식, 구찬동(2012)의 ‘복지재정압박도’의 업그레йд 버전으로 볼 수 있다. 한재명, 신우진(2017)은 기존의 복지재정압박도가 국비와 지방비를 정밀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복지재정압박도는 사회복지예산과 특정 기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복지 재정압박도가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나 증감율이 유사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에 따라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파악할 수 없다. 한재명, 김성수(2016), 한재명, 신우진(2017)는 이 두 변수가 지자체가 받는 실질적인 재정부담정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인 국비와 지방비를 정밀히 구분하여 국비와 지방비에 매칭 비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부담도를 구성하였다.

이 지표의 장점은 다각적 측면에서 지역 간 복지재정부담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아직 인지도가 낮아 보편화가 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고경환 등, 2020).

나. 선행연구

복지 재정 부담도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표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2004년 복지사무의 이양 등의 일련의 분권화 과정과 2000년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는 2000년대 이후 지방재정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많은 복지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사무분권에 비해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사무에 대한 재정 지출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칭방식의 국고 보조사업의 증가는 더욱더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자체 복지 고유사무나 다른 사회적 기반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복지재정의 분권화와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자체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다른 공공사업에 제한을 가져왔다. 다른 의미로 대체효과와 감소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태일, 2013; 박기묵, 2015; 주만수, 최병호, 2011; 장덕희, 2015).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지표 개발은 시작단계에 있었었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도를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방 재정 복지 지표는 사회복지 예산, 1인당 사회복지 예산, 복지 재정 자율성, 복지 재

정 압박도였고 지방재정의 부담도는 간접적인 추론만 가능하였다. 2010년 이후 이와 복지재정 부담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주만수, 최병호(2011)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측정하는데 있어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세출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과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율이다. 전자의 경우 세출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을수록 복지 재정의 부담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후자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향후 재정지출을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에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통해 지자체들이 부담정도나 향후 부담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2009년 사이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율과 2009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낮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을 바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의무적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태일(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예산과 기타 전체예산을 기준으로 복지 재정 부담도를 탐색하였다. 김태일(2013)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력의 차이가 복지 공급에 차이를 가져왔으며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부유자치구와 취약한 자치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재정력이 풍부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지출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비 부담증가가 타 분야의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덕희(2015)는 종속변수인 영역별 정책지출비중과 독립변수를 사회복지예산 비중으로 하여 복지재정부담도를 살펴보았다. 2008년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 군, 구 자치구에서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자체 복지

고유사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수요의 재정을 담당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고유사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기묵(2015)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자체사업지방비,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지방이양사업 대응 지방비 등 이전보다 다양한 지표를 사용했고 이들의 시계열에 따른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비중이 증가는 다른 지역 경제 사업에 제한하면서 향후 중앙정부의 종속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 연구는 전체적인 복지 재정부담을 보여주었지만 지역 간 단순 비교방식으로 인해 지역 간의 편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연구들은 지방에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지역 간의 격차나 불평등도에 초점이 맞추기 보다는 결정요인을 탐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지표 선정이 단순하고 산정방식이 세밀하지 못하는 등 비교 지역재정지표로 한계가 있다.

한재명, 김성수(2016)와 한재명, 신우진(2017)은 2008년~2015년 사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복지재장압박도와 복지 재정 부담도의 비례관계를 확인했지만 평균 재정복지 부담도가 같더라도 평균복지재정압박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가 시책의 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자체 복지 고유사무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한재명, 김성수(2016)는 시, 군, 구가 각기 다른 년도에 재정 부담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했으며 특히 2012~2013년 영유아보육사업 확대와 2014년 기초연금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7년간의 추이를

파악하여 기초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광역시, 시, 구)가 국가 보조 사업 확대에 일반재원의 부담이 증가하면 사회복지 고유 사무 보다 SOC 사업을 상대적으로 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산식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재정부담도는 한재명, 김성수(2016), 한재명, 신우진(2017)에 의해 개발된 지표이다. 사회복지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를 상대적 순위로 나타내어 비교하는 방식이다. 변수는 사회복지 전체 사회복지 예산과 국가 보조사업 예산을 토대로 한다. 상기했듯이 복지사업이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변수의 비중을 기본단위로 한다.

〈표 4-33〉 복지재정부담도 지표의 특징

분류	내용
활용도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국고 보조 사업이나 이양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하는 지표
원리	사회복지비 총액 중에서 국시비와 매칭비율에 의한 지자체의 부담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 복지사업의 비율
기본 공식	$\frac{\text{보조사업지방비}}{\text{보조사업지방비} + \text{자체사업지방비}} \times 100$
변수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자체 복지 사업비
단위	%, 변화량

자료: 한재명, 김성수. (2016).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58).과 한재명, 신우진. (2017).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지방예산편성 방식에 미친 영향 분석-기초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예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5(4), 47-83.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라. 동향

2019년 기준으로 광역시 복지재정부담도를 탐색해보았다. 평균적으로 복지재정부담도는 12.27%이다. 복지재정부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23.05%)이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20.68%), 대전광역시(17.68%)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재정부담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1.30%)이며 그 다음이 충청남도(6.66%)도, 충청북도(6.91)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에 부담정도가 낮을 것이다.

지역 간의 평균 격차는 0.0553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와 가장 낮은 지역인 경상남도의 격차는 21.75%로 약 18배의 차이가 난다. 경상남도의 경우 그다음으로 낮은 지역과도 5.36% 차이로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복지재정부담도의 주요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복지 사무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보조적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부담도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 탐색’이라는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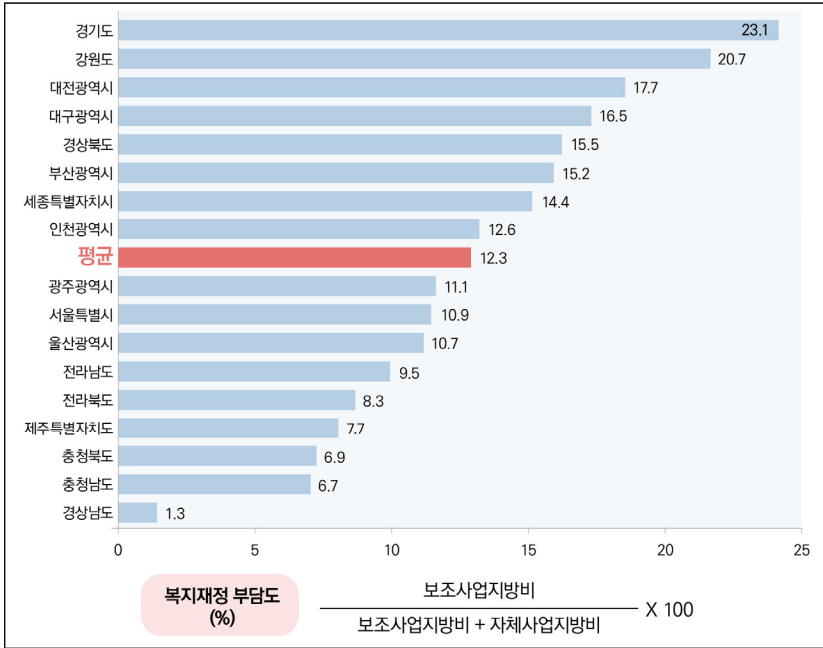
242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표 4-34〉 광역시 복지재정의 부담도

행정구역별	사회복지비 총액	자체사업 지방비	보조사업 지방비	복지재정 부담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
서울특별시	18,889,978	28,386	3,473	10.90
부산광역시	7,918,430	14,589	2,612	15.18
대구광역시	5,338,922	8,747	1,729	16.50
인천광역시	6,039,589	8,547	1,227	12.56
광주광역시	3,543,378	10,972	1,370	11.10
대전광역시	3,284,011	5,686	1,221	17.68
울산광역시	2,149,756	5,443	651	10.69
세종특별자치시	383,003	1,454	245	14.43
경기도	22,563,323	1,289,617	386,366	23.05
강원도	4,539,258	339,769	88,599	20.68
충청북도	3,953,402	20,707	1,538	6.91
충청남도	5,172,348	27,014	1,928	6.66
전라북도	5,263,094	20,347	1,834	8.27
전라남도	5,701,121	28,831	3,014	9.46
경상북도	7,025,752	35,535	6,500	15.46
경상남도	7,513,034	224,444	2,948	1.30
제주특별자치도	1,155,940	5,432	452	7.68
합계	110,434,339	2,075,521	505,707	19.59
평균	6,496,138	122,089	29,747	12.27
표준편차	5,780,691	314,303	94,268	0.0553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에서 2020.10.16. 인출)

[그림 4-11] 광역시 복지재정의 부담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복지 재정부담도를 탐색해보았다. 방법은 복지재정압박도와 마찬가지로 비교의 편의를 위해 복지재정부담도 지수가 높은 지역 10군데와 낮은 지역 10군데를 순위를 매겨 분석하였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복지재정부담도는 구(66.69%)가 가장 높았으며, 시(54.68%) 군(51.35%) 순이었다. 시의 경우 지역내 격차가 0.27로 군과 구에 비해 높았으며, 군과 구는 0.17로 동일하였다. 시에서 재정부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구미시로 89.28%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화성시로 2.44%였으며 이들 사이의 격차는 대략 37배 정도였다. 군의 경우 가장 복지재정부담도가 높은 지역은 양평군으로 81.30%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군으로 6.69%로 둘 사이의 격차는 12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더구나 복지재정부담도가 높은 시 10군데와 낮은 시 10군데를 비교해볼 때 이들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의 경우 복지재정부담도가 높은 지역 10군데의 경우 시나 군보다는 낮은 편이며, 복지재정부담도가 낮은 지역 10군데와 비교해보았을 때 시보다는 작지만 높은 편이었다. 구의 경우 복지재정부담도가 높은 지역 10군데는 시와 구보다 높았지만 낮은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복지재정부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남구로 94.07%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동작구로 25.17%로 3.7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복지재정부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남구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화성시였다.

참고로 광역시와 비교해볼 때 기초자치단체(57.75%)가 광역시(12.27%)보다 복지재정부담도가 4.7배 정도 높은 편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광역시는 자체 고유사업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보조 하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4-35〉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도

부담도 순위	시		군		구	
	행정구역	복지재정 부담도(%)	행정구역	복지재정 부담도(%)	행정구역	복지재정 부담도(%)
1	구미시	89.28	양평군	81.30	남구(부산)	94.07
2	광주시	87.35	울릉군	78.38	부평구	93.14
3	동두천시	86.66	고성군	77.79	동래구	90.64
4	용인시	85.53	양양군	77.33	미추홀구	89.76
5	고양시	85.39	양구군	75.47	연제구	89.04
6	남양주시	85.12	곡성군	72.38	남구(대구)	88.22
7	양주시	84.63	장성군	71.27	사상구	87.89
8	안성시	83.70	화천군	70.89	영도구	86.99
9	경산시	83.59	예천군	70.74	서구(대구)	86.85
10	동해시	82.43	금산군	70.73	동구(부산)	84.59
-10	의정부시	9.26	옥천군	29.84	중구(서울)	45.06
-9	거제시	8.62	장흥군	27.84	양천구	45.03
-8	이천시	7.83	단양군	25.13	서초구	43.79
-7	파주시	7.54	신안군	22.46	은평구	42.68
-6	평택시	6.91	산청군	14.88	마포구	40.65
-5	하남시	6.67	의령군	14.78	연수구	39.72
-4	진주시	5.81	고성군	10.16	남구(울산)	36.23
-3	김해시	4.21	창녕군	9.95	노원구	34.80
-2	양산시	3.95	거창군	9.11	영등포구	27.53
-1	화성시	2.44	남해군	6.69	동작구	25.17
평균	54.68		51.35		66.69	
표준편차	0.27		0.17		0.17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6. 소결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2000년대 고령화·저출산과 같은 복지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급격한 복지 재정의 필요성은 향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 재정 관리가 주요 사안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환경이 모든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만 이들의 대응능력은 다르다. 대응능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재정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대응 능력의 차이는 지역 간의 격차로 그리고 공간적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념인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등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은 향후 소멸해가는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역 재정 지표는 지역의 격차나 불평등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지역 재정지표를 통해 측정된 결과는 기초자료로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행정적 정치적 역할로도 요긴하다. 상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복지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재정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복지 재정과 관련된 지역 재정 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정비를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의 복지 욕구에 합리적인 대응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지방 복지 재정지표를 살펴보았다. 지표는 사회복지 예산, 1인당 사회복지비, 복지재정자율성, 복지재정압박도, 복지재정부담도였다.

사회복지 예산은 절대적인 총액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된다. 비중은 액수를 표준화하여 비교를 용의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변화량을 통

해 지자체 간의 상대적 노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정방식이 단순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의 총량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이 작은 곳에서는 자동적으로 값이 커지며, 사회복지 예산에 경직적 예산으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총량만 가지고 복지노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함영진, 2013).

1인당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1인당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예산을 해당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지역 간에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면, 1인당 사회복지비는 실질 주민에게 돌아가는 절대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지표는 단일 지표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예산 지표와 함께 사용하여 분석 결과의 정밀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도 이후에는 1인당 사회복지비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도 지표는 기존의 빈곤지수를 차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변이계수(CV)와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선호하는 지수는 변이계수이다. 그 이유는 산정방식이 단순하고 다른 지표와 비교해도 결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복지재정의 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자주도 또는 자립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위기관인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일 경우 광역시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지표는 사회복지예산과 1인당 사회복지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자율적인 의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측정은 자체 복지사업비를 사회복지 예산 총액으로 나누어 순수한 복지사업의 의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지표는 다른 사업에 확대에 따른 복지재정의 부담이나 취약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복지재정압박도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복지재정압박도의 논리는 지방재정은 세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 사회복지에 지출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재정압박도는 사회복지비 비중과 사회복지비 증가율을 함께 사용하여 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대 및 높은 지출 증가율로 인해 지자체가 그 동안 수행해 오던 타 분야 재정기능의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하능식, 구찬동, 2012). 복지재정압박도는 하능식, 구찬동(2012)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 지표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구성된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의 부담률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률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한재명, 신우진, 2017).

복지재정 부담도는 복지재정압박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표로 한재명, 김성수(2016), 한재명, 신우진(2017)에 의해 개발되었다. 복지재정압박도가 사회복지 총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이 지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자체 복지사업비를 기준으로 구성된 지표이다. 사회복지비 총액 중에서 국시비와 매칭비율에 의한 자치구의 부담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 복지사업의 비율로 측정한다. 이 지표를 통해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자체 복지 사무나 기타 다른 정책 사업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것 또한 파악이 가능하다.

〈표 4-36〉 복지재정지표의 특징 비교

	사회복지예산	1인당 사회복지비	복지재정 자율성	복지재정 압박도	복지재정 부담도
목적	복지노력	복지수준	복지 자립도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취약성	국고사업 따른 부담도
원리	지방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연도별 변화량	사회복지예산 을 해당지역 인구수로 나눈 값	자체복지 사업비를 사회복지예산 총액으로 나누어 순수한 복지사업의지 를 측정	사회복지비의 비중과 사회복지비의 증가율(사회 복지비 비중의 차)을 결합하여 표준화한 후 복지 압박도 도출	사회복지비 총액 중에서 국시비와 매칭비율에 의한 자치구의 부담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 복지사업의 비율
변수	사회복지예산	1인당 사회복지비, 인구수	복지 고유사업 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사회복지예산 증감율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자체 복지 사업비
단위	비중, 변화량	원, 변이계수(CV)	비중	비중, 변화량	비중, 변화량

자료: 저자 작성

복지재정 지표 간의 상이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광역시를 기준으로 지표별로 점수별 순위를 매겨 보았다. 분석 결과 지표별로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사회복지예산, 1인당 사회복지비, 복지재정자율성, 복지재정압박도, 복지재정부담도 사이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지표는 없었다. 지표의 종류별로 지역 간의 값이 상이하다는 것을 〈표 4-37〉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부산광역시 경우 1인당 복지비 순위는 8위로 중간 수준이며 복지재정자율성 순위는 13위로 다소 낮은 편이다. 반면 복지재정압박도는 2위로 상위권에 있으며 복지재정부담도 순위는 6위로 중간에서 약간 높은 편이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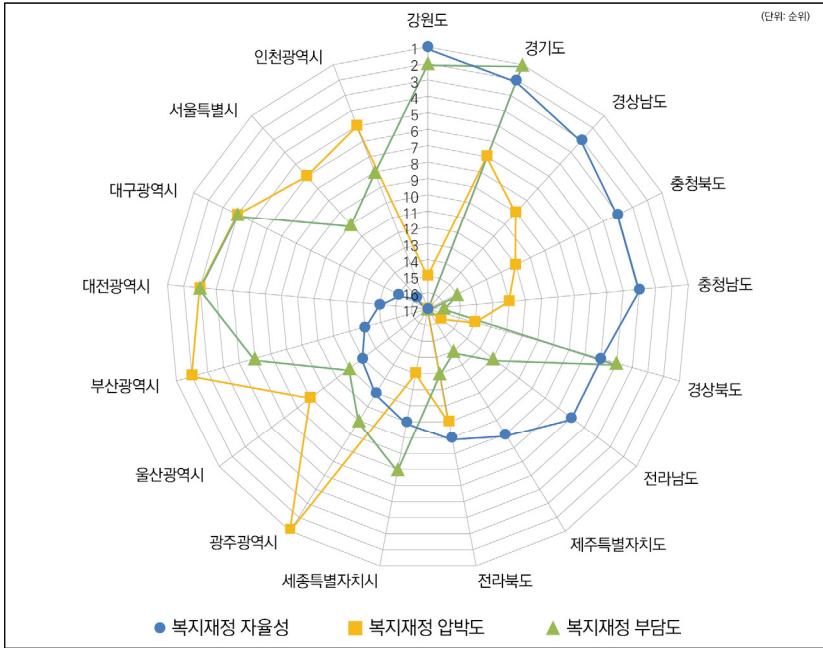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인당 사회복지비는 15위로 낮은 편이며, 복지재정자율성 순위는 8위로 중간 수준이다. 그리고 복지재정압박도는 17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복지재정부담도는 14위로 낮은 편이다. 이는 각 지표들이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변수의 종류와 산정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7〉 광역시 지방복지재정 지수에 따른 비교

행정구역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순위	1인당 사회복지비 순위	복지재정 자율성 순위	복지재정 압박도 순위	복지재정 부담도 순위
서울특별시	6	13	16	6	10
부산광역시	1	8	13	2	6
대구광역시	4	11	15	4	4
인천광역시	5	12	17	5	8
광주광역시	2	7	11	1	9
대전광역시	3	10	14	3	3
울산광역시	7	14	12	8	11
세종특별자치시	12	17	10	13	7
경기도	8	16	2	7	1
강원도	14	2	1	15	2
충청북도	10	5	4	11	15
충청남도	13	6	5	12	16
전라북도	11	3	9	10	13
전라남도	16	1	7	16	12
경상북도	15	4	6	14	5
경상남도	9	9	3	9	17
제주특별자치도	17	15	8	17	14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에서 2020.10.16. 인출) 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4-12] 광역시 지방복지재정 지수에 따른 비교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2020.10.16. 인출) 자료를 재구성함

3절의 주요 목표는 지역 간의 격차나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재정 지표를 탐색해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초기 단계로 아직 우리나라에 지역재정지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을 선별하고 탐색하는 등의 측면에서 체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술통계나 동향과 같은 간단한 분석만 수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시한 지표가 타당도와 신뢰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다. 추후 좀 더 세밀한 연구 설계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가용한 자료인 복지재정DB와 e나라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것 또한 지표 탐색 연구의 한계이다. 더욱이 지자체에서는 복지 행정 비용이나 사회서

비스 비용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지자체와 논의하여 표준적이고 세부적인 예산 항목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지역 간의 격차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상기했듯이 지표 종류 별로 지역 간의 격차나 불평등도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지표 사용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선별적 지표사용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각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편협한 해석을 막고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이 연구는 해석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지표의 이론적 근거제시가 미약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론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세대 간 형평성 지표에 관한 탐색

오늘날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이다. 사회정의는 다양한 개념과 상대적인 논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가 현재 공적 담론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바로 세대 간의 갈등 때문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인간 수명 연장, 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노인계층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동계층의 감소가 이어졌다. 이는 향후 미래세대가 현재 세대를 위해 부담해야할 몫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복지 재정측면에서 그렇다. 한국을 기준으로 2020년대부터 본격적인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압축적인 고령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에 이들의 은퇴는 고령화의 진행속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더욱이 코로다 19로 인해 출생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공적 조치가 없는 한 인구학적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비용을 가중 시키면서 재정적자와 부채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 부과방식(pay as you go)을 성격으로 인구학적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현재 저부담 고급여 방식의 사회보장체제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단언할 수가 없다.

인구학적 변화는 곧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그리고 재정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핵심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즉 오늘날 사회정의는 분배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서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부담을 하느냐는 곧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정의는 평등보다는 공평이나 형평의 개념에 가까우며 여기서 분배의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서는 이런 복지 재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 또는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 간의 회계,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세대 간 불평등, 지방재정 장래세대 부담이 있다. 이들 지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비교하여 세대 간 불평등이나 정책의 지속성, 재정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가.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GA)

세대 간 회계는 세대 간 형평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재정지표이다. 현재의 재정정책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1) 개념

GA는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개인이 남은여생 동안(잔여기간) 지출해야 하는 순 조세에 대한 현재가치이다(송지은, 2017; 안우진, 전영준, 2018). 여기서 순조세는 특정 세대의 개인이 납부해야할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에서 공적이전 수입을 뺀 가치(순조세 부담은 ‘조세+사회보험료-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를 의미한다(송지은, 2017)). 여기서 세대 간 계정(generational account)과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에 대한 개념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계정은 세대별 순부담(부담-혜택)의 현재가치를 의미(송지은, 2017)한다. 즉 연령집단 전체 또는 그 대표 개인이 기준년도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기여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의 부담에서 사회보장, 교육 등의 혜택을 차감한 순부담의 현재가치를 세대 계정이라고 한다. 반면 세대 간 회계는 세대계정의 집합 또는 표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최기홍, 2013).

GA의 전제는 Zero-Sum 게임에 기반한다. 즉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지출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정부 예산 제약 관점(government's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산 제약을 단순히 정의하면 정부의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관점에서 이전수입의 증가 혹은 조세의 감소에 따른 한 세대 회계의 감소는 다른 세대 회계의 증가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즉 현재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과 현재와 미래의 정부 조세수입에서 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이전지출을 차감한 정부의 순조세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의 모든 미래 지출수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이기영, 2012).

따라서 세대 간 회계의 목적은 장기간에 걸친 재정전망에 기초하여 정

부의 재정정책이 각 세대들의 순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송지은, 2017).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최기홍, 2013). GA는 재정 부담에 대한 세대 간의 부담을 가시화시켜서 공공재정의 장기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Arévalo, Berti, Caretta, & Eckefeldt, 2019). 또한 미래지향적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예산 균형을 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GA는 미래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공공 계정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하였다(Pinheiro, 2021). GA는 현재 재정정책이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 부담과 공적 자금 지출의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워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A는 특정 년도에 같은 세대의 잔여생애에 대한 정보의 세금총액의 현재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지 등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이성규, 2021).

한편 GA는 부채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장기전망치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시점간 예산 격차는 유한기간 내에 부채의 완전 청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지표이며 이 방식은 현재소비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이성규, 2021).

2) 선행연구

GA는 1991년 미국에서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가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재정지표가 장기간의 재정을 예측하지 못한

다는 비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은 재정 적자(deficit)와 부채(debt)를 단위로 계산했는데 이 단위는 현재세대만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 기간의 단기성(short-term focused)으로 인해 정확한 정부의 계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가 임의적인 등 공공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Pinheiro, 2021). 특히 유럽의 사회보장체계가 부과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간에 걸친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하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Boll, 1996).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1991)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GA를 개발하여 미래 정부의 지출 책임과 이러한 책임에 지불해야할 수단을 분리하여 재정의 격차를 분석하였고 미래세대가 직면할 생애 순세금부담의 극적인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1991)에 의해 개발된 세대 회계(GA)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여러 나라들이 미래세대를 다루는지 평가하는데 표준도구로 인정을 받고 있다(Wikipedia, 2021). GA는 현재 유럽연합이나 미국, IMF, OECD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GA는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암묵적 연금 부채를 추정하는데 적용되며 소득과 삶의 조건에 대한 유럽조사 통계(e European Survey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ILC)에도 사용가능하다(Arévalo, Berti, Caretta, & Eckefeldt, 2019).

GA는 현재와 미래 정부 지출이 현재와 미래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이나 정부의 순 자산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여 정부의 장기간 예산적 제약(Government's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에 기초하고 있다(Pinheiro, 2021). 이러한 제약은 모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세대 계정과 기존 정부 순 부의 합계가 현재 및 미래 정부 소비의 현재 가치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요구한다(Auerbach, Gokhale, &

Kotlikoff, 1991). 어떻게 재정이 충당되느냐에 따라 공공정책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세대 간 분배를 수반하게 된다. 세대 회계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미래 변화를 포함하면서 세대 간(세대 내) 및 세대 간(세대 간) 분배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정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을 통합할 수 있다(Pinheiro, 2021).

전영준(2012)은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당시의 정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으로 지칭되는 복지지출 증대정책의 효과도 시도하였다. 전영준(2021)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 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났지만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최기홍(2013)이 있다. 최기홍(2013)은 국민연금을 1990년 생을 현재 세대의 기준연령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는 -17. 백만 원 여자는 -34.8 백만 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회계가 Zero Sum원칙을 전제로 했을 때 국민연금제도가 세대 간 공평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시사하고 있다. 최기홍(2015)은 국민연금을 통해 세대 간의 회계를 분석하였다. 현행의 연금 보험료와 내부 수익률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 형태는 향후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 제도에 의한 내부수익률은 연 6.3%로서 2013 재정계산의 당시 이자율 4.8%의 1.1배로 가정된 기금 투자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여 현제도가 저부담·고급여임을 확인시켜주고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15% 인상안에서는 내부수익률이 4.8% 보다 낮아져서 저부담·고급여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연금보험료 9%로 했을 경우 지속가능한 격차라 288.7%로 높은 편이다.

송지은(2017)의 경우 통합적 방법을 사용하여 2013년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세대 간 회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는 재정 건전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세대인 2030년 이후 출생세대는 보험요율을 상향조종해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석의 기준연도인 2013년에서 10년 뒤인 2023년과 그 이후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현행 제도 요율 대비하여 74.8%만큼 증가시켜야 장기재정균형이 회복된다. 그 조정 시기를 2033년으로 미룬다면 조정 규모는 84.3%에 이르게 된다. 즉 보험료율의 조정 시기를 연기할수록 조정해야할 폭이 증가하게 되며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순 재정 부담은 출산율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부담률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의 상승은 증가시키고 있다.

Pinheiro(2021)는 2010년을 기준 년도로 전방주의적 접근방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정도를 추정하였다. 2010년 전에 태어난 세대를 현재세대로 가정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미래세대로 규정하였다. 포르투갈의 장기적인 공공재정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1995년에 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 48.7%의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며 2010년에는 372.4%로 급증하였다. 즉 현재의 재정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재정 부담을 직면하게 될 것을 시사하였다.

이기영(2012)은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둘 다 분석한 결과 공적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전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포괄한 총 이전은 소폭이나마 미래세대의 생애 순이전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적 재정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된다면 미래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제도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즉 세대 간 형평성이 불합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어렵다. 그러나 사적 이전이나 정책의 성격, 산정방식에 따라 분석 결과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방법론

세대 간 회계는 특정세대의 대표적 개인이 잔여 생애동안 예상되는 순조세 지불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순조세(net taxes)는 특정세대의 개인이 납부할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와 정부로부터 이전받을 이전수입(transfers)의 차이를 의미하며, 세대란 동일한 연령과 성으로 구성된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대상은 세대란 동일한 성이나 유사한 연령집단으로 이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분석 대상은 개별 연령집단들로 세대는 회계의 기준연도에 따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로 구분한다(최기홍, 2013). 주요 사용변수는 장기간 예산 격차와 세대 간 재정수지 격차이다.

〈표 4-38〉 세대 간 회계 산출식

$D - \sum_{s=t}^T PB_s \times (1+r)^{-s+t}$	PB_s	s 년의 재정수지 기초
	D	누적된 채무
	r	이자율

자료: 최기홍. (2013).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와 세대 간 형평성의 측정. 재정학연구, 6(3), 1-29.
을 참고로 저자가 작성.

산출방법은 전방주의적 접근, 후방주의적 접근, 통합주의적 접근 방식이 있다.

① 전방주의적 접근

미래의 재정 균형을 판단. 정부로부터 받을 이전 수입을 개인이 납부할 조세 금액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차감한 금액의 현재 가치. 현행 재정정책이 미래재정수입과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로 나타날 현재 세대와 미래 재정부담을 선출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송지은, 2017).

전방주의형 세대 간회계(FLGA)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모든 지출(수입)을 통해 얻게 되는 초과혜택(초과부담)은 가까운 미래시점에누군가의 초과부담(초과혜택)으로 귀결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장기간 예산제약 관점에서 조세부담의 감소 또는 이전지출의 증가에 따른 특정세대의 순조세부담의 감소는 다른 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간 예산제약식은 기준연도 정부의 순자산(Net Wealth)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로부터 들어오는 순조세수입의 현재가치의 합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의 미래 지출수준의 현재가치의 합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안우진, 전영준, 2018). 각 세대의 (송지은, 2017). 개인이 부담할 지출과 수급할 수입의 차이의 형평성 문제를 파악하는데 한계이다.

〈표 4-39〉 세대 간 회계 전방주의적 접근의 산출식

$\sum_{s=0}^D N_{t,t-s} P_{t,t-s} + \sum_{s=1}^{\infty} N_{t,t+s} P_{t+s,t+s} + W_t$ $= \sum_{s=t}^{\infty} G_s \prod_{j=t+1}^s \frac{1}{(1+r_j)}$	$N_{t,t-s}$ k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정부에 대해 잔존생애 동안 부담하는 액수를 t년도까지 할인한 현재가치
	G_s s년도 정부소비
	r_j 세전 수익률로 t년도까지 할인

자료: 안우진, 전영준. (2018). 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를 이용한 정부재정 유지가능성 및 세대간 불균형 평가.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32. p.6

② 후방주의적 접근

과거 납부한 조세부담의 방식을 평가하는 방식. 특정 시점에 생존하는 각 세대의 개인이 과거에 부담한 순조세를 기준연도 시점에서 평가한 것이다(송지은, 2017).

〈표 4-40〉 세대 간 회계 후방주의적 접근의 산출식

$$N^{B_{t,k}} = \sum_{s=k}^{t-1} T_{s,k} P_{s,k} \prod_{j=s}^t (1+r_j)$$

자료: 송지은. (2017).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9

③ 통합 세대 간 회계(full lifetime generational accounting, FLGA) 방식

전방주의적 방식과 후방주의적 접근을 통합하여 과거의 순 조세 부담을 포함한 전생애에 걸친 순조세 부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송지은, 2017). GA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망, 세금, 이전, 정부 지출의 전망, 정부 재산의 초기 가치, 성장률과 할인율(discount rate)이 요구된다.

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세대 간 이동성 지표: Th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GE)

1) 개념

탄력성이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변수가 변하면 다른 변수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 그 반응성을 측정해주는 것으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다. 세대 간 탄력성 지표는 부모소득의 변화에 따른 자녀소득의 반응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GE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지표는 ‘사회적 지위가 세대 간 대물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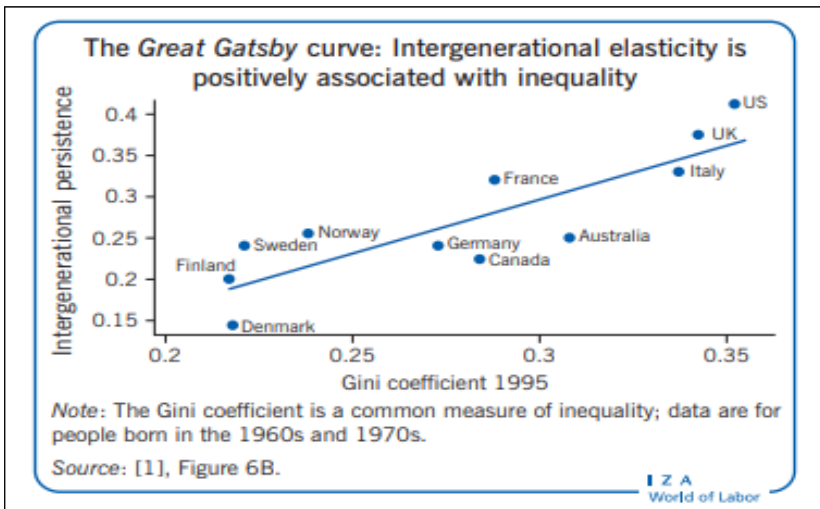
IGE는 기회의 불평등이나 세대 간 불평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현 세대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상승은 미래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IGE는 세대 간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리고 경제적 대물림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고착화될 수 있고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최기림, 2014).

IGE의 논리적 근거는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위대한 게츠비곡선(The Great Gatsby Curve)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적자본에 따르면 고소득 부모는 자녀의 인적 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역으로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에게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소득의 큰 차이는 자녀의 사회적 이동성을 감소시키고, 인적 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는 빈부 자녀 사이의 결과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증가시킨다(Justman, Krush, &

Millo, 2017).

위대한 게츠비는 미국 사회의 사회적 계층화를 묘사했던 피츠제럴드의 소설(F. Scott Fitzgerald)이다. 미국 정부 고문이자 경제학자인 크루거(Alan Krueger)는 소득 불평등이 높은 사회에서 세대 간 지속성(intergenerational persistence)도 높다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 주기 위해 위대한게츠비 곡선이라고 칭하고 도표를 제시하였다(Blanden. 2015). 위대한 게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은 특정 세대의 부(wealth)의 정도와 그 자녀세대의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위대한 게츠비 곡선은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계층 향상 간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도표로 IGE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림 4-13] 위대한 게츠비 곡선



자료: Blanden. (2015).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Measures of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can be indicative of equality of opportunity, but the relationship is not clear cut, IZA World of Labor.

2) 선행연구

IGE는 1980년대부터 경제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평균에 대한 회귀" 비율을 포착하는데 활용하는 요약 통계량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평균 로그 소득 수준으로 상승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세대 간 탄력성(IGE)은 임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대 간 경제 이동성 연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IGE는 국가내, 지역 간, 국가간, 그리고 성별간 등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zumder, 2015).

국내 연구는 2010년 년대 초부터 세대 간 이동을 설명하는데 IGE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2013)는 갈등을 유발하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에 대한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변동성이 부모세대의 세대 간 자원배분에 대한 태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탄력성은 0.2로 미국보다 낮게 나와 세대 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기림(2014)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녀간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탄력성이 0.172로 나타나면서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최기림(2014)은 부모의 경제력 이외에 소득 탄력성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부자간과 부녀간의 세대 간 이동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분석 결과 부녀간의 세대이동성은 선별적 결혼이 소득 탄력성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는 적은 표본수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넓은 연령격차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현익(2017)은 기존의 연구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도시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고 제주도나 농어촌을 포함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탄력성이 0.169로 나왔다. 그러나 하향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하에 4내 년도의 연간 실질 소득을 평균하여 추정한 결과 0.233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수행되고 있다. Justman, Krush, and Millo(2017)은 미국의 코호트 집단을 19개로 분류하고 IGE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은 10개의 코호트 집단은 IGE가 0.6으로 떨어진 적이 없지만, 그 나머지 연령이 적은 집단은 IGE가 0.6 이상이였다. 그리고 매년 IGE가 0.01씩 증가하면서 이동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Palomino, Marrero, and Rodríguez(2018)는 미국의 IGE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20년 동안 IGE의 감소 추세를 보인 다음 2000년대에 증가하였다. 특히 가장 소득계층이 낮은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2002년은 모든 세대에 전환점이 되었지만 특히 빈민계층에게는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이동성이 낮아졌다. 반면 중상층과 고소득 계층은 30년 동안 IGE의 안정적인 값을 유지했다.

IGE는 지역 간 국가간의 비교에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 불평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 경우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orak, Lindquist, & Mazumder, 2014). 미국에서 IGE를 추정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약 0.2였다. 이는 개인 소득 간의 차이의 20%만이 부모 소득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Solon(1992)과 Zimmerman(1992)은 세대 간 의존성(또는 비이동성)이 훨씬 더 큰 IGE 추정치를 약 0.4였다. 이후 일시적 충격과 라이프사이클 편향을 고려한 Mazumder(2015)연구에서 약 0.5의 추정값이 나왔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과 전 세계의 IGE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계층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alomino, Marrero, & Rodríguez, 2018). Connolly, Haeck and Lapierre(2021)은 캐나다의 지역 간 세대내 이동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Connolly, Haeck, and Lapierre(2021)는 부모의 소득과 아동의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 지역 내에서 계층 이동성은 더욱 악화되었고 지역 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의 매니토바지역은 일반적으로 10개 주 중에서 세대 간 이동성이 가장 낮으며, 기회의 균등의 악화가 최악인 곳은 서스캐처원 주이다. 특히 이런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계층이동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속 소득 하위 계층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중산층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과 지역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2013)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임금 소득탄력성의 낮은 추정치들은 소득이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온 세대 내 소득탄력성을 측정오차보정방식의 신뢰지수로 활용해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재추정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미국 등에 비해 낮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소득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이동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자본이나 위대한 게츠비 곡선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은 성별, 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과 분석자료의 특성, 산술 방식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분석에 주의가 요한다고 볼 수 있다.

3) 방법론

세대 간 탄력성은 세대 간 이동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IGE는 자녀소득의 자연로그가 부모 소득의 자연로그로 설명되는 선형모델의 추정방식이다. 즉 이 계수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사이의 노년기 소득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포착하는 회귀 모델을 통해 얻은 계수이다. IGE의 값이 높을수록, 두 세대의 소득 사이의 연관성이 커지고 따라서 세대 간 이동성이 낮아진다.

IGE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두 변수가 필요하다.

〈표 4-41〉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지표 산출식

$y_{1i}=a + \beta Y_{0i} + \epsilon_i$	y_{1i} =i 가구의 자녀 로그소득
	Y_{0i} = I 가구 부모 로그 소득
	β = 소득 탄력성
	ϵ_i = 확률 오차
소득 탄력성 지표 개요	- 부모의 항상 소득이 1%높을 때 자녀의 항상 소득이 몇 퍼센트 높은지 측정하는 지표 - 경제적 대물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 소득 탄력성지수는 0~1 사이임. 0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로,, 1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한 사회로 해석할 수 있음 -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상대적인 소득계층의 이동, 즉 연계성을 의미함

자료: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 (2013). 세대 내 소득탄력성을 활용한 우리나라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추정과 국제비교. 국제통상연구, 18(3), 65-84. 등의 자료를 참고로 저자가 작성.

다. 세대 간 불평등도(Generational Imbalance: GI)

1) 개념

GI는 현행 제도 하에 세대 간 불평등을 탐색하는 재정지표이다. GI(Generational Imbalance)는 Gokhale, Smetters, and Smetters (2003)에서 개발되었다. 이 지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재정불균형(FI)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보완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GI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한계에서 개발되고 발전되었다. 미국에서 고령화로 인해 은퇴자들의 증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 항목이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큰 비중을 두에 따라 기존에 공공재 예산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국방이나 경제정책과 같은 기존이 제도는 부채와 적자를 단위로 분석하여 단기 대책이 가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나 의료서비스는 부과방식(pay as you go)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기급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부채와 적자를 기준으로 한 단기 조치는 재정적자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특히 복지 부분에 75년간 과소평가되어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이 어렵게 되었다(Gokhale, Smetters, & Smetters, 2003).

GI는 현행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의 조세규모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GI 측정은 세금과 복리후생 예측에 따라 계산되며 평생 동안 현재 정책의 지속을 가정한다. 당대의 GI는 과거 세대와 현 세대가 현재 가치에서 혜택을 초과해 세금 납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현 재정 정책에 따른 암묵적 부채의 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암묵적 부채의 양은 현재의 재정 정책을 바꿈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Gokhale & Smetters, 2006).

따라서 GI는 재정 정책이 국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만,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완적인 측정도 제공한다. GI의 높은 가치에 반영되어 비현실적으로 큰 세금 인상이나 복리후생 감면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암묵적 부채를 수반하는 정책을 평가하는데도 가능하다(Gokhale & Smetters, 2006). 그리고 GI의 값은 현 정책에서 현재세대가 과거 또는 미래 세대의 재워 마련에 대한 기여금을 초과하여 정부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는 부의 양을 탐색하는 것도 가능하다(Gokhale, 2009).

한국은 전영준(2012, 2013, 2019)에 의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행제도의 평가보다는 세대 간 형평성이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전영준이 개발한 GI는 Gokhale and Smetters(2006) 과 비교해보면 논리는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전영준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순조세 부담 비율을 통해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있다. 국내 GI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기준연도를 정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로 분류하고, 현재 세대의 전 생애기간의 순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의 차이를 탐색하여 불평등을 추정하는 것이다.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은 현행 정책에서 산출하지만 미래세대의 경우 정부 수입과 지출간의 불균형을 미래세대가 부담 져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현 정책 속에서 현재세대의 조세부담과 지속성을 미래세대가 모두 부담진다는 것이다. 현행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현재 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초과하면 어느 시점에서 조세부담에 대한 상향 조성이 있어야 한다(전영준, 2013). Gokhale and Smetters(2006)는 현재대를 중심으로 과거세대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GI는 재정불균형(FI)에 대한 과거 및 살아있는 세대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GI를 통해 이는 현재 세대의 수명 동안 유지된다면 현재의 재정

정책이 가져올 자원의 세대 간 재분배를 분석하기 위함이다(Gokhale, 2009). 즉 전영준이 제시한 GI가 더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Gokhale and Smetters(2006)의 GI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선행연구

국내 GI는 전영준(2012, 2013, 2019)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복지 지출과 관련하여 GI를 활용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회계의 보완 지표로서 이용하고 있다. 전영준(2013)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복지 재정자료를 토대로 세대 간 불평등도의 측정한 결과 2012년도에는 157%, 2013년도에는 165%로서 매우 큰 것으로 1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장기 재정균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조세+사회보험료-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이 165%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영준, 2012).

전영준(2019)에 따르면 복지재정에 교육이나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산정한 결과 기존의 GI보다 더 높게 나왔다.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결과들은 현재의 복지 제도가 지속된다면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할 것을 시사해 주었다. 설령 사회보험료율과 세율을 상향 조종한다하더라도 현재의 체제에서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세금 액수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42〉 우리나라 세대 간 불평등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회계 1기준	226.6	250.8	250.3	230.8	225.5	226.4	267.2
회계 2기준	369.9	494.3	485.5	446.7	467.1	494.1	648.7

주: 회계I, 회계II 값 차이 이유는 회계II에는 저연령층에 혜택을 주는 '교육서비스'가 반영돼 기준연도 출생세대, 저연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낮게 평가돼 기준연도 출생세대 회계와 미래세대 회계의 차이 유발하기 때문임(김유리, 2021)

자료: 전영준. (2019).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한국경제연구원. p.29

3) 방법론

GI는 미래세대의 생애순조세 부담에서 현재세대의 생애순조세부담의 차이를 현재세대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것이다. GI가 상승하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도가 높고 역으로 하강하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이 약화되어 세대 간의 불평등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GI가 0보다 크면 미래세대의 생애순재정부담이 현재세대보다 큰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행의 제도는 유지 가능하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3〉 세대 간 불평등도 지표 산출식

세대 간 불평등도	$GI = \frac{\text{미래세대의 생애순조세부담} - \text{기준연도 출생세대 생애순조세부담}}{\text{기준연도 출생세대의 생애순조세부담}} \times 100$
항목	○ 사회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조세: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소비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기타조세, 기타조세 방위세

자료: 전영준. (2019).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라. 기타: 지방재정 장래세대부담 비율

지방재정 장래세대부담은 채무적 관점에서 측정하는 재정건전성 지표이다. 현재 형성된 자본과 미래세대의 채무 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이다(한현식, 2014).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재정 위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2010년도에 도입했다. 지방정부는 매해 장래세대부담을 측정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윤태섭, 서정섭, 2018). 지방재정 장래세대 부담비율의 지표 값이 높을수록 부채이 비율도 높다. 이 지표는 재원조달 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기능 탐색도 가능하다(박정수, 2011).

그러나 이 지표가 복지 재정을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이나 불평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향후 지방재정에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바 지역 복지 계층을 토대로 한 측정방식이 개발되어 지방복지 재정에 대한 장래세대 부담이 지역 간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 장래세대 비율은 매해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학문적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박정수(2011)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의 최대값은 17.3이고 최소값은 0.08이었으며 평균과 표준오차는 2.39였다. 전국 자치단체의 장래세대부담비율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현식(2014)은 “FY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2011~2012년)”를 통해 492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장래세대부담율은 평균 2.26로서 채무잔액이 장래세대 부담에는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타나난 것이다

〈표 4-44〉 지방재정 장래세대부담 비율 산출식

장래세대 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자산×100
항목	*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부채총계: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총부채: 유동부채(단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지방치 등), 기타비유동부채

자료: 한현식,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채무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로 저자가 작성.

마. 소결

오늘날 고령화와 저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상황은 전통적인 복지 모델에 도전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노동연령계층의 축소로 생산성의 저하가 발생하면서 복지 재정의 악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토대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일부 연구들은 이런 위기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중요하다고 본다. 즉 복지 정책이나 재정이 세대 간 불평등을 유발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지, 지역 간의 차이가 어떤지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의 이슈를 분석해 줄 세대 간 형평성 지표를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를 통해 세대 간 회계, 세대가 탄력성, 세대 간 불평등도, 장래세대부담도를 탐색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현재 복재 재정의 세대 간 불평등도나 이동성, 재정건전성, 정책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지표들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세대 간 회계와 세대 간 탄력성이었다. 세대 간 회계는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개인이 남은 여생동안 지출해야 하는 순조세에 대한 현재가치로 정의되는데 미래세대와 비교를 통해 분석된다. 여기의 관점은 제로섬 게임(Zero-sum)으로 정부가 수행하

는 모든 종류의 지출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불되어야 한다. 장기간 정부 예산 제약 관점(government's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은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책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 지표는 세대 간 형평성이나 불평등, 재정건전성, 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자료 종류나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세대 간 탄력성은 부모소득의 변화에 따른 자녀소득의 반응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세대 간 대물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는 지표이다. 논리적 근거는 사회자본과 위대한게츠비 곡선이다. 사회자본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인적 자본 투자를 증가시켜 성인이 된 후 부모와 유사한 계층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위대한게츠비곡선은 한 세대의 부(wealth)의 정도와 그 자녀세대의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국가간 지역 간 비교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외에 성별, 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과 분석자료의 특성, 산술 방식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세대 간 불평등도는 현재의 제도가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지 탐색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사회복지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유사한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는 반성하에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험이나 의료서비스는 부과방식(pay as you go)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기급여를 의무화하데 이런 특성을 간과한 기존의 정책 평가는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이 어렵게 만들었다. 세대 간 불평등도는 현행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의 조세규모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세대 간 불평등도의 측정은 세금과 복리후생 예측에 따라 계산되며 평생 동안 현재 정책의 지속을 가정한다. 세대 간 불평등도는 세대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정책 평가 등 사용 용도가 높다. 그러나 이 지표는 복지 재정 격차나 세대 간 계정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보완지표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장래세대 부담도는 지방재정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도입되었다. 이 지표는 현재 형성된 자본과 미래세대의 채무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표는 재정의 지출과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지표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지표는 지방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복지재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복지재정이나 통계 자료가 구축이 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 간 형평성 지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 간 복지 재정 패널 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세대 간 회계나 세대 간 탄력성, 세대 간 불평등도는 패널자료를 필요로 한다. 패널자료는 세대 간 분석을 하는데 일정 기간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 역사가 길지 않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동 패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행해온 패널자료이지만 농어촌 등과 같은 전 지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적인 자료로는 복지 패널이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한계이다. 지방재정 장래세대부담 정도는 자료의 부족으로 복지 부분에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방법론이나 이론이 우수해도 실증 분석할 자료가 적절하지 못하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론적 구축의 필요성이다. 국내에서 이 지표들은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이론보다는 방법론이 먼저 개발되었다. 그래서 방법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세대 간의 형평성에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탄탄한 지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양질의 결과 해석이 가능해진다.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 사회적 담론으로 구성되고 있는바 국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향후 잠재적 지표 개발은 물론 정책 형성, 집행, 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표 4-45〉 세대 간 형평성 지표 비교

		세대 간 회계	세대 간 탄력성	세대 간 불평등	장래세대 부담도
의미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개인이 남은여생 동안(잔여기간) 지출해야 하는 순 조세에 대한 현재가치	부모소득의 변화에 따른 자녀소득의 반응 정도	세대 간 불평등을 탐색	현재 형성된 자본과 미래세대의 채무 부담을 비교
논리적 근거		Zero-sum 장기간 정부 예산 제약 관점	사회자본론 위대한 게츠비 곡선	복지정책은 장기적 조치(예산 등)을 전제로 함	채무적 관점
목적	세대 간 형평성 (불평등)	○	○	○	×
	세대 간 이동성	×	○	×	×
	재정 건전성	○	×	○	○
	정책 평가	○	×	○	×
단점		산출방식이 정립되지 않아 연구자의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경제적 요인 이외에 성별, 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과 분석자료의 특성, 산출 방식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단순하여 보완지표로 사용	복지재정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독일의 사회예산 활용 사례

1. 독일의 사회예산과 사회보고서

독일 연방 노동사회성(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은 사회지출의 증감추이와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은 사회예산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회예산의 경우 독일의 사회급여(Sozialleistungen) 사용분야를 기능별(Leistungen nach Funktion), 제도별(Leistung nach Institution)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민계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국제비교 등과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 사회예산은 크게 10가지 기능별로 분류된다.: 1) 질병(Krankheit), 2) 근로무능력(Invalidität), 3) 노령(Alter), 4) 유족(Hinterbliebene), 5) 아동(Kinder), 6) 부부(Ehegatten), 7) 모성(Mutterschaft), 8) 실업(Arbeitslosigkeit), 9) 주거(Wohnen), 10) 기타 생계부조(allgemeine Lebenshilfe)이다. 여기서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에 따라 1) 현금급여(Einkommensleistung), 2) 현물급여(Sachleistungen), 3) 행정지출(Verwaltungsausgaben), 4) 기타지출(sonstige Ausgabe)로 다시 구분되는데, 2019년 사회예산에서 이에 따른 구분과 급여지출액은 <표 4-46>과 같다.

<표 4-46>에서 사회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질병(약 3천5백4십억 유로), 노령(약 3천2백3십억 유로)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급여별로 나누면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급여(Einkommensleistungen)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령(Alter)이 약 3천2백2십억 유로, 질병이 약 7백4억 유로 순인

반면, 현물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질병이 약 2천8백3십억 유로, 아동이 약 4백7십억 유로 순이 된다. 이는 독일 사회 역시도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추이와 이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노령 및 질병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수치로,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수요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46〉 독일 사회예산의 기능별 세부지출별 분류(2019년 추계치)

(단위: 백만 유로)

사회예산	세부 지출				
	소계	현금급여	현물급여	행정지출	기타지출
질병	354,370	70,403	283,966	-	-
근로무능력	87,241	50,680	36,561	-	-
노령	323,228	322,659	568	-	-
유족	60,022	59,808	215	-	-
아동	109,535	61,948	47,587	-	-
부부	2,929	2,929	-	-	-
모성	3,349	3,349	-	-	-
실업	31,816	29,184	2,632	-	-
주거	17,267	-	17,267	-	-
일반 생계부조	8,202	5,517	2,684	-	-
행정지출	37,835	-	-	37,835	-
기타지출	4,530	-	-	-	4,530
계	1,040,323	606,478	391,480	37,835	4,530

주: 2020년 5월 기준 2019년도 추계치임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0). Sozialbudget 2019.

독일 사회예산 내 사회보장을 제도별로 분류하면 1) 사회보험시스템, 2) 공무원 등 특별시스템, 3) 공공부문종사자 시스템, 4) 고용주시스템, 5) 손해배상시스템, 6) 부조 및 지원시스템의 6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대분류는 다시 5~8개의 중분류로 각각 나뉜다. 또한 〈표 4-46〉의 기능적 분류에서는 알 수 없었던 개별 행정지출도 제도별 분류에서는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 4-47〉과 같다.

〈표 4-47〉 독일 사회예산의 제도별 분류 및 행정지출

(단위: 백만 유로)

대분류	중분류	행정지출비	소계
1. 사회보험시스템 Sozialversicherungssysteme	11.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4,037	21,812
	12. 의료보험 Krankenversicherung	9,893	
	13. 요양보험 Pflegeversicherung	1,754	
	14. 산업재해보상보험 Unfallversicherung	1,825	
	15. 실업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4,302	
2. 공무원 등 특별시스템 Sondersysteme	21. 농업인 노령보장 Alterssicherung für Landwirte	51	4,736
	22. 생계지원 Versorgungswerke	667	
	23. 사적 노령보장 Private Altersvorsorge	-	
	24. 사적 의료보험 Private Krankenversicherung	3,814	
	25. 사적 요양보험 Private Pflegeversicherung	204	
3. 공공부문종사자 시스템 Systeme für öffentlichen Dienste	31. 연금 Pensionen	500	713
	32. 가족추가금 Familienzuschläge	40	
	33. 보조금 Beihilfen	174	
4. 고용주시스템 Arbeitgebersysteme	41. 급여의 계속지급 Entgeltfortzahlung	-	1,844
	42. 직장 노령보장 Betriebliche Altersvorsorgung	489	
	43. 추가보장 Zusatzvorsorgung	1,355	
	44. 기타 고용주 Sonstige Arbeitgeberleistungen	-	
5. 손해배상시스템 Entschädigungssysteme	51. 사회적 배상 Soziale Entschädigung	45	127
	52. 피해배상 Lastenausgleich	1	
	53. 회복 Wiedergutmachung	70	
	54. 기타 배상 Sonstige Entschädigung	11	
6. 부조 및 지원시스템 Förder- und Fürsorgesysteme	61. 아동수당 및 가족급여조정 Kindergeld und Familienleistungsausgleich	338	8,603
	62. 양육수당 / 부모수당 Erziehungsgeld / Elterngeld	26	
	63.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 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	5,768	
	64. 실업보조 / 기타 취업지원 Arbeitslosenhilfe/sonstige Arbeitsförderung	-	
	65. 직업교육 및 승진지원 Ausbildungs- und Aufstiegsförderung	106	
	66. 사회부조 Sozialhilfe	1,983	
	67. 아동 및 청소년부조 Kinder- und Jugendhilfe	303	
	68. 주거급여 Wohngeld	79	
행정지출 총액			37,835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0). Sozialbudget 2019 를 재구성함.

독일 사회예산은 제도별 분류에서 그 예산의 출처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 구분은 크게 1) 기업, 2) 연방, 3) 연방주, 4) 기초지방자치단체, 5) 사회보험, 6) 사적조직(Private Organisation), 7) 개별가구, 8)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발간되는 사회예산은 제도별 분류와 예산출처별 분류 역시 공개하고 있다.

〈표 4-48〉 독일 사회예산의 부담주체

(단위: 백만 유로)

2019년 사회예산	총액	기업	연방	연방주	기초자치 단체	사회보험	사적조직	개별가구	기타
사회예산 총액	1,099,693	305,533	226,083	98,570	107,577	40,40	12,556	345,272	62
사회보험시스템	633,751	213,008	113,875	10,304	7,670	2,632	7,937	278,263	62
공무원 등 특별시스템	65,850	6,255	5,688	152	946	30	90	52,689	-
공공부문 종사자 시스템	85,417	2,582	25,800	46,873	7,260	-	909	1,993	-
고용주시스템	119,238	83,179	2,543	7,218	8,971	1,379	3,620	12,327	-
손해배상시스템	2,582	-	2,026	525	30	-	-	0	-
부조 및 지원시스템	192,856	508	76,150	33,497	82,700	-	-	-	-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0). Sozialbudget 2019.

한편 매년 발간되는 사회예산(Sozialbudget)과 달리 사회보고서(Sozialbericht)는 독일 연방하원의원(Bundestag)의 임기인 4년 주기에 맞추어 발간되며 발간주체는 사회예산과 같은 노동사회성(BM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이다. 또한 사회보고서가 발간되는 해에 사회예산이 통합 발간되고 있다. 사회보고서(Sozialbericht) 역시 사회예산(Sozialbudget)과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다름이 없다. 하지만, 지난 발간주기인 4년 전과 대비하여 어떠한 부분이 변화하였고, 또 어떠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독일 사회예산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1)에 따르면 약 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발간되는 사회예산과는 달리, 사회보고서는 약 35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발간되며, 이 가운데 4년 차 사회예산은 크게 A, B로 나뉘어진 챕터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B챕터에 그 해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A챕터에서는 공동체와 사회정책의 조치와 계획(Maßnahmen und Vorhaben der Gesellschaft- und Sozialpolitik)이라는 주제로 총 13개의 주제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2019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의 초입부에 둠으로서 팬데믹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야별 조치에 대해 답았다는 점이다. 이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영향의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zur Bewältigung der Auswirkungen der Covid-19-Pandemie)에서 드러난다. 이후 이어지는 12개의 주제에서는 노동시장, 사회적 참여, 가족정책에서 유럽 및 국제 노동, 사회 및 건강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분야별로 지난 4년의 변화에 대해 기술한다.

사회예산을 다룬 B챕터에서는 크게 1)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예산(Das Sozialbudge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독일의 사회보장(Soziale Sicherung in Deutschland), 3) 사회급여의 재정(Finanzierung der Sozialleistungen), 4) 타 유럽과의 사회보장 비교(Soziale Sicherung im europäischen Vergleich)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항목별로 그 분류를 더욱 상세히 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 <표 4-49>와 같다.

〈표 4-49〉 사회보고서 2021의 B챕터 구성

연번	대분류	소분류
1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예산	사회예산의 구성 등 7개 하위분류
2	독일의 사회보장	사회급여와 국민경제 분야의 발전 개괄 등 34개 하위분류
3	사회급여의 재정	재정종류, 재정원천
4	타 유럽과의 사회보장 비교	목적과 과제 등 4개 하위분류
5	이민과 통합	단일분류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1). Sozialbericht 2021을 재구성함.

2. 사회예산 자료의 활용

가. 학술적 측면

독일 내 학술적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연방통계청, 연방정치교육센터, 독일 경제연구소, 베를린 사회연구센터 및 연방인구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데이터리포트(Datenreport)’ 시리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뒤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노동연구소 등이 운영하는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이다.

1) 데이터리포트 시리즈 (Datenreport)

데이터리포트 시리즈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발간하는 독일 사회전반에 대한 보고서로서,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연방인구연구원(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이 공동 편찬하고 사회경제패널(Das Sozio-oekonomischen Panel), 독일 경제연구소(DIW Berlin)의 후원으로 발간된다. 2021년 판 데이터리포트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여파를 정리한 부분을 포함, 총 1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 4장 ,경제와 공공부문(Wirtschaft und öffentlicher Sektor)’ 그리고 제 10장 ,사회보장과 은퇴로의 이전(Soziale Sicherung und Übergänge in den Ruhestand)’에 수록되어 있다. 제 4장의 경우, 2개의 중분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국민계정(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또 하나가 공공재정과 공공부문(öffentliche Finanzen und öffentlicher Dienst)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계정(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VGR)을 예로 들면, 매년도 독일 국민계정을 발행하는 주요 주무기관인 연방 통계청의 학자가 직접 전년도 대비 국민계정의 주요 구성 및 재정소요 등의 변화를 직접 설명해 주는 점이 데이터리포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그림 4-14] 데이터리포트 2021: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한 사회보고서 표지



자료: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Datenreport 2021.
(https://www.destatis.de/DE/Service/Statistik-Campus/Datenreport/Downloads/datenreport-2021.pdf?__blob=publicationFile 에서 2021.9.22.에 인출)

〈표 4-50〉 데이터리포트 2021: 독일연방공화국 사회보고서 목차

연번	테마	주 작성기관
1	인구와 인구구조	연방통계청, 연방인구연구원
2	가족, 삶의 방식, 아동	연방통계청, 사회경제패널, 연방인구연구원
3	교육	연방통계청, 사회경제패널
4	경제와 공공부문 4.1. 국민계정 4.2. 공공계정 및 공공부문	연방통계청
5	노동시장과 소득	사회경제패널, 연방통계청, 연방인구연구원
6	개별가계 - 소득과 소비	연방통계청, 사회경제패널
7	주거	연방통계청연방통계청, 사회경제패널, 연방인구연구원
8	사회구조와 사회상황	사회경제패널, 연방인구연구원
9	건강	연방통계청, 사회경제패널
10	사회보장과 은퇴로의 이전 10.1 사회보장 10.2 늘어난 연금연령 - 증가하는 연금액 10.3 은퇴연령자의 노동과 노동의사	연방통계청, 사회경제패널, 연방인구연구원
11	정치 및 공동체참여	사회경제패널, 연방통계청
12	평가와 고용	연방인구연구원, 사회경제패널
13	환경, 에너지, 이동성	연방통계청, 사회경제패널
14	코로나 판데믹의 영향	사회경제패널, 연방통계청, 연방인구연구원

주: 본 연구와 관련 챕터의 경우 볼드체 처리 및 하위 목차를 함께 표기함

자료: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Datenreport 2021 (https://www.destatis.de/DE/Service/Statistik-Campus/Datenreport/Downloads/datenreport-2021.pdf?__blob=publicationFile 에서 2021.9.22.에 인출) 을 재구성함.

2) 사회정책-현재 (Sozialpolitik-Aktuell.de)

Sozialpolitik-Aktuell이란 ‘사회정책-현재’라는 뜻으로, 두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노동연구소에서 한스-뵉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정책 관련 데이

터와 이를 해석한 다양한 그래프들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해 주고 있는 독일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 대표적인 데이터뱅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포함한 노령, 노동, 노동시장, 인구, 건강 및 유럽전체 비교에 이르기까지 관련분야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가 다양하게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 각 테마 별로 기본 정보(Grundinformationen), 의견이 기재된 인포그래픽(kommetrierte Infografiken), 분석과 보고서(Analysen und Berichte), 통계와 데이터 수집(Statistiken und Datensammlungen) 그리고 관련법률(Gesetze)등 그 하위 구성요소를 명확히 함으로서 활용에 있어 그 편의성과 근거를 함께 갖추도록 하고 있다. 주요 테마는 아래 <표 4-51>과 같다.

[그림 4-15]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 홈페이지



자료: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 (<http://www.sozialpolitik-aktuell.de>에서 2021.9.22. 인출)

〈표 4-51〉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의 주요 업데이트 주제

연번	주요 업데이트 주제
1	노령과 노령보장 (Alter und Alterssicherung)
2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Arbeitsbedingungen und Arbeitszeit)
3	노동시장과 실업 (Arbeitsmarkt und Arbeitslosigkeit)
4	인구 (Bevölkerung)
5	소득분배 (Einkommensverteilung)
6	유럽 (Europa)
7	가족과 아동 (Familien, Kinder)
8	복지국가의 재정 (Finanzierung des Sozialstaates)
9	건강과 의료보험 (Gesundheit und Krankenversicherung)
10	기초보장과 사회보험 (Grundsicherung, Sozialversicherung)
11	요양과 요양보험 (Pflege und Pflegeversicherung)
12	사회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Sozialpolitik und die Folgen von Covid-19)

자료: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 (<http://www.sozialpolitik-aktuell.de>에서
2021. 9. 22. 인출)를 참고하여 정리함

나. 정책적 측면

1) 연방하원 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독일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회보고서 및 사회예산은 연방부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생산 및 배포와 동시에 독일 연방하원 문서정보시스템인 DIP(Dokumentation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Parlamentsmaterialien)에 보고서(Unterrichtung)형태로 이관되고 보관 및 활용된다(Deutscher Bundestag, 2021). 본 글에서 예시로 들었던 사회보고서 2021의 경우, [그림 4-16]과 같이 ‘19/32120’이라는 고유번호로 2021년 8월 6일 19대 연방하원으로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연방노동사회성(BM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의 사회보고서 2021과 동일하다. 행정부에서 생산한 보고서가 생산 완료와 동시에 국회로 이관되고, 의회 임기 가운데 사

회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측면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4-16]과 같이 19대 연방하원에 제출된 ‘사회보고서 2021’은 매 연방하원 임기 종료에 맞추어 발간되는 사회보고서의 특성 상 새로이 구성될 20대 연방하원에서 이를 반영한 사회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림 4-16] 독일 19대 연방하원에 제출된 사회보고서 2021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9/32120
19. Wahlperiode		06.08.2021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Sozialbericht 2021		
Inhaltsverzeichnis		
		Seite
Berichtsauftrag		7
Fundstellen der bisherigen Sozialberichte/Sozialbudgets		8
Abkürzungsverzeichnis		9
Einführung		14
Teil A – Maßnahmen und Vorhaben der Gesellschafts- und Sozialpolitik		15
I.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zur Bewältigung der Auswirkungen der COVID-19-Pandemie		15
1.1 Maßnahmen im Bereich der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k		15
1.2 Maßnahmen im Bereich der Finanz- und Wirtschaftspolitik		19
1.3 Maßnahmen im Bereich der Kultur- und Medienpolitik		24
1.4 Maßnahmen im Bereich der Bildungs- und Ausbildungspolitik		25
1.5 Maßnahmen im Bereich der Familien-, Kinder und Jugendpolitik		27
1.6 Maßnahmen im Bereich der Gesundheitspolitik		29
1.7 Maßnahmen im Bereich der Verbraucherschutzpolitik		32

자료: 독일 연방하원 문서정보시스템

(<https://dserver.bundestag.de/btd/19/321/1932120.pdf> 에서 2021.11.1. 인출)

2) 연방주 개별 사회보고서 (Landessozialbericht)

독일을 구성하는 연방주(Bundesland)들은 연방 노동사회성(BMAS)과는 별개로 각 연방주 사회보고서(Landessozialbericht)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개별 연방주의 특성에 맞춘 보고서로서 사회보장예산 등의 분류에 있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개별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복지계정을 편성 및 지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등에 있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추후 한국 지역복지계정 구축에 있어 독일과의 사례 비교 시 참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이 아니라 각 연방주 별로 필요한 사회(보장)정책의 테마를 정하여 발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NRW) 주의 경우 1992년부터 연방주 사회보고서(Landessozialbericht)를 주 노동건강사회성(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에서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0년 사회보고서에는 크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회 및 인구구조, 교육, 경제상황, 집값, 빈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중부 헤센(Bundesland Hessen) 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주 사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헤센 주의 경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비해서는 그 역사가 다소 짧은 2012년부터 주 사회통합부(Das Hessische Ministerium für Soziales und Integration, HMSI)에서 발간하고 있다.

[그림 4-1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2020 사회보고서 표지(부제: 빈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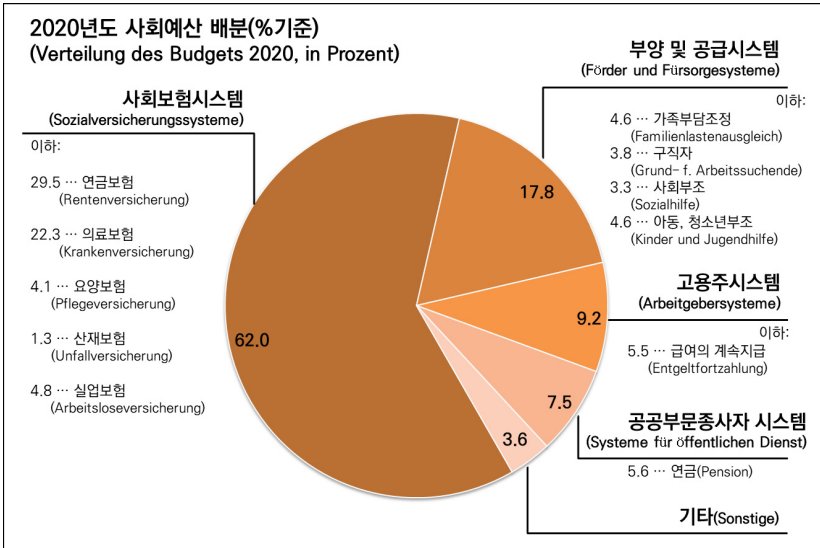
자료: 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21). Sozialbericht NRW 2020. Armuts- und Reichtumsbericht.

다. 언론 보도 측면

한국과는 달리, 독일 매스컴에서 복지계정 등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 국제비교보다는 매년도 발간되는 사회예산(Sozialbudget) 혹은 4년 주기로 발간되는 사회보고서(Sozialbericht)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지난 7월 심각해져 가는 코로나 정국 및 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과 복지지출에 대해 다룬 ‘복지국가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Sozialstaat wächst immer stärker)’ 제하의 프랑크푸르터알게마 이네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zeitungen)의 기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평균연령과 이에 따른 연간 사회예산 가운데 급격한 연금 및 건강보험지출의 증가에 대한 설명에서 2009년 이래 독일의 분야

별 복지지출을 다룸에 있어 2021년 발간된 사회보고서(Sozialbericht) 자료 가운데 제도적 분류를 인용, 그래픽화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림 4-18] 독일 매스컴의 사회보고서 데이터의 활용사례1



자료: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21).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arm-und-reich/sozialstaat-sozialausgaben-durch-corona-auf-hochststand-17415640.html> 에서 2021.10.10. 인출)

또한 독일에서 인정받는 정론지 가운데 하나인 데어 슈피겔(Der Spiegel) 2021년 7월 1일 자 Ein Drittel der deutschen Wirtschaftskraft fließt in Sozialleistungen(독일 경제력 1/3이 사회급 여로 흘러가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ALG), 복지국가의 강화 등을 언급하며 독일 연방노동사회성 발간 사회보고서 및 연방 정치교육원(bpb,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발간 데이터뱅크 2021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Der Spiegel, 2021).

[그림 4-19] 독일 매스컴의 사회보고서 데이터의 활용사례2



자료: Der Spiegel. (2021.07.01.). Ein Drittel der deutschen Wirtschaftskraft fließt in Sozialleistungen.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계정의 매스컴 활용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독일 내 언론에서의 복지계정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흔히 인용하는 OECD, UN 등의 기준 및 국민계정(VGR,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자료들에 비해 연방노동사회성(BMAS) 혹은 연방정치교육원(bpb) 발간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소결

4절에서는 독일에서 Social Protection 영역의 학술 및 정책적 활용 사례로서 연방 노동사회성, 연방 정치교육원, 연방 통계청, 연방하원 및 하원 문서정보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방부처에서 생산한 문서들은 단순히 생산에서만 그치지 않고, EU 및 연방하원으로의 제출 및 공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보고서의 경우, 매 하원임기 종료에 임박하여 4년 주기로 생산, 제출함으로서 차기 하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사회보호 정책을 유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다.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학술적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에 대해 보도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방주 개별 사회보고서를 발간함으로서 연방정부 뿐 아니라, 개별 주 특성이 반영된 보고서 역시 함께 발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추후 필요한 자료들을 검증,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역복지계정을 구축하는데 있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한국에 비해 오랜 기간 관련한 연구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연방 뿐 아니라 개별 연방주, 나아가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들과 함께 협업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 및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연구의 한계와 정책과제

제 5 장 연구의 한계와 정책과제

1. 복지계정 구축 후반연구인 ‘운영전략’은 향후연구로

이 연구는 5년사업으로 설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연구는 구축단계(2019~2021년)와 확산단계(2022~2023년)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구축단계는 충실히 연구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자료가 구축 및 분석되었다. 확산단계인 내년도 연구는 연구자의 여건으로 금년 연구로 종료하게 된다. 다만 3차년도까지 기획된 연구내용은 충실히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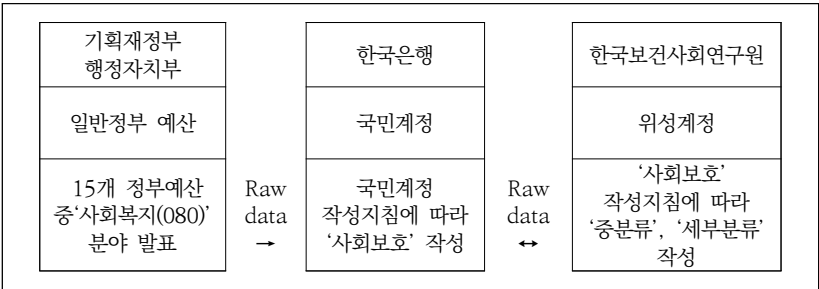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연구내용은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복지계정」간행물 발간(초판), 지방공무원의 통계생산 역량 교육, 그리고 복지 선진국가와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 작성 등이다. 이들은 복지계정 구축 후반에 연구할 내용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돌린다.

2. 두 기관 동일작업 지양을 위한 기초통계의 공유 또는 MOU 협정

한국은행은 매년 국제기구(OECD·IMF·UN 등)의 ‘국민계정’ 작성 지침(Manual)을 적용하여 복지재정인 ‘사회보호’를 작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난 1, 2차년에 중분류를 하고자 한국은행이 기 작성한 ‘사회보호’ 작업을 별도 실시하였다. 앞으로 두 기관의 동일 작업을 지양하기 위해 기초통계의 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연구원이

갖춘 복지재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보호’에 대해 중분류와 세부분류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공하면 상호 협력이 되리라 본다.

[그림 5-1] ‘사회보호’의 중분류와 세부지출 작성을 위한 협력방안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앞으로 지역복지 계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 플랫폼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여 자료 수요자들의 욕구 반영과 계정 제공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강원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강윤희. (2002). 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6(4), 227-241.

강철웅. (2009). 재정분권 시행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혜규. (2004).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30&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3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경남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7&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경북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6&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고경환, 김의준, 노용환, 이연희, 이혜정, 신지영, ..., 정영애. (2019).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I) - 지역복지지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신지영. (2021). 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보건복지포럼, 2021(11), 23-37.

- 고경환, 이연희, 신정우, 강지원, 신지영, 정영애, ..., 김승연. (2018).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 (I)-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이연희, 안수인, 노용환, 홍세영, 김원중. (202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보험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1-34.
- 공무원연금공단. (2018). 공무원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9). 공무원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정보 > 통계자료 > 2019년 주요통계
(https://www.geps.or.kr/g_data/page_1901.jsp 에서 2021.4.5. 인출)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018). 내부자료.
- 광주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7&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국가보훈처. (2018). 보훈연감.
-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2018). 군인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국방부. (2019). 군인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권민영, 박용호, 전지수. (2016). 지방재정자율성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대칭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2016(1), 132-140.
- 근로복지공단. (2019). 2018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기획재정부. (2018). 2018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김경준, 함영진, 이기동. (2013).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지능정보연구*, 19(2), 141-156.
-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 (2013). 세대 내 소득탄력성을 활용한 우리나라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추정과 국제비교. *국제통상연구*, 18(3), 65-84.
- 김성아, 이태진, 채수미, 유한별, 정소희, 남재현, 심수진. (2021).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삶의 질 지수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승연, 홍경준. (2011). 지방정부의 정부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207-231.
- 김승연. (2014).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및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행정연구*, 28(2), 111-135.
- 김용하, 임성은, 윤강재, 우선희. (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리. (2021.05.31.)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늘고, 세대간 불평등도 확대. *한국세정신문*.
- 김윤수, 류호영. (2012).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2(3), 298-326.
- 김은주, 최정우, 배수호. (2014).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3), 135-161.
- 김태일. (2013).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국가정책연구*, 27(3), 57-82.
- 김현익. (2017).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홍주, 구찬동. (2014). 정부재정보조가 지역 간 복지예산 불평등도 완화에 미친 효과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 191-218.
- 남상호. (2013). 복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210, 1-8.

네이버사전. “형태소”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ED%98%95%ED%83%9C%EC%86%8C&query=%ED%98%95%ED%83%9C%EC%86%8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에서 2021.10.26.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온톨로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3084&cid=42346&categoryId=42346> 에서 2021.10.26. 인출).

노용환. (2021).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한 이전지출의 소비효과 분석. 보건사회 연구, 41(2), 292-308.

대구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5&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대구도시철도공사. (2018). 내부자료.

대전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8&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대전도시철도공사. (2018). 내부자료.

독일 연방하원 문서정보시스템

(<https://dserver.bundestag.de/btd/19/321/1932120.pdf> 에서 2021.11.1. 인출)

모지환, 이중섭. (201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7(4), 49-73.

박고운, 박병현. (200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423-451.

박기묵. (201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9(2), 173-197.

박정수. (2011).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자산이 장래세대부담비율과 부채에 미치

- 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지현. (2014).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3(43), 1-106.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2&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부산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4&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부산교통공사. (2018). 내부자료.
- 부산-김해경전철. (2018). 내부자료.
- 사학연금공단. (2018). 사학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사학연금공단. (2019). 사학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 사회정책-현재(Sozialpolitik-aktuell.de)
(<http://www.sozialpolitik-aktuell.de> 에서 2021.9.22. 인출)
- 서울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3&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서울교통공사. (2018). 내부자료.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 세종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32&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송지은. (2017).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재혁, 김태완, 박희경. (2020). 선거 경쟁과 복지 지출, 소득 불평등: 한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비교 연구. 21 세기정치학회보, 30(2), 123-146.

- 신정관, 임준형. (201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 지방권력 교체기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225-251.
- 안우진, 전영준. (2018). 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를 이용한 정부재정 유지가능성 및 세대간 불균형 평가.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32.
- 오수현, 강인성. (2013). 지방자치단체 정당구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지출 영향요인분석: 사회복지 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215-240.
- 울산경찰청 경찰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9&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윤영진. (2013).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지방행정연구, 27(4), 31-65.
- 윤인주, 양준석. (2016).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3), 115-139.
- 윤태섭, 서정섭. (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지표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의정부경전철. (2018). 내부자료.
- 이기영. (2012).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세대간 소득이전. 재정학연구, 5(1).
- 이동식. (2012).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2(4), 75-100.
- 이상일, 박종철. (2016).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3), 129-163.
- 이상호. (2015). 사회복지 지출과 지방재정: 재정압박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427-454.
- 이석환. (2019).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3(1).
- 이성규. (2021). 재정정책의 세대 간 형평성과 세代会계의 유용성에 대한 소고. 제도와 경제, 15(2), 67-95.

- 이종대. (2008). 사회복지예산과 점증주의.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32(2), 195-217.
- 이진성. (20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효. (1990). 도시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토지행정학회보, 3, 223-237.
- 인천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6&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인천메트로. (2018). 내부자료.
- 장덕희. (2015).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 증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3), 107-132.
- 장동호. (2012).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에서의 종속변수 문제 검토. 보건사회 연구, 32(3), 122-158.
- 장인수, 김홍석. (2018). 인구 집단 측면의 복지 수요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는가?. 보건사회연구, 38(1), 365-395.
- 전남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5&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전북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4&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전영준. (2012). 복지지출 확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 전영준. (2013). 세대간 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과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5(2), 107-151.
- 전영준. (2019).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한국경제연구원.
- 전영준. (2021).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 부담. 한국경제연구원 연

- 구정책, 1, 1-54.
- 정성호, 김완희. (2015).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2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진현. (2003).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4).
- 제주경찰청 경찰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8&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조규영. (2009).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영향 요인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기태. (2017).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4), 35-60.
- 주만수, 최병호. (2011). 지방재정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분석. 지방재정건전성 T/F.
- 조무현. (201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1). <https://lofin.mois.go.kr>에서 2021.9.16. 인출)
- 진재문. (2010).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예산 격차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1), 413-431.
- 진재문. (2012). 시·군·구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2000~2010 년의 1인당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205-227.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75_MEA_OBE&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최기림. (2014).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 부녀간 소득탄력성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기홍. (2013).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와 세대 간 형평성의 측정. 재정학연구,

- 6(3), 1-29.
- 최기흥. (2015). 확장된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측정.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30.
- 최영. (2015).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 31-59.
- 최일진, 남황우. (2017).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사업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7, 157-192.
- 충남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3&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충북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2&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통계개발원. (2019). 국민 삶의 질 2019.
-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21). 2020년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 간이생명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에서 2021.9.16. 인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통계청 지역소득(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통계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01&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에서 2020.10.16.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60 에서 2020.10.16. 인출)
- 통계청 e-지방지표(<http://kosis.kr> 에서 2020.9.20.과 2021.4.5. 인출)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 에서 2020.9.20.과 2021.4.5. 인출)
- 하능식, 구찬동. (2012).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복지재정압박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3), 1-34.
- 한국가스공사. (2018). 내부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TX_334_2009_H2004&conn_path=I3에서 2021.9.16. 인출)
- 한국도로공사. (2018). 내부자료.
- 한국방송공사. (2018). 내부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복지계정DB.
-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에서 2021.10.26. 인출)
- 한국전력공사. (2018). 내부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 한국지역난방공사. (2018). 내부자료.
- 한국철도공사. (2018). 내부자료.
- 한재명, 김성수. (2016).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58).
- 한재명, 신우진. (2017).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지방예산편성 방식에 미친 영향 분석-기초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예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5(4), 47-83.
- 한현식.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채무수준에 미치는 영향.

- 경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함영진.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25-50.
- 행정안전부. 2018-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 (2020.9.20. 인출)
-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 (2021.4.5. 인출)
- 허명순. (2011).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6(1), 177-210.
- 현승현, 신현중. (2018).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69-83.
- Adema, W., & Fron, P. (2019). *The OECD SOCX Manual-2019 Edition*. Paris: OECD. Retrieved June, 24, 2020.
- Arévalo, P., Berti, K., Caretta, A., & Eckefeldt, P. (2019). The Intergenerational Dimension of Fiscal Sustainability (No. 112). Directorate General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DG ECFIN), European Commission.
- Auerbach, A. J., Gokhale, J., & Kotlikoff, L. J. (1991). Generational accounts: a meaningful alternative to deficit accounting. Tax policy and the economy, 5, 55-110.
- Barclay, G. W. (1965). Techniques of population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Blanden. (2015).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Measures of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can be indicative of equality of opportunity, but the relationship is not clear cut, IZA World of

Labor.

Boll, S. (1996).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through the public sector: Methodology of generational accounting and its empirical application to Germany (No. 1996, 06e). Discussion Paper.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0). Sozialbudget 2019.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1). Sozialbericht 2021.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Daten-report 2021. (https://www.destatis.de/DE/Service/Statistik-Campus/Datenreport/Downloads/datenreport-2021.pdf?__blob=publicationFile 에서 2021.9.22.에 인출)

Connolly, Haeck, & Lapierre. (2021). Parental Education and the Rising Transmission of Income between Generation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rak, M., Lindquist, M. J., & Mazumder, B. (2014). A comparison of upward and downward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Canada,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Labour Economics*, 30, 185-200.

De Clerck, M. S., and Wickens, T. (2019).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Der Spiegel. (2021.07.01.). Ein Drittel der deutschen Wirtschaftskraft fließt in Sozialleistungen.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07). Wörterbuch Fachbegriffe der Alterssicherung.

Deutscher Bundestag. (2021) (<https://dip.bundestag.de/> 에서 2021.10.26. 인출).

Duden. “Schutz” (<https://www.duden.de/rechtschreibung/Schutz> 에서 2021.10.26. 인출).

Duden. “Sicherung”

- (<https://www.duden.de/rechtschreibung/Sicherung> 에서
2021.10.26. 인출).
-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 World Bank.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 World Bank. (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21).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arm-und-reich/sozialstaat-sozialausgaben-durch-corona-auf-hoechststand-17415640.html> 에서 2021.10.10. 인출)
- Gokhale, J., Smetters, K. A., & Smetters, K. A. S. (2003). Fiscal and generational imbalances: New budget measures for new budget priorities (No. 5).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Gokhale, J., & Smetters, K. (2006). Fiscal and generational imbalances: An update. *Tax Policy and the Economy*, 20, 193-223.
- Gokhale, J. (2009). Unfunded obligation measures for EU countries. In *Fiscal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pp. 59-91). Routledge.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9). *Fiscal Space for Social Protection: A Handbook for Assessing Financing Optio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 Justman, M., Krush, A., & Millo, H. (2017). Th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is rising in tandem with income inequality and returns to schooling. Working Paper.

- Mazumder, B. (2015). Estimating th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and rank association in the US: Overcoming the current limitations of tax data. *FRB of Chicago Working Paper No. 2015-04*.
- 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21). Sozialbericht NRW 2020. Armuts- und Reichtumsbericht.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8). OECD Regional Well-Being: A users's guide. OECD Publishing.
-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11>)에서 2021.7.1. 인출).
- OECD.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21.11.20. 인출)
- Oxley, H., Maher, M., Martin, J. P., Nicoletti, G., & Alonso-Gamo, P. (1991). The public sector: issues for the 1990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90, OECD Publishing.
- Palomino, J. C., Marrero, G. A., & Rodríguez, J. G. (2018). One size doesn't fit all: a quantil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S (1980-2010).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6(3), 347-367.
- Pinheiro. (2021). Generational Accounting in Portugal: An assessment of long-term fiscal substantiality and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Portuguese Economic Journal*, 20, 181-221.
- Solon, G. (1992).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93-408.
- Sullivan, D. F. (1971). A single index of mortality and morbidity. *HSMHA health reports*, 86(4), 347.
- Varley, R. (1986). The government household transfer data base 1960-1984.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36,

- OECD Publishing.
- Veenhoven, R. (1996). Happy life-expectan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1), 1-58.
- Wikipedia. "Generational accounting"
(https://en.wikipedia.org/wiki/Generational_accounting 에서
2021.10.26. 인출).
- Williamson, J. G. (1965).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the patter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3(4, Part 2), 1-84.
- Yang, Y. (2008). Long and happy living: Trends and patterns of happy life expectancy in the US, 1970-2000. Social science research, 37(4), 1235-1252.
- Yoon, B. J. (2018). A Study on the Happy Life Expectancy by Life Table Method.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89-95.
- Zimmerman, D. J. (1992). Regression toward mediocrity in economic statu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09-429.



[부록 1] 사회보호와 경제분류의 개념과 구성내용

〈부표 1-1〉 정부의 기능별 COFOG 분류 체계(10개 분야 69개 부문)

7	총지출		
701	일반 공공행정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7061	주거시설 개발
7012	해외 경제원조	7062	지역사회 시설 개발
7013	일반 서비스	7063	수도 공급
7014	기초연구	7064	가로등
7015	일반 공공행정 R&D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7	공공 채무 거래	707	보건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7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702	국방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21	군사 방어	7073	병원서비스
7022	민방위	7074	공공 보건서비스
7023	해외 군사원조	7075	보건 R&D
7024	국방 R&D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708	휴양, 문화, 종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81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7031	경찰서비스	7082	문화서비스
7032	소방서비스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7033	법원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7034	교도소	7185	휴양, 문화, 종교 R&D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7086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709	교육
704	경제활동	7091	유아 및 초등교육
7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7092	중등교육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093	2차 중등교육
7043	연료 및 에너지	7094	고등교육
7044	광업, 제조, 건설	7095	등급 외 교육
7045	운송	7096	교육보조서비스
7046	통신	7097	교육 R&D
7047	기타 산업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7048	경제 R&D	710	사회보호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7101	질병 및 장애
705	환경보호	7102	노령
7051	폐기물 관리	7103	유족
7052	폐수 관리	7104	가족 및 자녀
7053	공해 방지	7105	실업
7054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7106	주거
7055	환경보호 R&D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7108	사회보호 R&D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자료: De Clerck, M. S., and Wickens, T. (2019).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pendix 6. p.143.

〈부표 1-2〉 사회보호와 중분류 영역의 개념

710 사회보호의 개념¹⁰⁾

사회보호에 대한 정부지출에는 개인과 가계에 제공되는 개인적 서비스 및 이전지출과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개인적 서비스 및 이전지출에 대한 지출은 (7101)부터 (7107)사이에 분류되고, 집단적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7108)부터 (7109)사이에 분류.

집단적 사회보호 서비스에는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 제공 관련 법률 및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등이 포함.

사회보호 기능과 정의는 EC 통계국(Eurostat)의 '1996 유럽 사회보호 통합통계체계(ESSPROS)'에 기초한다. ESSPROS에서는 사회보호가 보건 관리를 포함하지만, 이 분야에 서는 보건관리를 포함하지 않음. 보건 관리는 707분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7101)에서 (7107)까지 명시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재화와 서비스는 (7071), (7072), (7073)에 적절히 분류.

7101 질병 및 장애

71011질병(IS)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수입 손실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현금 또는 현물 사회보호 급여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액형 또는 소득 비례형 병가 지급금(sick-leave payments) 및 기타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질병 또는 상해로 근로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부조 같은 현물 급여(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

71012장애(IS)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또는 정상적 생활을 전혀 또는 일부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장애로 인해 작업 능력이 손상된 정년퇴직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장애 연금, 작업 능력의 손상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 급여, 간호 수당, 장애인용 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기타 사회보호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취업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숙박 및 하숙,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가사 지원, 교통시설 등),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장애인의 근로 재활과 사회 재활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직업 훈련 및 기타 훈련, 장애인의 휴양 및 문화 활동이나 여행 또는 지역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제외 :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71020)

7102노령

71020노령(IS)

노령에 따른 위험(소득 상실, 불충분한 소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잘입성 결여, 사회생활 및 지역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노령 연금,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조기 노령 연금, 정년퇴직 연령 이전 또는 이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근로 활동을 하는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 노령 연금, 간호 수당, 퇴직 도는 노령 때문에 지급되는 기타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전문 시설에 거주하거나 적정 시설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숙박 및 하숙,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가사 곳원, 교통시설 등),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노인의 휴양 및 문화 활동이나 여행 또는 지역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포함 : 군인 및 정부 피용자에 대한 연금제도

제외 : 장애(71012) 또는 실업(71050)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 대한 조기 퇴직급여

7103 유족

71030 유족(IS)

고인의 유족(고인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기타 친척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유족 연금, 사망 위로금, 기타 유가족에 대한 정기 도는 일시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장례비 및 유족들의 지역생활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7104 가족 및 자녀

71040 가족 및 자녀(IS)

피부양 자녀가 있는 가계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산모 수당,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가족 또는 자녀 수당, 기타 가정 지원 및 특정 비용 충당을 위한 정기 및 일시 지급금(결혼 부모 갖어 도는 장애 자녀 가정에 대한 급여 등) 등과 같은 현금 급여)

취학 전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간 보호 및 하숙시설, 주간 보모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영구적으로 어린이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하숙시설(고아원, 입양가족 등), 자녀나 보호자 가정에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족·청소년·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와 재화(휴가 및 여가센터 등) 등과 같은 현물 급여

제외 : 가족계획 서비스(70740)

7105 실업

71050 실업(IS)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전액 및 부분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해 또는 경제적 이유에 따른 감원조치로 인해 정년퇴직 연력 이전에 퇴직한 노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퇴직급여, 특정 집단 근로자들의 고용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 정리해고 보상금, 그 외에 실업자 특히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또는 일시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이사 및 정착지원금,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실업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 실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숙박·식품·의류 등과 같은 현물 급여

제외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률 감소 또는 소외계층과 기타 고실업 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일반적 프로그램 또는 제도(70412), 정상퇴직 연령에 도달한 실업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71020)

7106주거

71060 주거(IS)

가계의 주거비용 충당을 위한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이러한 급여의 수령자는 자산 조사를 받음)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임대료 지원을 위한 단기 또는 장기 지급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지급금(즉, 주택용자 원리금 상환을 도와주기 위한 지급금), 저가주택 또는 공공주택의 제공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1070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IS)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소외 위험에 처한 사람들(빈곤층, 저소득층, 이민자, 원주민, 피난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사회보호 급여의 제공

이러한 사회보호 제도의 관리, 운영, 지원

빈곤경감 또는 난관극복을 위해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소득 보조 및 기타 현금 지급금 등과 같은 현금 급여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장단기 보호 및 숙박시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재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상담, 주간 보호, 일상생활 지원, 식품, 의류, 연료,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등과 같은 현물 급여

7108 사회보호 R&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의 정의는 (7014)와 (7015)에 제시

71080 사회보호 R&D(CS)

사회보호와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종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 및 운영 연구기관, 대학 같은 비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회보호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용자, 보조
 제외 : 기초연구(70140)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71090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CS)**

전반적인 사회보호 정책·계획·프로그램·예산의 수립·집행·조정·점검 같은 활동의 관리·운영·지원, 사회보호 제공에 관한 법률과 기준의 수립 및 집행, 사회보호에 관한 일반정보, 기술문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포함 : 화재·홍수·지진·기타 평시 재해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형태의 사회보호 제공, 평시 재해에 대비한 긴급용도의 식품·장비·기타 보급품의 구입 및 저장, (7101), (7102), (7103), (7104), (7105), (7106), (7107), (7108)로 지정될 수 없는 기타 사회보호 활동 및 서비스

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168-1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372~377. 에서 재인용.

〈부표 1-3〉 기능별 공공기관별 관련 급여(사업)들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노령	기초연금지급 노인단체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공적연금연계제도 운영(국민연금)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급여지급(노령연금) 연금급여(퇴직연금, 사립학교연금기금) 퇴직급여(퇴역연금, 군인연금) 퇴직급여(퇴직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수당(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공단관리운영 인건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공무원연금) 위탁시설관리(공무원연금) 주택사업관리(공무원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비) 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노인시설물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용인 평온의 숲 운영
유족	6.25자녀수당 간호수당 고엽제수당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보훈의료복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지방보훈청 처본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국민연금급여지급(유족연금) 퇴직급여_유족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연금급여_유족연금(사학연금) 퇴직급여_유족연금일시금(군인연금) 연금급여_유족연금일시금(사학연금)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보훈가족위문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보훈사업 추진 보훈회관 건립 제2추모원 증축 종합장사시설건립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 화장기기 정비 및 관리
질병및장애	보상금(보훈보상금) 장애수당(기초)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국민연금급여지급_장애연금, 장애일시금 재해보상급여_상이연금(군인연금) 재해보상급여_장해연금, 장애연금일시금(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_장해연금, 장애보상금(공무원연금)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한마음복지관 운영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도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보조)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진폐위로금지급 교통시설이용지원(보훈의료 복지) 국립재활원 인건비	산재보험급여 근로자건강보호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산재병원지원 안전보건문화정착(산업재해 예방) 업종별재해예방(산업재해예 방) 유해작업환경개선(산업재해 예방)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산업재 해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 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지원(4종)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가족 및자 녀	아동수당 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 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 영지원, 인건비(여성가족부행정지 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장년고용안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중장년취업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성인지)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운영지 원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청소년재단 운영비 지원 청소년재단 출연금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노동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 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한국기술대학교운영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 리텍)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공공근로사업추진 근로복지관 운영 근로자시설운영관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육성 새희망 일자리사업 시흥형공공일자리사업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

322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해외취업지원 체당금 지급(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본부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일학습병행운영지원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고용센터인력지원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오산 홍익 일자리사업 일자리 창출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도비)
기타 사회 보호	WPRO 전략사업 추진 (ODA)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복지소의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 연계지원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회복지협의화운영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재해보상급여_재해부조금 (군인연금) 재해보상급여_재해부조금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_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회복지 역량강화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 G-푸드림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기타 사회 적배 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긴급복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3년 주기) 제대군인의료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글로벌센터 건립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권역별「희망케어센터」운영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실업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실업크레딧지원(고용정책)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지원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전직실업자능력 개발지원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국민 연금제도운영사업)	공공근로사업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파복공동체 기반조성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희복일자리사업
주거	국민임대출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그린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영구임대출자 임대주택리츠출자 전세임대경상보조 주거급여지원 행복주택출자	임대주택건립(공무원연금)	주거복지 지원 주거복지(매입임대주택) 사업 주거복지지원활성화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지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매입임대 공개주택 활용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 보호 R&D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 제품연구개발(R&D)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R&D)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 용역사업(R&D) 사회서비스(R&D)(지역자 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연구개발(R&D)(고용 노동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사업(R&D) (성평등정책기반강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 화)	-	-

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포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2021).

〈부표 1-4〉 GFS기준에 따른 복지지출의 세부지출 개념과 관련 비목·세목명

경제 분류	정의	비 목 명 ¹⁾	세 목 명 ¹⁾
피용자 보상	보고기간 동안 고용주-피용자 관계에서 피용자가 수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현금 및 현물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 이러한 금액은 기관단위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됨. 임금 및 급여, 피용자를 대신하여 사회보험제도에 납부하는 고용주의 사회기여금을 포함	인건비, 여비, 연구·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교육여비, 국외업무여비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연가보상비, 일용임금, 기타 직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시장 및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구성 다음은 제외함: 고정자본소비, 비금융자산 취득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자가 건설 관련 원가의 자본화에서의 재화와 서비스 사용, 정부가 구매하여 변환 없이 배분하는 현물 이전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재화. 이러한 이전은 보조, 출연, 사회급여, 또는 기타 미분류 경상 이전으로 분류됨.	업무추진비, 예비비 및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²⁾ , 특수활동비 ²⁾	업무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및손실금, 예비금, 예비비 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관리용역비, 급식비, 기타운영비,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 유류비, 일·숙직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재료비, 특근매식비, 피복비, 학교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교수보직경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고정 자본 소비	물리적 감모, 정상적 진부화, 또는 정상적 사고 손실에 의해 정부단위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현시점의 가치 하락		전출금 등: 감가상각비
이자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을 또 다른 기관단위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수	상환지출, 예탁금	상환지출: 국내차입금상환, 민간예수금원금상환, 민간예수금이자,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 전대차원금

경제 분류	정 의	비 목 명 ¹⁾	세 목 명 ¹⁾
	취하는 일종의 투자이익		상환, 전대차관이자, 차입금이자, 해외차입금상환 예탁금: 기금예탁금, 일반회계예탁금, 특별회계예탁금
보조	생산활동 수준 기준으로, 또는 생산, 판매, 수출 및 수입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정부단 위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일방적인 경상 이전	보전금	보전금: 배상금, 손실보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출연	조세, 보조금, 또는 사회기여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 으며, 정부단위가 거주나 비거주 정부단위, 또는 국제기 구에 지급하는 이전.	일반출연금, 출자금	일반출연금: 금융성기금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민간 기금출연금, 사업출연금 출자금: 일반출자금
사회 급여	질병, 실업, 퇴직, 주거, 교육 또는 가정 사정 등의 예치 법, 사회적 위험에 수반되는 필요를 위한 제공을 목적으 로 가계가 수취하는 경상이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구호및교정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 치단체대행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 비용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기타 미분류 이전, 그리고 비생 명보험과 표준화된 보증 관련 보험료, 수수료 및 보험정 구권의 지급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용자금, 전출금등, 해외이전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공채매입, 국채매입, 기타유가 증권매입,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지방채매입, 통화금 용기관예치금, 한국은행예치금 용자금: 기타민간용자금, 지방자치단체용자금, 통화금 용기관용자금 전출금 등: 계정간전출금, 기금전출금, 기타전출금, 당 기순이익, 일반회계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해외이전: 국제부담금, 해외경상이전, 해외자본이전
비금융자 산의	자가건설 관련 원가의 자본화 해당분	건설보상비, 건설비,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 건설비: 감리비, 공사비, 기본조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경제 분류	정 의	비 목 명 ¹⁾	세 목 명 ¹⁾
순투자		무형자산, 연구개발 출연금, 유형자산	실시설계비 무형자산: 무형자산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장 비·시스템구축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저장품매입비 지분취득비: 지분취득비

주: 1) 비목 및 세목명 기준 자출항목의 분류는 GFS기준 각 경제적 분류의 정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분류함.
2) 매뉴얼에 따라 업무 중에 사용되는 직무수행경비와 특수활동비는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분류함
자료: IMF(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p. 115~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GFSM 2014)". pp. 257~3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복지계정DB(2021).

〈부표 1-5〉 통합재정수지와 COFOG의 재정분류 체계

통합재정수지		COFOG	예산 비목 ^{주)}
경 상 지 출	재화 및 용역 (행정비용)	(인건비) 급여 및 임금 (물건비) 기타 재화 및 용역 구입	인건비, 보수(110-01), 상용임금(110-03), 연가보상비(110-05), 복리후생비(210-12), 특정업무경비(250-03), 직책수행경비(250-02)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220-01-03), 특수활동비, 연구용역비(260-01-02), 예비비 및 기타
	이자지급	이자지급	연구용역비(260-01-02), 예비비 및 기타
	보조금 및 경상이전 (이전지출)	보조금	차입금이자(510-03), 이자상환은 제외
		보조금 (D3)	보전금(배상금, 손실보상금, 기타보전금, 이자보전금(320-05)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기타경상이전 (D7)	민간경상보조(320-01), 5 민간위탁사업비(320-02),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360-01-05)
자 본 지 출	경상이전	경상이전	손실보상금(310-01), 배상금(310-02), 기타보전금(310-04), 구호및교정비(320-06), 반환금및손실금(*710-03)
			해외경상이전(340-01), 국제부담금(340-02)
		사회급여(D62)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연금지급금, 건강보험급여비, 보험금(320-04)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 대행사업비(330-04) 민간자본보조(320-07), 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본	자본이전	해외자본이전(340-03)
	지출	고정 자산 취득 토지 및 무형 자산 매입	공사비(420-03), 감리비(420-04), 시설부대비(420-05), 자산취득비(430-01), 무형자산(440) 토지매입비(410), 지분매입비(490)

주: 코드번호는 통합재정수지의 개요 참고

〈부표 1-6〉 중앙·지방정부의 세부지출별 예산 항목

중 앙 정 부									
비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국내여비	공공요금및제세	이자보전금	기타보전금	금융성기금출연금	민간경상보조	고용부담금	감리비		
국외교육여비	관리용역비		배상금	기관운영출연금	민간위탁사업비	구호및교정비	건설보상비		
국외업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손실보상금	사업출연금	보험금	국채 부담금	공사비		
기타직보수	급식비		포상금	일반출자금	연금지급금	해외경상이전	기본조시설계비		
보수	기타운영비					해외자본이전	무형자산		
상용임금	반환금및손실금						민간자본보조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일용임금	사업추진비						시설부대비		
	시설장비유지비						실시 설계비		
	시험연구비						연구개발연구활동비		
	유류비						등		
	일·숙직비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재료비								
	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지 방 자 치 단 체							
비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	비금용자산의 순투자
	특정업무경비						
	피복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공무원 교육여비	공공운영비	이차보전금	기타보상금	출연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국채부담금	감리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민간인제해및복구활동보상금	출자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내여비	내부유보금		배상금등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기타자본이전
국외업무여비	도서구입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국제화여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포상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기타직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사업비		비법정전출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인위탁교육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인국외여비	제료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설부대비

	비용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보수	전산개발비				보험금		시설비
	사회복무요원보 상금	특정업무경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성과상여금	행사관련시설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외빈초청여비	행사운영비				연금지급금		
	월액여비	연구용역비				운수임계보조금		
	자율방범대실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직급보조비					자치단체간부담금		
	연금부담금					장학금및학자금		

자료: 본 연구의 복지계정DB(2021).

[부록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부표 2-1〉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11,118 (100.0)	839 (7.5)	117 (1.1)	115 (1.0)	1 (0.0)	5 (0.0)	462 (4.2)	139 (1.2)	10,279 (92.5)	967 (8.7)	9,313 (83.8)
노령	41.6	4,629 (100.0)	152 (3.3)	34 (0.7)	53 (1.1)	-	0 (0.0)	58 (1.3)	6 (0.1)	4,477 (96.7)	0 (0.0)	4,477 (96.7)
유족	7.5	837 (100.0)	41 (4.9)	13 (1.6)	10 (1.2)	0 (0.0)	1 (0.1)	11 (1.3)	6 (0.7)	796 (95.1)	414 (49.5)	382 (45.6)
질병및 장애	11.7	1,300 (100.0)	179 (13.7)	14 (1.1)	7 (0.6)	0 (0.0)	1 (0.1)	91 (7.0)	65 (5.0)	1,122 (86.3)	346 (26.6)	775 (59.6)
가족및 자녀	10.8	1,203 (100.0)	261 (21.7)	7 (0.6)	16 (1.3)	-	0 (0.0)	231 (19.2)	7 (0.6)	942 (78.3)	2 (0.2)	940 (78.1)
기타 사회 보호	1.3	149 (100.0)	42 (28.4)	7 (4.4)	5 (3.4)	0 (0.0)	0 (0.3)	28 (18.8)	2 (1.4)	107 (71.6)	81 (54.2)	26 (17.4)
기타 사회적 배제	13.5	1,505 (100.0)	31 (2.1)	3 (0.2)	4 (0.3)	-	-	12 (0.8)	12 (0.8)	1,474 (97.9)	1 (0.1)	1,473 (97.8)
사회 보호 R&D	0.0	5 (100.0)	1 (11.6)	0 (1.0)	0 (6.4)	-	0 (0.2)	0 (4.0)	-	5 (88.4)	-	5 (88.4)
노동 ^{주)}	5.6	619 (100.0)	118 (19.1)	38 (6.2)	20 (3.2)	0 (0.0)	2 (0.3)	21 (3.4)	38 (6.1)	501 (80.9)	117 (18.9)	384 (62.0)
실업	6.5	718 (100.0)	1 (0.1)	0 (0.0)	0 (0.0)	-	-	0 (0.1)	-	717 (99.9)	5 (0.7)	712 (99.2)
주거	1.4	153 (100.0)	13 (8.8)	0 (0.0)	0 (0.1)	-	-	10 (6.6)	3 (2.1)	139 (91.2)	-	139 (91.2)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32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2〉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11,118 (100.0)	4,580 (41.2)	1,467 (13.2)	1,351 (12.2)	116 (1.0)	5,071 (45.6)	3,542 (31.9)	1,040 (9.4)	488 (4.4)
노령	41.6	4,629 (100.0)	1,025 (22.2)	422 (9.1)	401 (8.7)	21 (0.5)	3,181 (68.7)	3,181 (68.7)	0 (0.0)	-
유족	7.5	837 (100.0)	450 (53.7)	23 (2.8)	16 (1.9)	7 (0.9)	364 (43.5)	317 (37.9)	-	47 (5.6)
질병 및 장애	11.7	1,300 (100.0)	646 (49.7)	172 (13.2)	160 (12.3)	11 (0.9)	482 (37.1)	42 (3.2)	-	441 (33.9)
가족 및 자녀	10.8	1,203 (100.0)	599 (49.8)	487 (40.5)	446 (37.1)	41 (3.4)	116 (9.7)	-	116 (9.7)	-
기타 사회 보호	1.3	149 (100.0)	102 (68.3)	47 (31.7)	38 (25.3)	10 (6.4)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13.5	1,505 (100.0)	1,244 (82.6)	262 (17.4)	255 (16.9)	7 (0.5)	-	-	-	-
사회 보호 R&D	0.0	5 (100.0)	5 (100.0)	-	-	-	-	-	-	-
노동 ^{주)}	5.6	619 (100.0)	370 (59.7)	39 (6.2)	20 (3.3)	18 (3.0)	211 (34.1)	-	211 (34.1)	-
실업	6.5	718 (100.0)	3 (0.4)	1 (0.1)	1 (0.1)	0 (0.0)	715 (99.6)	2 (0.2)	713 (99.3)	-
주거	1.4	153 (100.0)	137 (89.5)	15 (9.8)	14 (9.3)	1 (0.5)	1 (0.7)	1 (0.7)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부산지역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11,118 (100.0)	4,580 (41.2)	1,467 (13.2)	1,351 (12.2)	116 (1.0)	5,071 (45.6)	3,542 (31.9)	1,040 (9.4)	488 (4.4)	
행정 비용	소계	7.5	839 (100.0)	295 (35.1)	328 (39.1)	270 (32.2)	58 (6.9)	216 (25.8)	107 (12.8)	54 (6.4)	55 (6.6)
	피용자 보상	1.1	117 (100.0)	63 (53.8)	11 (9.0)	7 (5.9)	4 (3.2)	43 (37.1)	38 (32.4)	5 (4.5)	0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0	115 (100.0)	39 (33.6)	10 (9.0)	3 (2.7)	7 (6.3)	66 (57.4)	57 (49.0)	9 (8.2)	0 (0.2)
	이자	0.0	1 (100.0)	1 (89.9)	0 (1.6)	0 (1.6)	- (0.0)	0 (8.5)	- (0.0)	0 (8.5)	- (0.0)
	기타 비용	0.0	5 (100.0)	4 (71.8)	- (0.0)	- (0.0)	- (0.0)	1 (28.2)	0 (8.1)	1 (19.6)	0 (0.4)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4.2	462 (100.0)	153 (33.1)	302 (65.5)	260 (56.3)	43 (9.2)	7 (1.4)	5 (1.2)	1 (0.2)	0 (0.1)
	출연	1.2	139 (100.0)	36 (25.9)	5 (3.3)	- (0.0)	5 (3.3)	98 (70.8)	7 (5.0)	37 (26.7)	54 (39.1)
	소계	92.5	10,279 (100.0)	4,285 (41.7)	1,139 (11.1)	1,081 (10.5)	58 (0.6)	4,855 (47.2)	3,435 (33.4)	987 (9.6)	433 (4.2)
이 전 지 출	보조금	8.7	967 (100.0)	961 (99.4)	2 (0.2)	1 (0.1)	1 (0.1)	3 (0.4)	2 (0.2)	2 (0.2)	0 (0.0)
	사회 급여	83.8	9,313 (100.0)	3,324 (35.7)	1,137 (12.2)	1,080 (11.6)	57 (0.6)	4,851 (52.1)	3,433 (36.9)	985 (10.6)	433 (4.6)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11,117,886	6,044,673	4,234,506	838,707
노령	4,628,555	4,283,019	193,865	151,671
유족	836,932	307,522	488,610	40,801
질병 및 장애	1,300,178	138,978	982,628	178,571
가족 및 자녀	1,203,072	245,320	696,635	261,117
기타 사회보호	148,702	21	106,491	42,190
기타 사회적 배제	1,505,264	409,742	1,064,066	31,455
사회보호 R&D	5,187	-	4,586	602
노동 ^{주)}	619,451	-	501,386	118,065
실업	717,895	660,070	57,070	755
주거	152,649	-	139,169	13,481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6,976 (100.0)	701 (10.0)	108 (1.5)	83 (1.2)	1 (0.0)	3 (0.0)	412 (5.9)	94 (1.3)	6,275 (90.0)	733 (10.5)	5,542 (79.4)
노령	43.6	3,041 (100.0)	116 (3.8)	29 (1.0)	40 (1.3)	- (0.0)	0 (0.0)	43 (1.4)	4 (0.1)	2,925 (96.2)	2 (0.1)	2,923 (96.1)
유족	9.0	627 (100.0)	32 (5.1)	10 (1.5)	8 (1.2)	0 (0.0)	1 (0.1)	10 (1.6)	4 (0.6)	595 (94.9)	317 (50.6)	278 (44.4)
질병및 장애	13.3	926 (100.0)	143 (15.4)	14 (1.5)	6 (0.7)	0 (0.0)	1 (0.1)	78 (8.4)	43 (4.7)	783 (84.6)	265 (28.6)	519 (56.0)
가족및 자녀	12.9	898 (100.0)	259 (28.8)	4 (0.5)	9 (1.0)	- (0.0)	0 (0.0)	240 (26.7)	6 (0.6)	639 (71.2)	1 (0.1)	638 (71.1)
기타 사회 보호	1.6	112 (100.0)	33 (29.8)	5 (4.3)	4 (3.9)	0 (0.0)	0 (0.3)	21 (19.0)	3 (2.4)	79 (70.2)	61 (54.8)	17 (15.4)
기타 사회적 배제	5.8	406 (100.0)	23 (5.7)	4 (1.0)	2 (0.5)	- (0.0)	- (0.0)	8 (2.0)	9 (2.3)	383 (94.3)	1 (0.2)	382 (94.1)
사회 보호 R&D	0.1	4 (100.0)	0 (11.6)	0 (1.0)	0 (6.4)	- (0.2)	0 (0.0)	0 (4.0)	- (0.0)	3 (88)	- (0.0)	3 (88.4)
노동 ^{주)}	6.1	429 (100.0)	87 (20.4)	42 (9.7)	14 (3.2)	0 (0.0)	1 (0.3)	7 (1.7)	23 (5.4)	341 (79.6)	84 (19.6)	257 (60.0)
실업	6.2	433 (100.0)	0 (0.0)	0 (0.0)	0 (0.0)	- (0.0)	- (0.0)	0 (0.0)	- (0.0)	432 (100.0)	3 (0.7)	429 (99.2)
주거	1.5	102 (100.0)	7 (6.8)	0 (0.0)	0 (0.1)	- (0.0)	- (0.0)	4 (4.4)	2 (2.3)	95 (93.2)	- (0.0)	95 (93.2)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36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6〉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976 (100.0)	2,666 (38.2)	944 (13.5)	861 (12.3)	83 (1.2)	3,366 (48.2)	2,421 (34.7)	630 (9.0)	314 (4.5)
노령	43.6	3,041 (100.0)	600 (19.7)	277 (9.1)	268 (8.8)	9 (0.3)	2,164 (71.2)	2,164 (71.2)	0 (0.0)	- -
유족	9.0	627 (100.0)	343 (54.8)	26 (4.1)	19 (3.0)	7 (1.1)	257 (41.1)	229 (36.6)	- -	28 (4.5)
질병 및 장애	13.3	926 (100.0)	480 (51.8)	134 (14.5)	118 (12.8)	16 (1.7)	312 (33.7)	26 (2.8)	- -	286 (30.9)
가족 및 자녀	12.9	898 (100.0)	466 (51.9)	361 (40.2)	332 (36.9)	29 (3.3)	71 (8.0)	- -	71 (8.0)	- -
기타 사회 보호	1.6	112 (100.0)	77 (68.5)	35 (31.5)	29 (26.3)	6 (5.2)	0 (0.0)	0 (0.0)	- -	- -
기타 사회적 배제	5.8	406 (100.0)	343 (84.4)	63 (15.6)	58 (14.4)	5 (1.2)	- -	- -	- -	- -
사회 보호 R&D	0.1	4 (100.0)	4 (100.0)	- -	- -	- -	- -	- -	- -	- -
노동 ^{주)}	6.1	429 (100.0)	263 (61.3)	38 (8.8)	27 (6.2)	11 (2.6)	128 (29.9)	- -	128 (29.9)	- -
실업	6.2	433 (100.0)	1 (0.2)	- (0.0)	- (0.0)	- (0.0)	432 (99.8)	1 (0.2)	431 (99.5)	- -
주거	1.5	102 (100.0)	90 (89.0)	10 (10.2)	10 (9.8)	0 (0.4)	1 (0.8)	1 (0.8)	- -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7〉대구지역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976 (100.0)	2,666 (38.2)	944 (13.5)	861 (12.3)	83 (1.2)	3,366 (48.2)	2,421 (34.7)	630 (9.0)	314 (4.5)	
행정 비용	소계	10.0	701 (100.0)	271 (38.7)	288 (41.1)	259 (36.9)	30 (4.2)	141 (20.2)	73 (10.5)	33 (4.6)	35 (5.1)
	비용자 보상	1.5	108 (100.0)	54 (49.6)	28 (26.2)	28 (25.5)	1 (0.7)	26 (24.2)	23 (21.1)	3 (3.0)	0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	83 (100.0)	26 (30.8)	9 (11.1)	3 (3.7)	6 (7.4)	48 (58.0)	42 (51.0)	6 (6.9)	0 (0.1)
	이자	0.0	1 (100.0)	1 (93.0)	- (0.0)	- (0.0)	- (0.0)	0 (7.0)	- (0.0)	0 (7.0)	- (0.0)
	기타 비용	0.0	3 (100.0)	3 (75.9)	- (0.0)	- (0.0)	- (0.0)	1 (24.1)	0 (6.7)	1 (17.0)	0 (0.4)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5.9	412 (100.0)	162 (39.2)	246 (59.7)	226 (54.9)	20 (4.8)	4 (1.1)	4 (0.9)	0 (0.1)	0 (0.1)
	출연	1.3	94 (100.0)	27 (29.1)	5 (5.0)	2 (2.0)	3 (3.0)	62 (65.8)	4 (4.5)	22 (24.0)	35 (37.3)
	소계	90.0	6,275 (100.0)	2,395 (38.2)	656 (10.5)	602 (9.6)	53 (0.9)	3,225 (51.4)	2,348 (37.4)	598 (9.5)	279 (4.4)
이 전 지 출	보조금	10.5	733 (100.0)	729 (99.4)	2 (0.3)	1 (0.1)	1 (0.2)	2 (0.3)	1 (0.1)	1 (0.1)	0 (0.0)
	사회 급여	79.4	5,542 (100.0)	1,666 (30.1)	654 (11.8)	601 (10.9)	52 (0.9)	3,222 (58.1)	2,347 (42.4)	597 (10.8)	279 (5.0)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8〉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6,976,429	4,015,436	2,259,994	700,999
노령	3,040,938	2,818,385	106,596	115,956
유족	626,549	222,528	372,265	31,756
질병 및 장애	926,282	95,252	688,102	142,928
가족 및 자녀	898,149	191,821	447,350	258,978
기타 사회보호	111,989	1	78,561	33,428
기타 사회적 배제	405,879	289,044	93,803	23,032
사회보호R&D	3,705	-	3,275	430
노동 ^{주)}	428,756	-	341,311	87,444
실업	432,659	398,405	34,062	193
주거	101,524	-	94,669	6,855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9〉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6,588 (100.0)	631 (9.6)	103 (1.6)	68 (1.0)	0 (0.0)	2 (0.0)	350 (5.3)	108 (1.6)	5,957 (90.4)	120 (1.8)	5,838 (88.6)
노령	42.8	2,818 (100.0)	114 (4.1)	33 (1.2)	28 (1.0)	- (0.0)	0 (0.0)	49 (1.7)	4 (0.1)	2,703 (95.9)	2 (0.1)	2,701 (95.9)
유족	4.5	295 (100.0)	39 (13.3)	2 (0.8)	3 (1.0)	- (0.0)	0 (0.0)	31 (10.6)	3 (0.9)	255 (86.7)	8 (2.7)	248 (84.1)
질병및 장애	9.6	631 (100.0)	126 (20.1)	9 (1.4)	2 (0.3)	- (0.0)	0 (0.0)	71 (11.3)	45 (7.1)	504 (79.9)	0 (0.0)	504 (79.9)
가족및 자녀	17.8	1,173 (100.0)	173 (14.8)	8 (0.7)	13 (1.1)	- (0.0)	0 (0.0)	142 (12.1)	10 (0.9)	1,000 (85.2)	3 (0.3)	997 (85.0)
기타 사회 보호	0.5	36 (100.0)	24 (66.1)	5 (12.7)	3 (8.3)	- (0.5)	0 (0.5)	16 (44.6)	0 (0.0)	12 (33.9)	0 (0.7)	12 (33.2)
기타 사회적 배제	6.3	413 (100.0)	29 (7.1)	2 (0.5)	1 (0.3)	- (0.0)	- (0.0)	14 (3.3)	12 (2.9)	384 (92.9)	0 (0.1)	383 (92.8)
사회 보호 R&D	0.1	4 (100.0)	1 (11.6)	0 (1.0)	0 (6.4)	- (0.2)	0 (0.2)	0 (4.0)	- (0.0)	4 (88.4)	- (0.0)	4 (88.4)
노동 ^{주)}	7.7	509 (100.0)	96 (18.9)	39 (7.8)	17 (3.3)	0 (0.0)	1 (0.3)	6 (1.1)	32 (6.3)	413 (81.1)	102 (20.0)	311 (61.2)
실업	9.0	592 (100.0)	7 (1.2)	4 (0.6)	1 (0.1)	- (0.0)	- (0.0)	2 (0.4)	- (0.0)	586 (98.8)	4 (0.7)	582 (98.2)
주거	1.8	118 (100.0)	21 (18.2)	0 (0.0)	0 (0.1)	- (0.0)	- (0.0)	18 (15.7)	3 (2.4)	96 (81.8)	- (0.0)	96 (81.8)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4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10〉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588 (100.0)	2,166 (32.9)	1,284 (19.5)	1,068 (16.2)	217 (3.3)	3,137 (47.6)	2,012 (30.5)	830 (12.6)	295 (4.5)
노령	42.8	2,818 (100.0)	615 (21.8)	412 (14.6)	325 (11.5)	87 (3.1)	1,790 (63.5)	1,790 (63.5)	0 (0.0)	- (-)
유족	4.5	295 (100.0)	8 (2.6)	78 (26.5)	56 (19.2)	22 (7.3)	209 (70.9)	189 (64.2)	- (-)	20 (6.7)
질병 및 장애	9.6	631 (100.0)	191 (30.3)	133 (21.2)	122 (19.3)	12 (1.9)	306 (48.5)	31 (4.9)	- (-)	275 (43.6)
가족 및 자녀	17.8	1,173 (100.0)	562 (47.9)	522 (44.5)	467 (39.8)	55 (4.7)	89 (7.6)	- (-)	89 (7.6)	- (-)
기타 사회 보호	0.5	36 (100.0)	11 (29.6)	25 (70.4)	19 (53.8)	6 (16.5)	0 (0.0)	0 (0.0)	- (-)	- (-)
기타 사회적 배제	6.3	413 (100.0)	348 (84.4)	65 (15.6)	53 (12.7)	12 (2.9)	- (-)	- (-)	- (-)	- (-)
사회 보호 R&D	0.1	4 (100.0)	4 (100.0)	- (-)	- (-)	- (-)	- (-)	- (-)	- (-)	- (-)
노동 ^{주)}	7.7	509 (100.0)	312 (61.3)	29 (5.6)	10 (2.0)	18 (3.6)	168 (33.1)	- (-)	168 (33.1)	- (-)
실업	9.0	592 (100.0)	9 (1.5)	9 (1.5)	5 (0.8)	4 (0.7)	575 (97.0)	1 (0.2)	573 (96.8)	- (-)
주거	1.8	118 (100.0)	107 (90.5)	11 (9.1)	11 (9.1)	0 (0.0)	0 (0.4)	0 (0.4)	- (-)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11〉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588 (100.0)	2,166 (32.9)	1,284 (19.5)	1,068 (16.2)	217 (3.3)	3,137 (47.6)	2,012 (30.5)	830 (12.6)	295 (4.5)
행정 비용	소계	9.6 (100.0)	631 (33.3)	210 (45.3)	286 (34.5)	68 (10.9)	135 (21.4)	59 (9.4)	43 (6.8)	33 (5.3)
	피용자 보상	1.6 (100.0)	103 (44.6)	46 (28.4)	19 (18.2)	10 (10.2)	28 (27.0)	23 (22.7)	4 (4.1)	0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0 (100.0)	68 (29.8)	20 (17.0)	7 (9.6)	5 (7.3)	36 (53.2)	28 (41.9)	8 (11.1)	0 (0.2)
	이자	0.0 (100.0)	0 (0.0)	- (0.0)	- (0.0)	- (0.0)	0 (100.0)	- (0.0)	0 (100.0)	- (0.0)
	기타 비용	0.0 (100.0)	2 (57.2)	1 (0.0)	- (0.0)	- (0.0)	1 (42.8)	0 (10.4)	1 (31.8)	0 (0.5)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5.3 (100.0)	350 (31.9)	111 (67.1)	234 (54.7)	43 (12.4)	4 (1.0)	3 (0.8)	1 (0.2)	0 (0.1)
	출연	1.6 (100.0)	108 (28.7)	31 (9.9)	11 (0.9)	1 (8.9)	66 (61.4)	4 (3.8)	30 (27.3)	33 (30.3)
	소계	90.4 (100.0)	5,957 (32.8)	1,956 (16.8)	999 (14.3)	148 (2.5)	3,002 (50.4)	1,953 (32.8)	788 (13.2)	261 (4.4)
이 전 지 출	보조금	1.8 (100.0)	120 (87.5)	105 (10.2)	12 (8.7)	10 (1.5)	3 (2.3)	1 (1.1)	1 (1.2)	0 (0.0)
	사회 급여	88.6 (100.0)	5,838 (31.7)	1,852 (16.9)	986 (14.4)	840 (2.5)	3,000 (51.4)	1,952 (33.4)	786 (13.5)	261 (4.5)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개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12〉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6,588,169	3,793,051	2,164,431	630,687
노령	2,817,508	2,499,540	203,755	114,213
유족	294,534	183,879	71,594	39,061
질병 및 장애	630,634	97,791	406,357	126,487
가족 및 자녀	1,173,160	197,812	802,222	173,126
기타 사회보호	36,219	14	12,255	23,950
기타 사회적 배제	413,001	282,885	100,961	29,155
사회보호 R&D	4,493	-	3,972	521
노동 ^{주)}	508,545	-	412,580	95,966
실업	592,415	531,130	54,455	6,829
주거	117,661	-	96,282	21,379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13〉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비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5,185 (100.0)	552 (10.7)	80 (1.5)	66 (1.3)	1 (0.0)	3 (0.1)	339 (6.5)	64 (1.2)	4,633 (89.3)	696 (13.4)	3,937 (75.9)
노령	37.9	1,968 (100.0)	76 (3.9)	13 (0.7)	33 (1.7)	- (0.0)	0 (0.0)	28 (1.4)	2 (0.1)	1,891 (96.1)	0 (0.0)	1,891 (96.1)
유족	10.3	535 (100.0)	27 (5.1)	9 (1.6)	7 (1.3)	0 (0.0)	1 (0.1)	7 (1.4)	4 (0.7)	508 (94.9)	317 (59.2)	191 (35.7)
질병및 장애	14.6	759 (100.0)	123 (16.2)	16 (2.2)	6 (0.7)	0 (0.0)	1 (0.1)	67 (8.8)	33 (4.3)	637 (83.8)	265 (34.9)	372 (49.0)
가족및 자녀	12.4	644 (100.0)	219 (34.1)	2 (0.4)	6 (0.9)	- (0.0)	0 (0.0)	208 (32.2)	4 (0.6)	425 (65.9)	1 (0.1)	424 (65.8)
기타 사회 보호	1.7	88 (100.0)	18 (21.0)	6 (6.7)	3 (3.0)	0 (0.0)	0 (0.3)	8 (8.9)	2 (2.0)	69 (79.0)	61 (69.9)	8 (9.1)
기타 사회적 배제	11.9	618 (100.0)	26 (4.2)	12 (2.0)	3 (0.5)	- (0.0)	- (0.0)	6 (1.0)	5 (0.8)	592 (95.8)	1 (0.1)	591 (95.6)
사회 보호 R&D	0.0	2 (100.0)	0 (11.6)	0 (1.0)	0 (6.4)	- (0.0)	0 (0.2)	0 (4.0)	- (0.0)	2 (88.4)	- (0.0)	2 (88.4)
노동 ^{주)}	4.9	255 (100.0)	46 (18.0)	20 (7.9)	9 (3.4)	0 (0.0)	1 (0.3)	2 (1.0)	14 (5.5)	209 (82.0)	50 (19.6)	159 (62.3)
실업	4.7	246 (100.0)	2 (0.7)	1 (0.6)	0 (0.1)	- (0.0)	- (0.0)	0 (0.0)	- (0.0)	244 (99.3)	2 (0.7)	242 (98.6)
주거	1.3	70 (100.0)	14 (20.0)	0 (0.0)	0 (0.2)	- (0.0)	- (0.0)	12 (17.8)	1 (2.0)	56 (80.0)	0 (0.0)	56 (80.0)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44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14〉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5,185 (100.0)	2,227 (42.9)	705 (13.6)	640 (12.3)	65 (1.3)	2,254 (43.5)	1,645 (31.7)	359 (6.9)	250 (4.8)
노령	37.9	1,968 (100.0)	315 (16.0)	176 (8.9)	157 (8.0)	19 (1.0)	1,476 (75.0)	1,476 (75.0)	0 (0.0)	-
유족	10.3	535 (100.0)	342 (63.9)	11 (2.1)	4 (0.8)	7 (1.3)	182 (34.0)	151 (28.1)	-	31 (5.9)
질병 및 장애	14.6	759 (100.0)	424 (55.9)	100 (13.2)	95 (12.5)	5 (0.7)	235 (30.9)	16 (2.1)	-	219 (28.8)
가족 및 자녀	12.4	644 (100.0)	337 (52.4)	261 (40.5)	243 (37.7)	19 (2.9)	46 (7.1)	-	46 (7.1)	-
기타 사회 보호	1.7	88 (100.0)	74 (84.5)	14 (15.5)	11 (12.1)	3 (3.5)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11.9	618 (100.0)	507 (82.0)	112 (18.0)	107 (17.3)	5 (0.8)	-	-	-	-
사회 보호 R&D	0.0	2 (100.0)	2 (100.0)	-	-	-	-	-	-	-
노동 ^{주)}	4.9	255 (100.0)	164 (64.3)	19 (7.4)	12 (4.8)	6 (2.5)	72 (28.3)	-	72 (28.3)	-
실업	4.7	246 (100.0)	3 (1.1)	1 (0.6)	1 (0.6)	0 (0.0)	242 (98.3)	1 (0.2)	241 (98.1)	-
주거	1.3	70 (100.0)	58 (83.3)	11 (15.6)	10 (14.5)	1 (1.1)	1 (1.0)	1 (1.0)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15〉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5,185 (100.0)	2,227 (42.9)	705 (13.6)	640 (12.3)	65 (1.3)	2,254 (43.5)	1,645 (31.7)	359 (6.9)	250 (4.8)
소계	10.7	552 (100.0)	238 (43.1)	215 (39.0)	188 (34.1)	27 (4.9)	99 (17.9)	52 (9.5)	18 (3.3)	28 (5.1)
행정 비용	피용자 보상	1.5	80 (100.0)	53 (66.3)	13 (15.7)	12 (14.5)	14 (18.1)	12 (15.6)	2 (2.3)	0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3	66 (100.0)	21 (31.4)	7 (11.0)	3 (4.8)	4 (6.3)	38 (57.6)	35 (52.5)	3 (4.9)
	이자	0.0	1 (100.0)	1 (96.0)	- (0.0)	- (0.0)	- (0.0)	0 (4.0)	- (0.0)	0 (4.0)
	기타 비용	0.1	3 (100.0)	2 (82.6)	- (0.0)	- (0.0)	- (0.0)	0 (17.4)	0 (4.4)	0 (12.6)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6.5	339 (100.0)	146 (43.2)	189 (55.9)	173 (50.9)	17 (4.9)	3 (0.9)	3 (0.8)	0 (0.1)
	출연	1.2	64 (100.0)	15 (23.8)	6 (9.5)	1 (1.7)	5 (7.8)	43 (66.7)	2 (3.5)	13 (19.7)
이 전 지 출	소계	89.3	4,633 (100.0)	1,989 (42.9)	490 (10.6)	451 (9.7)	38 (0.8)	2,155 (46.5)	1,592 (34.4)	341 (7.4)
	보조금	13.4	696 (100.0)	694 (99.7)	1 (0.1)	0 (0.1)	1 (0.1)	1 (0.2)	1 (0.1)	1 (0.1)
	사회 급여	75.9	3,937 (100.0)	1,295 (32.9)	489 (12.4)	451 (11.5)	38 (1.0)	2,154 (54.7)	1,592 (40.4)	340 (8.6)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46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16〉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5,185,424	2,500,984	2,132,042	552,397
노령	1,967,648	1,787,922	103,493	76,233
유족	535,186	145,694	361,996	27,496
질병 및 장애	759,491	58,546	578,153	122,792
가족 및 자녀	644,075	122,042	302,723	219,310
기타 사회보호	87,916	0	69,467	18,448
기타 사회적 배제	618,443	163,709	428,480	26,255
사회보호R&D	2,213	-	1,956	257
노동 ^{주)}	254,895	-	208,918	45,977
실업	245,877	223,071	21,106	1,700
주거	69,679	-	55,751	13,929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17〉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비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4,904 (100.0)	481 (9.8)	77 (1.6)	59 (1.2)	1 (0.0)	2 (0.0)	272 (5.6)	70 (1.4)	4,423 (90.2)	548 (11.2)	3,875 (79.0)
노령	39.1	1,919 (100.0)	85 (4.4)	25 (1.3)	29 (1.5)	- (0.0)	0 (0.0)	26 (1.3)	5 (0.2)	1,834 (95.6)	0 (0.0)	1,834 (95.6)
유족	9.5	466 (100.0)	42 (9.0)	7 (1.5)	6 (1.2)	0 (0.0)	0 (0.1)	26 (5.5)	3 (0.6)	424 (91.0)	244 (52.4)	180 (38.6)
질병및 장애	14.6	714 (100.0)	119 (16.7)	13 (1.9)	4 (0.6)	0 (0.0)	1 (0.1)	67 (9.5)	33 (4.7)	594 (83.3)	204 (28.5)	391 (54.7)
가족및 자녀	13.7	673 (100.0)	140 (20.8)	3 (0.5)	8 (1.2)	1 (0.0)	0 (0.0)	126 (18.7)	2 (0.3)	533 (79.2)	0 (0.0)	533 (79.2)
기타 사회 보호	1.7	85 (100.0)	25 (29.2)	3 (3.4)	2 (2.7)	0 (0.0)	0 (0.3)	13 (15.2)	6 (8)	60 (70.8)	47 (55.4)	13 (15.4)
기타 사회적 배제	9.9	488 (100.0)	25 (5.0)	8 (1.6)	2 (0.3)	- (0.0)	- (0.0)	10 (2.0)	5 (1.0)	463 (95.0)	1 (0.1)	462 (94.8)
사회 보호 R&D	0.0	2 (100.0)	0 (11.6)	0 (1.0)	0 (6.4)	- (0.2)	0 (0.0)	0 (4.0)	- (0.0)	2 (88.4)	- (0.0)	2 (88.4)
노동 ^{주)}	5.0	246 (100.0)	41 (16.7)	17 (6.9)	8 (3.2)	0 (0.0)	1 (0.3)	1 (0.6)	14 (5.7)	205 (83.3)	51 (20.6)	154 (62.7)
실업	5.4	265 (100.0)	0 (0.0)	0 (0.0)	0 (0.0)	- (0.0)	- (0.0)	0 (0.0)	- (0.0)	265 (100.0)	2 (0.7)	263 (99.3)
주거	1.0	48 (100.0)	5 (10.0)	0 (0.0)	0 (0.1)	- (0.0)	- (0.0)	3 (6.9)	1 (2.9)	43 (90.0)	- (0.0)	43 (90.0)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18〉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4,904 (100.0)	1,896 (38.7)	728 (14.8)	651 (13.3)	77 (1.6)	2,280 (46.5)	1,617 (33.0)	405 (8.3)	258 (5.3)
노령	39.1	1,919 (100.0)	305 (15.9)	158 (8.2)	144 (7.5)	14 (0.7)	1,456 (75.9)	1,456 (75.9)	0 (0.0)	-
유족	9.5	466 (100.0)	265 (56.8)	34 (7.4)	14 (3.1)	20 (4.3)	167 (35.8)	142 (30.5)	-	25 (5.3)
질병 및 장애	14.6	714 (100.0)	354 (49.5)	109 (15.3)	107 (15.1)	2 (0.3)	251 (35.1)	17 (2.4)	-	233 (32.7)
가족 및 자녀	13.7	673 (100.0)	315 (46.8)	294 (43.7)	274 (40.7)	20 (2.9)	64 (9.5)	-	64 (9.5)	-
기타 사회 보호	1.7	85 (100.0)	56 (66.3)	29 (33.7)	18 (20.8)	11 (12.9)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9.9	488 (100.0)	400 (82.0)	88 (18.0)	85 (17.5)	3 (0.5)	-	-	-	-
사회 보호 R&D	0.0	2 (100.0)	2 (100.0)	-	-	-	-	-	-	-
노동 ^{주)}	5.0	246 (100.0)	156 (63.7)	12 (4.8)	4 (1.7)	8 (3.2)	77 (31.5)	-	77 (31.5)	-
실업	5.4	265 (100.0)	1 (0.2)	- (0.0)	- (0.0)	- (0.0)	264 (99.8)	1 (0.2)	264 (99.5)	-
주거	1.0	48 (100.0)	43 (89.5)	4 (9.2)	4 (9.2)	0 (0.0)	1 (1.3)	1 (1.3)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19〉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4,904 (100.0)	1,896 (38.7)	728 (14.8)	651 (13.3)	77 (1.6)	2,280 (46.5)	1,617 (33.0)	405 (8.3)	258 (5.3)	
소계	9.8	481 (100.0)	164 (34.1)	220 (45.6)	172 (35.8)	47 (9.9)	97 (20.2)	48 (10.0)	20 (4.1)	29 (6.1)	
행정 비용	피용자 보상	1.6	77 (100.0)	46 (60.3)	15 (20.0)	13 (17.4)	2 (2.6)	15 (19.6)	13 (16.9)	2 (2.5)	0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	59 (100.0)	17 (29.5)	8 (13.2)	2 (3.9)	5 (9.2)	34 (57.3)	30 (51.3)	3 (5.9)	0 (0.2)
	이자	0.0	1 (100.0)	0 (41.4)	1 (56.2)	- (0.0)	1 (56.2)	0 (2.4)	- (0.0)	0 (2.4)	- (0.0)
	기타 비용	0.0	2 (100.0)	2 (78.8)	- (0.0)	- (0.0)	- (0.0)	0 (21.2)	0 (5.4)	0 (15.3)	0 (0.5)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5.6	272 (100.0)	83 (30.4)	187 (68.5)	157 (57.5)	30 (11.1)	3 (1.1)	2 (0.9)	0 (0.1)	0 (0.1)
	출연	1.4	70 (100.0)	16 (22.2)	9 (13.3)	- (0.0)	9 (13.3)	45 (64.5)	2 (3.3)	14 (19.5)	29 (41.7)
	소계	90.2	4,423 (100.0)	1,732 (39.2)	508 (11.5)	479 (10.8)	29 (0.7)	2,183 (49.3)	1,568 (35.5)	386 (8.7)	229 (5.2)
이 전 지 출	보조금	11.2	548 (100.0)	546 (99.7)	1 (0.1)	0 (0.0)	0 (0.1)	1 (0.2)	1 (0.1)	1 (0.1)	0 (0.0)
	사회 급여	79.0	3,875 (100.0)	1,186 (30.6)	508 (13.1)	479 (12.4)	29 (0.7)	2,181 (56.3)	1,568 (40.5)	385 (9.9)	229 (5.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개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0〉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4,904,088	2,468,116	1,954,768	481,205
노령	1,918,522	1,769,557	64,438	84,527
유족	465,977	137,993	285,960	42,024
질병 및 장애	713,720	56,059	538,339	119,322
가족 및 자녀	672,508	116,856	415,795	139,857
기타 사회보호	85,071	1	60,228	24,842
기타 사회적 배제	487,528	143,235	319,690	24,604
사회보호 R&D	2,241	-	1,981	260
노동 ^{주)}	245,620	-	204,724	40,897
실업	265,111	244,415	20,579	116
주거	47,789	-	43,033	4,756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1〉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2,872 (100.0)	352 (12.3)	53 (1.9)	28 (1.0)	0 (0.0)	1 (0.0)	219 (7.6)	51 (1.8)	2,519 (87.7)	46 (1.6)	2,474 (86.1)	
노령	39.8	1,143 (100.0)	61 (5.4)	14 (1.2)	11 (1.0)	- (0.0)	0 (0.0)	35 (3.0)	2 (0.2)	1,082 (94.6)	2 (0.2)	1,080 (94.4)	
유족	4.1	119 (100.0)	11 (9.0)	1 (0.9)	1 (0.9)	- (0.0)	0 (0.0)	5 (4.3)	3 (2.9)	108 (91.0)	0 (0.0)	108 (91.0)	
질병및 장애	11.3	325 (100.0)	70 (21.6)	3 (0.9)	1 (0.2)	- (0.0)	0 (0.0)	41 (12.5)	26 (7.9)	255 (78.4)	0 (0.0)	255 (78.4)	
가족및 자녀	18.1	519 (100.0)	130 (25.0)	2 (0.5)	4 (0.9)	- (0.0)	0 (0.0)	121 (23.2)	2 (0.4)	390 (75.0)	1 (0.1)	389 (74.9)	
기타 사회 보호	0.5	13 (100.0)	8 (60.4)	2 (14.8)	1 (10.8)	- (0.5)	0 (0.5)	4 (34.2)	-	5 (39.6)	0 (2.0)	5 (37.7)	
기타 사회적 배제	8.4	240 (100.0)	13 (5.3)	2 (0.7)	1 (0.3)	- (0.0)	- (0.0)	6 (2.6)	4 (1.7)	228 (94.7)	0 (0.1)	227 (94.5)	
사회 보호 R&D	0.1	2 (100.0)	0 (11.6)	0 (1.0)	0 (6.4)	- (0.2)	0 (0.2)	0 (4.0)	-	2 (88.4)	-	2 (88.4)	
노동 ^{주)}	8.0	230 (100.0)	56 (24.4)	29 (12.4)	8 (3.5)	0 (0.0)	1 (0.3)	6 (2.4)	13 (5.8)	174 (75.6)	41 (17.7)	133 (57.9)	
실업	9.0	257 (100.0)	1 (0.5)	1 (0.5)	0 (0.0)	- (0.0)	- (0.0)	0 (0.0)	-	256 (99.5)	2 (0.7)	254 (98.8)	
주거	0.8	24 (100.0)	2 (9.8)	0 (0.0)	0 (0.1)	- (0.0)	- (0.0)	1 (5.1)	1 (4.6)	21 (90.2)	-	21 (90.2)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2〉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2,872 (100.0)	859 (29.9)	523 (18.2)	461 (16.0)	62 (2.2)	1,489 (51.9)	908 (31.6)	373 (13.0)	209 (7.3)
노령	39.8	1,143 (100.0)	187 (16.4)	134 (11.7)	124 (10.9)	9 (0.8)	822 (71.9)	822 (71.9)	0 (0.0)	- -
유족	4.1	119 (100.0)	1 (1.1)	17 (14.0)	15 (12.5)	2 (1.5)	101 (84.9)	72 (60.6)	- -	29 (24.3)
질병 및 장애	11.3	325 (100.0)	72 (22.2)	60 (18.5)	47 (14.6)	13 (3.9)	192 (59.2)	13 (3.9)	- -	180 (55.4)
가족 및 자녀	18.1	519 (100.0)	247 (47.6)	229 (44.1)	203 (39.1)	26 (5.0)	43 (8.3)	- -	43 (8.3)	- -
기타 사회 보호	0.5	13 (100.0)	4 (30.1)	9 (69.9)	7 (54.2)	2 (15.8)	0 (0.0)	0 (0.0)	- -	- -
기타 사회적 배제	8.4	240 (100.0)	192 (80.0)	48 (20.0)	46 (19.1)	2 (0.9)	- -	- -	- -	- -
사회 보호 R&D	0.1	2 (100.0)	2 (100.0)	- -	- -	- -	- -	- -	- -	- -
노동 ^{주)}	8.0	230 (100.0)	132 (57.4)	23 (10.1)	15 (6.6)	8 (3.5)	75 (32.6)	- -	75 (32.6)	- -
실업	9.0	257 (100.0)	1 (0.3)	1 (0.4)	1 (0.4)	- (0.0)	255 (99.3)	1 (0.2)	255 (99.1)	- -
주거	0.8	24 (100.0)	21 (88.5)	3 (10.8)	2 (9.8)	0 (0.9)	0 (0.7)	0 (0.7)	- -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3〉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2,872 (100.0)	859 (29.9)	523 (18.2)	461 (16.0)	62 (2.2)	1,489 (51.9)	908 (31.6)	373 (13.0)	209 (7.3)	
행정 비용	소계	12.3	352 (100.0)	106 (30.0)	177 (50.1)	146 (41.3)	31 (8.8)	70 (19.9)	27 (7.7)	19 (5.4)	24 (6.7)
	비용자 보상	1.9	53 (100.0)	22 (40.8)	17 (32.3)	17 (31.1)	1 (1.1)	14 (26.9)	12 (23.1)	2 (3.5)	0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0	28 (100.0)	8 (30.4)	5 (16.9)	2 (7.5)	3 (9.5)	15 (52.7)	11 (40.4)	3 (12.1)	0 (0.3)
	이자	0.0	0 (100.0)	- (0.0)	- (0.0)	- (0.0)	- (0.0)	0 (100.0)	- (0.0)	0 (100.0)	- (0.0)
	기타 비용	0.0	1 (100.0)	1 (52.4)	- (0.0)	- (0.0)	- (0.0)	0 (47.6)	0 (13.4)	0 (33.4)	0 (0.9)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7.6	219 (100.0)	63 (28.8)	154 (70.4)	127 (58.1)	27 (12.3)	2 (0.8)	1 (0.6)	0 (0.1)	0 (0.1)
	출연	1.8	51 (100.0)	12 (23.4)	1 (1.3)	- (0.0)	1 (1.3)	39 (75.3)	2 (4.3)	13 (25.5)	23 (45.4)
	소계	87.7	2,519 (100.0)	754 (29.9)	347 (13.8)	315 (12.5)	31 (1.2)	1,419 (56.3)	880 (34.9)	354 (14.0)	185 (7.3)
이 전 지 출	보조금	1.6	46 (100.0)	41 (90.2)	3 (7.1)	2 (4.2)	1 (2.9)	1 (2.7)	1 (1.3)	1 (1.4)	0 (0.0)
	사회 급여	86.1	2,474 (100.0)	712 (28.8)	343 (13.9)	313 (12.7)	30 (1.2)	1,418 (57.3)	880 (35.6)	353 (14.3)	185 (7.5)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4〉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2,871,812	1,526,798	992,561	352,453
노령	1,143,236	1,030,206	51,622	61,407
유족	118,764	69,929	38,180	10,654
질병 및 장애	324,874	33,590	221,227	70,058
가족 및 자녀	519,418	99,731	289,846	129,841
기타 사회보호	13,000	0	5,152	7,849
기타 사회적 배제	240,419	57,341	170,285	12,793
사회보호 R&D	1,744	-	1,542	202
노동 ^{주)}	229,534	-	173,516	56,018
실업	257,192	236,000	19,870	1,322
주거	23,629	-	21,320	2,309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5〉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693 (100.0)	78 (11.3)	9 (1.3)	9 (1.3)	0 (0.0)	0 (0.0)	52 (7.4)	9 (1.2)	615 (88.7)	26 (3.8)	589 (84.9)
노령	41.1	285 (100.0)	9 (3.3)	2 (0.6)	4 (1.2)	-	0 (0.0)	4 (1.4)	0 (0.1)	275 (96.7)	0 (0.0)	275 (96.7)
유족	3.1	22 (100.0)	3 (11.6)	0 (1.3)	1 (3.3)	-	0 (0.0)	1 (6.8)	0 (0.1)	19 (88.4)	0 (0.1)	19 (88.4)
질병및 장애	4.8	34 (100.0)	11 (33.4)	1 (3.4)	0 (1.1)	-	0 (0.1)	8 (24.0)	2 (4.8)	22 (66.6)	0 (0.0)	22 (66.6)
가족및 자녀	27.9	194 (100.0)	36 (18.7)	0 (0.3)	1 (0.6)	-	0 (0.0)	34 (17.7)	0 (0.2)	157 (81.3)	14 (7.2)	143 (74.1)
기타 사회 보호	1.0	7 (100.0)	5 (74.4)	0 (1.6)	1 (15.3)	-	0 (0.3)	2 (23.0)	2 34	2 (25.6)	0 (0.4)	2 (25.3)
기타 사회적 배제	6.5	45 (100.0)	3 (6.0)	1 (1.9)	0 (0.3)	-	-	1 (1.2)	1 (2.6)	43 (94.0)	0 (0.1)	43 (93.9)
사회 보호 R&D	0.1	1 (100.0)	0 (11.6)	0 (1.0)	0 (6.4)	-	0 (0.2)	0 (4.0)	-	0 (88.4)	-	0 (88.4)
노동 ^{주)}	8.1	56 (100.0)	10 (18.1)	5 (8.1)	2 (3.3)	0 (0.0)	0 (0.3)	1 (2.0)	2 (4.4)	46 (81.9)	12 (20.7)	34 (61.2)
실업	6.6	46 (100.0)	0 (0.0)	0 (0.0)	0 (0.0)	-	-	0 (0.0)	-	46 (100.0)	0 (0.7)	45 (99.3)
주거	0.7	5 (100.0)	1 (18.1)	0 (0.0)	0 (0.1)	-	-	1 (11.6)	0 (6.3)	4 (81.9)	-	4 (81.9)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 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6〉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93 (100.0)	234 (33.8)	158 (22.8)	102 (14.7)	56 (8.1)	301 (43.4)	232 (33.5)	69 (9.9)	- (0.0)
노령	41.1	285 (100.0)	44 (15.3)	29 (10.1)	23 (8.2)	5 (1.9)	212 (74.6)	212 (74.6)	0 (0.0)	- (0.0)
유족	3.1	22 (100.0)	1 (5.6)	3 (15.4)	1 (3.2)	3 (12.2)	17 (79.0)	17 (79.0)	- (0.0)	- (0.0)
질병 및 장애	4.8	34 (100.0)	18 (52.5)	13 (39.5)	10 (30.9)	3 (8.7)	3 (8.0)	3 (8.0)	- (0.0)	- (0.0)
가족 및 자녀	27.9	194 (100.0)	91 (47.2)	92 (47.6)	53 (27.2)	39 (20.4)	10 (5.2)	- (0.0)	10 (5.2)	- (0.0)
기타 사회 보호	1.0	7 (100.0)	1 (19.4)	6 (80.6)	3 (38.4)	3 (42.2)	0 (0.0)	0 (0.0)	- (0.0)	- (0.0)
기타 사회적 배제	6.5	45 (100.0)	36 (79.2)	9 (20.8)	9 (20.1)	0 (0.7)	- (0.0)	- (0.0)	- (0.0)	- (0.0)
사회 보호 R&D	0.1	1 (100.0)	1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노동 ^{주)}	8.1	56 (100.0)	38 (68.0)	5 (8.3)	3 (4.5)	2 (3.9)	13 (23.7)	- (0.0)	13 (23.7)	- (0.0)
실업	6.6	46 (100.0)	0 (0.2)	- (0.0)	- (0.0)	- (0.0)	45 (99.8)	0 (0.2)	45 (99.5)	- (0.0)
주거	0.7	5 (100.0)	4 (82.9)	1 (15.7)	1 (15.7)	- (0.0)	0 (1.5)	0 (1.5)	- (0.0)	- (0.0)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7〉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93 (100.0)	234 (33.8)	158 (22.8)	102 (14.7)	56 (8.1)	301 (43.4)	232 (33.5)	69 (9.9)	- (0.0)	
소계	11.3	78 (100.0)	33 (41.8)	36 (46.2)	21 (26.8)	15 (19.5)	9 (12.0)	6 (7.7)	3 (4.3)	- (0.0)	
행정 비용	피용자 보상	1.3	9 (100.0)	5 (50.0)	2 (25.8)	1 (11.0)	1 (14.8)	2 (24.2)	2 (20.5)	0 (3.7)	- (0.0)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3	9 (100.0)	2 (27.1)	2 (26.3)	1 (8.4)	2 (17.9)	4 (46.6)	4 (39.9)	1 (6.8)	- (0.0)
	이자	0.0	0 (100.0)	- (0.0)	- (0.0)	- (0.0)	- (0.0)	0 (100.0)	- (0.0)	0 (100.0)	- (0.0)
	기타 비용	0.0	0 (100.0)	0 (66.6)	- (0.0)	- (0.0)	- (0.0)	0 (33.4)	0 (7.9)	0 (25.5)	- (0.0)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7.4	52 (100.0)	22 (42.8)	29 (56.6)	17 (32.7)	12 (23.9)	0 (0.7)	0 (0.6)	0 (0.1)	- (0.0)
	출연	1.2	9 (100.0)	4 (41.4)	2 (27.9)	2 (27.9)	- (0.0)	3 (30.7)	0 (3.6)	2 (27.1)	- (0.0)
	소계	88.7	615 (100.0)	201 (32.8)	122 (19.8)	81 (13.2)	41 (6.6)	292 (47.4)	226 (36.8)	65 (10.6)	- (0.0)
이 전 지 출	보조금	3.8	26 (100.0)	14 (54.8)	12 (44.3)	2 (9.2)	9 (35.1)	0 (0.8)	0 (0.4)	0 (0.4)	- (0.0)
	사회 급여	84.9	589 (100.0)	187 (31.8)	110 (18.7)	79 (13.3)	32 (5.4)	292 (49.5)	226 (38.4)	65 (11.1)	- (0.0)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개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8〉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693,400	382,676	232,232	78,492
노령	284,680	257,826	17,431	9,422
유족	21,752	16,710	2,525	2,516
질병 및 장애	33,540	7,079	15,256	11,204
가족 및 자녀	193,508	47,975	109,345	36,189
기타 사회보호	7,049	0	1,805	5,243
기타 사회적 배제	45,292	11,060	31,513	2,720
사회보호 R&D	518	-	457	60
노동 ^{주)}	56,381	-	46,184	10,197
실업	45,594	42,026	3,548	20
주거	5,087	-	4,166	920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29〉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비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30,219 (100.0)	2,944 (9.7)	409 (1.4)	320 (1.1)	0 (0.0)	11 (0.0)	1,641 (5.4)	563 (1.9)	27,275 (90.3)	542 (1.8)	26,733 (88.5)
노령	40.7	12,304 (100.0)	393 (3.2)	101 (0.8)	139 (1.1)	- (0.0)	1 (0.0)	136 (1.1)	16 (0.1)	11,911 (96.8)	17 (0.1)	11,893 (96.7)
유족	4.4	1,329 (100.0)	152 (11.4)	11 (0.8)	17 (1.2)	- (0.0)	0 (0.0)	103 (7.8)	21 (1.6)	1,178 (88.6)	29 (2.2)	1,148 (86.4)
질병및 장애	9.1	2,739 (100.0)	619 (22.6)	35 (1.3)	8 (0.3)	- (0.0)	1 (0.0)	379 (13.9)	195 (7.1)	2,120 (77.4)	2 (0.1)	2,118 (77.3)
가족및 자녀	20.1	6,059 (100.0)	1,091 (18.0)	36 (0.6)	52 (0.9)	- (0.0)	1 (0.0)	896 (14.8)	107 (1.8)	4,968 (82.0)	18 (0.3)	4,950 (81.7)
기타 사회 보호	0.7	197 (100.0)	105 (53.4)	24 (12.4)	13 (6.8)	- (0.0)	1 (0.4)	52 (26.5)	14 (7.3)	92 (46.6)	2 (0.8)	90 (45.8)
기타 사회적 배제	8.7	2,624 (100.0)	110 (4.2)	10 (0.4)	11 (0.4)	- (0.0)	- (0.0)	43 (1.6)	46 (1.7)	2,514 (95.8)	3 (0.1)	2,511 (95.7)
사회 보호 R&D	0.1	20 (100.0)	2 (11.6)	0 (1.0)	1 (6.4)	- (0.0)	0 (0.2)	1 (4.0)	- (0.0)	18 (88.4)	- (0.0)	18 (88.4)
노동 ^{주)}	7.4	2,244 (100.0)	444 (19.8)	188 (8.4)	77 (3.4)	0 (0.0)	6 (0.3)	21 (0.9)	152 (6.8)	1,799 (80.2)	455 (20.3)	1,345 (59.9)
실업	7.8	2,353 (100.0)	5 (0.2)	3 (0.1)	1 (0.1)	- (0.0)	- (0.0)	0 (0.0)	- (0.0)	2,348 (99.8)	16 (0.7)	2,332 (99.1)
주거	1.2	351 (100.0)	23 (6.6)	0 (0.0)	1 (0.2)	- (0.0)	- (0.0)	10 (2.9)	13 (3.6)	328 (93.4)	- (0.0)	328 (93.4)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0〉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30,219 (100.0)	9,329 (30.9)	6,198 (20.5)	4,923 (16.3)	1,274 (4.2)	14,692 (48.6)	9,849 (32.6)	3,482 (11.5)	1,361 (4.5)
노령	40.7	12,304 (100.0)	2,201 (17.9)	1,265 (10.3)	1,135 (9.2)	131 (1.1)	8,838 (71.8)	8,838 (71.8)	0 (0.0)	-
유족	4.4	1,329 (100.0)	24 (1.8)	253 (19.0)	96 (7.2)	157 (11.8)	1,052 (79.1)	874 (65.8)	-	178 (13.4)
질병 및 장애	9.1	2,739 (100.0)	741 (27.1)	686 (25.0)	545 (19.9)	141 (5.1)	1,312 (47.9)	129 (4.7)	-	1,183 (43.2)
가족 및 자녀	20.1	6,059 (100.0)	2,579 (42.6)	3,025 (49.9)	2,544 (42.0)	481 (7.9)	455 (7.5)	-	455 (7.5)	-
기타 사회 보호	0.7	197 (100.0)	55 (27.9)	142 (72.1)	16 (8.0)	126 (64.1)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8.7	2,624 (100.0)	2,014 (76.7)	610 (23.3)	489 (18.6)	121 (4.6)	-	-	-	-
사회 보호 R&D	0.1	20 (100.0)	20 (100.0)	-	-	-	-	-	-	-
노동 ^{주)}	7.4	2,244 (100.0)	1,390 (61.9)	165 (7.4)	53 (2.4)	112 (5.0)	689 (30.7)	-	689 (30.7)	-
실업	7.8	2,353 (100.0)	6 (0.3)	3 (0.1)	2 (0.1)	1 (0.1)	2,343 (99.6)	6 (0.2)	2,338 (99.4)	-
주거	1.2	351 (100.0)	300 (85.4)	48 (13.8)	44 (12.6)	4 (1.2)	3 (0.8)	3 (0.8)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1〉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30,219 (100.0)	9,329 (30.9)	6,198 (20.5)	4,923 (16.3)	1,274 (4.2)	14,692 (48.6)	9,849 (32.6)	3,482 (11.5)	1,361 (4.5)
소계	9.7	2,944 (100.0)	890 (30.2)	1,447 (49.1)	832 (28.2)	615 (20.9)	607 (20.6)	278 (9.4)	175 (5.9)	154 (5.2)
행 정 비 용	1.4	409 (100.0)	176 (43.1)	113 (27.7)	35 (8.5)	78 (19.2)	120 (29.2)	102 (24.8)	17 (4.2)	1 (0.2)
피용자 보상	1.1	320 (100.0)	92 (28.8)	52 (16.4)	14 (4.3)	38 (12.0)	175 (54.8)	144 (45.0)	31 (9.7)	1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0.0	0 (100.0)	- (0.0)	0 (10.3)	- (0.0)	0 (10.3)	0 (89.7)	- (0.0)	0 (89.7)	- (0.0)
이자	0.0	11 (100.0)	6 (59.1)	- (0.0)	- (0.0)	- (0.0)	4 (40.9)	1 (10.2)	3 (30.1)	0 (0.6)
기타 비용	5.4	1,641 (100.0)	476 (29.0)	1,148 (69.9)	782 (47.6)	366 (22.3)	17 (1.0)	14 (0.8)	2 (0.1)	1 (0.1)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1.9	563 (100.0)	139 (24.7)	133 (23.7)	1 (0.2)	132 (23.5)	290 (51.6)	18 (3.1)	121 (21.5)	152 (27.0)
출연	90.3	27,275 (100.0)	8,439 (30.9)	4,751 (17.4)	4,092 (15.0)	659 (2.4)	14,085 (51.6)	9,571 (35.1)	3,307 (12.1)	1,207 (4.4)
이 전 지 출	1.8	542 (100.0)	471 (87.0)	59 (10.9)	17 (3.2)	42 (7.7)	11 (2.1)	6 (1.0)	6 (1.1)	0 (0.0)
보조금	88.5	26,733 (100.0)	7,968 (29.8)	4,692 (17.6)	4,075 (15.2)	617 (2.3)	14,074 (52.6)	9,566 (35.8)	3,301 (12.3)	1,207 (4.5)
사회 급여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2〉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30,219,137	16,657,910	10,617,133	2,944,093
노령	12,304,135	11,399,014	511,843	393,278
유족	1,329,462	851,037	326,788	151,637
질병 및 장애	2,738,825	376,107	1,743,952	618,766
가족 및 자녀	6,059,014	1,185,089	3,782,506	1,091,418
기타 사회보호	196,560	5	91,659	104,896
기타 사회적 배제	2,623,996	681,822	1,832,274	109,900
사회보호 R&D	20,118	-	17,785	2,334
노동 ^{주)}	2,243,527	-	1,799,403	444,124
실업	2,352,740	2,164,835	183,371	4,534
주거	350,760	-	327,553	23,207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3〉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비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5,963 (100.0)	1,098 (18.4)	139 (2.3)	79 (1.3)	0 (0.0)	1 (0.0)	780 (13.1)	99 (1.7)	4,865 (81.6)	97 (1.6)	4,768 (80.0)
노령	45.8	2,730 (100.0)	153 (5.6)	37 (1.4)	38 (1.4)	- (0.0)	0 (0.0)	75 (2.8)	2 (0.1)	2,577 (94.4)	2 (0.1)	2,575 (94.3)
유족	6.0	357 (100.0)	42 (11.7)	3 (0.9)	6 (1.6)	- (0.0)	0 (0.0)	21 (5.8)	12 (3.4)	315 (88.3)	4 (1.1)	312 (87.3)
질병및 장애	12.7	758 (100.0)	166 (21.9)	10 (1.3)	2 (0.2)	- (0.0)	0 (0.0)	93 (12.2)	61 (8.1)	592 (78.1)	1 (0.1)	591 (78.0)
가족및 자녀	12.1	720 (100.0)	206 (28.7)	6 (0.9)	14 (1.9)	- (0.0)	0 (0.0)	184 (25.5)	3 (0.4)	514 (71.3)	16 (2.2)	497 (69.1)
기타 사회 보호	0.7	39 (100.0)	25 (62.9)	2 (4.8)	3 (8.0)	- (0.2)	0 (0.0)	19 (49.8)	0 (0.0)	15 (37.1)	1 (3.0)	13 (34.2)
기타 사회적 배제	10.1	602 (100.0)	348 (57.8)	6 (1.1)	3 (0.5)	- (0.0)	- (0.0)	333 (55.4)	5 (0.9)	254 (42.2)	1 (0.1)	253 (42.1)
사회 보호 R&D	0.0	2 (100.0)	0 (11.6)	0 (1.0)	0 (6.4)	- (0.2)	0 (0.0)	0 (4.0)	- (0.0)	2 (88.4)	- (0.0)	2 (88.4)
노동 ^{주)}	6.4	381 (100.0)	101 (26.5)	65 (17.2)	13 (3.3)	0 (0.0)	1 (0.2)	9 (2.2)	14 (3.6)	280 (73.5)	68 (17.7)	213 (55.8)
실업	4.6	272 (100.0)	9 (3.5)	8 (3.1)	1 (0.4)	- (0.0)	- (0.0)	0 (0.0)	- (0.0)	263 (96.5)	5 (1.8)	258 (94.7)
주거	1.7	101 (100.0)	48 (47.6)	0 (0.0)	0 (0.3)	- (0.0)	- (0.0)	46 (45.8)	1 (1.4)	53 (52.4)	0 (0.1)	53 (52.3)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4〉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5,963 (100.0)	1,713 (28.7)	1,226 (20.6)	899 (15.1)	328 (5.5)	3,024 (50.7)	2,058 (34.5)	378 (6.3)	587 (9.9)
노령	45.8	2,730 (100.0)	556 (20.4)	330 (12.1)	265 (9.7)	64 (2.4)	1,844 (67.6)	1,844 (67.6)	0 (0.0)	-
유족	6.0	357 (100.0)	3 (0.8)	57 (15.9)	12 (3.5)	44 (12.4)	297 (83.2)	191 (53.4)	-	107 (29.9)
질병 및 장애	12.7	758 (100.0)	129 (17.0)	127 (16.8)	75 (9.9)	52 (6.9)	502 (66.2)	21 (2.8)	-	481 (63.4)
가족 및 자녀	12.1	720 (100.0)	302 (42.0)	368 (51.1)	296 (41.1)	72 (10.0)	50 (6.9)	-	50 (6.9)	-
기타 사회 보호	0.7	39 (100.0)	8 (20.2)	31 (79.8)	12 (29.6)	20 (50.3)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10.1	602 (100.0)	463 (76.9)	139 (23.1)	117 (19.4)	22 (3.7)	-	-	-	-
사회 보호 R&D	0.0	2 (100.0)	2 (100.0)	-	-	-	-	-	-	-
노동 ^{주)}	6.4	381 (100.0)	188 (49.2)	119 (31.2)	73 (19.3)	45 (11.9)	75 (19.6)	-	75 (19.6)	-
실업	4.6	272 (100.0)	6 (2.3)	12 (4.3)	10 (3.6)	2 (0.7)	255 (93.4)	1 (0.2)	254 (93.2)	-
주거	1.7	101 (100.0)	56 (55.8)	44 (43.4)	38 (37.6)	6 (5.7)	1 (0.8)	1 (0.8)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5〉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5,963 (100.0)	1,713 (28.7)	1,226 (20.6)	899 (15.1)	328 (5.5)	3,024 (50.7)	2,058 (34.5)	378 (6.3)	587 (9.9)
행정 비용	소계	18.4 (100.0)	1,098 (42.8)	482 (43.9)	295 (26.9)	187 (17.0)	146 (13.3)	60 (5.4)	19 (1.7)	67 (6.1)
	비용자 보상	2.3 (100.0)	139 (37.6)	68 (49.3)	44 (31.7)	24 (17.6)	18 (13.1)	16 (11.5)	2 (1.4)	0 (0.2)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3 (100.0)	79 (18.9)	23 (28.8)	6 (8.0)	16 (20.8)	41 (52.3)	38 (47.8)	3 (4.2)	0 (0.3)
	이자	0.0 (100.0)	0 (0.0)	- (0.0)	- (0.0)	- (0.0)	0 (100.0)	- (0.0)	0 (100.0)	- (0.0)
	기타 비용	0.0 (100.0)	1 (58.0)	- (0.0)	- (0.0)	- (0.0)	1 (42.0)	0 (12.4)	0 (27.5)	0 (2.1)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13.1 (100.0)	780 (49.5)	390 (50.0)	245 (31.4)	145 (18.6)	4 (0.5)	3 (0.4)	0 (0.0)	0 (0.1)
	출연	1.7 (100.0)	99 (16.4)	1 (1.0)	- (0.0)	1 (1.0)	82 (82.6)	3 (2.7)	13 (13.3)	66 (66.5)
	소계	81.6 (100.0)	4,865 (25.6)	1,243 (15.3)	744 (12.4)	603 (2.9)	2,878 (59.2)	1,998 (41.1)	359 (7.4)	521 (10.7)
이 전 지 출	보조금	1.6 (100.0)	97 (60.5)	37 (38.3)	29 (30.3)	8 (8.0)	1 (1.3)	1 (0.6)	1 (0.6)	0 (0.0)
	사회 급여	80.0 (100.0)	4,768 (24.8)	707 (14.8)	574 (12.0)	133 (2.8)	2,877 (60.3)	1,997 (41.9)	359 (7.5)	521 (10.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6〉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5,963,184	3,136,193	1,728,926	1,098,065
노령	2,730,037	2,372,223	204,753	153,061
유족	357,172	185,171	130,267	41,733
질병 및 장애	757,941	71,723	520,526	165,691
가족 및 자녀	719,968	105,965	407,599	206,404
기타 사회보호	39,151	1	14,538	24,612
기타 사회적 배제	601,638	165,958	88,043	347,636
사회보호R&D	2,342	-	2,071	272
노동 ^{주)}	381,240	-	280,180	101,060
실업	272,478	235,152	27,901	9,424
주거	101,219	-	53,047	48,172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7〉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4,842 (100.0)	487 (10.1)	74 (1.5)	55 (1.1)	0 (0.0)	1 (0.0)	300 (6.2)	56 (1.2)	4,356 (89.9)	72 (1.5)	4,283 (88.5)
노령	46.7	2,260 (100.0)	103 (4.6)	14 (0.6)	29 (1.3)	- (0.0)	0 (0.0)	58 (2.6)	2 (0.1)	2,157 (95.4)	3 (0.1)	2,155 (95.3)
유족	4.6	223 (100.0)	23 (10.3)	2 (0.9)	3 (1.4)	- (0.0)	0 (0.0)	14 (6.2)	4 (1.8)	200 (89.7)	4 (1.6)	196 (88.1)
질병및 장애	9.0	437 (100.0)	126 (28.9)	8 (1.8)	1 (0.3)	0 (0.0)	0 (0.0)	91 (20.9)	25 (5.8)	311 (71.1)	0 (0.0)	311 (71.1)
가족및 자녀	15.7	758 (100.0)	112 (14.8)	9 (1.1)	8 (1.1)	- (0.0)	0 (0.0)	92 (12.2)	3 (0.4)	646 (85.2)	5 (0.7)	640 (84.5)
기타 사회 보호	0.4	21 (100.0)	14 (63.6)	3 (13.2)	2 (9.0)	- (0.5)	0 (35.4)	8 (35.4)	1 (5)	8 (36.4)	0 (0.8)	8 (35.7)
기타 사회적 배제	11.4	551 (100.0)	38 (6.9)	6 (1.0)	2 (0.3)	- (0.0)	- (4.5)	25 (4.5)	6 (1.0)	513 (93.1)	0 (0.1)	513 (93.0)
사회 보호 R&D	0.1	2 (100.0)	0 (11.6)	0 (1.0)	0 (6.4)	- (0.2)	0 (4.0)	0 (4.0)	- (88.4)	2 (88.4)	- (0.0)	2 (88.4)
노동 ^{주)}	5.9	287 (100.0)	62 (21.5)	33 (11.5)	9 (3.3)	0 (0.0)	1 (0.3)	5 (1.8)	14 (4.7)	226 (78.5)	58 (20.1)	168 (58.4)
실업	5.3	258 (100.0)	0 (0.0)	0 (0.0)	0 (0.0)	- (0.0)	- (0.0)	0 (0.0)	- (100.0)	258 (100.0)	2 (0.7)	256 (99.3)
주거	0.9	43 (100.0)	8 (19.6)	0 (0.0)	0 (0.1)	- (0.0)	- (15.9)	7 (15.9)	2 (3.5)	35 (80.4)	0 (0.0)	35 (80.4)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8〉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4,842 (100.0)	1,597 (33.0)	992 (20.5)	702 (14.5)	290 (6.0)	2,253 (46.5)	1,683 (34.8)	379 (7.8)	191 (3.9)
노령	46.7	2,260 (100.0)	486 (21.5)	265 (11.7)	202 (8.9)	63 (2.8)	1,509 (66.8)	1,509 (66.8)	0 (0.0)	- (-)
유족	4.6	223 (100.0)	4 (2.0)	33 (14.7)	3 (1.4)	30 (13.2)	186 (83.3)	152 (68.4)	- (-)	33 (15.0)
질병 및 장애	9.0	437 (100.0)	136 (31.0)	125 (28.5)	74 (17.0)	51 (11.6)	177 (40.5)	20 (4.5)	- (-)	157 (35.9)
가족 및 자녀	15.7	758 (100.0)	338 (44.6)	372 (49.1)	300 (39.5)	73 (9.6)	48 (6.3)	- (-)	48 (6.3)	- (-)
기타 사회 보호	0.4	21 (100.0)	6 (29.0)	15 (71.0)	2 (8.2)	13 (62.8)	0 (0.0)	0 (0.0)	- (-)	- (-)
기타 사회적 배제	11.4	551 (100.0)	410 (74.4)	141 (25.6)	104 (18.8)	37 (6.8)	- (-)	- (-)	- (-)	- (-)
사회 보호 R&D	0.1	2 (100.0)	2 (100.0)	- (-)	- (-)	- (-)	- (-)	- (-)	- (-)	- (-)
노동 ^{주)}	5.9	287 (100.0)	178 (61.9)	35 (12.1)	12 (4.1)	23 (8.0)	75 (26.0)	- (-)	75 (26.0)	- (-)
실업	5.3	258 (100.0)	1 (0.2)	0 (0.0)	0 (0.0)	- (0.0)	257 (99.8)	1 (0.2)	257 (99.5)	- (-)
주거	0.9	43 (100.0)	37 (84.8)	6 (13.7)	6 (13.1)	0 (0.6)	1 (1.5)	1 (1.5)	- (-)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39〉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4,842 (100.0)	1,597 (33.0)	992 (20.5)	702 (14.5)	290 (6.0)	2,253 (46.5)	1,683 (34.8)	379 (7.8)	191 (3.9)	
행정 비용	소계	10.1	487 (100.0)	143 (29.3)	252 (51.8)	115 (23.6)	137 (28.1)	92 (18.9)	51 (10.5)	19 (3.9)	22 (4.5)
	비용자 보상	1.5	74 (100.0)	28 (37.5)	29 (39.0)	10 (13.2)	19 (25.8)	17 (23.4)	15 (20.7)	2 (2.5)	0 (0.1)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1	55 (100.0)	12 (21.3)	9 (16.7)	2 (3.6)	7 (13.0)	34 (62.0)	31 (55.7)	3 (6.1)	0 (0.1)
	이자	0.0	0 (100.0)	- (0.0)	0 (34.3)	0 (33.9)	0 (0.4)	0 (65.7)	- (0.0)	0 (65.7)	- (0.0)
	기타 비용	0.0	1 (100.0)	1 (59.8)	- (0.0)	- (0.0)	- (0.0)	1 (40.2)	0 (12.2)	0 (27.3)	0 (0.7)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6.2	300 (100.0)	86 (28.6)	211 (70.4)	103 (34.4)	108 (36.1)	3 (1.0)	3 (0.9)	0 (0.1)	0 (0.1)
	출연	1.2	56 (100.0)	17 (29.8)	2 (4.2)	- (0.0)	2 (4.2)	37 (66.0)	3 (4.7)	13 (23.3)	21 (38.0)
이 전 지 출	소계	89.9	4,356 (100.0)	1,455 (33.4)	741 (17.0)	587 (13.5)	153 (3.5)	2,161 (49.6)	1,632 (37.5)	360 (8.3)	169 (3.9)
	보조금	1.5	72 (100.0)	57 (78.7)	14 (19.7)	5 (6.8)	9 (12.9)	1 (1.7)	1 (0.8)	1 (0.9)	0 (0.0)
	사회 급여	88.5	4,283 (100.0)	1,398 (32.6)	726 (17.0)	583 (13.6)	144 (3.4)	2,159 (50.4)	1,631 (38.1)	360 (8.4)	169 (3.9)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0〉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4,842,254	2,691,894	1,663,705	486,654
노령	2,260,436	2,007,385	150,042	103,009
유족	222,917	147,695	52,343	22,879
질병 및 장애	437,355	69,796	241,296	126,264
가족 및 자녀	757,879	106,982	538,595	112,302
기타 사회보호	21,344	0	7,774	13,570
기타 사회적 배제	551,443	122,010	391,420	38,013
사회보호 R&D	2,431	-	2,149	282
노동 ^{주)}	287,332	-	225,545	61,786
실업	258,013	238,025	19,872	116
주거	43,101	-	34,668	8,434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1〉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5,591 (100.0)	619 (11.1)	100 (1.8)	65 (1.2)	0 (0.0)	2 (0.0)	381 (6.8)	72 (1.3)	4,971 (88.9)	127 (2.3)	4,845 (86.7)
노령	46.9	2,624 (100.0)	141 (5.4)	30 (1.1)	29 (1.1)	- (0.0)	0 (0.0)	79 (3.0)	3 (0.1)	2,483 (94.6)	3 (0.1)	2,480 (94.5)
유족	4.9	274 (100.0)	31 (11.1)	3 (1.1)	5 (1.7)	- (0.0)	0 (0.0)	18 (6.4)	5 (2.0)	244 (88.9)	7 (2.5)	237 (86.4)
질병및 장애	8.7	489 (100.0)	142 (29.0)	11 (2.3)	2 (0.5)	- (0.0)	0 (0.0)	99 (20.2)	30 (6.1)	347 (71.0)	0 (0.0)	347 (70.9)
가족및 자녀	16.5	921 (100.0)	159 (17.3)	11 (1.2)	10 (1.1)	- (0.0)	0 (0.0)	133 (14.4)	5 (0.5)	762 (82.7)	40 (4.4)	722 (78.3)
기타 사회 보호	0.7	40 (100.0)	29 (72.3)	2 (5.0)	3 (8.6)	- (0.3)	0 (0.0)	21 (51.2)	3 (7.0)	11 (27.7)	1 (2.4)	10 (25.3)
기타 사회적 배제	9.8	548 (100.0)	25 (4.5)	6 (1.0)	3 (0.5)	- (0.0)	- (0.0)	9 (1.6)	8 (1.4)	523 (95.5)	0 (0.1)	523 (95.4)
사회 보호 R&D	0.1	3 (100.0)	0 (11.6)	0 (1.0)	0 (6.4)	- (0.2)	0 (0.0)	0 (4.0)	- (0.0)	3 (88.4)	- (0.0)	3 (88.4)
노동 ^{주)}	6.1	341 (100.0)	68 (19.9)	36 (10.7)	12 (3.4)	0 (0.0)	1 (0.3)	3 (0.8)	16 (4.8)	273 (80.1)	73 (21.4)	200 (58.7)
실업	5.4	303 (100.0)	1 (0.4)	1 (0.3)	0 (0.1)	- (0.0)	- (0.0)	0 (0.0)	0 (0.0)	302 (99.6)	2 (0.7)	300 (98.9)
주거	0.8	46 (100.0)	23 (49.6)	0 (0.1)	0 (0.6)	- (0.0)	- (0.0)	21 (44.6)	2 (4.3)	23 (50.4)	- (0.0)	23 (50.4)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2〉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5,591 (100.0)	1,864 (33.3)	1,208 (21.6)	876 (15.7)	332 (5.9)	2,519 (45.1)	1,855 (33.2)	445 (8.0)	219 (3.9)
노령	46.9	2,624 (100.0)	661 (25.2)	301 (11.5)	245 (9.3)	56 (2.1)	1,662 (63.3)	1,662 (63.3)	0 (0.0)	- (-)
유족	4.9	274 (100.0)	3 (1.0)	57 (20.9)	3 (1.1)	54 (19.8)	214 (78.1)	169 (61.5)	- (-)	45 (16.5)
질병 및 장애	8.7	489 (100.0)	155 (31.7)	137 (28.1)	103 (21.0)	35 (7.1)	196 (40.2)	23 (4.7)	- (-)	173 (35.5)
가족 및 자녀	16.5	921 (100.0)	363 (39.4)	502 (54.5)	395 (42.9)	107 (11.6)	56 (6.1)	- (-)	56 (6.1)	- (-)
기타 사회 보호	0.7	40 (100.0)	6 (15.5)	34 (84.5)	7 (17.2)	27 (67.3)	0 (0.0)	0 (0.0)	- (-)	- (-)
기타 사회적 배제	9.8	548 (100.0)	418 (76.2)	130 (23.8)	104 (19.0)	26 (4.8)	- (-)	- (-)	- (-)	- (-)
사회 보호 R&D	0.1	3 (100.0)	3 (100.0)	- (-)	- (-)	- (-)	- (-)	- (-)	- (-)	- (-)
노동 ^{주)}	6.1	341 (100.0)	227 (66.4)	27 (7.8)	7 (2.2)	19 (5.6)	88 (25.8)	- (-)	88 (25.8)	- (-)
실업	5.4	303 (100.0)	1 (0.4)	1 (0.4)	0 (0.1)	1 (0.3)	301 (99.3)	1 (0.2)	300 (99.0)	- (-)
주거	0.8	46 (100.0)	27 (59.3)	18 (39.5)	12 (25.0)	7 (14.5)	1 (1.2)	1 (1.2)	- (-)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3〉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5,591 (100.0)	1,864 (33.3)	1,208 (21.6)	876 (15.7)	332 (5.9)	2,519 (45.1)	1,855 (33.2)	445 (8.0)	219 (3.9)
소계	11.1	619 (100.0)	178 (28.8)	339 (54.8)	181 (29.2)	158 (25.5)	102 (16.4)	54 (8.8)	22 (3.6)	25 (4.0)
행정 비용	비용자 보상	1.8	100 (100.0)	41 (40.9)	38 (38.2)	17 (17.4)	21 (20.8)	19 (18.5)	2 (2.2)	0 (0.1)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	65 (100.0)	16 (24.4)	15 (23.8)	4 (6.0)	12 (17.8)	34 (51.8)	30 (45.6)	4 (6.1)
	이자	0.0	0 (100.0)	- (0.0)	- (0.0)	- (0.0)	0 (100.0)	- (0.0)	0 (100.0)	- (0.0)
	기타 비용	0.0	2 (100.0)	1 (62.1)	- (0.0)	- (0.0)	1 (37.9)	0 (12.1)	0 (25.2)	0 (0.6)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6.8	381 (100.0)	98 (25.8)	279 (73.4)	160 (41.9)	120 (31.4)	3 (0.8)	3 (0.7)	0 (0.1)
	출연	1.3	72 (100.0)	22 (31.1)	6 (8.5)	- (0.0)	6 (8.5)	43 (60.4)	3 (4.6)	15 (21.6)
이 전 지 출	소계	88.9	4,971 (100.0)	1,685 (33.9)	869 (17.5)	695 (14.0)	174 (3.5)	2,417 (48.6)	1,800 (36.2)	423 (8.5)
	보조금	2.3	127 (100.0)	83 (65.3)	43 (33.6)	24 (18.7)	19 (14.9)	1 (1.1)	1 (0.6)	1 (0.6)
	사회 급여	86.7	4,845 (100.0)	1,603 (33.1)	826 (17.1)	671 (13.8)	155 (3.2)	2,416 (49.9)	1,800 (37.2)	422 (8.7)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금;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74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44〉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5,590,666	3,157,156	1,814,173	619,337
노령	2,623,751	2,323,622	159,098	141,030
유족	274,249	163,736	79,953	30,560
질병 및 장애	488,540	81,748	264,875	141,917
가족 및 자녀	921,424	141,450	620,586	159,388
기타 사회보호	40,313	1	11,186	29,126
기타 사회적 배제	548,191	168,209	355,104	24,878
사회보호 R&D	3,227	-	2,853	374
노동 ^{주)}	341,403	-	273,470	67,933
실업	303,429	278,390	23,809	1,230
주거	46,139	-	23,238	22,902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5〉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6,185 (100.0)	613 (9.9)	120 (1.9)	73 (1.2)	0 (0.0)	1 (0.0)	350 (5.7)	69 (1.1)	5,572 (90.1)	73 (1.2)	5,499 (88.9)
노령	48.4	2,991 (100.0)	166 (5.5)	35 (1.2)	39 (1.3)	- (0.0)	0 (0.0)	88 (2.9)	5 (0.2)	2,825 (94.5)	1 (0.0)	2,824 (94.4)
유족	4.1	252 (100.0)	24 (9.4)	3 (1.2)	5 (2.1)	- (0.0)	0 (0.0)	12 (4.7)	3 (1.3)	229 (90.6)	0 (0.1)	229 (90.5)
질병및 장애	7.8	483 (100.0)	127 (26.2)	10 (2.0)	1 (0.3)	- (0.0)	0 (0.0)	88 (18.2)	28 (5.7)	357 (73.8)	0 (0.0)	357 (73.7)
가족및 자녀	13.1	812 (100.0)	134 (16.5)	11 (1.4)	10 (1.2)	- (0.0)	0 (0.0)	108 (13.3)	4 (0.5)	678 (83.5)	5 (0.6)	673 (82.9)
기타 사회 보호	0.4	26 (100.0)	14 (56.1)	5 (20.2)	2 (9.1)	- (0.4)	0 (0.4)	6 (23.4)	1 (3)	11 (43.9)	1 (2.2)	11 (41.7)
기타 사회적 배제	14.8	915 (100.0)	32 (3.5)	5 (0.5)	3 (0.3)	0 (0.0)	- (0.0)	18 (2.0)	6 (0.7)	884 (96.5)	1 (0.1)	883 (96.4)
사회 보호 R&D	0.0	3 (100.0)	0 (11.6)	0 (1.0)	0 (6.4)	- (0.2)	0 (0.2)	0 (4.0)	- (0.0)	2 (88.4)	- (0.0)	2 (88.4)
노동 ^{주)}	5.5	339 (100.0)	85 (25.1)	49 (14.4)	12 (3.4)	0 (0.0)	1 (0.2)	4 (1.1)	20 (5.8)	254 (74.9)	63 (18.5)	191 (56.4)
실업	4.8	298 (100.0)	4 (1.4)	3 (0.9)	0 (0.2)	- (0.0)	- (0.0)	1 (0.4)	- (0.0)	294 (98.6)	2 (0.8)	292 (97.8)
주거	1.1	65 (100.0)	28 (42.1)	0 (0.4)	1 (0.9)	- (0.0)	- (0.0)	25 (38.1)	2 (2.6)	38 (57.9)	0 (0.0)	38 (57.7)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76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46〉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185 (100.0)	2,295 (37.1)	1,202 (19.4)	1,012 (16.4)	190 (3.1)	2,688 (43.5)	2,067 (33.4)	423 (6.8)	199 (3.2)
노령	48.4	2,991 (100.0)	744 (24.9)	396 (13.3)	340 (11.4)	56 (1.9)	1,850 (61.9)	1,850 (61.9)	0 (0.0)	-
유족	4.1	252 (100.0)	3 (1.4)	29 (11.6)	19 (7.4)	10 (4.2)	220 (87.1)	193 (76.4)	-	27 (10.7)
질병 및 장애	7.8	483 (100.0)	168 (34.8)	121 (25.1)	111 (23.0)	10 (2.1)	194 (40.1)	22 (4.6)	-	172 (35.5)
가족 및 자녀	13.1	812 (100.0)	391 (48.1)	371 (45.7)	328 (40.5)	43 (5.3)	50 (6.1)	-	50 (6.1)	-
기타 사회 보호	0.4	26 (100.0)	9 (35.3)	17 (64.7)	7 (27.2)	10 (37.5)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14.8	915 (100.0)	713 (77.9)	202 (22.1)	172 (18.8)	31 (3.3)	-	-	-	-
사회 보호 R&D	0.0	3 (100.0)	3 (100.0)	-	-	-	-	-	-	-
노동 ^{주)}	5.5	339 (100.0)	216 (63.8)	37 (11.0)	19 (5.5)	18 (5.5)	85 (25.2)	-	85 (25.2)	-
실업	4.8	298 (100.0)	2 (0.8)	7 (2.5)	4 (1.3)	3 (1.1)	289 (96.7)	1 (0.2)	288 (96.5)	-
주거	1.1	65 (100.0)	45 (68.7)	20 (30.1)	12 (18.5)	8 (11.5)	1 (1.3)	1 (1.3)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7〉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185 (100.0)	2,295 (37.1)	1,202 (19.4)	1,012 (16.4)	190 (3.1)	2,688 (43.5)	2,067 (33.4)	423 (6.8)	199 (3.2)
행정 비용	소계	9.9 (100.0)	613 (34.4)	211 (47.8)	197 (32.1)	96 (15.7)	109 (17.9)	65 (10.7)	22 (3.5)	22 (3.6)
	피용자 보상	1.9 (100.0)	120 (46.0)	55 (36.7)	44 (22.8)	27 (14.0)	21 (17.3)	19 (15.4)	2 (1.8)	0 (0.1)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 (100.0)	73 (20.2)	15 (19.7)	4 (5.9)	10 (13.8)	44 (60.0)	40 (54.7)	4 (5.2)	0 (0.1)
	이자	0.0 (100.0)	0 (0.0)	0 (33.8)	- (0.0)	0 (33.8)	0 (66.2)	- (0.0)	0 (66.2)	- (0.0)
	기타 비용	0.0 (100.0)	1 (59.4)	- (0.0)	- (0.0)	- (0.0)	1 (40.6)	0 (12.8)	0 (27.3)	0 (0.6)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5.7 (100.0)	350 (34.3)	120 (64.7)	162 (46.5)	64 (18.2)	4 (1.1)	3 (1.0)	0 (0.1)	0 (0.0)
	출연	1.1 (100.0)	69 (29.1)	20 (12.1)	8 (3.4)	2 (8.7)	40 (58.8)	3 (4.8)	15 (21.9)	22 (32.1)
	소계	90.1 (100.0)	5,572 (37.4)	909 (16.3)	815 (14.6)	93 (1.7)	2,579 (46.3)	2,001 (35.9)	401 (7.2)	176 (3.2)
	보조금	1.2 (100.0)	73 (89.3)	6 (8.7)	2 (2.3)	5 (6.4)	1 (1.9)	1 (0.9)	1 (1.0)	0 (0.0)
이 전 지 출	사회 급여	88.9 (100.0)	5,499 (36.7)	902 (16.4)	813 (14.8)	89 (1.6)	2,577 (46.9)	2,000 (36.4)	401 (7.3)	176 (3.2)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금;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8〉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6,184,808	3,495,929	2,075,622	613,258
노령	2,990,616	2,568,984	255,836	165,796
유족	252,374	186,769	41,993	23,611
질병 및 장애	483,481	96,824	259,838	126,818
가족 및 자녀	812,059	128,634	549,589	133,836
기타 사회보호	25,654	1	11,254	14,400
기타 사회적 배제	915,300	248,191	635,345	31,764
사회보호 R&D	2,764	-	2,443	321
노동 ^{주)}	338,628	-	253,719	84,909
실업	298,441	266,526	27,668	4,247
주거	65,492	-	37,937	27,555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49〉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6,068 (100.0)	1,307 (21.5)	192 (3.2)	73 (1.2)	1 (0.0)	1 (0.0)	979 (16.1)	60 (1.0)	4,762 (78.5)	95 (1.6)	4,667 (76.9)
노령	48.2	2,925 (100.0)	213 (7.3)	87 (3.0)	36 (1.2)	- (0.0)	0 (0.0)	87 (3.0)	3 (0.1)	2,712 (92.7)	2 (0.1)	2,710 (92.7)
유족	4.4	265 (100.0)	37 (14.1)	3 (1.2)	5 (1.8)	- (0.0)	0 (0.0)	26 (9.9)	3 (1.2)	228 (85.9)	3 (1.1)	225 (84.8)
질병및 장애	7.8	472 (100.0)	128 (27.1)	10 (2.1)	2 (0.3)	- (0.0)	0 (0.0)	91 (19.4)	25 (5.3)	344 (72.9)	2 (0.3)	343 (72.6)
가족및 자녀	14.4	874 (100.0)	251 (28.7)	13 (1.4)	11 (1.3)	1 (0.0)	0 (0.0)	223 (25.5)	4 (0.5)	623 (71.3)	21 (2.4)	602 (68.9)
기타 사회 보호	0.6	34 (100.0)	22 (65.9)	7 (19.4)	4 (11.0)	- (0.3)	0 (0.3)	10 (28.8)	2 (6.4)	12 (34.1)	1 (1.7)	11 (32.4)
기타 사회적 배제	13.8	837 (100.0)	519 (62.0)	8 (0.9)	4 (0.5)	- (0.0)	- (0.0)	501 (59.8)	6 (0.8)	318 (38.0)	1 (0.1)	317 (37.9)
사회 보호 R&D	0.0	3 (100.0)	0 (11.6)	0 (1.0)	0 (6.4)	- (0.2)	0 (4.0)	0 (0.0)	- (0.0)	3 (88.4)	- (0.0)	3 (88.4)
노동 ^{주)}	5.2	314 (100.0)	71 (22.5)	40 (12.8)	11 (3.4)	0 (0.0)	1 (0.2)	5 (1.6)	14 (4.5)	243 (77.5)	64 (20.5)	179 (57.0)
실업	4.3	261 (100.0)	26 (10.1)	25 (9.5)	1 (0.4)	- (0.0)	- (0.0)	1 (0.3)	- (0.0)	235 (89.9)	2 (0.6)	233 (89.3)
주거	1.4	82 (100.0)	38 (45.9)	0 (0.3)	0 (0.3)	- (0.0)	- (0.0)	35 (43.1)	2 (2.2)	44 (54.1)	0 (0.0)	44 (54.0)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0〉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068 (100.0)	2,403 (39.6)	1,328 (21.9)	1,103 (18.2)	225 (3.7)	2,337 (38.5)	1,823 (30.0)	346 (5.7)	168 (2.8)
노령	48.2	2,925 (100.0)	912 (31.2)	398 (13.6)	337 (11.5)	62 (2.1)	1,614 (55.2)	1,614 (55.2)	0 (0.0)	-
유족	4.4	265 (100.0)	13 (4.9)	40 (15.2)	9 (3.3)	32 (11.9)	212 (79.9)	188 (70.7)	-	24 (9.2)
질병 및 장애	7.8	472 (100.0)	160 (34.0)	148 (31.3)	124 (26.2)	24 (5.1)	164 (34.7)	20 (4.3)	-	143 (30.4)
가족 및 자녀	14.4	874 (100.0)	383 (43.8)	446 (51.0)	408 (46.7)	38 (4.3)	45 (5.2)	-	45 (5.2)	-
기타 사회 보호	0.6	34 (100.0)	10 (29.4)	24 (70.6)	11 (31.1)	13 (39.5)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13.8	837 (100.0)	634 (75.7)	203 (24.3)	164 (19.6)	39 (4.7)	-	-	-	-
사회 보호 R&D	0.0	3 (100.0)	3 (100.0)	-	-	-	-	-	-	-
노동 ^{주)}	5.2	314 (100.0)	212 (67.3)	33 (10.6)	23 (7.4)	10 (3.2)	69 (22.1)	-	69 (22.1)	-
실업	4.3	261 (100.0)	23 (8.8)	6 (2.5)	5 (2.1)	1 (0.4)	232 (88.8)	1 (0.2)	231 (88.6)	-
주거	1.4	82 (100.0)	53 (64.7)	28 (34.5)	22 (27.3)	6 (7.2)	1 (0.7)	1 (0.7)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함;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1〉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6,068 (100.0)	2,403 (39.6)	1,328 (21.9)	1,103 (18.2)	225 (3.7)	2,337 (38.5)	1,823 (30.0)	346 (5.7)	168 (2.8)
소계	21.5	1,307 (100.0)	676 (51.7)	538 (41.1)	426 (32.6)	112 (8.6)	93 (7.1)	57 (4.3)	18 (1.3)	19 (1.4)
행 정 비 용	3.2	192 (100.0)	100 (51.9)	72 (37.2)	63 (32.9)	8 (4.3)	21 (10.9)	19 (9.9)	2 (0.9)	0 (0.0)
비용자 보상	3.2	192 (100.0)	100 (51.9)	72 (37.2)	63 (32.9)	8 (4.3)	21 (10.9)	19 (9.9)	2 (0.9)	0 (0.0)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	73 (100.0)	19 (25.6)	20 (27.1)	7 (9.7)	13 (17.4)	35 (47.3)	31 (42.9)	3 (4.3)	0 (0.1)
이자	0.0	1 (100.0)	- (0.0)	1 (95.5)	0 (1.9)	0 (93.6)	0 (4.5)	- (0.0)	0 (4.5)	- (0.0)
기타 비용	0.0	1 (100.0)	1 (62.6)	- (0.0)	- (0.0)	- (0.0)	1 (37.4)	0 (14.1)	0 (22.7)	0 (0.5)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16.1	979 (100.0)	537 (54.8)	439 (44.9)	355 (36.3)	84 (8.6)	3 (0.3)	3 (0.3)	0 (0.0)	0 (0.0)
출연	1.0	60 (100.0)	20 (32.7)	6 (10.5)	- (0.0)	6 (10.5)	34 (56.8)	3 (5.6)	12 (20.3)	19 (31.0)
이 전 지 출	78.5	4,762 (100.0)	1,728 (36.3)	790 (16.6)	677 (14.2)	113 (2.4)	2,244 (47.1)	1,767 (37.1)	328 (6.9)	149 (3.1)
보조금	0.3	95 (100.0)	73 (76.8)	21 (21.9)	12 (13.0)	8 (9.0)	1 (1.2)	1 (0.6)	1 (0.6)	0 (0.0)
사회 급여	16.0	4,667 (100.0)	1,655 (35.5)	769 (16.5)	665 (14.3)	104 (2.2)	2,243 (48.1)	1,766 (37.8)	328 (7.0)	149 (3.2)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2〉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6,068,298	3,347,535	1,414,113	1,306,650
노령	2,924,865	2,523,143	188,615	213,108
유족	265,244	181,851	46,021	37,371
질병 및 장애	471,996	96,973	247,226	127,797
가족 및 자녀	874,431	136,793	486,418	251,220
기타 사회보호	34,140	0	11,646	22,494
기타 사회적 배제	837,221	194,797	122,951	519,473
사회보호 R&D	2,840	-	2,510	329
노동 ^{주)}	314,216	-	243,375	70,842
실업	261,303	213,978	20,933	26,392
주거	82,042	-	44,417	37,625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3〉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8,502 (100.0)	902 (10.6)	156 (1.8)	105 (1.2)	0 (0.0)	2 (0.0)	538 (6.3)	101 (1.2)	7,600 (89.4)	119 (1.4)	7,481 (88.0)
노령	48.5	4,127 (100.0)	195 (4.7)	60 (1.4)	47 (1.1)	- (0.0)	0 (0.0)	83 (2.0)	5 (0.1)	3,932 (95.3)	2 (0.0)	3,930 (95.2)
유족	4.8	412 (100.0)	44 (10.7)	4 (1.1)	9 (2.2)	0 (0.0)	0 (0.0)	21 (5.2)	9 (2.3)	368 (89.3)	9 (2.3)	358 (87.0)
질병및 장애	7.9	671 (100.0)	195 (29.0)	15 (2.2)	2 (0.3)	- (0.0)	0 (0.0)	140 (20.8)	38 (5.7)	477 (71.0)	1 (0.2)	475 (70.8)
가족및 자녀	13.7	1,169 (100.0)	296 (25.3)	16 (1.4)	20 (1.7)	- (0.0)	0 (0.0)	251 (21.4)	9 (0.8)	873 (74.7)	10 (0.9)	863 (73.8)
기타 사회 보호	0.4	31 (100.0)	16 (51.9)	3 (9.5)	4 (12.7)	- (0.5)	0 (0.0)	6 (20.9)	3 (8.3)	15 (48.1)	1 (4.8)	13 (43.3)
기타 사회적 배제	12.2	1,038 (100.0)	34 (3.2)	10 (0.9)	5 (0.5)	- (0.0)	- (0.0)	10 (1.0)	9 (0.9)	1,004 (96.8)	1 (0.0)	1,003 (96.7)
사회 보호 R&D	0.0	4 (100.0)	0 (11.6)	0 (1.0)	0 (6.4)	- (0.2)	0 (0.0)	0 (4.0)	- (0.0)	4 (88)	- (0.0)	4 (88.4)
노동 ^{주)}	5.7	486 (100.0)	88 (18.1)	41 (8.4)	16 (3.3)	0 (0.0)	1 (0.3)	4 (0.9)	25 (5.2)	398 (81.9)	92 (18.9)	306 (63.1)
실업	5.7	485 (100.0)	9 (1.9)	8 (1.6)	1 (0.2)	- (0.0)	- (0.0)	1 (0.2)	- (0.0)	475 (98.1)	3 (0.7)	472 (97.4)
주거	1.0	81 (100.0)	25 (31.5)	0 (0.2)	1 (1.2)	- (0.0)	- (0.0)	22 (26.9)	3 (3.1)	55 (69)	0 (0.0)	55 (68.5)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4〉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8,502 (100.0)	2,993 (35.2)	1,627 (19.1)	1,355 (15.9)	272 (3.2)	3,883 (45.7)	2,910 (34.2)	684 (8.1)	288 (3.4)
노령	48.5	4,127 (100.0)	1,068 (25.9)	458 (11.1)	402 (9.7)	56 (1.4)	2,601 (63.0)	2,601 (63.0)	0 (0.0)	-
유족	4.8	412 (100.0)	8 (1.9)	69 (16.8)	31 (7.5)	38 (9.3)	335 (81.3)	274 (66.5)	-	61 (14.8)
질병 및 장애	7.9	671 (100.0)	218 (32.4)	193 (28.8)	172 (25.7)	21 (3.1)	260 (38.8)	33 (5.0)	-	227 (33.8)
가족 및 자녀	13.7	1,169 (100.0)	515 (44.1)	577 (49.4)	502 (42.9)	75 (6.4)	77 (6.6)	-	77 (6.6)	-
기타 사회 보호	0.4	31 (100.0)	9 (27.6)	22 (72.3)	7 (23.0)	15 (49.3)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12.2	1,038 (100.0)	806 (77.7)	231 (22.3)	187 (18.0)	45 (4.3)	-	-	-	-
사회 보호 R&D	0.0	4 (100.0)	4 (100.0)	-	-	-	-	-	-	-
노동 ^{주)}	5.7	486 (100.0)	296 (60.9)	51 (10.5)	33 (6.7)	18 (3.7)	139 (28.6)	-	139 (28.6)	-
실업	5.7	485 (100.0)	6 (1.2)	9 (1.8)	8 (1.7)	0 (0.0)	470 (97.0)	1 (0.2)	469 (96.8)	-
주거	1.0	81 (100.0)	64 (78.9)	16 (20.1)	13 (16.0)	3 (4.1)	1 (1.0)	1 (1.0)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5〉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8,502 (100.0)	2,993 (35.2)	1,627 (19.1)	1,355 (15.9)	272 (3.2)	3,883 (45.7)	2,910 (34.2)	684 (8.1)	288 (3.4)
행정 비용	소계	10.6 (100.0)	902 (31.0)	280 (51.9)	468 (37.2)	132 (14.7)	155 (17.2)	87 (9.7)	35 (3.9)	32 (3.6)
	피용자 보상	1.8 (100.0)	156 (40.3)	63 (37.6)	59 (29.1)	45 (8.4)	13 (22.1)	34 (19.8)	31 (2.2)	3 (0.1)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2 (100.0)	105 (21.2)	22 (29.0)	30 (6.1)	6 (22.9)	24 (49.8)	52 (43.8)	46 (5.9)	6 (0.1)
	이자	0.0 (100.0)	0 (0.0)	- (39.6)	0 (9.5)	0 (30.1)	0 (60.4)	- (0.0)	0 (60.4)	- (0.0)
	기타 비용	0.0 (100.0)	2 (56.2)	1 (0.0)	- (0.0)	- (0.0)	1 (43.8)	0 (14.6)	1 (28.6)	0 (0.6)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6.3 (100.0)	538 (30.7)	165 (68.3)	284 (52.7)	84 (15.6)	5 (1.0)	4 (0.8)	0 (0.1)	0 (0.0)
	출연	1.2 (100.0)	101 (27.7)	28 (11.1)	11 (0.0)	- (11.1)	11 (61.2)	6 (5.6)	24 (24.1)	32 (31.5)
	소계	89.4 (100.0)	7,600 (35.7)	2,713 (15.2)	1,159 (13.4)	1,019 (1.8)	139 (49.1)	3,728 (37.1)	2,823 (8.5)	649 (3.4)
	보조금	1.4 (100.0)	119 (81.1)	97 (17.0)	20 (9.9)	12 (7.1)	8 (1.9)	2 (0.9)	1 (1.0)	1 (0.0)
이 전 지 출	사회 급여	88.0 (100.0)	7,481 (35.0)	2,617 (15.2)	1,138 (13.5)	1,008 (1.7)	131 (49.8)	3,726 (37.7)	2,822 (8.7)	648 (3.4)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6〉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8,502,412	4,939,748	2,660,356	902,308
노령	4,126,960	3,672,058	259,969	194,932
유족	411,904	265,863	101,794	44,248
질병 및 장애	671,214	125,762	350,755	194,697
가족 및 자녀	1,168,795	200,923	672,042	295,829
기타 사회보호	30,816	4	14,809	16,003
기타 사회적 배제	1,037,665	241,116	762,853	33,696
사회보호 R&D	4,051	-	3,581	470
노동 ^{주)}	485,624	-	397,955	87,669
실업	484,507	434,022	41,188	9,298
주거	80,876	-	55,410	25,466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7〉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9,835 (100.0)	996 (10.1)	228 (2.3)	112 (1.1)	0 (0.0)	3 (0.0)	510 (5.2)	143 (1.5)	8,839 (89.9)	149 (1.5)	8,690 (88.4)
노령	45.0	4,426 (100.0)	206 (4.7)	56 (1.3)	51 (1.2)	- (0.0)	0 (0.0)	90 (2.0)	8 (0.2)	4,220 (95.3)	5 (0.1)	4,216 (95.2)
유족	4.7	465 (100.0)	47 (10.1)	4 (0.9)	7 (1.4)	- (0.0)	0 (0.0)	28 (6.0)	8 (1.8)	418 (89.9)	1 (0.2)	417 (89.7)
질병및 장애	9.5	935 (100.0)	193 (20.7)	20 (2.1)	3 (0.3)	- (0.0)	0 (0.0)	105 (11.2)	66 (7.0)	742 (79.3)	0 (0.0)	742 (79.3)
가족및 자녀	14.5	1,422 (100.0)	276 (19.4)	15 (1.1)	16 (1.2)	- (0.0)	0 (0.0)	239 (16.8)	6 (0.4)	1,146 (80.6)	15 (1.1)	1,131 (79.5)
기타 사회 보호	0.6	57 (100.0)	28 (48.7)	4 (6.7)	7 (11.8)	- (0.4)	0 (0.4)	10 (16.7)	8 (13.1)	29 (51.3)	2 (2.7)	28 (48.6)
기타 사회적 배제	11.5	1,135 (100.0)	48 (4.2)	13 (1.1)	3 (0.3)	- (0.0)	- (0.0)	20 (1.7)	12 (1.0)	1,088 (95.8)	1 (0.1)	1,087 (95.7)
사회 보호 R&D	0.1	5 (100.0)	1 (11.6)	0 (1.0)	0 (6.4)	- (0.0)	0 (0.2)	0 (4.0)	- (0.0)	5 (88)	- (0.0)	5 (88.4)
노동 ^{주)}	6.4	634 (100.0)	164 (25.9)	99 (15.7)	23 (3.6)	0 (0.0)	2 (0.3)	8 (1.2)	33 (5.1)	470 (74.1)	120 (18.9)	350 (55.2)
실업	6.7	655 (100.0)	19 (2.8)	17 (2.6)	2 (0.2)	- (0.0)	- (0.0)	0 (0.0)	- (0.0)	636 (97.2)	5 (0.7)	632 (96.5)
주거	1.0	100 (100.0)	15 (14.7)	0 (0.0)	0 (0.2)	- (0.0)	- (0.0)	11 (11.2)	3 (3.2)	85 (85)	0 (0.0)	85 (85.2)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8〉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9,835 (100.0)	3,279 (33.3)	1,865 (19.0)	1,508 (15.3)	357 (3.6)	4,691 (47.7)	3,285 (33.4)	903 (9.2)	503 (5.1)
노령	45.0	4,426 (100.0)	971 (21.9)	522 (11.8)	466 (10.5)	55 (1.3)	2,933 (66.3)	2,933 (66.3)	0 (0.0)	- -
유족	4.7	465 (100.0)	9 (1.9)	87 (18.7)	46 (9.9)	41 (8.7)	369 (79.4)	307 (66.0)	- -	62 (13.5)
질병 및 장애	9.5	935 (100.0)	241 (25.8)	211 (22.5)	167 (17.8)	44 (4.7)	483 (51.7)	43 (4.6)	- -	440 (47.1)
가족 및 자녀	14.5	1,422 (100.0)	675 (47.5)	639 (44.9)	545 (38.3)	94 (6.6)	108 (7.6)	- -	108 (7.6)	- -
기타 사회 보호	0.6	57 (100.0)	12 (21.0)	45 (79.0)	20 (34.1)	26 (44.9)	0 (0.0)	0 (0.0)	- -	- -
기타 사회적 배제	11.5	1,135 (100.0)	866 (76.3)	270 (23.7)	216 (19.0)	54 (4.7)	- -	- -	- -	- -
사회 보호 R&D	0.1	5 (100.0)	5 (100.0)	- -	- -	- -	- -	- -	- -	- -
노동 ^{주)}	6.4	634 (100.0)	394 (62.1)	59 (9.2)	23 (3.7)	35 (5.6)	182 (28.6)	- -	182 (28.6)	- -
실업	6.7	655 (100.0)	24 (3.7)	15 (2.3)	9 (1.4)	6 (1.0)	615 (94.0)	2 (0.2)	614 (93.7)	- -
주거	1.0	100 (100.0)	81 (81.2)	18 (17.8)	16 (15.9)	2 (2.0)	1 (1.0)	1 (1.0)	- -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59〉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9,835 (100.0)	3,279 (33.3)	1,865 (19.0)	1,508 (15.3)	357 (3.6)	4,691 (47.7)	3,285 (33.4)	903 (9.2)	503 (5.1)
소계	10.1	996 (100.0)	347 (34.8)	449 (45.1)	279 (28.0)	170 (17.1)	201 (20.1)	98 (9.8)	46 (4.6)	57 (5.7)
행 정 비 용	2.3	228 (100.0)	116 (50.8)	73 (32.2)	40 (17.6)	33 (14.6)	39 (17.0)	34 (14.9)	5 (2.0)	0 (0.1)
피용자 보상	2.3	228 (100.0)	116 (50.8)	73 (32.2)	40 (17.6)	33 (14.6)	39 (17.0)	34 (14.9)	5 (2.0)	0 (0.1)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1	112 (100.0)	27 (24.5)	24 (21.1)	7 (6.1)	17 (15.0)	61 (54.4)	53 (47.0)	8 (7.3)	0 (0.2)
이자	0.0	0 (100.0)	- (0.0)	- (0.0)	- (0.0)	- (0.0)	0 (100.0)	- (0.0)	0 (100.0)	- (0.0)
기타 비용	0.0	3 (100.0)	2 (56.6)	- (0.0)	- (0.0)	- (0.0)	1 (43.4)	0 (12.7)	1 (29.9)	0 (0.8)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5.2	510 (100.0)	166 (32.6)	338 (66.3)	231 (45.2)	108 (21.1)	6 (1.1)	5 (0.9)	1 (0.1)	0 (0.1)
출연	1.5	143 (100.0)	36 (24.9)	14 (9.7)	1 (0.9)	13 (8.8)	94 (65.4)	6 (4.2)	32 (22.2)	56 (39.0)
이 전 지 출	89.9	8,839 (100.0)	2,932 (33.2)	1,416 (16.0)	1,229 (13.9)	187 (2.1)	4,491 (50.8)	3,188 (36.1)	857 (9.7)	446 (5.0)
보조금	1.5	149 (100.0)	127 (85.4)	19 (12.6)	12 (8.3)	7 (4.4)	3 (2.0)	1 (1.0)	2 (1.0)	0 (0.0)
사회 급여	88.4	8,690 (100.0)	2,805 (32.3)	1,397 (16.1)	1,217 (14.0)	180 (2.1)	4,488 (51.6)	3,186 (36.7)	856 (9.8)	446 (5.1)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90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60〉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9,834,817	5,498,144	3,340,740	995,933
노령	4,426,416	3,949,633	270,852	205,930
유족	464,518	297,588	119,932	46,999
질병 및 장애	935,199	136,138	605,811	193,250
가족 및 자녀	1,422,142	266,289	879,585	276,267
기타 사회보호	57,440	1	29,474	27,965
기타 사회적 배제	1,135,395	280,380	807,358	47,657
사회보호 R&D	5,110	-	4,517	593
노동 ^{주)}	634,298	-	470,241	164,057
실업	654,686	568,115	68,013	18,557
주거	99,616	-	84,958	14,658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61〉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행 정 비 용							이 전 지 출		
	%		소계	피용 자 보수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이자	기타 비용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출연	소계	보조금	사회급여
계	100.0	2,057 (100.0)	341 (16.6)	55 (2.7)	26 (1.3)	0 (0.0)	1 (0.0)	240 (11.7)	19 (0.9)	1,717 (83.4)	127 (6.2)	1,590 (77.3)
노령	38.2	786 (100.0)	47 (6.0)	11 (1.5)	10 (1.3)	- (0.0)	0 (0.0)	24 (3.1)	1 (0.1)	739 (94.0)	0 (0.0)	739 (94.0)
유족	6.5	133 (100.0)	13 (10.1)	2 (1.4)	3 (1.9)	0 (0.0)	0 (0.1)	8 (5.9)	1 (0.6)	120 (89.9)	49 (36.6)	71 (53.3)
질병및 장애	11.2	230 (100.0)	69 (29.8)	7 (3.2)	1 (0.5)	0 (0.0)	0 (0.1)	53 (23.0)	7 (3.0)	162 (70.2)	41 (17.7)	121 (52.5)
가족및 자녀	19.8	408 (100.0)	134 (32.8)	5 (1.1)	4 (1.1)	- (0.0)	0 (0.0)	122 (30.0)	2 (0.6)	274 (67.2)	1 (0.3)	273 (66.9)
기타 사회 보호	1.4	28 (100.0)	13 (45.8)	2 (8.5)	2 (5.6)	0 (0.0)	0 (0.2)	9 (31.4)	-	15 (54.2)	9 (33.3)	6 (20.9)
기타 사회적 배제	10.2	209 (100.0)	12 (5.8)	3 (1.3)	1 (0.3)	0 (0.0)	- (0.0)	7 (3.2)	2 (1.1)	197 (94.2)	0 (0.1)	197 (94.1)
사회 보호 R&D	0.0	1 (100.0)	0 (11.6)	0 (1.0)	0 (6.4)	- (0.0)	0 (0.2)	0 (4.0)	-	1 (88)	-	1 (88.4)
노동 ^{주)}	6.6	135 (100.0)	38 (28.2)	24 (17.9)	5 (4.0)	0 (0.0)	0 (0.2)	3 (2.5)	5 (3.7)	97 (71.8)	24 (17.8)	73 (54.0)
실업	4.5	93 (100.0)	0 (0.3)	0 (0.2)	0 (0.1)	- (0.0)	- (0.0)	0 (0.0)	-	93 (99.7)	2 (2.7)	90 (97.1)
주거	1.6	34 (100.0)	15 (43.6)	0 (0.0)	0 (0.1)	- (0.0)	- (0.0)	14 (41.6)	1 (1.9)	19 (56)	-	19 (56.4)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62〉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기능별 재원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2,057 (100.0)	747 (36.3)	543 (26.4)	384 (18.7)	159 (7.7)	767 (37.3)	587 (28.5)	140 (6.8)	40 (1.9)
노령	38.2	786 (100.0)	141 (17.9)	120 (15.2)	74 (9.5)	45 (5.8)	525 (66.8)	525 (66.8)	0 (0.0)	-
유족	6.5	133 (100.0)	56 (41.7)	16 (12.2)	4 (3.0)	12 (9.2)	61 (46.1)	55 (41.1)	-	7 (5.0)
질병 및 장애	11.2	230 (100.0)	109 (47.2)	82 (35.6)	48 (21.0)	34 (14.5)	40 (17.3)	7 (2.9)	-	33 (14.3)
가족 및 자녀	19.8	408 (100.0)	155 (38.0)	229 (56.3)	185 (45.3)	45 (11.0)	23 (5.7)	-	23 (5.7)	-
기타 사회 보호	1.4	28 (100.0)	14 (48.4)	15 (51.6)	1 (4.7)	13 (47.0)	0 (0.0)	0 (0.0)	-	-
기타 사회적 배제	10.2	209 (100.0)	158 (75.5)	51 (24.5)	47 (22.4)	4 (2.1)	-	-	-	-
사회 보호 R&D	0.0	1 (100.0)	1 (100.0)	-	-	-	-	-	-	-
노동 ^{주)}	6.6	135 (100.0)	87 (64.2)	22 (16.1)	17 (12.8)	4 (3.2)	27 (19.8)	-	27 (19.8)	-
실업	4.5	93 (100.0)	2 (2.2)	0 (0.3)	0 (0.3)	- (0.0)	91 (97.5)	0 (0.2)	90 (97.2)	-
주거	1.6	34 (100.0)	25 (75.0)	8 (24.3)	7 (21.9)	1 (2.5)	0 (0.7)	0 (0.7)	-	-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표 2-63〉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비(2019년): 재원별 지출종류별

(단위: 십억 원, %)

기능	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			소계	매칭 사업	자체 사업	소계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100.0	2,057 (100.0)	747 (36.3)	543 (26.4)	384 (18.7)	159 (7.7)	767 (37.3)	587 (28.5)	140 (6.8)	40 (1.9)	
행정 비용	소계	16.6	341 (100.0)	123 (36.0)	189 (55.4)	123 (36.1)	66 (19.2)	29 (8.6)	18 (5.3)	7 (2.0)	4 (1.3)
	피용자 보상	2.7	55 (100.0)	29 (53.2)	19 (35.5)	17 (31.9)	2 (3.6)	6 (11.2)	5 (10.0)	1 (1.2)	0 (0.0)
	재화 및 서비스 사용	1.3	26 (100.0)	8 (29.8)	7 (24.8)	2 (9.3)	4 (15.5)	12 (45.4)	11 (40.8)	1 (4.6)	0 (0.1)
	이자	0.0	0 (100.0)	0 (88.2)	0 (2.9)	- (0.0)	0 (2.9)	0 (8.9)	- (0.0)	0 (8.9)	- (0.0)
	기타 비용	0.0	1 (100.0)	1 (75.2)	- (0.0)	- (0.0)	- (0.0)	0 (24.8)	0 (7.6)	0 (17.0)	0 (0.2)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	11.7	240 (100.0)	78 (32.5)	161 (67.1)	103 (42.9)	58 (24.1)	1 (0.4)	1 (0.4)	0 (0.0)	0 (0.0)
	출연	0.9	19 (100.0)	7 (37.7)	2 (8.6)	- (0.0)	2 (8.6)	10 (53.7)	1 (4.9)	5 (25.1)	4 (23.7)
	소계	83.4	1,717 (100.0)	624 (36.3)	355 (20.7)	261 (15.2)	93 (5.4)	738 (43.0)	569 (33.2)	133 (7.8)	35 (2.0)
이 전 지 출	보조금	6.2	127 (100.0)	125 (98.4)	2 (1.2)	1 (1.0)	0 (0.2)	0 (0.3)	0 (0.2)	0 (0.2)	0 (0.0)
	사회 급여	77.3	1,590 (100.0)	499 (31.4)	353 (22.2)	260 (16.4)	93 (5.9)	737 (46.4)	569 (35.8)	133 (8.4)	35 (2.2)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금;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394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부표 2-64〉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9년): 기능별 현금유형별

(단위: 백만원)

기능	계	현금	현물	행정비용
계	2,057,268	954,937	761,662	340,668
노령	786,148	679,484	59,765	46,899
유족	133,100	53,011	66,709	13,381
질병 및 장애	230,423	24,051	137,753	68,619
가족 및 자녀	407,501	59,490	214,465	133,546
기타 사회보호	28,399	0	15,391	13,008
기타 사회적 배제	209,153	55,210	141,758	12,185
사회보호 R&D	1,020	-	901	118
노동 ^{주)}	135,027	-	96,968	38,059
실업	92,965	83,692	9,030	244
주거	33,531	-	18,921	14,610

주: 정부의 예산구조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080)'를 COFOG기준에 따라 9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노동'부문이 남게 되어 별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회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록 3]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비율

〈부표 3-1〉 지역별 인구 수 및 구성비(2019년)

(단위: 명, %)

지 역	계	남 자	여 자	구성비 (중앙정부 경상비_가족 및자녀 등)
전국	51,849,861	25,864,816	25,985,045	1.000
서울	9,729,107	4,744,059	4,985,048	0.188
부산	3,413,841	1,675,417	1,738,424	0.066
대구	2,438,031	1,205,286	1,232,745	0.047
인천	2,957,026	1,482,249	1,474,777	0.057
광주	1,456,468	720,740	735,728	0.028
대전	1,474,870	736,607	738,263	0.028
울산	1,148,019	589,712	558,307	0.022
세종	340,575	169,845	170,730	0.007
경기	13,239,666	6,659,995	6,579,671	0.255
강원	1,541,502	775,386	766,116	0.030
충북	1,600,007	810,384	789,623	0.031
충남	2,123,709	1,081,938	1,041,771	0.041
전북	1,818,917	904,110	914,807	0.035
전남	1,868,745	937,674	931,071	0.036
경북	2,665,836	1,342,037	1,323,799	0.051
경남	3,362,553	1,692,032	1,670,521	0.065
제주	670,989	337,345	333,644	0.013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부표 3-2〉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국민연금

지 역	노령_노령연금	유족_유족연금	질병 및 장애_장애연금	실업_실업급여
전국	0.880	0.100	0.020	-
계	1.000	1.000	1.000	1.000
서울	0.193	0.164	0.160	0.186
부산	0.081	0.080	0.076	0.079
대구	0.046	0.048	0.049	0.048
인천	0.052	0.051	0.061	0.063
광주	0.022	0.025	0.026	0.027
대전	0.025	0.024	0.026	0.029
울산	0.029	0.024	0.027	0.028
세종	0.004	0.004	0.004	0.005
경기	0.224	0.207	0.240	0.258
강원	0.031	0.035	0.032	0.028
충북	0.031	0.034	0.033	0.028
충남	0.039	0.044	0.042	0.033
전북	0.036	0.042	0.036	0.032
전남	0.039	0.054	0.036	0.026
경북	0.065	0.073	0.061	0.052
경남	0.072	0.077	0.079	0.068
제주	0.011	0.014	0.012	0.01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부표 3-3〉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공무원연금

지 역	노령_퇴직연금	유족_퇴직유족연금	질병 및 장애_장해연금	주거_퇴직 연금
전국	0.92072	0.07443	0.00485	-
계	1.000	1.000	1.000	1.000
서울	0.188	0.176	0.143	0.188
부산	0.069	0.068	0.077	0.069
대구	0.055	0.063	0.042	0.055
인천	0.033	0.033	0.032	0.033
광주	0.049	0.056	0.048	0.049
대전	0.042	0.047	0.055	0.042
울산	0.011	0.008	0.005	0.011
세종	0.005	0.004	0.005	0.005
경기	0.180	0.173	0.177	0.180
강원	0.054	0.059	0.065	0.054
충북	0.042	0.044	0.053	0.042
충남	0.038	0.036	0.041	0.038
전북	0.055	0.057	0.061	0.055
전남	0.041	0.039	0.043	0.041
경북	0.056	0.054	0.065	0.056
경남	0.067	0.069	0.075	0.067
제주	0.015	0.014	0.013	0.01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9). 공무원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부표 3-4〉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9년): 군인연금

지 역	노령_퇴역연금	유족_유족연금	질병 및 장애_상이연금	기타사회보호_재해보상급여
전국	0.866772	0.127078	0.006145	0.000005
계	1.000	1.000	1.000	1.000
서울	0.209	0.267	0.161	0.161
부산	0.027	0.046	0.055	0.055
대구	0.035	0.046	0.033	0.033
인천	0.035	0.046	0.044	0.044
광주	0.019	0.019	0.028	0.028
대전	0.044	0.036	0.046	0.046
울산	0.004	0.005	0.003	0.003
세종	0.013	0.006	0.017	0.017
경기	0.317	0.308	0.321	0.321
강원	0.077	0.060	0.058	0.058
충북	0.033	0.020	0.026	0.026
충남	0.044	0.024	0.035	0.035
전북	0.017	0.019	0.035	0.035
전남	0.015	0.009	0.017	0.017
경북	0.038	0.032	0.037	0.037
경남	0.066	0.051	0.073	0.073
제주	0.007	0.006	0.011	0.011

자료: 국방부. (2019). 군인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부표 3-5〉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사학연금

지 역	노령_퇴직연금	유족_유족연금	질병 및 장애_장해연금	기타사회보호_재해부조금
전국	0.93804	0.06044	0.00151	0.00001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서울	0.34368	0.36934	0.30982	0.21181
부산	0.08547	0.08431	0.08471	0.43358
대구	0.06162	0.05815	0.04704	-
인천	0.02476	0.02806	0.04308	0.28241
광주	0.04835	0.04864	0.01610	-
대전	0.03621	0.03914	0.04878	-
울산	0.01273	0.00907	0.01469	-
세종	0.00053	0.00052	0.00147	-
경기	0.10398	0.10091	0.14422	-
강원	0.02694	0.01970	0.04697	-
충북	0.02395	0.02286	0.01864	-
충남	0.03138	0.03392	0.04211	-
전북	0.04797	0.04600	0.04327	-
전남	0.02927	0.02250	0.05112	-
경북	0.06883	0.06811	0.04121	0.07220
경남	0.04867	0.04310	0.04487	-
제주	0.00566	0.00567	0.00190	-

자료: 사학연금공단. (2018). 사학연금통계연보와 내부자료.

〈부표 3-6〉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고용보험

지 역	가족 및 자녀_모성보호	실업_실업급여	가족및자녀, 노령, 노동_실업급여
계	1.000	1.000	1.000
서울	0.428	0.186	0.186
부산	0.045	0.079	0.079
대구	0.028	0.048	0.048
인천	0.033	0.063	0.063
광주	0.020	0.027	0.027
대전	0.032	0.029	0.029
울산	0.017	0.028	0.028
세종	0.005	0.005	0.005
경기	0.201	0.258	0.258
강원	0.022	0.028	0.028
충북	0.020	0.028	0.028
충남	0.024	0.033	0.033
전북	0.020	0.032	0.032
전남	0.020	0.026	0.026
경북	0.029	0.052	0.052
경남	0.044	0.068	0.068
제주	0.012	0.010	0.010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와 내부자료.

〈부표 3-7〉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산재보험

지 역	질병 및 장애_요양급여 등	유족_유족보상연금 등
전국	0.866	0.134
계	1.000	1.000
서울	0.153	0.146
부산	0.080	0.056
대구	0.052	0.033
인천	0.050	0.023
광주	0.040	0.037
대전	0.043	0.029
울산	0.033	0.034
세종	0.000	0.000
경기	0.216	0.209
강원	0.088	0.126
충북	0.029	0.039
충남	0.032	0.053
전북	0.031	0.032
전남	0.026	0.029
경북	0.041	0.072
경남	0.080	0.074
제주	0.006	0.008

자료: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402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3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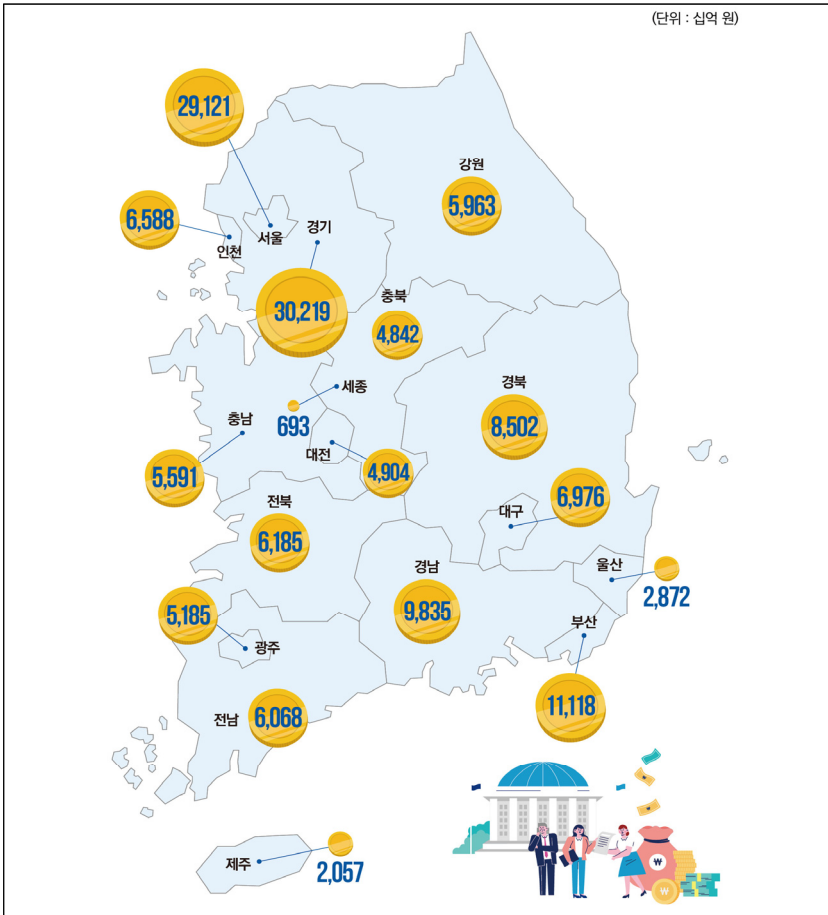
〈부표 3-8〉 중앙정부 보훈경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9년): 보훈

지 역	질병 및 장애 _상이군경	유족_군경유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	기타 사회적 배제 _기타
전국	0.48	0.41	0.11
계	1.00	1.00	1.00
서울	0.45	0.45	0.45
대전	0.10	0.10	0.10
대구	0.13	0.13	0.13
부산	0.17	0.17	0.17
광주	0.13	0.13	0.13
제주	0.02	0.02	0.02

자료: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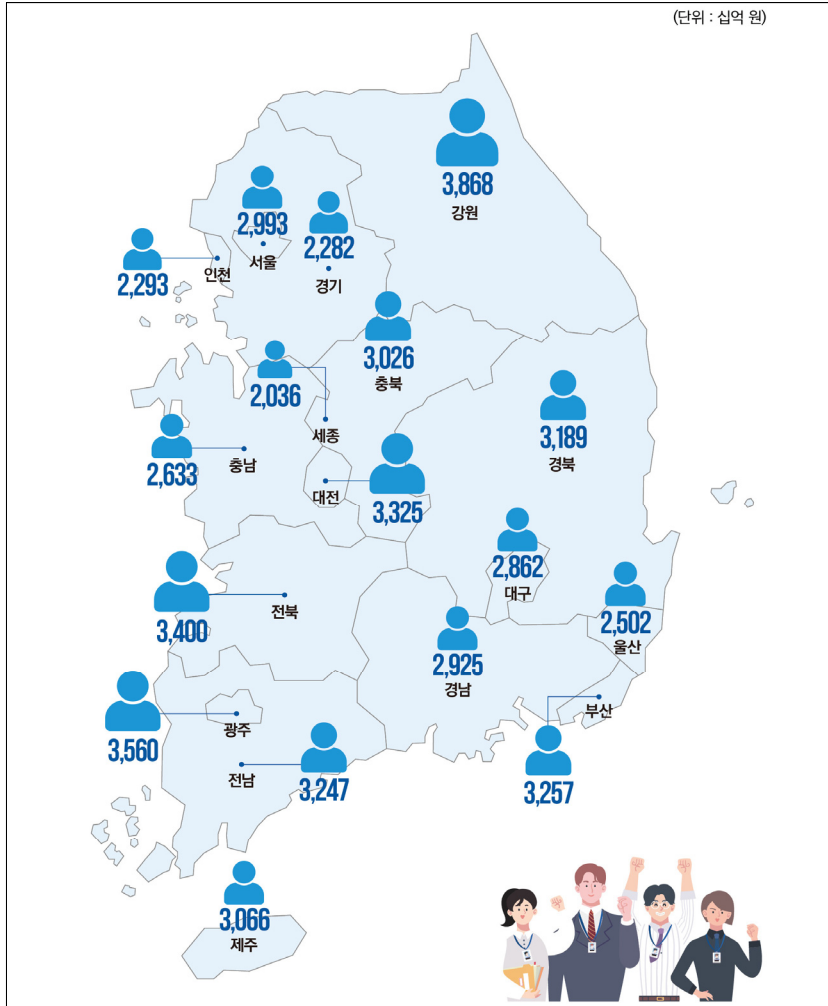
[부록 4] 지역별 사회복지지출 시각화

[부도 4-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금액 비교(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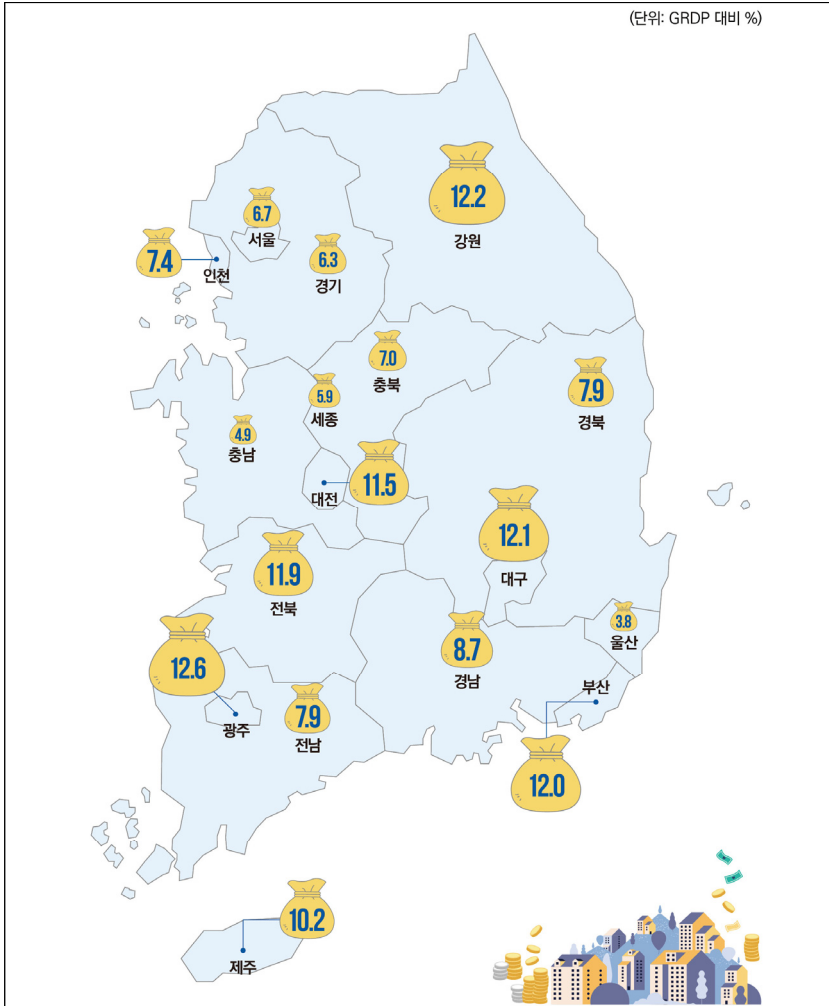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부도 4-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금액(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재정DB.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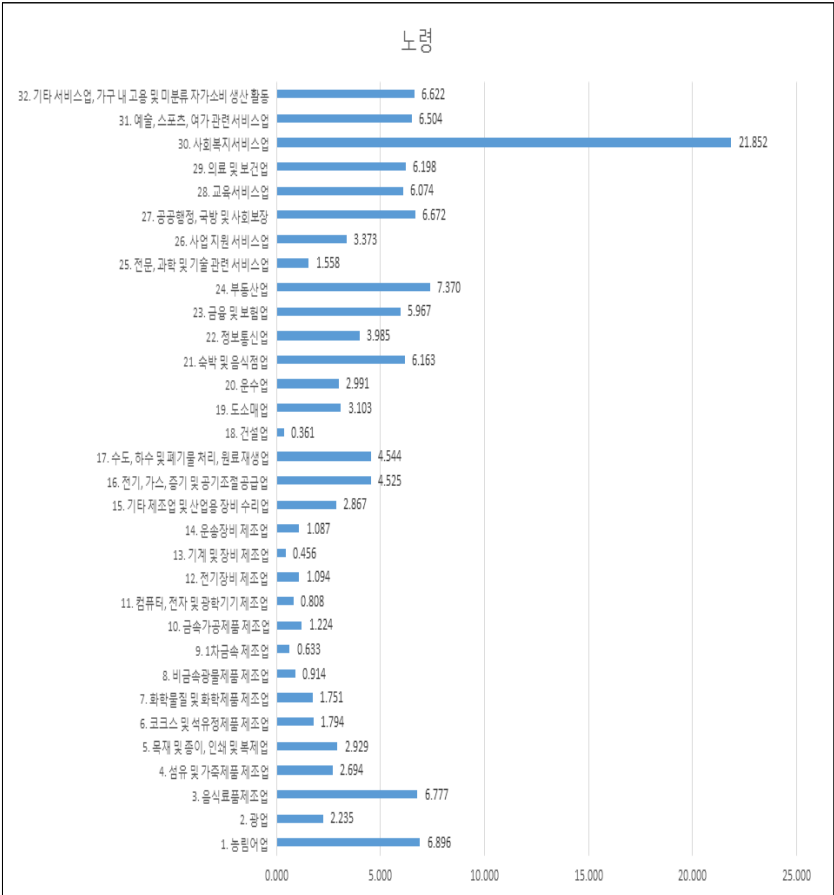
[부도 4-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의 GRDP대비 %(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Retrieved from www.e-hojo.go.kr. 2021.4.5.;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Retrieved from kosis.kr. 2021.4.5.;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9). 내부자료; 국방부. (2019).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국가보훈처. (2019). 보훈연감;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Retrieved from <http://kosis.kr/>. 2021.4.5.을 재구성; 본 연구의 복지계정DB.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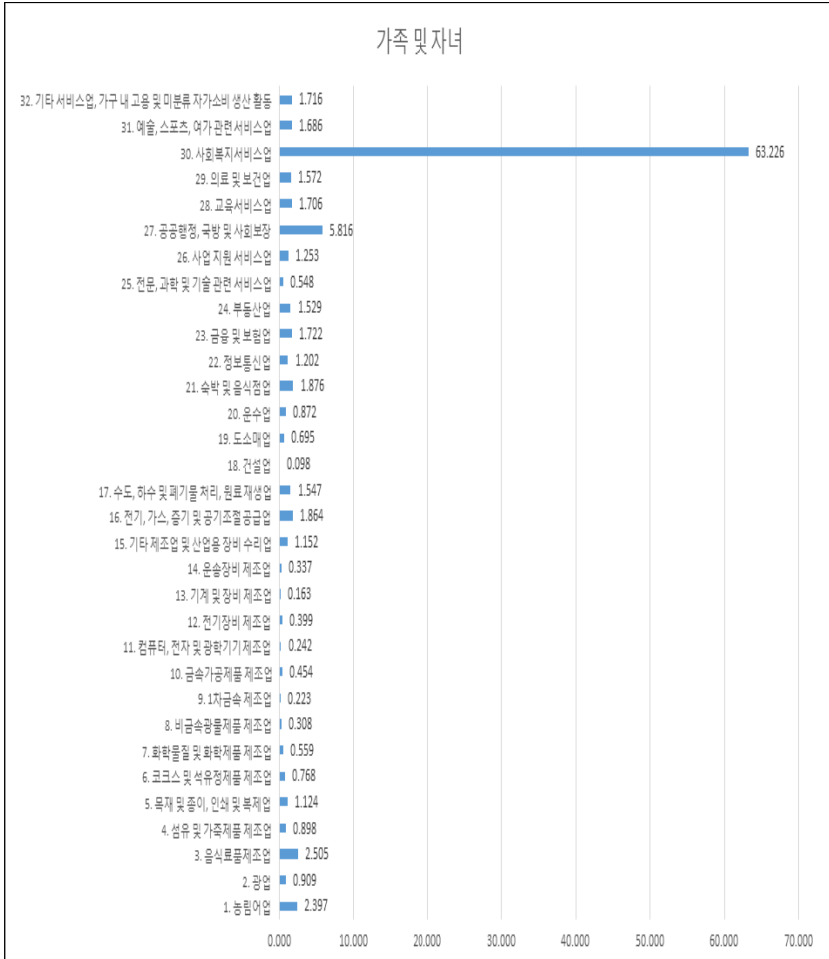
[부록 5]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부도 5-1]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 노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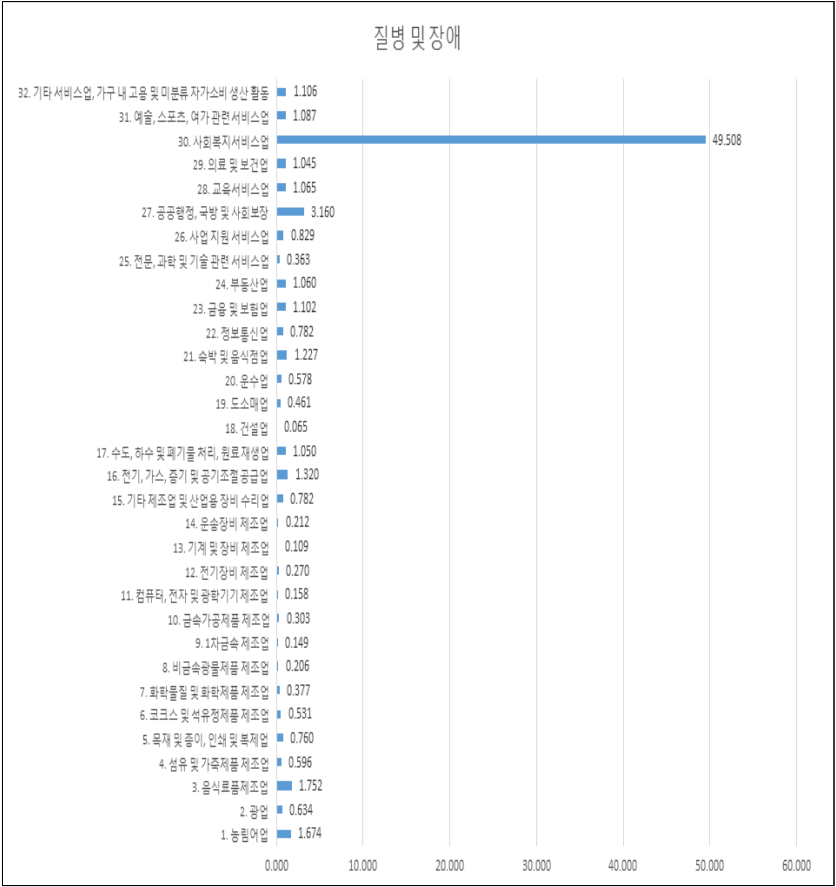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부도 5-2]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가족 및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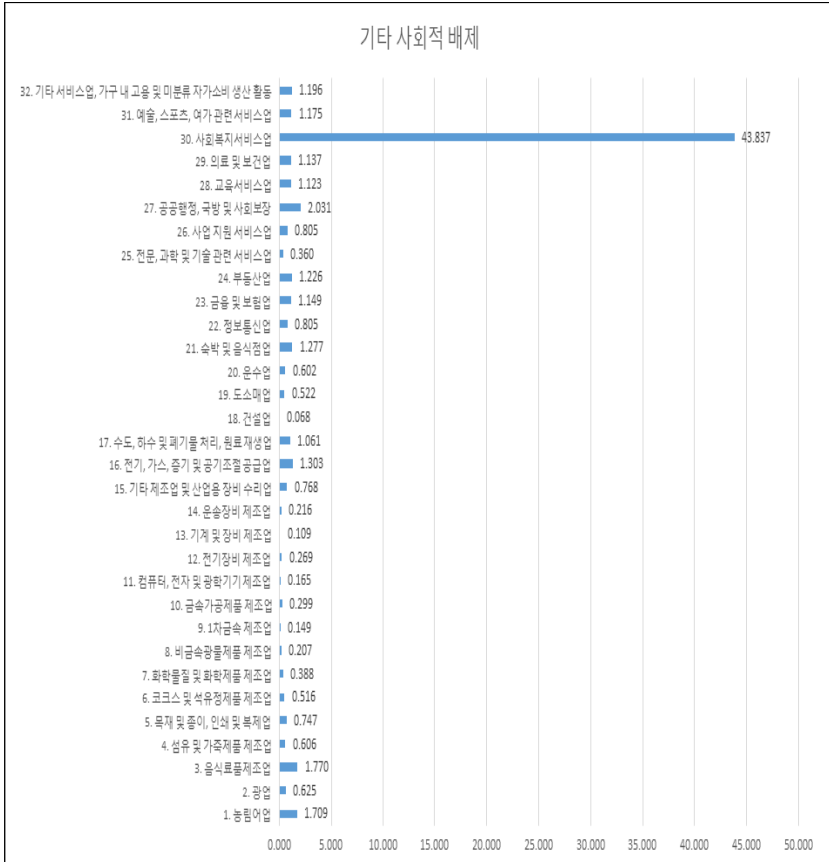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부도 5-3]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질병 및 장애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부도 5-4] 복지지출로 인한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증가율 비교: 사회적 배제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계한 기능별 복지지출 금액으로 분석함.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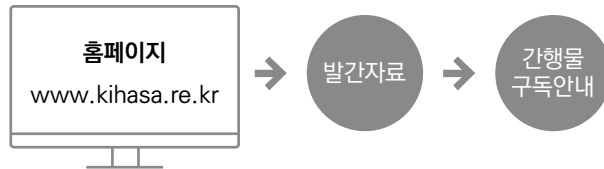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016)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